

2008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Ⅱ)

2008. 10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Ⅰ 권)

권 택 기 의원 .....	1
김 동 철 의원 .....	253
김 영 선 의원 .....	323
김 용 태 의원 .....	511
박 상 돈 의원 .....	523
박 선 숙 의원 .....	567
박 종 희 의원 .....	625
신 학 용 의원 .....	695

## (Ⅱ 권)

이 사 철 의원 .....	1
이 석 현 의원 .....	163
이 성 남 의원 .....	189
이 성 현 의원 .....	229
이 정 희 의원 .....	285
이 진 복 의원 .....	315
이 한 구 의원 .....	449
이 한 정 의원 .....	589

## (Ⅲ 권)

조 경 태 의원 .....	1
조 문 환 의원 .....	399
조 윤 선 의원 .....	579
허 태 열 의원 .....	721
현 경 병 의원 .....	799
홍 재 형 의원 .....	889





#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사철 의원	1. 감사원 처분요구서	3
	2. 국무총리실의 감사결과 보고서	5
	3.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5
	4.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5
	5.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5
	6. 감사원 외 정부 다른 기관에 의한 지적사항	5
	7.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5
	8. 자체감사 계획서	5
	9. 업무 관련 자체 평가 결과,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7
	10. '07년 이후	8
	- 임직원들의 퇴직내역	
	-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제한 확인 신청 및 승인 내역	
	11.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9
	12.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0
	13. 계약 및 해약 현황, 수의계약 현황	45
	14. 종료된 혹은 진행 중인 소송 세부 현황	47
	15.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기간, 제목, 용역비, 연구자 등), 정책반영 결과	49
	16. 해외교육중인 직원 현황	52
	(이름, 소속, 업무, 직급, 교육학교, 전공, 기간, 예산지원내역, 교육기간중 받는 급여수준, 근속연수)	
	17. 최근 3년간 타 부처, 대기업 파견자 명단(이름, 소속, 직급, 파견기관, 기간, 주요업무, 파견사유 등)	54
	18. 최근 3년간 타 부처, 대기업 파견되었다 복귀한 명단(이름, 소속, 직급, 파견기관, 기간, 주요업무, 복귀 후 주요업무 등)	5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사철 의원	19. 최근 3년간 금융위의 퇴직자 명단	58
	20. 08.8 현재 임원/이사/고문/감사 현황	59
	20-1. 08.8 현재 국장 이상 간부 현황 (인건비·월정직책급등 월지급액)	60
	21. 06년 1월 이후 퇴직한 임원/이사/고문/감사 이직현황	61
	22. 금융위 사무실 이전 문제 TF, 현재 진행 내역 ○ 여의도 사무실 이전 관련 내부 찬반 투표 결과, 분석 결과	62
	23. 2008.3 퀵-히트 과제 사본 및 추진현황	63
	24. 직급별 정원과 현원	68
	24-1. 외부기관으로부터 금융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69
	25.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72
	26. 경제부총리 주관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안건 사본 일체	74
	27-1. 대부업과 관련한 부총리 지시사항	127
	27-2. 금융위에서 마련한 대책	128
	28-1.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입장, 견해	129
	28-2. 김광수 금융서비스 국장의 발언 관련하여 론스 타에 과태료 부과를 실제할 것인지 여부	130
	28-3.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론스타가 주식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31
	28-4. 법원 1심 판결을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	132
	28-5. 법원 1심 판결 결과로 론스타의 매매 계약 승인 취소 가능 여부	133
	28-6.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 여부	134
	28-7.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지연되는 이유	13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사철 의원	28-8.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가능성	136
	28-9. 론스타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이후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	137
	28-10.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가격과 HSBC에 매각금액	138
	28-11. 론스타의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 대응방안	139
	29. 최근 5년간 공적자금 회수현황	140
	30.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141
	31. '07년 10월 이후 재경부(기재부), 한은,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과 주고 받은 공문서 대장 목록 (비밀문서 포함)	143
	32. 06년이후 금융위가 진행한 금융관련 법령 제정, 개정 내역, 현재 개정중인 법령현황 및 사유 등	146
	33.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사본, 매뉴얼개선방향 및 진행경과 10개 은행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및 실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담당자 수	151
	34-1. '06년 이후 7개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과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각 은행별 월별 고액현금거래 보고 현황	153
	34-2. '06년 이후 위 10개 은행별 혐의거래보고 접수추이	153
	34-3. '06년 이후 위 10개 은행별 혐의거래보고 충실도 분석	153
	34-4. '06년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부당하게 누락하는 사례 발견 목록, 조치결과	159
	35. 자금세탁방지업무	161
이석현 의원	1. 2006~2008년간 감사내역	165
	2. 06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168
	3. '06년~08.8월말 현재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현황	17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석현 의원	○ 사건명, 사건내용, 승·패소(일부 승·패소 구분), 담당 법무법인 및 변호사명, 소송비용 명기 요망	
	4. '08.8월말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 현황 (사건명, 사건내용, 담당법무법인명 및 변호사명, 진행내역)	175
	5. 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및 임직원이 참여하는 현황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관련예산, 주요활 동내역, 위원 인적사항)	177
	6. 06년~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회의개최내역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178
	7.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내부규정	180
	8. 05년~08년 8월말 현재, 임직원 훈포상 내역 (일시, 훈포상자명, 훈포상 사유, 훈포상 내용) 훈 포상규정	181
	9. 08년 연두업무 보고자료	182
	10. '06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발간자료 현황	183
	11. '07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184
	12. 현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및 활성화 방안	185
	13.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금융위 입장	187
	14. 퇴직연금의 투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	188
이성남 의원	1.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공매도 규제 실시국 가의 사례	191
	2.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193
	3.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 현황 및 공익기금 조성 진행상황	198
	4.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관련 규정,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완화의 근거와 목적	20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성남 의원	5. 금융위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 일시/ 장소/ 행사면/ 주요참석대상/ 주요내용/ 강 연료(기고료)	207
	6. 금융위원회 출범후 신설된 각종 소속 위원회 및 기획단 현황 - 발족일시/위원명단(학력/주요경력)/발족사유/준속기 간/운영현황(개최일, 참석위원, 논의내용 등)	209
	7. 現 기획재정부 등의 '금융허브' 추진 연혁, 평가, 금 융허브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결과	212
	8.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여부,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	216
	9. 07년 8월~08년 9월 현재, 연구용역 내역 - 용역명, 기간, 금액, 계약서, 결과보고서	217
	10. 금융위원회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포함)	220
	11. 공공기관 계약경영제의 목적 및 내용, 체결한 계약서 사본일체	222
	12.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	224
이성현 의원	1.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제17조와 18조 에 의해 적발한 내역일체(최근 3년간)	231
	1-1. 금융위원회 08-4차 69호 안건, 증권선물위원회 08-4차 89호 안건 일체에 대한 자료	233
	2. 리먼브라더스 증권과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증권 서울지점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 및 영업이 이루 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234
	3. 회의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의 경위에 대한 자료	235
	4.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예비인가 관련, 증선위 에서 보류된 것이 금융위에서 예비인가가 내려진 경위에 대한 자료	23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성현 의원	5. 금융위의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예비인가 관련 회의록 상의 법무부 유권해석의 경위에 대한 자료	237
	6-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1조의 2에 의거 보존되는 문서 리스트	238
	6-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부칙 제7111호에 따라 보존되는 문서 리스트의 제출	250
	7.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학력, 경력포함),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 일체, 심의회 관련 예결산내역	283
이정희 의원	1. 지난 1년간 산업은행과 '미국 리먼 브라더스사 인수 건'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서 일체	287
	2.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관련하여	287
	(1) 산업은행을 은행계 IB, 즉 CIB로 산업은행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계획 관련서류	
	(2) 은행계 IB의 구체적 모습은, 개념상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일반 IB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련자료	
	(3) 은행계 IB 아래에 있는 은행은, 구체적으로 일반은행과 달리 어떤 규제를 받는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지 및 지주회사 아래 있는 은행과 소속증권사 간 위험전가를 막기 위한 방화벽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인지 자료	
	(4) 민영화 계획서	
	3.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직후 현재까지 대책회의 등 회의록 사본	300
	4. 산은 민영화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관련	305
	(1) 산업은행을 민영화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KDF 운영관련 자료	
	(2) 신용평가 C등급 중소기업의 금융정책 방안	
	(3) 독일의 온랜딩 방식 관련한 실사 자료, 조사 자료, 회의 자료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정희 의원	(4) 기보, 신보,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C등급 중 소기업지원 활성화 등 공기능 강화방안 자료	
	5. 코스콤 관련	308
	(1) 3년간 코스콤이 고객사와 계약해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금액	
	(2) 코스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코스콤의 비정규직 직원 비율	
이진복 의원	6.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관련	311
	○ 제정 관련 회의 서류 일체	
	○ 제정 관련 검토했던 외국제도 관련 서류 일체	
	○ 리먼 부도이후 자통법 시행 관련하여 회의서류 일체	
	7.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 변경승인 9차 의사록, 승인 신청서 및 심사자료 일체를 요청	312
이한구 의원	8. 금융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액수·건수에 대한 추산 및 금융 차명거래와 도명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	313
	1. '00년 이후 '08.9월 현재까지 환율변동 따른 금융위 의 금융시장 및 기업 안정 조치 내역 일체	317
이한구 의원	2. '00년 이후 '08.9월 현재까지 환율변동 따른 금융시 장 및 기업 안정 위한 금융위의 제도/정책 수립 및 개선 내역	317
	3. '00년 이후 '08.9월 현재까지 기업대상 설문조사 내역	317
	4. '07년 이후 '08.9월 현재까지 재경부와 송수신한 공 문서 목록 일체	318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320
	6.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424
	7.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447
	1.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목록	451
이한구 의원	2. 부동산 PF문제 관련	47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한구 의원	2-B. 2002년~2008.8월말 연도별 금융권별 금융위원회에 대해 부동산PF 문제와 관련한 '공동검사요청' 및 '자료제출요구' 등과 관련해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및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내역	472
	3-B. 상호저축은행 PF대출과 관련하여 예보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공동검사요청 등을 받은 공문서	473
	4-A. 지방은행 PF대출과 관련하여 예보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공동검사요청 등을 받은 공문서	474
	5-A.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참여정부의 전략 및 정책방향(발표문 / 주요 내용)과 현 정부의 지난 대선 공약 및 인수위 내용, 현 정부 출범 후 전략 및 정책방향(발표문 / 주요 내용)을 상세히 명기하고, 2008.8월말 현재 현황 및 추진경과, 추진상의 문제점,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475
	5-B,C. 가계 부채(주택담보대출) 급증문제 및 이에 따른 금융부문 부실 가능성 문제(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 - 참여정부와 현정부 비교	525
	5-D. 중소기업 자금난 및 이에 따른 금융부문 부실가능성 문제(금리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 - 참여정부와 현정부 비교	528
	6. 2008년 6월 11일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 관련	530
	6-A.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 특례 보증제도'의 개요 및 운용주체,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	530
	6-B. '08.9월 현재까지 추진경과	530
	6-C. 상기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금융위가 추진한 실적	530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한구 의원	6-D.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09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	531
	6-E. '08년 9월 도입 예정이던 동 제도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531
	7. 소위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한 금융위원회 대응일지 및 근거(증빙) 자료	532
	8. 08년 7월 15일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위·금감원합동 워크숍'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회의결과, 향후 조치내역	543
	9.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552
	9-A. 산업은행의 글로벌 IB화 전략에 대한 찬반논리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해결 방안	552
	9-B. 산업은행의 글로벌 IB화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 성공전략 및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또는 필요사항	552
	9-C. KDF 출범에 대한 찬반 논리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해결 방안	556
	- 정책금융제도로서의 필요성 vs 여타 다른 국책 금융기관의 활용	
	-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업무 중복	
	- 사실상 정책금융이 불필요한 우량·중견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집중 우려	
	10.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관련	561
	10-A. '08.9월 현재까지 신보와 기보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논의진행과정 및 통합의 이유와 목적 또는 필요성, 현재의 정부의 정책방향	561
	10-B. 통합에 대한 찬반 논리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561
	10-C. 통합에 따른 중소기업 보증축소 우려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및 해결방안	56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한구 의원	10-D. 신기보 업무중복이 거의 없고,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위 입장	562
	10-E. 통합무산시 신·기보 각각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 조정 등 선진화 방안	563
	10-F.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금융위의 정책방안 및 연구보고서	563
	11.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관련	564
	11-A. 도입배경 및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요, 설립요건, 9월 현재까지 추진경과	564
	11-B. 공인인증서 문제 및 고객개인정보 보호 등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책	566
	12.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관련	568
	12-A. 도입 배경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의 개요, 설립요건, 9월 현재까지 추진경과	568
	12-B. 금융상품전문판매업에서 취급하게 되는 금융상품 내역과 9월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채널(판매방식) - 금융권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융상품을 명기할 것	568
	12-C.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의 '전문성 문제, 불완전판매, 부당 판매, 계약자 계약 승계·안정성 문제'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책	568
	13. 미국 투자은행 부실 문제 관련	571
	13-B. 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3개 투자은행의 부실 및 파산 원인 분석에 준하여 산업은행의 IB화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	571
	14. '08년 6월 11일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에 담긴 '합성 CDO 및 유동화회사 보증도입'의 개요 및 추진방식, 주체, 재원, 대상 기업 조건, 2000년대 초반 신보와 기보의 P-CBO 및 P-CLO와의 차이점 등 상세내용	57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한구 의원	15.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신용보증 부문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	574
	16. 금융위원회에서 준비중인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초안) - 국책은행, KDF,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작성할 것	575
	17. 중소기업 정책금융(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576
	17-A.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 개요, 개편방향	576
	17-B.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중복 문제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576
	17-C. 2005년~2008.8월말 연도별 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중산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 단' 각각의 지원 규모, 지원업체수, 중복지원 현황	577
	18-O.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경쟁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장점 및 약점	578
	18-P.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단계별 추진 계획, 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과 실적,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방안	581
이한정 의원	1.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591
	2.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592
	3. 최근 3년간 예산서 및 결산서	611
	4. 최근 3년간 국회(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12
	5.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716
	6. 최근 3년간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71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한정 의원	7.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720
	8.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	743
	9.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744
	10. 최근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현황	745
	11. 최근 3년간 임원 및 직원들의 국내외 연수출장 관 련 세부 내역	746
	1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07년 이후 현재까지월별 법 인카드별 사용내역	747
	13. 유사수신행위 관련 -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영위 업종별 수사기관 통보 현황(2006~2008년 현재 까지) - 유사수신 유형별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	748

# 이 사 철 의 원



## 1. 감사원 처분요구서

☐ 2007년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 정리 (붙임)

<붙임>

## 2007-2008.8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기 간	제 목	주요 처분요구 사항	비고
2008. 2~3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舊 금감위
2008. 1~2	기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舊 금감위
2007.12 ~2008. 1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舊 재경부
2007. 9~11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舊 재경부
2007. 6~7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여비규정」을 초과한 공무국외여행 경비 지급이 없도록 주의(주의)	舊 재경부
2007. 4~6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舊 재경부



2. 국무총리실의 감사결과 보고서
3.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5.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 감사원 외 정부 다른 기관에 의한 지적사항
7.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 해당사항 없음

## 8. 자체감사 계획서

☐ 2008년 자체감사 계획 (붙임)

\* 현재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중

<붙임>

## 2008 자체감사 실시계획

### 1. 목적

- ☐ 청사 이전비용 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을 통하여 위원회 출범 후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2. 감사방법

- ☐ 일부 부서의 업무를 선정하여 표본감사로 실시
- ☐ 수감부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류점검 위주로 실시

### 3. 감사 실시계획

- ☐ 감사기간 : '08.6.23(월)~6.27(금) (5일간)
-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 ☐ 감사반 구성 : 감사담당관실 전원 (과장1, 5급3, 6급2명)
- ☐ 점검 대상
  - ♦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 ♦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 ♦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등

## 9. 업무 관련 자체 평가 결과,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 ☐ 금융감독위원회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보고서, 금융감독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를 별첨  
(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별도제출)

## 10. '07년 이후

- 임직원들의 퇴직내역
-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제한 확인 신청 및 승인 내역

성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자	재취업 기관	취업제한 승인 여부
문00	상임위원	07. 2.28	금융감독원	취업제한 미대상 기관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금융보안연구원	취업제한 미대상 기관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보험개발원	취업제한 미대상 기관
윤00	위원장	07. 8. 3	-	-
윤00	부위원장	07.12.21	중소기업은행	취업제한 미대상 기관
박00	상임위원	08.1.2	예금보험공사	취업제한 미대상 기관
김00	위원장	08.3.5	-	-
이00	부위원장	08.3.13	-	-
이00	FIU원장	08.3.28	증권선물거래소	'08.3.29 윤리위 승인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은행연합회	취업제한 미대상 기관
김00	혁신행정과장	08.5.15	법무법인 태평양	취업제한 미대상 기관

## 11.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 해당사항 없음

## 12.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첨부 : 별첨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2008. 10.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 II.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III.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1. 총 괄

#### 2. 인 건 비

#### 3. 기본경비

#### 4. 사업경비

#### 5. 기금간거래

#### <별 첨> 사업별 설명자료



# I.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 1. 목적 및 기능

### 가. 설립경위

- ☐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08.2)
  - 재경부 금융정책기능과 금감위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나. 설립목적

- ☐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다. 주요기능

-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2

## 조직 및 정원

### 가.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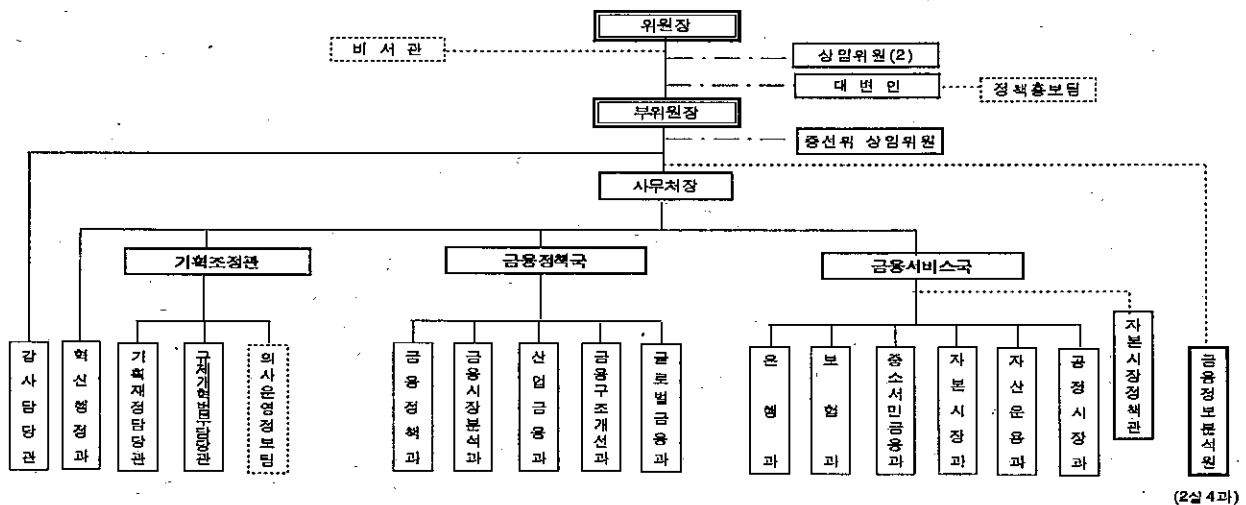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사무처] 본부에 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를 두고,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



(2실 4과)

### 나. 정 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 계	2	182	4	7	14	209
본 부	2	136	4	—	13	155
금융정보분석원	—	46	—	7	1	54

## II.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0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3억 1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억 6백만원 증가(3.1%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12,907	13,313	406	3.1
전대차관 이자수입	316	197	△119	△37.7
전대차관 원금회수	831	895	64	7.7
벌금 및 몰수금	11,667	12,130	463	4.0
가 산 금	93	91	△2	△2.1

### □ 증감 주요내역

- 전대차관 이자 수입('08년 대비 1억 19백만원 감)
  -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은행에 재전대한(\$17,791,387)차관과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에 재전대한(\$129,020)차관에 대한 이자상환수입('04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전대차관 원금 회수('08년 대비 64백만원 증)
  - 기준환율 변동(920원→1,000원)으로 증액
- 벌금 및 몰수금('08년 대비 4억 63백만원 증)
  - 과징금 징수결정액 평균치에서 세외수입 증대노력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가산금('08년 대비 2백만원 감)
  - 최근 5년간('03년~'07년) 가산금 수입액 평균치 적용

###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1. 총 괄

- ☐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41억 26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3,540억 46백만원 증가(235.9%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150,080	504,126	354,046	235.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 운영	127,038	201,208	74,170	58.4
○ 인 건 비	14,223	14,313	90	0.6
○ 기 본 경 비	4,397	4,798	401	9.1
○ 사 업 비	108,418	182,097	73,679	67.9
<input type="checkbox"/>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23,042	302,918	279,876	1,215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0,000	300,000	280,000	1,400
○ IBRD차관 원금 상환	2,204	2,396	192	8.7
○ IBRD차관 이자 상환	838	522	△316	△37.7

#### 2. 인 건 비

- ☐ 2009년 인건비 예산(안)은 143억 1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90백만원 증가(0.6%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14,223	14,313	90	0.6
○ 인 건 비	13,314	13,437	123	0.9
○ 직무수행경비	909	876	△33	△3.6

#### ☐ 증감 주요내역

- 직제상 정원(본부 155명 + FIU 54명) 등에 대한 예산 반영

### 3. 기본경비

- 2009년 기본경비 예산(안)은 47억 98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억 1백만원 증가(9.1% 증)

(단위 : 백만원)

구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계	4,397	4,798	401	9.1
○관서운영비	2,671	2,575	△96	3.6
○비정규직보수	326	457	131	40.2
○직무수행경비	279	283	4	1.4
○여비	250	430	180	72.0
○업무추진비	494	794	300	60.7
○기타유형자산	179	180	1	0.6
○용역비 <sup>1)</sup>	170	-	△170	-
○민간이전 <sup>2)</sup>	19	57	38	200.0
○기타	9	22	13	144.4

1) 정책연구개발 사업경비로 통합됨

2) 비정규직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 □ 증감 주요내역

- '08.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위는 신설된 조직으로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 폐지, 상임위원 1명 증원, 사무처장 및 2개과(감사담당관실, 규제법규담당관실) 신설 등에 따라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증액 및 일용직 증원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증가

\* 금융위는 정원 209명의 소규모 부처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 소관 법령 45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산하기관 19개사,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8개(기금운용액 36조원)관리, 출입기자 120명 등 다른 대규모 부처 못지 않은 업무량임

#### 4. 사업경비

□ 2009년 사업경비 예산(안)은 1,820억 97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736억 79백만원 증가(67.9%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108,418	182,097	73,679	67.9
○금융업법체계개편	80	79	△1	△1.0
○금융허브	369	300	△69	△18.7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500	500	0	0
○금융관련국제협력	159	373	214	134.6
○금융전문인력양성	2,000	1,500	△500	△25.0
○저축의날행사및저축장려	80	72	△8	10.0
○대부업법관리·감독체계개편 <sup>1)</sup>	70	0	△70	순감
○공인회계사실무수습지원	24	0	△24	순감
○모지론이차보전	1,639	3,903	2,264	138.1
○역모기지론출연	7,000	3,000	△4,000	△57.1
○농어기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89,206	65,000	△24,206	△27.1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0	100,000	100,000	순증
○금융정보분석원운영	1,122	1,102	△20	△1.8
○FIU전산망구축운영	4,182	4,757	575	13.7
○에그몽총회	700	사업종료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38	127	△11	△8.0
○정보화지원	556	604	48	8.6
○정책연구개발	592	500	△92	34.4
○금융정책알리기	0	280	280	순증

1) 사업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조정됨

#### □ 증감 주요내역

- 저소득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 확대를 위해 모기지론 이차 보전사업비 증가('08년 대비 22억 64백만원 증)

- '08. 6월 금융위원장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 위원회 의장 당선에 따라 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FTA 금융분과장으로 금융협상 업무 수행 및 우리지주 등 매각을 위한 해외 IR 활동 등을 위해 금융관련 국제협력 사업비 증가('08년 대비 2억 14백만원 증)
- 주택금융공사 법정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50배)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에 신규 출자 ('09년 신규 1,000억원 증)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은 저축장려금 소요액 감소 전망치를 고려하여 감액 편성('08년 대비 242억 6백만원 감)
- 역모기론출연사업은 연금보증료 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08년 대비 40억원 감)
-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금융전문대학원 자체 등록금 수입 증가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08년 대비 5억원 감)

##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 2009년 내부거래 예산(안)은 3,029억 18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798억 76백만원 증가(1,215%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23,042	302,918	279,876	1,215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0,000	300,000	280,000	1,400
○ IBRD차관 원금 상환	2,204	2,396	192	8.7
○ IBRD차관 이자 상환	838	522	△316	△37.7

## □ 증감 주요내역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은 '02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른 재정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09년도에 3,000억원을 반영
- IBRD차관 원금 상환은 예산편성 기준 환율(920→1,000원)을 반영하여 증액
- IBRD차관 이자 상환은 '04년부터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 및 예산편성 기준 금리 인하(6.5%→4.5%)를 반영하여 감액



## 〈별 첨〉 사업별 설명 자료

### I. 세 입

1. IBRD전대차관 원리금 수입
2. 별 금
3. 가 산 금

### II. 세 출

#### 【금융정책국】

1. 금융업법체계개편
2. 금융허브
3.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4. 금융관련 국제협력
5. 금융전문인력양성

#### 【금융서비스국】

6. 저축의날행사 및 저축장려
7. 모기지론이차보전
8. 역모기지론활성화출연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금융정보분석원】

11. FIU운영
12. FIU전산망구축운영

#### 【본 부】

1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4. 정보화지원(정보화)
15. 정책연구개발
16. 금융정책 알리기

#### 【회계기금간 거래】

17.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 IBRD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 세 입

## 1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수입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수납액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146	1,147	1,092	△55

### 나. 세입개요

- '98년9월 IBRD로부터 도입한 전대차관자금 중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은행에 재전대한 금액(\$17,791,387.84)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전대한 금액(\$129,020.86)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수입(5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 다. 예산(안) 내역

#### □ 이자 수입

은행에 재 전대 금액 (원금의 1/2상환조건)에 대한 이자수입	○ 상반기 $\$4,447,846.90 \times 4.5\% \times 1,000\text{원}/\$ \times 183/360 = 102\text{백만원}$
	○ 하반기 $\$4,003,062.20 \times 4.5\% \times 1,000\text{원}/\$ \times 183/360 = 92\text{백만원}$
한국공인회계사에 재 전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 상반기 $\$64,510.86 \times 4.5\% \times 1,000\text{원}/\$ \times 183/360 = 1.5\text{백만원}$
	○ 하반기 $\$58,059.86 \times 4.5\% \times 1,000\text{원}/\$ \times 183/360 = 1.3\text{백만원}$

#### □ 원금 회수

은행 재전대 금액의 1/2을 균등분할 상환	○ $\$444,784.70 \times 1,000\text{원}/\$ \times 2\text{회(반기별상환)}$ = 889백만원
공인회계사회에 재전대 금액을 균등분할 상환	○ $\$6,451.00 \times 1,000\text{원}/\$ \times 2\text{회(반기별상환)}$ = 13백만원

\* 환율조정액 : -7백만원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수납액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2,974*	11,667	12,130	463

\* 12,629(구 금감위) + 345(구 채경부)

## 나. 세입개요

-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다. 예산(안) 내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증권거래법 등 위반 과징금 : 11,872백만원
  - 과징금징수결정액<sup>1)</sup>(26,270백만원)×수납율(49%)<sup>2)</sup>-1,000백만원<sup>3)</sup>

1) '04년 ~ '07년 과징금징수결정액 평균

2) '04년 ~ '07년 평균수납율(46.6%)에 '07불납결손 및 세외수입 증대 노력분 반영

3) 소송 패소 환급액 예상분 계상&lt;상고심이 진행중인 삼일회계법인 관련 소송(2건)&gt;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과태료 : 233백만원

- '04년 ~ '07년 징수실적의 평균증감율

\* (284+345+132+149)/4년\*1.03 = 233백만원

-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과태료 : 25백만원('08년 예산수준 반영)

### 3 가 산 금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수납액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	93	91	△2

\* '07년 가산금 세입실적은 88백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에이디칩스와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기 납부한 가산금(89백만원) 환급처리함에 따라 △1

#### 나. 세입개요

- 과징금 채납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전날까지 연 100분의 6의 가산금 부과

#### 다. 예산(안) 내역

- '03~'07년간 수납 가산금 평균 : 91백만원

#### < 연도별 가산금 수납내역 >

(단위 : 백만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20	286	71	79	△1

# 세 출

# 1 금융업법 체계개편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44	80	79	△1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현행 업종별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업의 효율성 제고, 투자자보호 강화 등 선진 금융제도 확립

### □ 사업내용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의 지속적 추진
- 금융업법 통합작업의 초기단계인 자본시장통합법에 이어 여타 금융업법 통합 및 하위법령 정비
  - 통합작업을 계획수립을 위한 T/F회의, 토론회 개최 및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 <참 고>

#### < 금융업법 체계개편의 단계 >

① 업권별 통합법 제정(1단계)	② 기능별 법 통합 작업(2단계)	③ 단일 금융통합법 제정(최종단계)
- 자통법 제정(자본시장 관련 법 통합) - 은행법·보험업법 정비	-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진입·퇴출에 관한 법 등 제정	

##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288	369	300	△69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지속·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견인코자 함

☐ 사업내용

- 금융허브사업은 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사업임
- '07년까지 7대 추진과제 실행을 통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한 후 2015년에는 아시아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 목표
- '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 금융클러스트 지정 등 금융인프라 정비 를 통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증가 유도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	500	500	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해외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지원할 종합적 민간지원기관으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운영

\*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경우도 별도의 금융기관 지원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공

☐ 사업내용

- 근거 :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

- 금융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금융 관련 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정과제인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설립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 지원
-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및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여타 산업과 차별화된 별도의 지원조직이 필요

## 4 금융관련 국제협력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	159	373	214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금융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국제금융기구 활동 및 긴밀한 국제협력, 해외 IR 활동 등을 통한 해외 홍보 노력 강화

#### □ 사업내용

- 현 정부는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면서 FTA체결 다변화를 통한 실용적·능동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FTA·WTO 등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은 국정과제 사업임
- 적극적인 국제금융기구 활동,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적극적인 이해관계 반영 필요성
- FTA·WTO 협상을 위한 여비 등을 반영

## 5 금융전문인력 양성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2,000	2,000	1,500	△500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실무중심의 교육·연구를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

#### ☐ 사업내용

- 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금융전문교육기관 확충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국정과제 금융산업 발전방안(Ⅱ-3-6)]
-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설립된 KAIST내에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 지속
- 자통법시행 등에 따라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현장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학위 전문교육기관의 핵심금융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	80	72	△8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저축의식을 고양하고, 개인의 신용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신용카드·신불자 사태 등 과소비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

## □ 사업내용

- 한국은행이 적자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이관을 요청해옴에 따라 '08년부터 동 업무를 우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
- 건전한 소비문화와 더불어 건전한 저축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금융자원의 원활한 유통 증진
- 단순 예금중심의 저축문화에서 탈피하여 간접투자시장, 보험 상품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대국민 이해향상을 유도

## &lt;참 고&gt;

- 저축의 날 기념행사(10월 마지막 화요일)는 국민저축 정신을 양양 등을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부기념일로 지정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841	1,639	3,903	2,264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모기지론의 이차를 보전

## □ 사업내용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하여 모기지론 금리를 차등(0.5~1.0%p) 우대
  - 05.10.31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출시(1년간 한시 판매)
  - 07.8.27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재개

## 【 소득수준별 금리우대 내역 】

	차입자 연소득		
	16백만원 이하	16백만원 초과 ~ 18백만원 이하	18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모기지론 기준금리	만기별 기준금리		
이차보전금리	1.0%	0.75%	0.5%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0,000	7,000	3,000	△4,000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

☐ 사업내용

- 주택연금보증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업무비용 등으로 30억원 출연 (사업시행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 — &lt;참 고&gt; —

- ☐ 주택연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택연금 보증 공급확대 및 장기간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하여 자본금 성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부출연 필요

- 사업초기 일정기간은 자체수입 실적이 미미한 반면, 주택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경비 등 관리업무비 필요

-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며, 일정 수준의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운용배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법정 운용배수(30배) 초과 우려

##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79,120	89,206	65,000	△24,206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출연

\* 일반농어민 : 연 1.5 ~ 2.5%, 저소득농어민 : 연 6.0 ~ 9.6%

☐ 사업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 의거 정부는 매년도마다 저축장려금 예상소요액의 1/2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
  - '09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예상소요액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

## &lt;참 고&gt;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도시근로자와 농어민간의 형평성 문제\*, 농어민 소득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과 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 도시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 94.12 폐지

\*\* FTA, DDA 협상 등에 대비 농업·농촌에 향후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계획

- 동 저축의 근거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폐지를 추진
  - 동 저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만기(최장 5년)까지 법정장려금을 지급

##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50,000	0	100,000	100,000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부 모기지론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의 유동화증권(MBS, SLBS)을 발행함으로써 장기 채권시장의 육성·발전에 기여

#### ☐ 사업내용

- 지원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
  -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함
  - \* 납입자본금 : 4,766억원(정부 600, 국민주택기금 1,066, 한국은행 3,100)
- 법정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50배) 유지를 위해 자본금 확충 필요
  - 매년 유동화증권 잔액이 4~5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보증자리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09년 1,000억원 수준 정부출자

< 지급보증배수 추정 >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 지급보증 추정잔액(A)	141,696	197,101	249,835
▪ 년도말 자기자본(B)	4,603	4,090	5,090
▪ 지급보증배수(A/B)	30.8배	48.2배	49.1배



## 11 금융정보분석원(FIU) 운영

### 가.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888	1,122	1,102	△20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

#### □ 사업내용

- 9.11테러 이후 테러자금조달 억제와 관련한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예산 필요

- 비정규직보수 : 88백만원
- 관서운영비 : 454백만원
- 여비 : 210백만원
- 업무추진비 : 6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 155백만원
- 해외경상이전(국제분담금) : 113백만원
- 비정규직 보험료 및 자산취득비 : 20백만원 등
- 사업경비 합계 : 1,102백만원

## 12 FIU 전산망 구축·운영

###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3,982	4,182	4,757	575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 보완·운영

#### ☐ 사업내용

- 금융기관과 연계된 자금세탁방지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FIU에 입수되는 대량의 금융거래자료를 활용하여 혐의성이 높은 거래 및 거래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6천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FIU 전산망의 기능개선
  - 장비 임차료 : 2,850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695백만원
  - 위탁사업비 : 782백만원
  - 연구개발비 : 398백만원
  - 전산운영비 및 전산장비 구입 등 : 32백만원

\* FIU 전산망은 보안유지 필요성 등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대상이 아님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06	138	127	△11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조직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 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능력개발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 및 능력 개발을 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 사업내용

- 위탁전문교육, 금융전문가 강의 및 혁신강의, 권역별 금융포럼 개최, 정책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만족도 조사, 혁신학습단 운영
-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 및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 젊고 유능한 인재에 대해 우리위원회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에서 시행중인 YP(Young Professional)제도를 도입·운영

## 14 정보화 지원(정보화)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583	556	604	48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내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추진

#### □ 사업내용

- 금융통합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사업(130백만원) : 금융위·금감원의 전자민원창구를 일원화한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금감원 정보시스템과 연계 등을 위한 고도화 사업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241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애에 즉시 대처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 금융법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45백만원) : 금융위 소관 법령 및 감독규정, 각종 규정 및 지침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 디스크 증설, 조달수수료, 전용회선 사용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기타 운영 경비(88백만원)

## 15 정책연구개발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67*	592	500	△92

\* 구 금융감독위원회 결산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금융정책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통하여 정책수립·집행의 객관성을 도모

#### ☐ 사업내용

- 금융규제개혁 과제 지속 발굴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담보대출중 고정금리 대출의 비율 확대 방안 연구
- 금융상품판매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EWS모형의 설명력 및 속보성 제고 방안
-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 금융회사 통합법 제정을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방안 연구
-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연구
- 공시·불공정 제도 개선 방안 등

#### <참 고>

- ☐ 금융정책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어 고품질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필요

## 16 금융정책 알리기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0	0	280	280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정책·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금융위의 주요 정책을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등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극 홍보

\* 조직개편(舊재경부 금융정책국+舊금감위)으로 인해 '08년의 경우 등 사업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정책 및 부처 홍보에 애로

#### □ 사업내용

- 금융위 출범 이후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고객들의 알권리 충족
- 금융의 국제화·글로벌화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고객들을 위해 영문 홍보 강화
- 금융 문맹 및 소외자 등의 금융교육을 위해 정책 블로그 및 정책 알리미 도입을 추진하여 알기 쉬운 눈높이 맞춤 홍보 실시

#### ○ 세부 사업 내역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2명 채용 : 70백만원
- 정책 블로그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 45백만원
- 정책 알리미 도입 : 50백만원
- 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개발 : 50백만원
- 금융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개발 : 40백만원
- 자산취득비 : 25백만원

## 17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20,000	20,000	300,000	280,000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경제위기 이후 집행된 공적자금의 채무상환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제고

#### □ 사업내용

- 정부보증채(예보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 만기도래액\*중 재정 부담분 49조원(02말 기준)을 국채로 전환\*\*하고

\* 공적자금 부채 97조원('02말 기준)중 회수 가능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은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49조원 및 20조원 분담

\*\* 국채 전환(49조) : (03년) 13조, (04년) 12조, (05년) 12조, (06년) 12조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지원받아 25년(2003년~2027년) 이내에 상환
- 적정수준의 일반회계 출연이 안될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을 예탁받아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25년간('03-'27)일반회계(재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전출)할 예정

## 18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3,040	3,042	2,918	△124

### 나.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98년 IBRD로부터 전대차관자금을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지원 및 증권시장 선진화,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기술지원차관의 원리금 상환

#### □ 사업내용

- 원금상환 : 2,396백만원
- 이자상환 : 52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원금(\$)	2009년도 상환규모		
		계(A+B)	원금(A)	이자(B)
합 계	23,959,720	2,918	2,396	522
① 기업 및 금융구조 조 정 지 원	23,542,703	3,063	2,354	512
② 증권시장발전연구	168,737	22	17	4
③ 회계감사제도개선	248,280	32	25	6



### 13. 계약 및 해약 현황, 수의계약 현황

□ 2007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계약액	계약기간	수주자	계약방법
금감위 홈페이지 개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30	8.1~9.30	(주)코리즌	수의
정책홍보 관련 KTV 방송프로그램 제작 용역	15	12.7~12.20	한국정책방송	수의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22	7.24~10. 8	한국증권연구원	수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19	2. 6~12. 6	한국개발연구원	수의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21	9. 7~12.2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15	10.19~12.20	한국증권연구원	수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71	7.31~12. 3	(주)신세계아이앤씨	경쟁입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53	10.22~12.20	삼성에스디에스(주)	경쟁입찰
합 계	346			

□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집행액	계약기간	수주자	계약방법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30	7. 4~10. 3	한국금융연구원	수의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40	7.21~12.2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홈페이지 부분개편에 따른 용역 계약	9	8. 1~8.15	(주)코리즌	수의
FTA,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40	8. 1~12.24	법무법인(유) 태평양	수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37	8.13~12.12	언스트앤영어브 바이저리(주)	수의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22	9. 2~11.2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쟁입찰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46	8. 6~11. 4	(사)국제금융센터	경쟁입찰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30	7.28~10.26	한국금융연구원	경쟁입찰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19	7.11~8.29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경쟁입찰
합계	273			

※ 해약 내역은 없음

## 14. 종료된 혹은 진행 중인 소송 세부 현황

### □ '08.8말 진행 중인 소송 현황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불 포함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소송담당 (소송비용)	진행 내역
1	손해배상	동아정기 발행주식에 투자한 신OO 외 169명이 유가증권 심사과실 등 주장 (2004가합2964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2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플래닛팔이가 제재 과중을 주장 (2006구합13961)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진행 중
3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외 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2006구합15684)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4	부당이득금반환 등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실채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2006가합4250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5	손해배상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2006가합49593)	"	1심: 진행 중
6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처분 과중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6구합29270)	"	1심: 중선위 승 2심: 진행 중
7	손실보전금 등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부산) 조흥금고를 인수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2007가합42810)	법무법인 세종 (9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8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경제개혁연대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2007구합35166)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9	손해배상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융기관 예금자인 진솔건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요구(2007가합79195)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10	불합격처분 취소	권OO 외 41명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38028)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남OO이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2007구합43228)	"	1심: 진행 중
12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은 동양증권 퇴직자인 김OO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45408)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13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손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2156)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4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송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6561)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5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이OO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17028)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대한은박지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0383)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17	주식처분 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디엠파트너스 외 1명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3276)	"	1심: 진행 중
18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전OO가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4453)	"	1심: 진행 중
1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임OO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7018)	"	1심: 진행 중

## 15.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기간, 제목, 용역비, 연구자 등), 정책반영 결과

### □ 2007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정책반영결과
1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 08.03.04	45	한국증권 연구원 (노희진)	관련법 개정시 기초자료 마련
2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07.12.18~ 08.0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충열)	금융중심지기본계획에 반영, 관계기관과 추진협의 중
3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31	30	한국금융 연구원 (이병윤)	은행법 개정과정에서 참고 중
4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 07.12.24	29	한국금융 연구원 (이상제)	금융중심지법령 제정에 반영
5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조사	07.10.01~ 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준)	단기금융상품 거래, 금융상품 판매제도 등 금융인프라에 관한 제도정비에 활용
6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07.09.07~ 07.12.20	2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인석)	향후 자통법 개정 또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법률 제정(예정) 등 정책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
7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 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 시사점 연구	07.11.05~ 07.12.20	33	BHP 코리아(주) (한국회)	금융클러스터지정 추진방안 검토시 반영
8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09.21~ 07.12.20	28.5	한국법제 연구원 (박찬호)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제시 및 개정시 법률적 기초제공
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05~ 07.12.20	33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상일)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연번	제 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정책 반영결과
10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20	28.5	삼성케이피 엠지어드 바이저리 (강동원)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제 도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11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09.05~ 07.12.20	38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안형도)	혐의거래 상세분석기법 개발 등에 활용
12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모색	07.10.26~ 07.12.17	38	한국금융 연구원 (박재하)	금융중심지기본계획에 반영
13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02~ 07.12.17	19	한국금융 연구원 (김병연)	인력기초통계조사등에 반영
14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07.30~ 07.12.14	33.2	한국금융 연구원 (이병윤)	'08.11월 FATF 상호평가 대비 보고서 작성, 관계 기관 협의 등에 활용
15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07~ 07.12.07	10	케이티지 엘에스(주) (위명숙)	금융업권간 규제형평제 고 및 규제개혁 참고자 료로 활용
16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 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07.07.24~ 07.10.08	22	한국증권 연구원 (엄경식)	○상장규정 개정시 연구용 역 결과 반영 ○향후 자본시장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
17	어음제도 개선방안	07.02.01~ 07.04.30	14.25	한국금융 연구원 (김동환)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어음 제도 개선방안 추진 중

□ 2008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 번	제 목	기 간	용역비	수행기관 (연구자)	활용예정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04~ 08.10. 3	30	한국금융연 구원 (정찬우)	여전법 개정 작업시 활용
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08.7.21~ 08.12.20	40	아주대 학교 (이진국)	국내 현황에 적합한 주요 선진국의 심사분석 시스 템 고찰
3	FTA, DDA 등 금융서비스 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01~ 08.12.24	40	법무법인(유) 태평양 (정의종)	FTA금융협상 양허안 및 협정문작성에 활용
4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08.8.13~ 08.12.12	37	언스트앤영 어브바이저 리(주) (정태수)	향후 감독·검사업무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 본방향 연구용역	08. 09.02 ~08.11.21	22	연세대 학교 산학협력단 (연강흠)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등 기업 친화적인 자본시장 개편 방안 마련
6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 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0 6 ~08.11. 4	46	(사)국제금융 센터 (오창석)	금융위기 징후와 부문별 위기수준을 신속하게 파악
7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08.7.28~ 08.10.26	30	한국금융연 구원 (구정한김영도)	파생상품시장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방안마련
8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 용역	08.7.11~8. 29	19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윤덕용)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

## 16. 해외교육중인 직원 현황

(이름, 소속, 업무, 직급, 교육학교, 전공, 기간, 예산지원 내역, 교육기간중 받는 급여수준, 근속연수)

### □ 해외교육중인 직원 현황

이름	소속	업무	직급	교육기관	훈련과제 또는 전공	기간	근속연수	예산지원 내역	교육기간중 급여
이○○	본부	-	4급	레딩대 (영국)	주택금융 감독체계연구	07. 7 ~현재	10년 5월	(주1) 항 공 료 체 제 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주2) 봉급100% 수당100%
손○○	본부	-	5급	에라무스대 (네덜란드)	유럽의 자산운용산업 및 퇴직연금 연구	07. 8 ~현재	9년 5월		
손○○	본부	-	5급	콜로라도대-텐버	미국 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및 사모펀드관련 제도및시장연구	07. 6 ~현재	9년 5월		
이○○	본부	-	5급	상트갈렌대 (스위스)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금융개혁 추진방안	08. 7 ~현재	6년 5월		
선 ○	본부	-	5급	조지워싱턴대	미국 보험업관련 연구	08. 6 ~현재	7년 5월		
이○○	본부	-	6급	파리제1대학 (프랑스)	한-EU FTA체결에 따른 향후 경제협력 방향 연구	07.12 ~현재	5년 6월		
이○○	본부	-	5급	보스턴대	전업주의하의 은행산업 발전방안 연구	08. 6 ~현재	6년 5월		
최○○	본부	-	4급	듀크대	미국 사적연금 감독연구	08. 1 ~현재	14년 5월		
김○○	본부	-	4급	시카고 상업거래소 (직무훈련)	증권·선물시장의 현전연계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제도연구	07. 6 ~현재	12년 5월		
윤○○	본부	-	4급	시카고 상업거래소 (직무훈련)	증권시장의 자율규제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08. 6 ~현재	15년 5월		
최○○	본부	-	4급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직무훈련)	미국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감독시스템 조사·연구	08. 9 ~현재	10년 5월		

\* 국비장기훈련자 및 직무훈련자 : 훈련과제 명기, 유학휴직자 : 전공 명기

주1)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9조3항관련 별표 <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의거 행안부(교육훈련예산)에서 지급

주2) 교육훈련파견에 해당되어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이름	소속	업무	직급	교육 기관	훈련과제 또는 전공	기간	근속 연수	예산지원 내역	교육 기간중 급여
홍○○	본부	-	5급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유학휴직)	자산관리학	08. 6 ~현재	7년 5월	지원 없음	(주3) 봉급50% 수당50%
이○○	본부	-	5급	일리노이대 -어바나삼페인 (유학휴직)	경제정책학	08. 5 ~현재	5년 5월		
윤○○	본부	-	4급	일리노이대 -어바나삼페인	미국의 자본시장연구	06. 7 ~08. 5	12년 5월	(주1) 항공 체료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주2) 봉급100% 수당100%
						08. 5 ~현재		지원 없음	(주3) 봉급50% 수당50%

주1)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9조3항관련 별표 <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의거 행안부(교육훈련예산)에서 지급

주2) 교육훈련파견에 해당되어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주3)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항(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에 의거, 봉급 및 수당 각각 50% 지급

17. 최근 3년간 타 부처, 대기업 파견자 명단(이름, 소속, 직급, 파견기관, 기간, 주요업무, 파견사유 등)

□ 최근 3년간 타 기관 파견 현황

○ 2006년

성명	직급	파견 기관명	주요업무
전○○	4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전○○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김○○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최○○	4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
변○○	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경제정책
이○○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
김○○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

○ 2007년

성명	직급	파견 기관명	주요업무
전○○	4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전○○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이○○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박○○	4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
남○○	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경제정책
이○○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
김○○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

○ 2008년

성명	직급	파견 기관명	주요업무
김○○	고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금융규제·투자유치
신○○	4	미래기획단	신성장산업육성
김○○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금융규제·투자유치
이○○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금융규제·투자유치
이○○	4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금융 사이버 침해 방지 및 예방
이○○	5	미래기획단	국제자문단운영
김○○	4	대통령실	금융정책
배○○	4	대통령실	금융정책
강○○	6	대통령실	인사
남○○	4	서울특별시 금융도시담당관	금융중심지추진

18. 최근 3년간 타 부처 대기업 파견되었다 복귀한 명단(이름, 소속, 직급, 파견기관, 기간, 주요 업무, 복귀 후 주요업무 등)

□ 최근 타 기관 파견 복귀 현황

○ 2006년

성명	직급	파견 기관명	주요업무	복귀후 주요업무
전○○	4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금융위 소속기관 으로 편입
전○○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금융위 소속기관 으로 편입
김○○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금융위 소속기관 으로 편입
최○○	4	국민경제 자문회의	경제정책	KDI 교육과정
변○○	4	대통령자문정책위	경제정책	국제협력과장
이○○	4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김○○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	자산운용과

○ 2007년

성명	직급	파견 기관명	주요업무	복귀후 주요업무
전○○	4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금융위 소속기관 으로 편입
전○○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금융위 소속기관 으로 편입
이○○	5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분석	금융위 소속기관 으로 편입
박○○	4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	은행과
남○○	4	대통령자문정책위	경제정책	서울시 금융도시 담당관 파견
이○○	4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김○○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	자산운용과

## 19. 최근 3년간 금융위의 퇴직자 명단

성명	직책	퇴직일자	퇴직사유	재취업기관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의원 면직	하나금융지주
안00	별정4급	06. 2.27	"	한동대
양00	부위원장	06. 9.11	"	한국수출입은행
김00	별정6급	06.10.25	"	금융보안연구원
이00	별정5급	06.12.4	"	-
문00	상임위원	07. 2.28	"	금융감독원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	금융보안연구원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	보험개발원
윤00	위원장	07. 8. 3	임기만료	-
윤00	부위원장	07.12.21	의원면직	중소기업은행
박00	상임위원	08.1.2	"	예금보험공사
김00	위원장	08.3.5	"	-
이00	부위원장	08.3.13	"	-
이00	FIU원장	08.3.28	"	증권선물거래소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	은행연합회
김00	혁신행정과장	08.5.15	"	법무법인 태평양
윤00	계약직5호	08.6.7	"	-

## 20. 08.8 현재 임원/이사/고문/감사 현황

□ 고위공무원 이상 현황

직 위 명	성명	임용일	주요이력
위원장	전광우	'08.3.6(3년)	세계은행(IBRD)이코노미스트, 우리 금융그룹 부회장,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부위원장	이창용	'08.3.14(3년)	미 로체스터대 경제학교수, 서울대 경제학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위원
사무처장	임승태	'08.3.28	재경부 총무과장, IBRD 근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상임위원	김용환	'08.3.28(3년)	미 SEC파견,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08.3.28(3년)	Shearman & Sterling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재경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권혁세	'08.1.2(3년)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제국장,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영과	'08.3.28	재경부 규제혁신심의관, 경제협력국장
대변인	유재훈	'08.3.28	ADB 근무, 금감위 은행감독과장, 증권감독과장, IBRD 근무
기획조정관	조인강	'08.9.3	IMF 근무, 뉴욕총영사관 영사,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
금융정책국장	김주현	'08.3.28	ADB 근무, 금감위 감독정책과장, 감독정책2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김광수	'08.3.28	AfDB 근무, 금감위 법규과장,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공자위사무국장
자본시장정책관	홍영만	'08.3.28	EBRD 근무, 금감위 혁신행정과장, 증권감독과장, 홍보관리관

## 20-1. 08.8 현재 국장 이상 간부 현황 (인건비·월정직책급등 월지급액)

### □ 08.8 현재 국장 이상 간부 현황

(단위 : 천원)

직 위	성 명	연봉월액	월정직책급 (매월)	합 계
위 원 장	전광우	9,423	2,250	11,673
부위원장	이창용	8,992	1,350	10,342
사무처장	임승태	8,448	1,000	9,448
상임위원	김용환	7,782	1,000	8,782
"	이종구	6,914	1,000	7,914
"	권혁세	8,357	1,000	9,357
기획조정관	최수현	6,855	900	7,755
금융서비스국장	김광수	7,152	900	8,052
자본시장정책관	홍영만	7,198	900	8,098
금융정책국장	김주현	7,161	900	8,061

\* '08. 3월~6월중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41,201천원,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17,436천원이고, 기타 우리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130,921천원임



## 21. 06년 1월 이후 퇴직한 임원/이사/고문/감사 이직현황

☐ 06년 1월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현황

성명	퇴직당시 직위(직급)	퇴직일자	현 직위
석일현	기획행정실장(1급)	06. 2.15	하나금융지주 감사
안진원	서기관	06. 2.27	한동대 교수
양천식	부위원장(차관급)	06. 9.11	-
문재우	상임위원(고위공무원)	07. 2.28	금융감독원 감사
송철복	일반계약직4호	07. 6. 7	-
정채웅	기획행정실장(고위공무원)	07. 7.27	보험개발원장
윤증현	위원장(장관급)	07. 8. 4	-
윤용로	부위원장(차관급)	07.12.21	중소기업은행장
박대동	상임위원(고위공무원)	08.1. 2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용덕	위원장(장관급)	08. 3. 5	
이승우	부위원장(차관급)	08.3.13	
이철환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	08.3.2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병렬	FIU제도운영과장(4급)	08.4.30	은행연합회 감사
김영모	혁신행정과장(3급)	08.5.15	법무법인 태평양
최수현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	09.9.2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 22. 금융위 사무실 이전 문제 TF, 현재 진행 내역

### ○ 여의도 사무실 이전 관련 내부 찬반 투표 결과, 분석 결과

- 정부조직개편으로 금융위가 출범하면서 본부 조직은 서울지방 조달청사,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은 과천청사에 별도로 입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금융위 조직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각종 협회 등 금융유관기관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 조직의 융합, 금융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금융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측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인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지정과 연계하여
    - 금융위 청사를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한편,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격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지난 7.1일부터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 금융위-금감원 합동 민원실을 설치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현재 청사 이전을 위한 TF구성, 내부 찬반 투표 및 예산편성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음

## 23. 2008.3 퀵-히트 과제 사본 및 추진현황

### 가. 퀵-히트 과제 사본

☐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퀵-히트 과제 추진현황

#### (1) 온라인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추진 현황

☐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일반민원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08.7.1~)

○ 인허가 등 민원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민원인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http://www.fcsc.kr))에 접속하여 금융당국 관련 민원을 신청

※ 불필요한 방문·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적

☐ 인허가·등록 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회신

**< 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08.8.31 현재 기준) >**

구 분	인 허가		등록신고		유 권해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583	24	48	16	125	796

**(2) 금융회사 종류별 인가기준 다양화로 설립의 용이성 제고**

☐ '08.7.29일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제정 완료

- \*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적은 자본으로 특정 업무에 특화하는 전문 금융투자회사 진입 확대 (예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현재 100억원이 소요되나 부동산에 특화할 경우 20억원으로 가능)

**(3)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적극 검토 ('08.7월말까지)**

☐ '08.7.25일 8개 회사\*에 대한 증권업 허가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이상 종합증권업), 엘아이지투자증권(주), 토러스투자증권(주) (이상 위탁+자기매매업), 아이엔지증권중개(주), 애플투자증권중개(주), 바로증권중개(주) (이상 위탁매매업)

☐ '08년중 13개 자산운용사 신규 허가

- \* 엠플러스자산운용(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아이엠엠자산운용(주),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 메리츠자산운용(주), 더커자산운용(주), 블랙록자산운용(주),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주), 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 엘에스자산운용(주),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 지에스자산운용(주), 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

#### (4)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관련 추진 현황

□ 보험상품 개발·심사 절차 간소화 및 보험사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를 Quick-Hit 과제로 선정하였음

- 보험상품에 대한 Negative 규제를 도입하고 상품개발·심사 절차 간소화

\*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또는 사후제출을 의무화  
→ 보험사에서 개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상품 허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 허용

□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08.7.16~)이며,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예정

#### (5)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신속 정비

□ 은행이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와 사전협의 하도록 은행법에서 규정

\* 증권이나 보험사의 경우 사후보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원칙 사후보고, 예외\* 사전협의로 개선할 예정

\* 예 :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 등

□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타 개정사항과 함께 연내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예정

## Quick Hit 과제의 신속한 추진

◇ 규제개혁 과제중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Quick Hit)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추진

### 1) 민원사항에 대한 On-line One stop 모듈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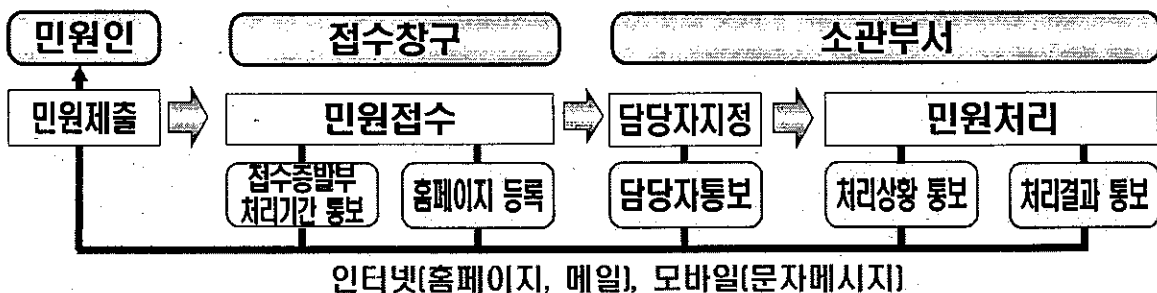
①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한 곳을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방문(One stop)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착

- 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유권해석의뢰, 정보공개청구, 단순 민원 등 다양한 민원종류별로 처리시스템 구축
-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인이 금융당국을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내부의 민원관리 프로세스를 개선

② 민원 제출이후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는 전과정을 금융당국이 On-line으로 통보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 민원접수/담당자/처리시간/처리상황/자료보완사항/처리결과 등을 금융당국이 인터넷, e-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세히 제공

#### On-line One stop 민원처리시스템 체계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On-line One stop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4.30)	시스템 개발 및 운영(6.30)			

## 2)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民願性 規制의 優先的 해소

### ① 금융회사 종류별 인가기준 다양화로 설립의 용이성 제고

-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와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신규진입요건 대폭 완화 (자통법시행령 제정)

### ②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허용

- 증권사 (13개), 자산운용사 (9개) 신설 인가여부 결정 ('08.7까지)

### ③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보험상품에 대한 Negative 규제 도입, 상품개발·심사 절차 간소화 추진(보험업법 개정)

\*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또는 사후제출을 의무화  
→ 보험사에서 개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상품 허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 허용

### ④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신속 정비

- 사전협의·신고 사항이던 해외점포 설치를 사후신고로 통일

\* 은행: 금융위와 사전협의, 보험·증권: 사후보고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민원성 규제 신속해소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보험업법개정안 입법예고	자통법시행령 제정		

## 24. 직급별 정원과 현원

□ 직급별 정·현원 (운영정원 기준)

(단위 : 명, 08.9.19 현재)

구 분	정무 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경찰	연구 사	계
정원	2	10	5	14	17	90	43	2	14	7	1	205
현원	2	9	3	17	20	94	44	0	16	7	1	213
계	0	△1	△2	3	3	4	1	△2	2	0	0	8

\*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 24-1. 외부기관으로부터 금융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현황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파견기관에서의 직위 및 담당업무, 금융위에서의 배치부서 및 담당업무, 비용지급기관 등)

### □ 외부기관으로부터 금융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2008. 8. 31 현재)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원소속 기관 담당업무	파견 기간	파견 사유 (담당업무)	비용지급 기관
	원소속	직위(급)	성명				
자문관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	금융회사 금융전략변화 연구	08.4.7~ 09.4.6 (1년)	위원장 자문업무	원소속기관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	금융관련 경영분석 및 건전성감독	08.4.21~ 09.4.20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	"	"	한○○	금융관련 경영분석 및 건전성감독	08.5.15~ 09.5.14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법률 자문관실	"	"	장○○	금융관련 경영분석 및 법규적용	08.6.23~ 09.6.15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	자산 관리공사	대리	이○○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전반, 공매업무	08.4.21~ 09.4.20 (1년)	일정관리, 회의준비, 자료수집	"
혁신 행정과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정○○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	정부업무평가, 혁신업무수행	"
"	자산 관리공사	과장	오○○	국유재산관리 담보채권관리	"	과징금 과태료 징수 및 관리	"

(2008. 8. 31 현재)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원소속 기관 담당업무	파견 기간	파견 사유 (담당업무)	비용지급 기관
	원소속	직위(급)	성명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조○○	법률자문 소송업무수행 감독규정심사	08.4.21~ 09.4.20 (1년)	법률자문, 소송업무 수행	원소속기관
"	예금 보험공사	과장	장○○	부실기관정리 송무업무	"	법률자문, 소송업무 수행	"
의사운영 정보팀	금융결제원	과장	박○○	금융정보공유 분석센터운영 정보보호기획	"	정보보안	"
"	예금 보험공사	과장	박○○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통신망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
금융 정책과	중소 기업은행	대리	이○○	외환여신취급 업무,종합기획	"	금 융 회 사 여신관련 통계	"
"	한국 증권금융	과장	정○○	우리사주 주가 지 수 개발,관리	"	외환 및 자본시장 관련 통계	"
금융시장 분석과	농협중앙회	"	황○○	자금운용 관련업무	"	금융시장 동향분석	"
"	한국 증권금융	대리	이○○	금융리스크 관리	"	금융시장 동향분석	"
산업 금융과	산업은행	과장	박○○	산업은행 경영전략, 경제분석	"	국 채 은 행 민영화 관련 업무	"
금융구조 개선과	예금 보험공사	과장	김○○	예금보험 제도 연구	"	공적자금 및 예 보 관 련 업무	"
"	"	주임	황○○	정리금융 공사 관련 업무	"	공적자금 및 예 보 관 련 업무	"
글로벌 금융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신 BIS협약 도입업무	08.6.23~ 09.6.15 (1년)	금 융 회 사 진 · 출 입 지원	"
"	산업은행	과장	이○○	기업금융 업무	08.4.21~ 09.4.20 (1년)	금 융 클 러 스터 지원	"

(2008. 8. 31 현재)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원소속 기관 담당업무	파견 기간	파견 사유 (담당업무)	비용지급 기관
	원소속	직위(급)	성명				
은행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윤○○	은행법규 은행건전 경영 지도	08.6.23~ 09.6.15 (1년)	은행 산업 동향 파악	원소속기관
"	예금 보험공사	주임	한○○	불공정거래 관련통계 자료 작성	08.4.21~ 09.4.20 (1년)	금융 시장 동향 파악	"
보험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외국계 원수사지점 검사업무	"	보험 산업, 보험 시장 관련 업무	"
중소서민 금융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정○○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인·허가	08.4.21~ 09.4.20 (1년)	상호저축 은행 관련 업무	"
"	"	"	장○○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 검사	08.6.23~ 09.6.15 (1년)	여신전문 금융업, 상호금융	"
자본 시장과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이○○	제도개선 종합기획 업무	08.4.21~ 09.4.20 (1년)	유가증권· 코스닥규정 제·개정	"
"	증권업협회	과장	허○○	분쟁자율 조정업무	"	증권산업 자율규제	"
자산 운용과	증권예탁 결제원	과장	신○○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업무	"	자산운용업 통계 조사 및 관리	"
공정 시장과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박○○	불공정거래 심리, 심의 조정	"	증조심안건 검토, 시감위 현안 검토	"
"	공인 회계사회	감리위원	전○○	기업공시 시스템구축, 회계연구 위원회 운영	"	회계감사기준 검토, 회계 법인등록	"
FIU 제도운영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김○○	금융회사 인·허가 감독업무	08.6.23~ 09.6.15 (1년)	검사 지원 및 사후관리	"
FIU 심사기획팀	"	수석검사역	이○○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업무	08.4.21~ 09.4.20 (1년)	금감위·금 감원 요청 거래 분석	"

## 25.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 1. 기본방향

- ☐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
- ☐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민 피해 예방
- ☐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 2.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 (1)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규업무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활성화 유도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자기앞 수표 발행 허용 ('08.4),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09 상반기 예정)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서민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상정 예정)

## (2)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 □ 대부업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 강화

- 관계부처가 '대부업 정책협의회' 운영 중
- 대부업자의 부당·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추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 추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 (3)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31만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기록을 삭제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08.6.2)
- 사금융 실태조사('08.3월~5월)를 토대로 「금융소외자지원 종합대책(7.24)」을 마련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9.2일)하여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재조정하고
  -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
- \* '08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09년부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
-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소외자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 및 간이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 이외에도 소액서민금융재단('08.4)을 통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

## 26. 경제부총리 주관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안건 사본 일체

□ 대부업 정책 협의회는 운용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회의 안건은 안건 내용과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붙임> 첨부1~4

 <b>재정경제부</b>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참고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li> <li>•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li> </ul>
<b>생 산 일</b> <b>담당과장</b>	<b>2006. 12. 27</b> <b>박영춘(02-2150-2370)</b>	<b>보도일시 2006. 12. 28(목) 11:00부터</b> <b>답 당 자</b>	<b>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b> <b>이상규(02-2150-2372)</b>

## 제 목: 제 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6.12.27(수) 09:3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경제부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동 협의회는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장관회의(12.19)에서 구성·운영기로 결정

□ 금번 협의회에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침을 확정하였음

○ 장관급 협의회는 대부업 정책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보고하기 위하여 매분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재정부 차관보 주재)를 두고, 부처별 실행과제의 선정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실무협의회 산하에 과제별 T/F를 설치하여 부처소관별 이행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보고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정부),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 (행자부·금감위 공동), 불법사금융 단속(법무부)

○ 시·도의 원활한 행정협의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시·도별로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기로 함

□ 아울러 07년 중 추진할 부처별 제도개선 사항 및 실행 사항을 확정하였음

○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07년 1~3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 1월은 사전홍보와 더불어 탐문, 광고분석 신고센터 접수사례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3월 기간 동안 집중 단속 실시

○ 재경부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홍보 방안,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추진기로 하였음

○ 행자부·금감위 공동주관으로 07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 상시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감위는 서민금융 119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활동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특히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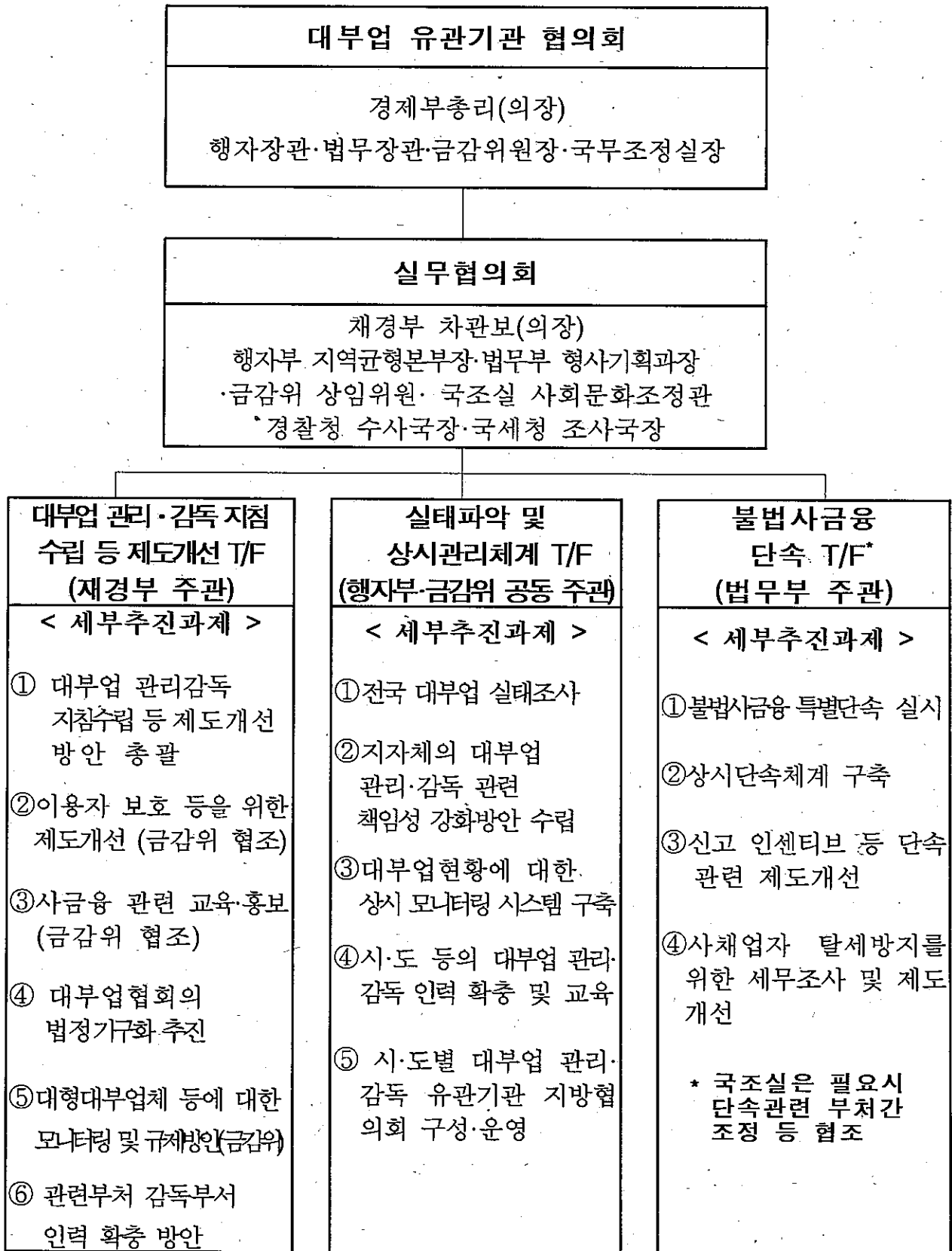
○ 법무부 주관 하에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정통부·행자부 등 단속기관간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대부업 관리·감독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준법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고리채·불법추심·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해 나가시기로 하였음

##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lt;참 고&gt;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안)

 재정경제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
	<b>보도일시</b>	<b>2007.6.5(화) 15:00 부터</b>	
<b>생 산 일</b>	2007.6.5(화)	<b>생산부서</b>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경제정책국 복지경제과
<b>담당과장</b>	박영춘 과장(2150-2370) 이재영 과장(2150-2180)	<b>담 당 자</b>	김연준 사무관(2150-2372) 박은숙 사무관(2150-2184)

## 제 목 :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7.6.5(화) 15: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장관, 금감위원장,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참고1)

※ 동 협의회는 '06.12.19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성·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 12.27 제1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대부업 제도개선, ②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③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한 ④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결과〉

- ① (최고이자율 인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70%→60%로 인하하되,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실행이자율을 결정

②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지자체가 관리·감독시 업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제정을 추진 (☞참고2)

-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절차와 함께, 판례·단속사례·유권해석 등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침의 유용성과 이해도를 제고

③ (상시모니터링)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참고3)

\* DB 구축은 행자부가, 자료의 검토·분석은 금감위가 담당

- 감독당국에 대한 대부업체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의무 부과
-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금감위(원)·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불법사금융 단속)·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
  -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세적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http://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

④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중소형 업체의 경우 반기보고, 대형대부업체(자산 70억원 이상)의 경우 분기보고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세분화\* (☞참고4)

※ 대형대부업체 비중(대부잔액의 83%), 대부규모(업체당 811억원)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기관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

- 회사분할, 법인화 기피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특수관계인의 자산을 포함하여 70억원이 넘는 경우, ②개인·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대형업체에 준하여 모니터링

⑤ (실태조사) 결산시기에 맞추어 실태조사를 정례화

- 반기별 결산시기(3월, 9월)를 기준으로, 매년 4월, 10월중 2차례 실태조사

\* 은행법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12.31일을 결산일로 하고,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공고

⑥ (상시단속체계)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 경찰이 현장단속을 전담하고, 검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검사가 경찰 수사지휘 및 송치 후 처리 전담, 중형유도에 주력

\* 필요시 금년 하반기 중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재설정

- 제1차 단속시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2명)·국무총리 표창(5명)을 수여하는 한편, 향후 단속의 공로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⑦ (허위·과장광고 규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자율·대출 조건 등을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의 방식·문구 등을 규제하는 한편,

-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도 직접 단속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조사 이후에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참고5)

- ⑧ (인력·조직 보강) 대부업 관리·감독과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결정

- 무엇보다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을 총 71명 증원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지자체별 인력 총원 기준(행자부 안)>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증원인력 (명)	4	2	2	5	6	2	2	19	2	4	3	5	4	2	7	2	71

- ※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수가 70개에 미달되어 금번에 증원되지 않은 지자체도 향후 70개 초과시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강
- 법률 소관부처인 재경부에 1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행자부·금감위에 담당인력을 각 1명씩 증원키로 함
- 이자제한법 시행 전까지 경찰청의 단속전담 인력 총원도 추진

- ⑨ (법률구제지원) 이자제한법 시행(6.30)시 이자제한법 관련 법정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 법무부 중심으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법률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참고6)

**10 (금융소외계층 지원)**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 계층(25만명 추가지원)에 대하여 사용목적별로 적절한 금융 기회를 제공 (☞참고 7)

- 재정자금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지원 강화
-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및 소액보험(Micro - insurance) 제도 도입
  -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제도를 통한 창업 등 자활지원
- \* 공익기금 : 사회투자재단(7월중설립예정), 휴면예금관리재단(6월이후 설립예정), 사회공헌기금(9월이후 설립예정)

〈참고1〉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대부업정책협의회

경제부총리(의장)  
법무부장관·행자부장관·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국무조정실장

실무협의회

재경부 차관보(의장)  
법무부, 행자부, 공정위, 금감위, 국조실,  
경찰청, 국세청

관계기관  
협의회

시·도 및 지방  
경찰·공정위  
·국세청·금감원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경부 주관)

- 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 총괄
- ②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금감위 협조)
- ③ 사금융 관련 교육·홍보 (금감위 협조)
- ④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추진
- ⑤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금감위)
- ⑥ 관련부처 감독부서 인력 확충 방안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  
(행자부·금감위 공동 주관)

- ①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 ②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수립
- ③ 대부업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④ 시·도 등의 대부업 관리·감독 인력 확충 및 교육
- ⑤ 시·도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구성·운영

불법사금융  
단속 T/F\*  
(법무부 주관)

- 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② 상시단속체계 구축
  - ③ 신고 인센티브 등 단속관련 제도개선
  - ④ 사채업자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제도개선
- \* 국조실은 필요시 단속관련 부처간 조정 등 협조

## 《참고2》

##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1. | 대부업의 개념 |**

①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② 판례에 따른 “업”의 의미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  
(대판 94. 4. 28. 93다54842 판결 등)

○ 다만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인바,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즉, ① 영리의 목적(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②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③ 영업의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영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성)



## 2. | 대부업 등록 |

### 가. 등록대상 여부 판단(법 제2조, 제3조)

#### ☐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정의

- 금전의 대부는 물론 어음할인, 전당포,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 해석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 받은 대출모집인(재경부 보험41207-323)
-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모집인은 등록대상에 포함

### 나. 대부업체 상호선택시 주의사항(법 제3조)

☞ 위반시 제재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여신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되므로 대부업체는 물론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도 유의할 필요

★ (법개정 추진중) 대부업자 명칭에 “대부업” 명시 (대부중개만 하는 경우는 “대부중개” 명시)

### 3. | 대부계약 체결 前 단계 |

#### 가. 대부광고·게시(법 제9조)

☞ 위반시 제재내용 : 과태료 5백~2천만원, 영업정지

- ☐ 이자율, 등록번호 등 대부 표시·광고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표기**

★ (법개정 추진중) 광고의 문안·방식 등을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안·방식 관련사항은 재경부 장관이 정함

- ☐ 광고내용에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권고사항)

\* 예시 : 서울시 대부업 등록 제000호

\*\* 사례 : 부동산 담보대출 가족소유 부동산[비밀보장]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가족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 (법개정 추진중) 이자율·대부조건 등과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 및 불법을 유도·조장하는 광고 금지

#### 나. 명의대여 등의 금지(법 제9조)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대부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 법 위반에 해당**

- 명의를 대여한 등록 대부업자는 명의대여 금지 위반, 명의를 차용한 무등록 업자는 대부업 등록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예시 : 무등록업자 甲이 등록업자 乙의 명의를 빌려 대부계약을 체결

- ☐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은 '계산의 주체' 및 '계약의 당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4. | **대부계약 체결** |

☞ 위반시 제재내용 : 과태료 5백~2천만원, 영업정지

##### 가. 계약서 교부·보관의무(법 제6조)

- ☐ 대부계약 체결시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1부는 대부업자가 보관(2년간)
- ☐ 대부금액, 대부업자의 명칭, 부대비용 등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금지

##### 나. 대부조건 설명의무(법 제9조①)

-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설명
  -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 **권고사항**

##### 다. 과잉대부 금지(법 제7조)

☞ 위반시 제재내용 : 영업정지

- ☐ 과잉대부란 차주의 소득 및 재산수준 등을 고려할 때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로서 대부업법은 이를 금지
  - 변제능력은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상환 능력도 포함, 과잉대부의 판단시점은 개별 계약 체결시를 기준
  - 과잉의 판단대상은 대부금액은 물론 대부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며, 이자율은 법 제8조(이자율의 제한)에서 별도 규율

## 5. | 이자율 제한(법 제8조)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가. 이자율의 최고 상한

□ 대부업자는 연66%를 초과하는 이자수취 금지

○ 사례금·수수료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법원에 지급하는 실비)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간주 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나. 선이자·선수수수료 공제

□ 대출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 선수수수료 등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이자율 한도 초과여부 계산시 원금에서 제외

○ 대부계약 체결후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

[사례]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5만원, 수수료 명목 5만원을 공제한 90만원만 지급, 1달후 원금 및 이자로 총 105만원을 수취

<이자율 계산> 이자율(%) = 이자/원금×100

- 원금 : 최초 지급받은 90만원

- 이자 : 15만원(1달후 지급한 105만원 - 최초 지급받은 90만원)

- 1개월 이자율 = 15만원/90만원×100 = 16.7%

- 연 이자율 = 1개월 이자율×12 = 200%

## 다. 이자제한법과의 관계

- ☐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제한은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고, 이자제한법\*은 그 밖의 모든 대부계약에 적용

\* 법 연 40%, 시행령 연 30% (07.6.30 시행)

- ☐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모두 적용

- 연30% 초과 이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연66% 초과이자 수취시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 (법개정 추진중) 무등록업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30%)을 적용

## 라.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의 성립시기

- ☐ 1회라도 이자율의 최고상한(연66%)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때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성립

- 계약기간 전체를 통산, 수취이자가 이자율의 최고상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법화하지 못함

### **[법제처 유권해석]**

- ☞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

## 6.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법 제10조)

### 가. 적용대상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또는 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

☞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여전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중복 적용

### 나. 추심관련 금지행위

☐ 폭행 · 협박 · 위계 ·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시 제재내용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관련 사례 >

-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 · 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 ·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권고사항)

## □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 관련 사례 > —

- ▶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 채무자에게는 채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6월이하 영업정지

### — < 관련 사례 > —

-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

## □ 말·글·영상·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 관련 사례 > —

- ▶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부적절한 시간 : 21:00 ~ 08:00)
  - \* 다만, 야간근무 등으로 일반인과 수면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정 필요
- ▶ 필요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7. | 중개의 제한(법 제11조의2) |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중개를 의뢰한 금융이용자를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연결하는 행위 금지

- 일반인이라도 (중개)대부업자에게 금융이용자 소개를 의뢰하는 경우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를 받는 행위 금지

-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에 대한 대가를 수취

## 8. | 감독·검사 및 제재

☐ 대부업 등록을 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권한을 보유

- 대부업체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통해 감독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
- 다른 지자체\*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요청 가능

\* 감독대상 대부업체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에 속하는 영업소를 둔 경우

\*\* 2개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 월평균 대부잔액 10억원 초과, 금융기관과 연계

- 감독상 필요한 명령(시정명령 포함),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부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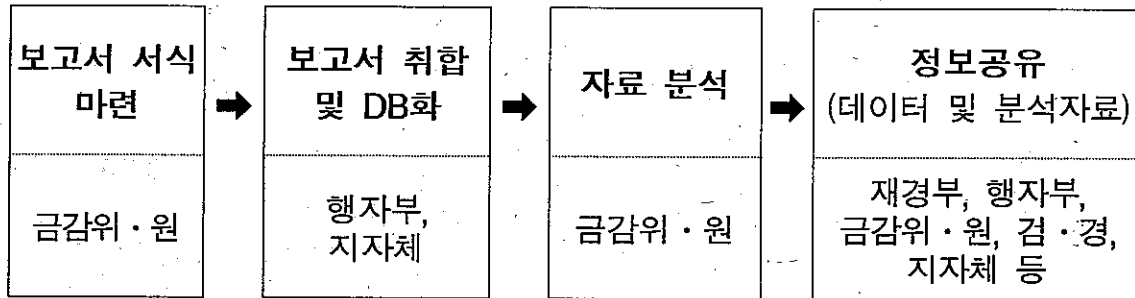
☐ 제재절차는 대부업법 및 행정절차법 준수



## 《참고3》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행자부·금감위)

## &lt; 추진 단계별 업무 분장 &gt;



## 1. 업무보고서 서식 마련 [금감위·원 주관]

## □ 업무보고서 내용 및 보고주기

☞ 대부업체의 자산규모에 따라 보고내용과 주기를 차등화

- 개인, 소규모법인은, 반기별로 상호, 등록번호 등 일반 현황과 대출금, 차입금 규모 등 기본 영업현황을 보고
- 대형업체(자산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등)는, 분기별로 기본 영업현황 외에 대출내역 등 상세 재무자료를 보고
- 보고시한은 분·반기 종료후 1월 이내

## □ 업무보고서 서식 마련

- 지자체 및 대부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보고서 서식을 마련('07.6월)

※ 대형업체의 기준, 업무보고서 서식, 보고주기 등을 추후 대부업 법령에 반영

## 2. 대부업 현황관리 및 DB화 [지자체 주관]

- ☐ 지자체는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DB화
  - 지자체별로 대부업체 일반 현황 외에 감독·검사 및 행정 조치 결과 등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최대한 DB로 구축
- ☐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 ※ 현재, 70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대한 전담인력 보강 추진중(행자부)

## 3. 업무보고서 취합 및 DB화 [행자부 주관]

- ☐ 지자체가 취합한 영업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DB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07년말)
  - 행자부, 금감위·원, 지자체, 대부업협회 등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 T/F 구성·운영
-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http://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

## 4. 자료 분석 [금감위원 주관]

- ☐ 행자부가 취합한 DB를 토대로 대부업체 일반현황\* 분석
  - \* 대부업체수, 대부잔액, 대부수익 등
- ☐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실시

## 5. 관계 부처간 정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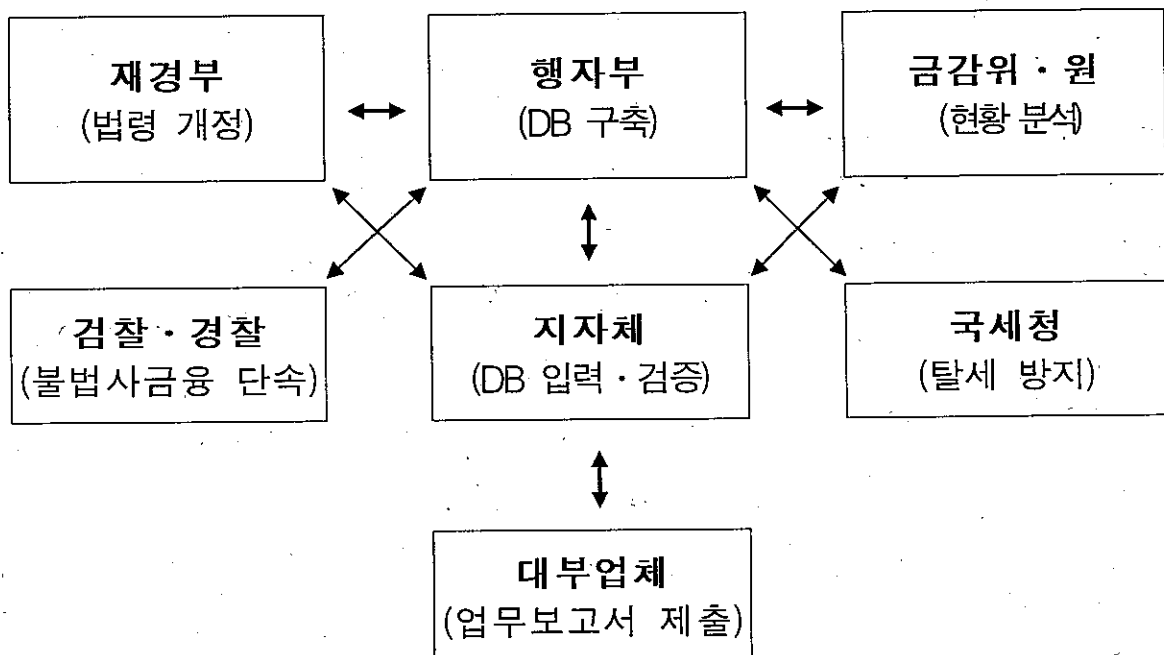
### □ 정보공유 필요성

-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금감위·원, 검찰·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공유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

### □ 정보공유 방안

- 행자부에 수집된 대부업체 자료(DB) 공유
  - 관계 부처는 ID를 부여받아 전산시스템에 수시 접근
- 금감위·원은 행자부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대부업정책 협의회」에 분기별로 보고

〈정보 공유 체계〉



## 〈참고4〉

##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방안(금감위)

- 자산 70억원 이상 외감대상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형 업체(반기보고)보다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분기보고)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세분화\*\*

\* '06말 현재 140개(총 대부업체수 17,210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

- 회사분할이나 개인 또는 유한회사로 등록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 강구

- 자산 70억원 미만의 회사라도 특수관계인\*의 자산 포함시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감대상 업체에 준하여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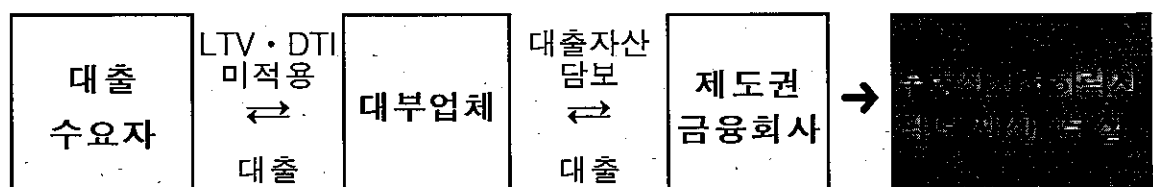
\* 계열회사, 주요주주, 임원 등(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개인 또는 유한회사 등의 경우에도 자산(개인의 경우 평균 대출 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해 대부업체 지원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

- 대부업체가 국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 담보대출 취급 등을 확대할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리스크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을 차단

<대부업체 대출에 따른 은행 등의 부실우려(예시)>



## 〈참고5〉

### 허위·과장광고 조사 및 향후 계획 (공정위)

#### 1. 조사현황

- ☐ 5월 15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중
  - 조사대상 업체는 그동안의 모니터링(4월부터 실시) 결과를 토대로, 허위·과장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
    - \* 모니터링은 인터넷, TV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는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
- ☐ 조사사항은 이자율 등의 대부조건, 대부받을 수 있는 자격, 대부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임

#### 2. 향후계획

- ☐ 6월초까지 현장조사를 완료
- ☐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를 거쳐 부당 광고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조치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 《참고6》

##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제 지원(법무부)

## 1. 현 황

- 이자제한법 시행(6.30)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로 자력으로는 법률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

⇒ 저소득층 법률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

## 2.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

- (대 상)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 관련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서 월 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등 저소득층 국민을 구조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 고리사채 이용자를 별도의 구조대상자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필요시 별도 지정 방안 검토

- (적용범위) 고리사채 이용 후 채권자측의 지급 요구에 대한 거절,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의 반환청구 등 이자제한법 관련 채권자와의 모든 법적분쟁에 대한 구조 가능

- 고리사채를 이용한 저소득층 국민이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참고7〉

##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2007. 6. 5(火)

재정경제부

## I.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 정부재정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자금수요별(교육·의료·자활 등)로 적절한 금융기회 마련

- ① (재정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지원 강화
- ② (공익기금)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및 소액보험(Micro - insurance) 제도 도입
  -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제도를 통한 창업 등 자활지원

\* 공익기금 : 사회투자재단(7월중설립예정), 휴면예금관리재단(6월이후 설립예정), 사회공헌기금(9월이후 설립예정)

### 1. 【재정사업】 학자금 대출확대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① (교육) 중·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폭 확대(07.2학기부터)

\* 대학생 이상, 연 50만명, 2조원 규모

#### 교육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소득기준	이자경감폭	혜택범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2% 할인(이공계 무이자) → 무이자	연 17만명
· 대출자 70% (수급자 · 차상위 제외)	국고채 이자율 → 2% 할인	연 18만명
· 대출자 30%	국고채 이자율 유지	연 15만명



## ② (의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저소득층 범위 확대 (최저생계비(4인기준 121만원) 130% → 150%, 1만명 추가)

\*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06.3월 도입)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2회 지원

## 2.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민간사업] 의료비·교육비 대출제도 도입 및 소액대출·소액보험제도 도입

### ①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환시점을 소득발생시점과 연계한 교육비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

- 본인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시점의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
- 대출금 상환시 정확한 소득과약을 위해 대출제도와 과세·4대보험 징수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장기교육비 대출제도(안)

	장기교육비 대출제도(안)
지원대상	· 저소득 고등학생으로 연간 약 9만명
대출한도	· 연 200만원, 총 600만원
상환기간	· 본인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이자납부	· 상환시점에 함께 납부(후불 이자)
대출금리	· 상환당시의 소득기준 - 저소득자 : 무이자·저리, 고소득자 : 적정 금리 부여
투자규모	· 연 1,800억원 수준으로 공익기금 등 활용

## ② (의료비 대출제도 도입)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긴급한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비 대출제도를 도입

- \* 중저소득층은 건강이 회복되면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 제도를 통한 지원제도를 마련

-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계층 (약10만명)에 대해 단기간·적정금리로 의료비를 대출

### 의료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 현 행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30%)	
· 개선안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30% → 150%)	의료비 대출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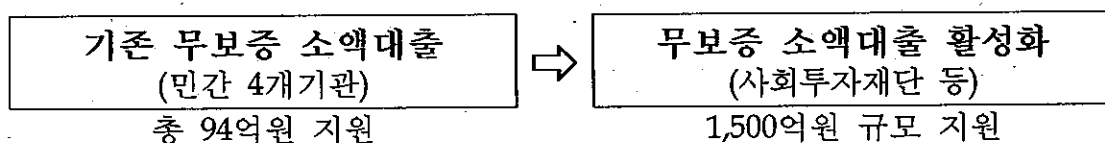
## ③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 제도 활성화

- 제도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의 창업·자활을 지원

- \* 그동안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규모가 작아 (4개기관, 총 247억원, 94억원 지원)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한계

- 다양한 기관들의 창업·취업지원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창업·자활성공률을 제고

### 자활·창업 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 4 소액보험(Micro-insurance) 제도 신규 도입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교육보험 등 민영소액 보험상품 개발하여 미래의 급전수요에 대비

- 보험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빈곤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요발생시 보험금 지급

\* 연간 가구소득 3,600만원 이상 가구 가입률은 90~93%인 반면 1,200만원 미만 가구 가입률은 35%에 불과(보험개발원)

○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험 설계사 이외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Ⅱ. 예상지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① 지원규모(안) : 약 25만명 추가보호 (약 0.6조원 추가투자)

	현 행		추진계획(안)	
	지원규모	소요재원	지원규모	소요재원
① 긴급복지지원	3.5만명	재정 340억원	1만명	정부예산 100억원
② 장기교육비 대출	-	-	9만명	공익기금 등 1,800억원
③ 의료비대출제도	-	-	10만명	공익기금 등 2,000억원
④ 무보증소액대출	493건	민간 94억원	7,500건	공익기금 등 1,500억원
⑤ 소액보험	-	-	5만명	공익기금 등 1,000억원
계			25만명	추가정부예산 : 100억원 공익기금 등 : 6,400억원

\*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경감(35만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

### ② 재원조달방안

① 학자금대출(08년 468억원) 및 긴급복지지원 확대(약100억원)  
: 정부 재정에서 추가지원

② 교육비 대출, 의료비 대출, 무보증소액대출 및 소액보험 :  
공익기금\* 등 활용(약 0.6조원)

\*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

### Ⅲ. 향후 일정

---

① 재정사업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내용 확대


-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는 예산에 既반영되어 있고 07년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복지부 예산에 반영 추진중 (08년예산에 반영 목표)

②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사회투자재단 등이 설립 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내 지원 실시

- (사회투자재단) 7월중 설립예정
- (휴면예금등관리재단) 6월 임시국회에서 휴면예금특별법이 마무리 되는 대로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 설립
- (사회공헌기금) 하반기중 발족 예정(9월 이후)

③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마련

-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 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 및 공익기금 등 기부대상 단체의 투명성 제고

 재정경제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b>보도일시</b>	<b>2007.11.5(월) 15:00 부터</b>	
<b>생 산 일</b>	2007.11.5(월)	<b>생산부서</b>	금융정책국 중소기업금융과
<b>담당과장</b>	이상현 과장(2150-9650)	<b>담 당 자</b>	이석란 사무관(2150-9653)

## 제 목 :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 ☐ 정부는 2007.11.5(월) 15: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금감위부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참고1)

※ 동 협의회는 '06.12.19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성·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 12.27일 제1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07.6.5일 제2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대부업 제도개선, ②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③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시장동향을 조사해 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마련

###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및 대부업체의 모범기준(Best Practice) 역할을 할 지침을 제정
-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지침안을 확정하여, 11월중 지자체 등에 배포 계획
- 향후, 지침안은 운영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 추가적인 법령 해석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

② (상시모니터링)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 행자부·지자체가 정기적(대형대부업체는 분기, 중소형업체나 개인은 반기)으로 대부업 DB를 구축하고 금감위가 자료의 검토·분석

-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중('07.10~11)
  -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2월중 결과 발표
-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금감위(원)·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불법사금융 단속)·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
  -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http://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

③ (상시단속체제)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 내년에도 필요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④ (홍보강화) 이자제한 내용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관련 홍보를 강화

\*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금감원, 10.8~23, 865명) 결과 이자제한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44.5%, 이자제한법 시행이후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이용자는 13.1%

- 서민금융안내 책자, 이자제한법 해설책자 등을 제작하여 11월중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

○ 특히,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제를 강화할 예정(☞참고2)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법률내용과 구조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⑤ (서민금융공급 확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 제공**

○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 기존 서민금융 대출제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

\* 대부업체 이용자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연이율 35%~48%)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상품  
(실적 : 5.21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32건, 28.7억원을 대출)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급전수요에 따른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07.2학기부터)

\*\* 07.10월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최저생계비 130% → 150%, 1만가구 추가)하는 긴급복지법시행령 개정중(08.1월 시행)

○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계층에게는 다양한 대안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제고

- 내년 1/4분기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 창업·취업지원 대출, 교육·의료비 지원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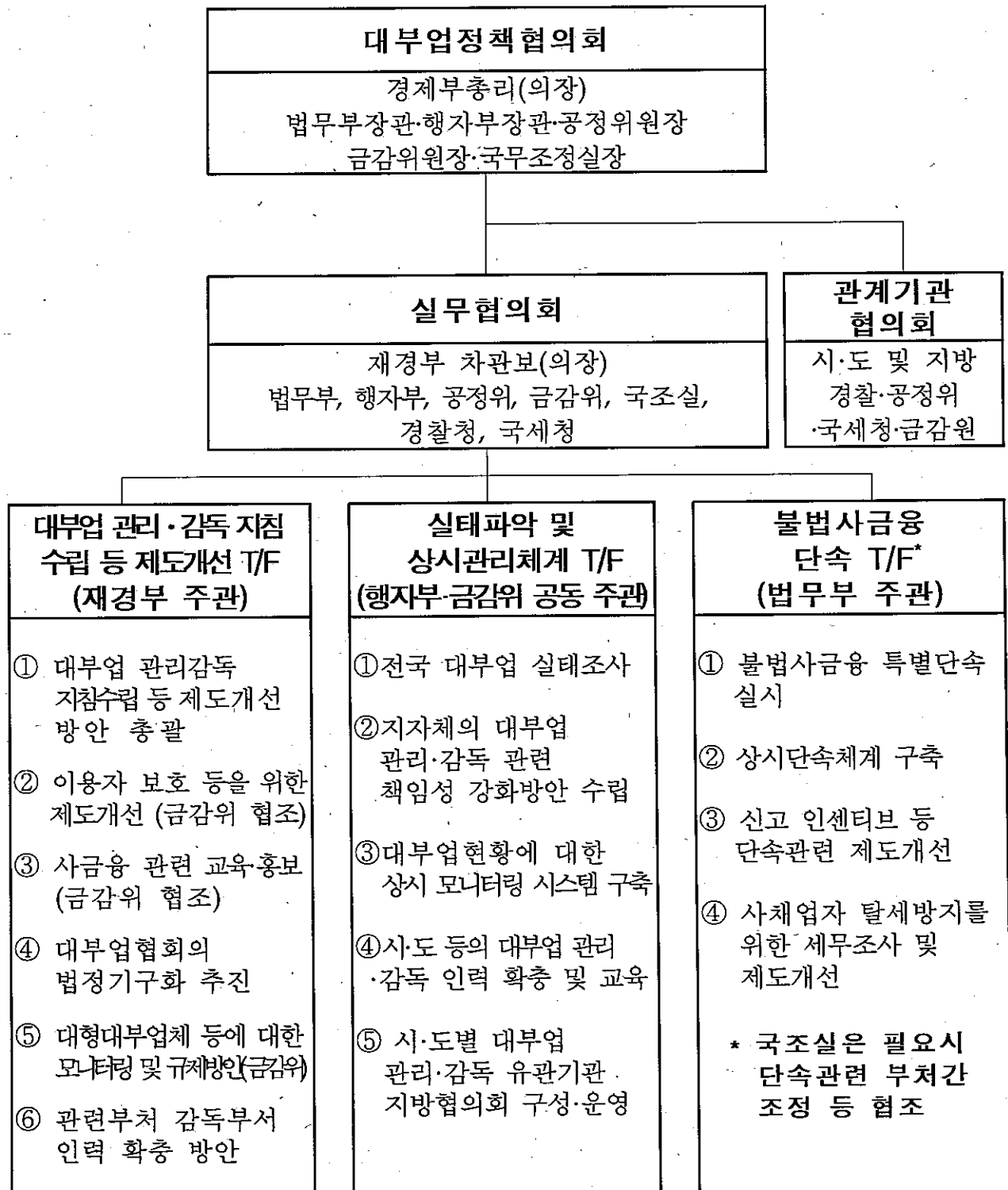
-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교육 등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에 특화하는 재단으로 설립 추진중(11월 설립 예정)

- 11월말 이후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운영재단이 설립되면 영세서민을 위한 소액보험지원 가능



# 〈참고1〉

##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 《참고2》

##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법무부)

## 1. 현 황

- 이자제한법 시행(6.30)으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로 자력으로 법률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

⇒ 저소득층 법률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

## 2. 법률구조공단의 이자제한법 관련 법률구조

## 【 법률구조대상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

- ▶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농·어·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영세담배소매인/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

## 【주요 법률상담 사례】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나 원본에 충당이 가능함을 설명  
▶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약정한 이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중 초과부분은 무효임을 설명  
▶ 이자제한법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


### 3. 향후 추진계획

####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지속적 추진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등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

####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홍보 강화('07.10.~11.)

- 공단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국정홍보처 전광판 활용 홍보, 안내 리플렛(10만부) 제작·배포,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 관련 서식 게시
- 유관기관과 협조,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구조 홍보 강화

 <b>금융위원회</b>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책임자	이상현 과장(2156-9850)	담당자	이석란 사무관(2156-9854)
배포일	2008. 6. 2.(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15매

## 제 목 :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8.6.3(화) 15:00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법무부·행안부·기획재정부 차관, 공정위부위원장(☞참고1)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②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③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현황, ④금감원 직권검사 추진실적 및 계획, ⑤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결과》

- ① (사금융 실태조사)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 금번 실태조사의 의의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엔 부적합
-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 (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기타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별첨 참조(☞참고2)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② (불법 사금융 단속)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 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장\*,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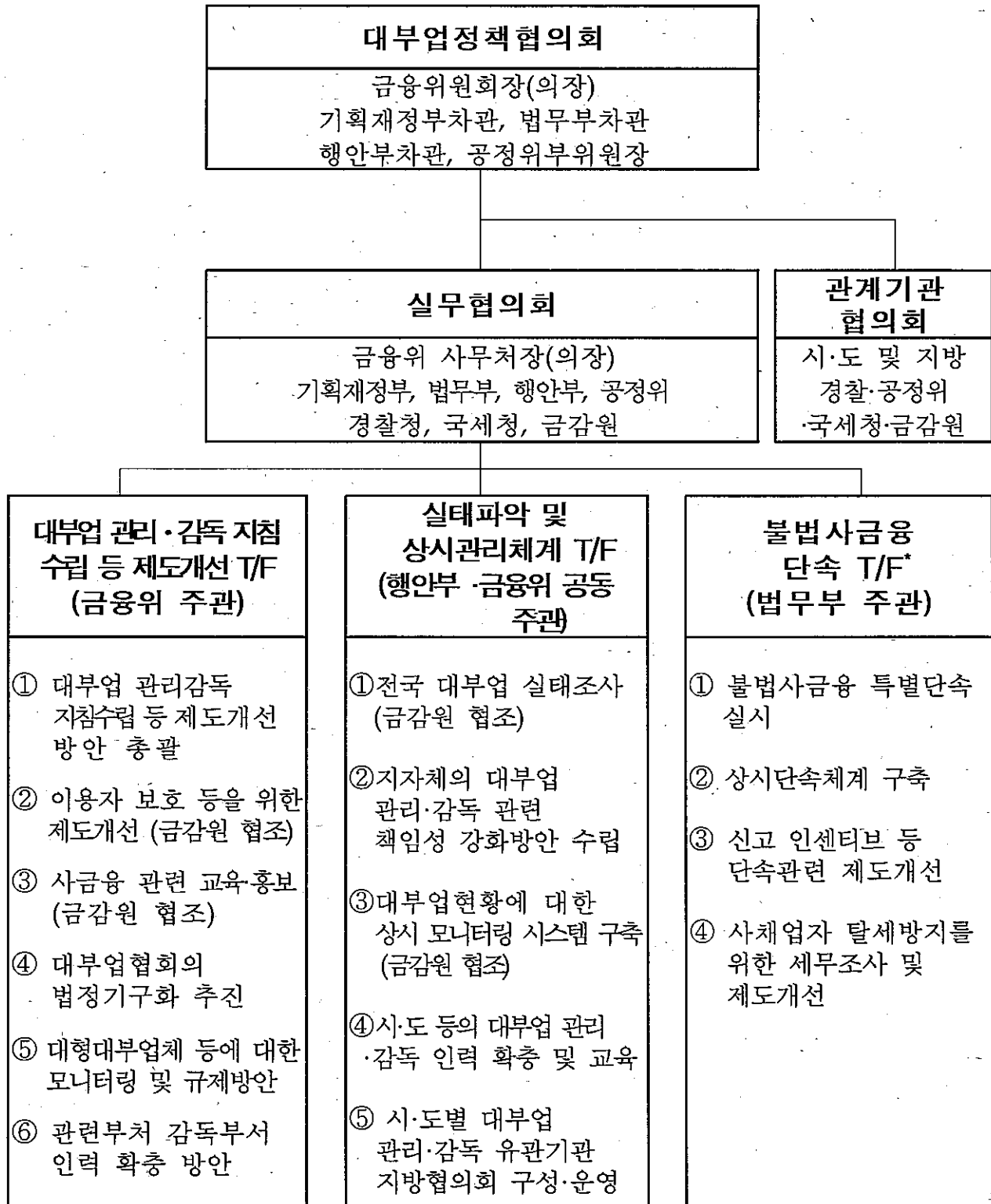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참고1》

## 대부업 정책협의회 구성



##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 목 차 >

#### I. 조사개요

####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 III. 정책 시사점



## I. 조사 개요

### 1. 목 적

-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자(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대부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
  - ➡ 지원 가능한 대상의 범위, 지원한도 등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함

### 2. 경 과

#### ①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체 등록업자 대상 : 전국 약 18,000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으로 조사
  - \* 자료분석이 가능한 7,058개 대부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일부 현장조사 : 247개\* 등록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및 임원 면접
  - \* 대형업체 67개, 중소법인 80개, 개인업체 100개

####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국민 조사 : 1만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 사금융 이용자 조사 :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 기존 데이터 활용 : 한신평정, 한신정 CB에 등록된 약 3,500만명의 대출정보 분석

##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① (사금융 이용자)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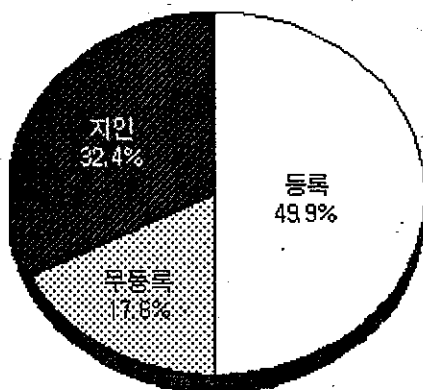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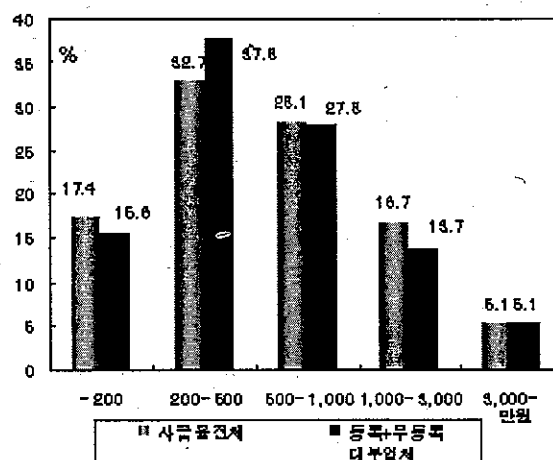
- 이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 (127.6만명×783.4만원\*)

\*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사금융 이용 형태>



<사금융 대출 금액>



##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 ①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와 무등록 대부업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 ② (제도권 대출 이용) 사금융 이용자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천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 신용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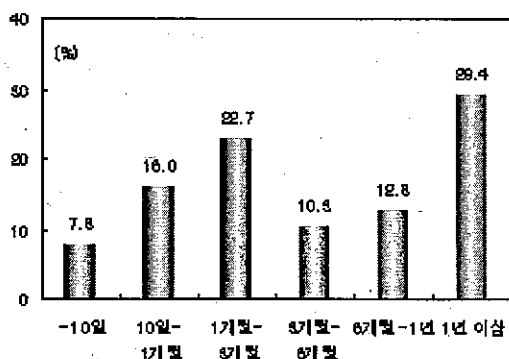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53.0%, 3천만원 이하가 84.7%, 5천만원 이하는 91.7%로 평균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중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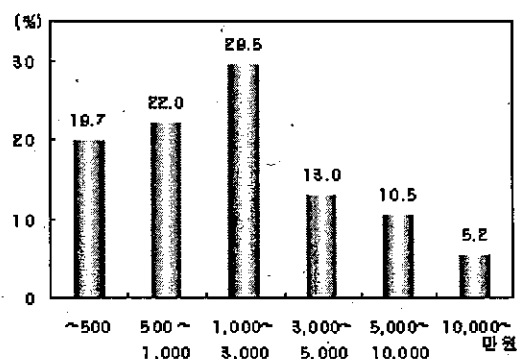
\* 전체 국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3개월 이상 연체)은 5.2%

- 이중 3개월 이하 연체자는 32.2%이고, 3개월~1년 연체는 29.2%, 1년이상 연체는 37.2%

<사금융 연체일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



###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 ①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 ('07.10.4일부터 시행)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② (이용업체수)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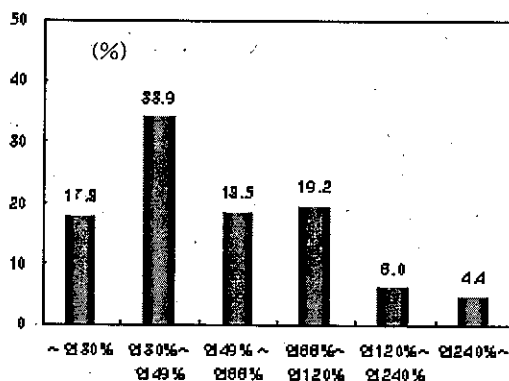
\* 이용업체수 : 1군데(48.5%), 2군데(19.4%), 3군데(17.2%), 4군데(6.6%), 5군데 이상(5.1%)

#### ③ (대출형태) 사금융 시장의 76.0%는 개인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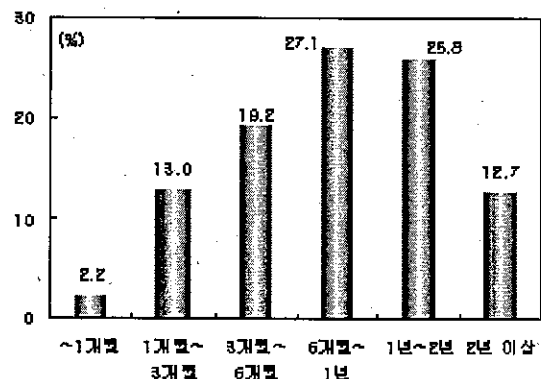
\* 개인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 대출은 8.6%

#### ④ (상환기간) 일반적인 사금융 상환기간은 3개월~1년(46.3%)이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사금융 연 이자율>



<사금융 평균 상환기간>



####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① (사금융 이용계기)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

-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임

② (상환의지)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력(73.6%)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10.4%)으로 상환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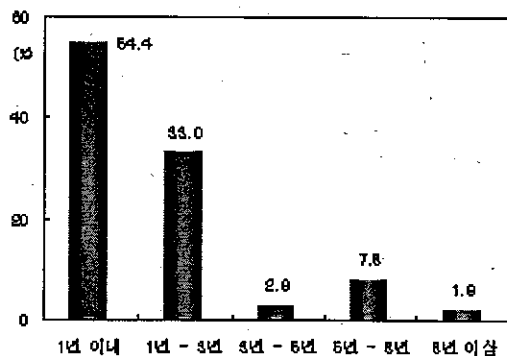
\* 기타답변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6.2%), 추가대출로 상환(3.2%), 새로운 신용회복 대책 기다림(3.2%), 개인회생이나 파산 활용(1.8%), 현행 신용회복 기구 이용(1.5%)

-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에는 36.5%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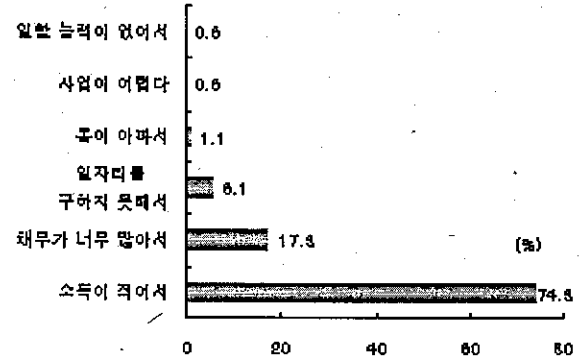
- 이들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고 한 이용자는 54.4%

- 상환할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사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시기>



<연체 대출금 미상환 이유>



③ (상환능력)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대출상환 가능금액은 월평균 5만원, 정상상환자는 약 62만원

\* 연체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66만원, 정상 상환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23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총채무액(제도권+등록+무등록)은 100% 미만인 69.8%이고, 100~120%가 5.2%, 120% 이상이 25%

- 사금융 이용자중 6.3%는 무직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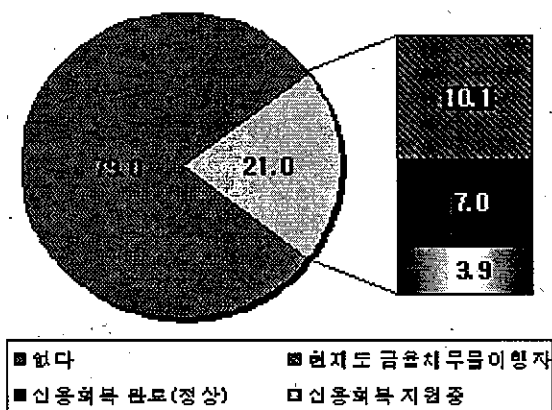
- 현재, 개인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남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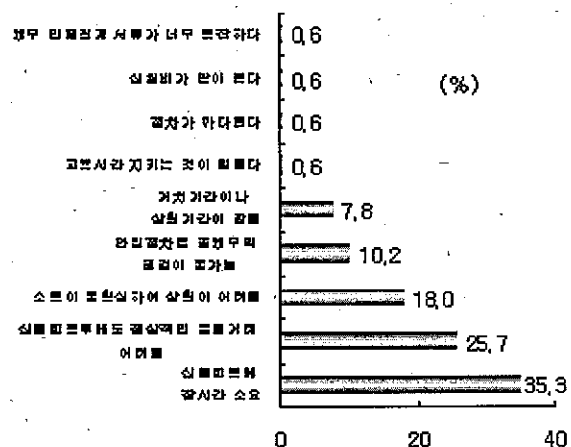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 중인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신용회복 지원제도 불편사항>



⑤ (기초수급자)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있는 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인 27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06년 현재 약 153만명으로 전국민의 3.2% 이지만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자중 비중이 낮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3만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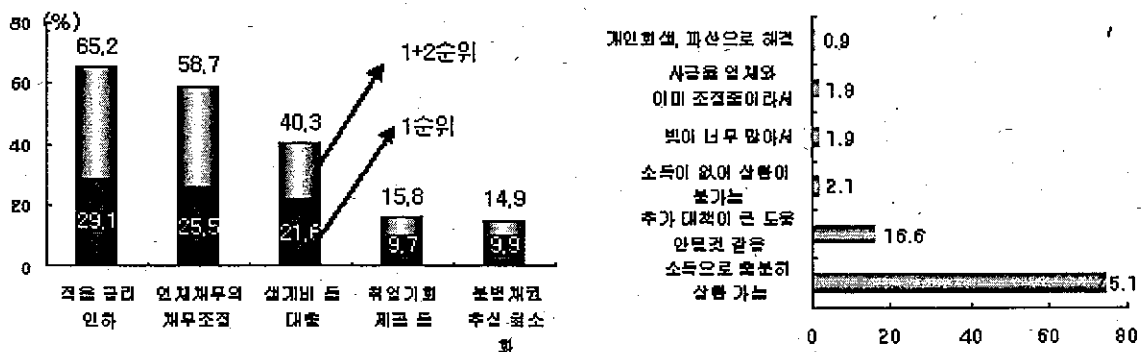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 연체자(286만명)의 약 3.6%, 대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8%

⑥ (정부대책) 정부의 추가적인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61.6%)이 많은 반면,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다소 낮음 (46.2%)

○ 사금융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장기분할 상환)', '생계비 대출'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신용회복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기 때문이 대부분 (75.1%)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 <신용회복 추가대책 비참여 이유>



○ 또한, 정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5%가 참여의향을 밝힌 가운데, 창업관련 지원을 주로 희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7.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대출 32.6%, 중소기업 취업지원 13.3%, 직업훈련 11.9%, 공공근로 4.7%

### Ⅲ. 정책 시사점

#### ①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전 국 민  4,700 만명	대출 있음 (1,774 만명)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정상상환 (1,339만명)	정상상환 (49만명)	정상상환 (42만명)
		금융채무불이행 (240만명)	금융채무불이행 (20만명) -돌다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신용회복중 (67만명)	대부업체 대출만 연체 (2만명)	
	대출없음 (2,926만명)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은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 ②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의 모든 제도권·사금융 채권을 일괄하여 조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채권매각 등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을 추진하며
  - ③ 불법대부업체의 참여등을 위해 신복위, 대부업 협회 등 민간기구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③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활동이 제한되므로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연체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에서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고,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연체채권은 추심을 통해 어느정도 상환받을 수 있어 매각의사가 없음

#### ④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 상황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
- ➔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황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

#### ⑤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책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현재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지원제도 시행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

#### ⑥ 채무외의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의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들은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보다는 창업 지원을 희망
  - 지원제도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완수하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27-1. 대부업과 관련한 부총리 지시사항

□ 대부업과 관련한 부총리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대부업 관련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상황 점검 지시('07.1.15일)
- ② 대부업과 관련해 그간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진행 상황 점검·보완 차원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 ('07.9.20일)

## 27-2. 금융위에서 마련한 대책

- 정부는 '06.12.27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대부업 이용자 보호 등 대부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①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가, ②계약서 작성시 중요 사항의 자필기재, ③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 적용 등

- 또한, 향후 (가칭)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28-1.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입장, 견해

□ HSBC는 9.25일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 이에 금융위(금감원)는 同 일자로 HSBC의 승인심사를 종료하였음

**28-2. 김광수 금융서비스 국장의 발언 관련하여  
론스타에 과태료 부과를 실제할 것인지 여부**

- 9.2일 정부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 이후 9.8일 일부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
-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의결 등 은행법에 따른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28-3.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론스타가 주식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① 은행법 시행령 별표

- 최근 5년간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과태료 부과처분이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유권해석 07.7.20)

- 시행령 별표 '최근 5년간 은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도 포함

□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법 제16조의 4에 따라 주식매각 명령도 가능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주식매각명령 여부는 충분한 절차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28-4. 법원 1심 판결을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

- 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사자인 론스타는 현재 직·간접적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 결과에 따라 론스타 및 이해관계자의 법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였음
- 07.3월 감사원이 舊 금감위에 대해 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 바,
  - 舊 금감위는 혈값매각 사전 재판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음



**28-5. 법원 1심 판결 결과로 론스타의 매매 계약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법원 1심 판결에서 론스타의 불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03년 론스타의 인수승인(한도초과보유승인)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나,
  -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위해서는 승인처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의 존재, 법률상 이익의 비교 형량 등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
  -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취소가능여부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함
- 다만, 금융위가 인수승인을 취소한다할지라도 론스타와 舊 주주(코메르츠, 수은)간의 매각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 舊 주주들이 취소하는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 28-6.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산업 자본 가능성 여부

□ 03년 승인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등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 심사결과 대주주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음

## 28-7.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지연되는 이유

- ☐ 현재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심사결과를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 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체된 이유는
  - 해외부분의 투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감독당국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론스타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
- ☐ 다만, 론스타가 9.8일 일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동 자료에 근거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

## 28-8.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가능성

- ☐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위가 무효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학설 다수와 판례의 일관된 견해임
- ☐ 또한, 직권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내린다할지라도 론스타와 舊 주주간의 03년 매각계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 舊 주주들이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

## 28-9. 론스타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이후 유사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

- ☐ 현재 론스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직 론스타의 불법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먹튀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 다만,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음

## 28-10.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가격과 HSBC에 매각금액

### ☐ 외환은행 매입금액

- 03.10.30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가액 1.38조원
- 06.5.30 Call option 행사 지분 14% 0.77조원

### ☐ 외환은행 매각금액

- 07.6.22 블록세일 14%, 1.19조원
- HSBC 계약 금액 51%, 6.06조원\*

\* 단 07말 배당액만큼 차감 예정

28-11. 론스타의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 대응방안

□ 금번 HSBC가 계약을 포기한 것은 론스타와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파기한 것이며

○ 또한, 現 시점에서 국제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토록 하겠음

## 29. 최근 5년간 공적자금 회수현황

### □ 최근 5년간 공적자금 회수현황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	계
2003년	5.6	2.4	1.1	9.1
2004년	5.7	1.4	0.2	7.3
2005년	3.6	2.1	0.1	5.8
2006년	3.4	4.8	0.2	8.4
2007년	4.4	0.8	0.2	5.4
2008년 (1~6월)	1.0	0.4	0.3	1.7

### □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단위 : 조원, %)

연 도	지원액	회수액	회수율
2003년	161.1	62.9	39.0
2004년	165.0	70.2	42.6
2005년	168.0	76.1	45.3
2006년	168.3	84.5	50.2
2007년	168.4	90.0	53.4
2008년 6월	168.5	91.7	54.4

\* 지원액, 회수액은 연도말 누적금액이며, 08년은 6월말 기준



## 30.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 1. 기본방향

- ☐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
- ☐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민 피해 예방
- ☐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 2.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 (1)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규업무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활성화 유도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자기앞 수표 발행 허용 ('08.4),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09 상반기 예정)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서민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상정 예정)

## (2)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 □ 대부업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 강화

- 관계부처가 '대부업 정책협의회' 운영 중
- 대부업자의 부당·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추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 추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 (3)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31만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기록을 삭제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08.6.2)
- 사금융 실태조사('08.3월~5월)를 토대로 「금융소외자지원 종합대책(7.24)」을 마련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9.2일)하여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재조정하고
  -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
- \* '08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09년부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
-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소외자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 및 간이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 이외에도 소액서민금융재단('08.4)을 통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

31. '07년 10월 이후 재정부(기재부), 한은,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과 주고 받은 공문서 대장 목록  
(비밀문서 포함)

☐ 해당 문서목록 첨부

(단, 위의 기관과 주고 받은 비밀문서는 없음)

구분	등록일자	문서번호	제목	수신자(발신자)
생산	2007.10.02-13:25	혁신행정과-3972	파견 공무원 호봉발령 사항 통보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생산	2007.10.18-18:00	시장감독과-2604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송부	금융정보분석원(심사분석실)
접수	2007.11.12-15:22	시장감독과-2825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7033434)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금융정보분석원
생산	2007.11.14-21:40	시장감독과-2856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송부	금융정보분석원(심사분석실)
접수	2007.12.07-11:01	시장감독과-3068	2007년 4/4분기 범죄행기관협의 회 개최 안내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금융정보분석원
접수	2007.12.13-16:33	시장감독과-3111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7031073)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금융정보분석원
접수	2008.01.08-13:04	시장감독과-29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7041271)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금융정보분석원
접수	2008.02.12-08:51	시장감독과-246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7040488)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금융정보분석원
생산	2008.03.11-09:32	혁신행정과-187	파장급 인사발령 통지	금융정보분석원
생산	2008.03.27-09:35	혁신행정과-390	파견검사 인사발령 통지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국제 경찰청, 경찰청
생산	2008.04.04-15:16	혁신행정과-495	파견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경 청
생산	2008.04.18-18:12	공정시장과-533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송부	금융정보분석원
접수	2008.04.22-09:12	공정시장과-540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8020620)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금 영정보분석원
접수	2008.04.22-09:13	공정시장과-541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8010831)	금융정보분석원
생산	2008.05.01-19:50	혁신행정과-928	경찰청 파견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생산	2008.05.02-09:21	공정시장과-660	FATF 권고사항 이행보고서 작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분석원
생산	2008.05.02-18:53	혁신행정과-956	법무부 파견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기획 행정실)
접수	2008.05.15-15:44	공정시장과-725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8016018)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금 영정보분석원
생산	2008.06.16-13:48	감사담당관-49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
생산	2008.06.16-13:48	감사담당관-49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
생산	2008.07.14-16:11	혁신행정과-1922	관세청 파견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관세청(운영지원과), 금융정보분 석원(기획행정실), 금융정보분 석원(심사분석2과)
접수	2008.08.27-14:49	공정시장과-1976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사(102008046511)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금 영정보분석원

연도	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2006	1	12	30	8	0	170	101	2	3
	2	17	20	8	1	197	92	0	0
	3	16	30	9	0	231	98	3	5
	4	24	30	19	1	151	75	0	4
	5	18	18	8	0	401	103	0	11
	6	21	25	9	1	192	116	5	11
	7	14	23	8	0	177	90	2	6
	8	14	22	8	1	188	80	0	9
	9	21	26	6	0	217	92	0	2
	10	16	17	6	0	120	59	2	2
	11	14	14	8	1	129	74	0	3
	12	20	15	9	0	285	98	2	3
2007	1	28	34	9	1	143	66	1	2
	2	17	29	4	0	109	62	3	0
	3	11	20	7	1	161	95	0	2
	4	16	30	3	1	123	82	0	2
	5	16	29	4	0	127	89	0	3
	6	15	20	3	0	138	67	1	2
	7	12	18	3	3	157	102	0	3
	8	7	25	2	1	122	76	0	2
	9	9	23	1	0	124	77	3	1
	10	13	29	2	1	135	91	2	0
	11	12	18	0	0	161	86	1	1
	12	18	31	1	2	140	90	0	2
2008 (9.25까지)	1	11	23	0	0	135	83	0	1
	2	11	19	5	1	166	71	0	1
	3	15	10	3	3	90	64	2	0
	4	19	36	6	10	205	87	2	2
	5	11	50	4	8	145	97	3	1
	6	24	118	8	12	300	188	2	0
	7	15	63	2	9	161	111	1	0
	8	13	43	3	6	84	74	0	1
	9	0	3	0	0	14	11	0	0

## 32. 06년이후 금융위가 진행한 금융관련 법령 제정, 개정 내역, 현재 개정중인 법령현황 및 사유 등

### □ 2008년도 금융위 입법추진 실적

법률명	분류	일자	주요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08.1.17	신협중앙회 별단예금을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호 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8.2.29	금융위원회 설치 등 정부 조직개편 내용 반영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08.2.2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폐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08.2.29	경영관리위원회 위원 수 축소(11인→ 9인)
은행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보험업법	개정	08.3.14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사기 행위 금지 의무 신설, 배당보험 이외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근거 마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신탁업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08.3.28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보유주식 처분시한(5년이내) 폐지 등

법률명	분류	일자	주요 내용
증권거래법	개정	08.3.14	주권상장법인에 외국주권 및 DR상장 법인 포함
		08.3.21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외감법 준용
선물거래법	개정	08.3.14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08.3.28	임원결격 요건 강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08.3.21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 시 감사인의 잘못을 금융기관이 입증
예금자보호법	개정	08.9.26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적용기한을 2011.8.31일까지 3년 연장

## □ 2008년도 금융위 입법추진 계획

연 번	법안명	주요내용	진행 상황	국회 제출
1	예금자보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보험료율 상한(0.5%) 적용기한 연장(3년)</li> <li>◦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 사항</li> <li>※ 이중에서 예금보험료율 적용기한 연장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국회 기 통과('08.9월)</li> </ul>	국회 제출 완료	'08.7.21 (제출)
2	여신전문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 대출범위 확대</li> <li>◦ 여전사의 자금차입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한 영업효율성 제고</li> <li>◦ 신용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허위·과장 설명 등)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li> </ul>	"	'08.9.4 (제출)
3	공인회계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신설(국제적 회계 제도 자문으로 한정)</li> <li>◦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규율</li> <li>◦ 외국공인회계사의 한국 회계법인 출자(5년 이후부터 1인당 10%미만, 총 50%미만)</li> </ul>	"	'08.10.10 (제출)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li> <li>◦ '09년부터 적용이 허용('11년 상장회사 의무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상장기업 적용 국제회계기준 vs. 비상장기업 적용 Local회계기준)</li> <li>- 재무제표의 명칭 및 종류 조정</li> </ul> </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및 보고 회수 조정</li> </ul>	법제 심사	'08. 10.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 제도 강화</li> <li>◦ 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의무화</li> <li>◦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도입</li> </ul>	"	'08. 10.



연 번	법안명	주요내용	진행 상황	국회 제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 제도 도입</li> <li>○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 (45일 → 60일)</li> <li>○ 자사주 취득 등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규정 이관</li> </ul>	법제 심사	'08. 11.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자 등의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등록 관리 강화, 영업현황 정기보고 의무화 등</li> </ul> </li> <li>○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계약시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상호에 대부업 명시 등</li> </ul> </li> </ul>	"	'08. 11.
8	한국개발펀드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개발펀드(KDF)의 조직 및 업무 범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을 최소화하고, 자산 관리 업무는 산업은행에 포괄 위탁</li> <li>-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간접적인 On-lending 방식으로 추진</li> </ul> </li> </ul>	규제 심사	'08. 11.
9	산업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 업무범위 확대 및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li> <li>○ 산업은행의 지주회사화 근거규정 신설</li> </ul>	"	'08. 11.
1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승인하에 주식·회사채 매입 허용</li> </ul> </li> <li>○ 업무검사 대상기관 확대</li> </ul>	"	'08. 11.
11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권자본금 규모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현재 자본금 4조원)</li> <li>○ 업무방법서 작성변경을 금융위 승인 → 보고로 가능하도록 함</li> </ul>	"	'08. 11.
12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신협의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금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당 최대 출자좌수 상향조정 등</li> </ul> </li> <li>○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장의 비상근화 등</li> </ul> </li> </ul>	입법 예고	'08. 11.
13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의 임면·임기,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li> <li>○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li> </ul>	입법 예고	'08. 11.

연 번	법 인 명	주 요 내 용	신 행 상 황	국 회 제 출
14	보험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상품 심사 체계를 사전규제 ⇒ 사후 감독 체계로 개편 등 업무 자율성 확대</li> <li>◦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등 판매채널 제도 혁신</li> <li>* 다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책임성은 강화</li> </ul>	부처 협의	'08. 11.
1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은행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 수준 보다 완화</li> <li>◦ 동일업종 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임원겸직 허용범위 확대</li> <li>- 예: 이중업종간 임원겸직 허용</li> </ul>	"	'08. 11.
16	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소유규제 합리화</li> <li>◦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의 겸영 허용 등 은행 업무범위 확대</li> </ul>	"	'08. 12.
17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저축은행"외에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사용 허용</li> <li>◦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허용</li> <li>◦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상근임원의 겸업 금지 추가</li> <li>◦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li> <li>- 저축은행의 거액여신한도 비율확대 등</li> </ul>	"	'08. 12.
18	불법 추심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채권 추심관련 규제를 단일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제하여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저신용·서민층에 대한 보호강화</li> </ul>	입안 중	'08. 12.
1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의 허가제 ⇒ 등록제로 완화</li> <li>◦ 해킹, 추심이체 출금 등의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li> </ul>	"	'08. 12.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신용파생상품과 연계한 유동화 (합성 CDO) 등 새로운 유동화 기법 반영</li> <li>◦ ABS 거래의 건전성 제고·인프라 정비</li> </ul>	"	'08. 12.
21	증권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증권제도 도입</li> <li>- 전자등록의 효력, 등록기관의 요건, 등록의 절차, 기발행 실물증권의 전환, 투자자 보호 등</li> </ul>	"	'08. 12

### 33.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사본, 매뉴얼개선방향 및 진행경과 10개 은행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및 실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담당자 수

#### ①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관련

☐ 검사매뉴얼 : 붙임 1(검사매뉴얼) 참조

☐ 검사매뉴얼 개선방향 및 진행경과 관련

-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단계(검사전, 검사실시, 검사후)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
- 우리원은 수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검사매뉴얼 작성지침 등을 마련하여, 검사수탁기관에 이를 제공·운영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사업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연구수행기간 : '08.8-12, 주요연구내용 : 중장기적 감독·검사업무 방향, 검사수탁기관 검사업무 내실화 방안 등

#### ②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 각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중 : 붙임 2 참조

## 붙임 2) 은행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및 검사담당자 수

항 목 은행명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책임부여*	보고책임자** 임명 여부	검사담당자 수***	비 고
국민은행	역할 및 책임 부여 예정	기 임명, 운영	128명(검사부)	
우리은행	"	"	74명(검사실)	
신한은행	"	"	30명(검사부)	
하나은행	"	"	38명(검사부)	
외환은행	"	"	46명(검사부)	
시티은행	기 운영	"	31명(검사부)	
SC제일 은행	"	"	50명(검사부)	
농협중앙회	역할·책임 부여 예정	"	20명(영업점 감사국)	
수협중앙회	"	"	20명(영업점 감사국)	
우정사업 본부	"	"	10명(본부 2명, 각 체신청 8명)	

\* 역할 및 책임을 은행별 자체 내부규정에 반영 예정 ('08.12.22)

\*\* 주요 임무 :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업무, 교육·연수, 업무  
지침작성·운용, 내부보고체제 수립·운용 등이 임무

\*\*\* 검사담당자의 경우 건전성 검사시 AML검사도 함께 실시

- 34-1. '06년 이후 7개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과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각 은행별 월별 고액현금거래 보고 현황
- 34-2. '06년 이후 위 10개 은행별 혐의거래보고 접수추이
- 34-3. '06년 이후 위 10개 은행별 혐의거래보고 충실도 분석

□ 금융정보분석원은 2006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7개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현 우정사업본부)으로부터 8,410건, 174조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접수함(월별 세부현황은 붙임 1 및 2 참조)

□ 2006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위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한 혐의거래보고는 총 127,565건으로 국민은행이 47,081건(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리은행(17,337건), 신한은행(17,185건)등의 순이었음(월별 접수추이는 붙임3참조)

#### □ 혐의거래보고서 충실도 관련

○ 혐의거래보고서 충실도는 금융기관이 보고한 STR을 심사분석자가 상세분석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충실여부를 판단하여 등급화(1~10등급)한 것\*으로('04.12월부터 활용)

\* 보고서의 필수항목 입력여부, 서술부문의 구체성 등에 따라 등급부여(2007.1.5.까지는 1~5등급)

- 모든 STR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분석\*을 진행한 STR에만 부여가 되는 것이며,

\* '08년 6말 현재 140,793건 접수, 30,582건 상세분석 (상세분석률 21.7%)

- 현재 금융기관의 보고 품질제고, 혐의거래 참고유형 개발, 금융기관 교육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혐의거래보고 충실도는 상세분석 대상이 된 STR에 한정된 것이고, 심사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등급화된 것으로서,

- 실제 보고기관의 혐의거래보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FIU 또한 심사분석 및 제도운영 업무에 단순참고자료로 이용할 뿐,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에서는 FIU에 보고된 혐의거래보고 정보 및 자료는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혐의거래보고서 충실도 점수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보고기관 통제의 수단으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 이에 선의의 보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혐의거래보고서 충실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 156 -



(한:하)

- 157 -

(५५:५५)

- 158 -

### 34-4. '06년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부당하게 누락하는 사례 발견 목록, 조치결과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9월까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례 총 6건을 보고  
받아, 2,950만원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부과하였습니다.

○ 자세한 과태료 부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과태료 부과 현황 >

부과일	기관	부과금액
2006. 3. 14	현대증권	300만원
2007. 9. 7	국민은행	200만원
2008. 3. 7	우리투자증권	200만원
2008. 7. 4	유진투자증권	1,200만원
2008. 8. 26	우리은행	500만원
2008. 9. 11	우리투자증권	550만원
계		2,950만원

## <참고> 혐의거래미보고관련 과태료부과절차

-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혐의거래미보고 사실을 적발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사실을 통보
  - 아울러, 금감원은 혐의거래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요구 가능
-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부과 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조문>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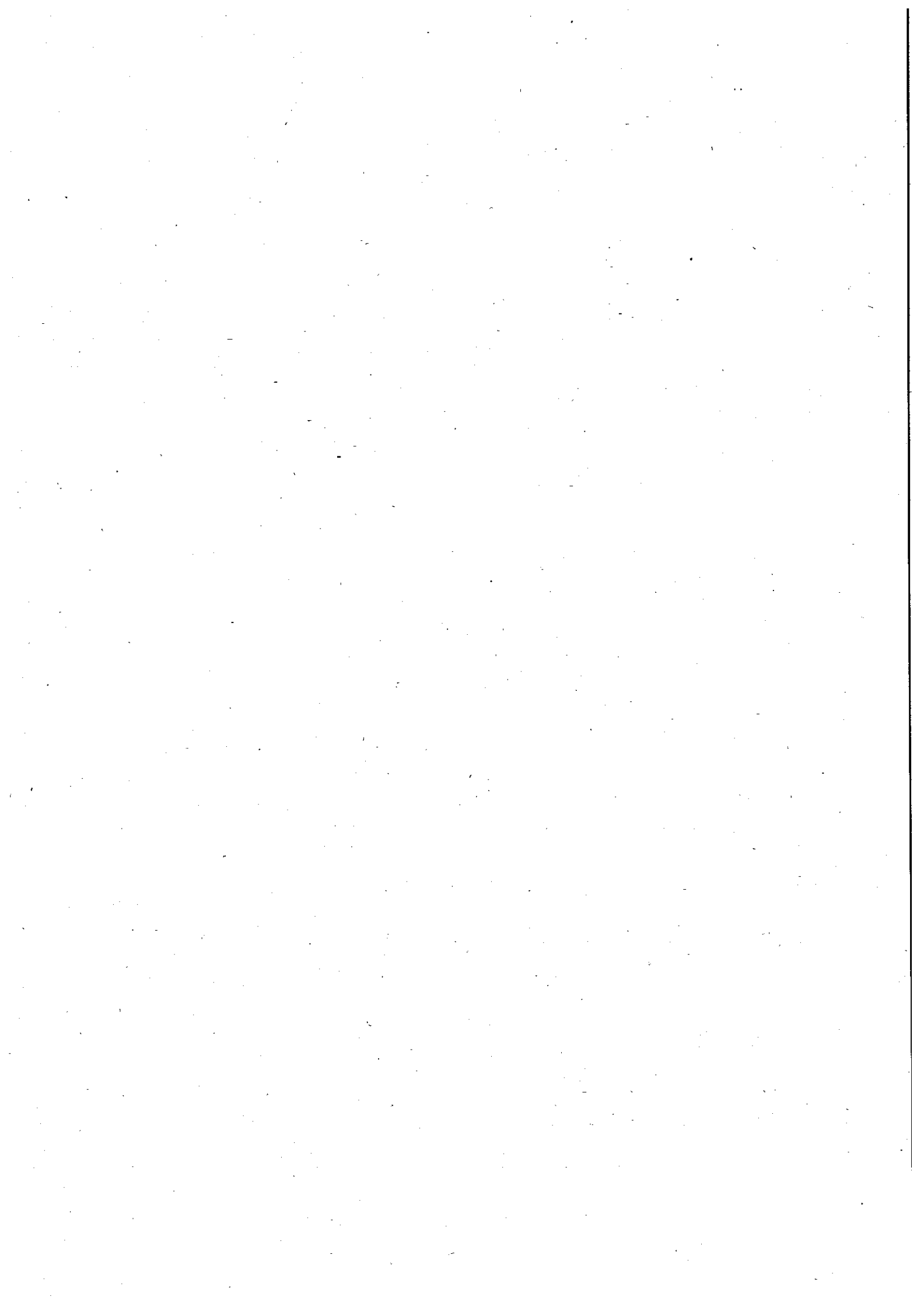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35. 자금세탁방지업무

☐ 자료 : 별도제출



## 이 석 현 의원





## 1. 2006~2008년간 감사내역

☐ 불임 참조

# ◇ 2006~2008년간 감사내역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지적 사항	조치 및 회신 내역
2008 (감사원)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금감위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주의조치
2007 (감사원)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7 (감사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신·기보 발주 용역을 참고한 정책수립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6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기관운영실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편드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소액공모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반영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 2. 06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 연구용역 내역은 첨부와 같음

○ 06년~07년 용역내역은 舊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연구용역을 취합한 것임

\*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08년 3월 출범

□ 2006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 번	제 목	기 간	금 액	수행기관 (연구자)	계약방식
1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방안 연구	2006-07-26 ~ 2007-03-19	43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규업)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 인과 대응방안	2006-12-11 ~ 2007-02-28	28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3	주요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연구	2006-10-18 ~ 2006-12-27	25.5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4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2006-09-08 ~ 2006-12-15	20	보험개발원 (이태열)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5	주요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2006-09-29 ~ 2006-12-15	22.5	한국금융연구원 (이병훈)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6	금융규제 인식에 대한 현장 실태 조 사	2006-03-24 ~ 2006-12-01	30	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7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 도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6-05-22 ~ 2006-11-30	60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도종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8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 용 규제개선 방안	2006-10-10 ~ 2006-11-27	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9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2006-08-28 ~ 2006-11-27	31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안형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0	갈등사례분석-금융실명제를 중심으 로	2006-08-22 ~ 2006-09-21	9.5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경쟁입찰
11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 방 안 연구	2006-06-12 ~ 2006-09-11	28.5	한영회계법인 (국균)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2	서민금융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06-05-30 ~ 2006-08-29	2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3	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2006-05-04 ~ 2006-07-04	26	(주)다산이앤이 (김영훈)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4	금융집적지역 조성방안에 관한 연 구	2006-03-30 ~ 2006-06-30	29.5	한국채권연구원 (박동규)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5	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 마련 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 연구	2006-04-17 ~ 2006-06-16	40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호)	경쟁입찰

# □ 2007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 번	제 목	기 간	금 액	수행기 관 (연구자)	계약방식
1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 08.03.04	45	한국증권 연구원 (노희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 국기업의 진출 전략	07.12.18~ 08.0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충열)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3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 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31	30	한국금융 연구원 (이병윤)	경쟁입찰
4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 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 07.12.28	29	한국금융 연구원 (이상재)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5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 도현황 조사	07.10.01~ 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준)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6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방안	07.09.07~ 07.12.20	21	중앙대학교산학 협력단 (신인석)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7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 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 07.12.20	33	BHP 코리아(주) (한국회)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8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 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09.21~ 07.12.20	28.5	한국법제 연구원 (박찬호)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 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05~ 07.12.20	33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산학협력단 (한상일)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0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 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20	28.5	삼정케이피엠지 어드바이저리 (강동원)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1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09.05~07.12. .20	38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안형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2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의 해외진출 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모색	07.10.26~ 07.12.17	38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경쟁입찰
13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02~ 07.12.17	19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경쟁입찰
14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07.30~07.12. .14	33.2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5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07~ 07.12.07	10	케이티지엘에스 (주) (위명숙)	경쟁입찰
16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07.07.24~07.10. .08	22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17	어음제도 개선방안	07.02.01~07.04. .30	14.25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 2008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계약방식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04 ~ 08.10. 3	3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08.7.21 ~ 08.12.20	40	아주대학교 (이진국)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3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01 ~ 08.12.24	40	법무법인(유)태평 양 (정의중)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4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 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08.8.13 ~ 08.12.12	37	언스트앤영어브바 이저리(주) (정태수)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08. 09.02 ~08.11.21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강흠)	경쟁입찰
6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0 6 ~08.11. 4	46	(사)국제금융센터 (오창석)	경쟁입찰
7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08.7.28 ~ 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환김영도)	경쟁입찰
8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11 ~8.29	19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윤덕웅)	경쟁입찰

### 3. '06년-08.8월말 현재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현황

- 사건명, 사건내용, 승·패소(일부 승·패소 구분), 담당 법무법인 및 변호사명, 소송비용 명기 요망

#### □ '06년-08.8월말 소송제기 현황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불 포함

연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승·패소	법무법인 (소송비용)
2006	영업정지처분 취소	보람투자자문(주)이 영업정지 처분의 부당을 주장(2006구합6703)	승소(종료)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6	영업인가 취소 처분 취소	이OO의 1명이 한중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2006구합18522)	승소(종료)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2006	손해배상(기)	강OO 외 7명이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의 출제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2006가합95350)	1심: 승 2심: 패(일부) 3심: 패(종료)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6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플래닛팔이가 제재 과징을 주장(2006구합13961)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진행 중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6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외 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2006구합15684)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2006	부당이득금반환 등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실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2006가합42509)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6	손해배상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2006가합49593)	1심: 진행 중	"
2006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처분 과징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6구합29270)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



2007	손해배상	투자자인 정OO가 금융위의 (주)대호에 대한 주금납입 확인의무 위배 주장 (2007가합11281)	승소(종료)	"
2007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개정규정(안) 승인취소	정OO외 10명이 생보사 상장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취소를 주장(2007구합25961)	승소(종료)	"
2007	불합격처분취소	공OO외 10명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 (2007구합44351)	승소(종료)	"
200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에이디칩스가 과징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것을 주장	화해권고 결정 (종료)	법무법인 태평양 (300만원)
2007	손실보전금 등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부산) 조흥금고를 인수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2007가합42810)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법무법인 세종 (900만원)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경제개혁연대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2007구합35166)	1심: 진행 중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7	손해배상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융기관 예금자인 진솔건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요구(2007가합79195)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2007	불합격처분 취소	권OO 외 41명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38028)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중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남OO이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2007구합43228)	1심: 진행 중	"
2007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은 동양증권 퇴직자인 김OO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45408)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
2008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취소	김OO이 자신이 대량 매집한 오양수산(주) 주식에 대한 매각처분 명령이 개인의 권리침해라고 주장(2008구합13958)	소송 취하 (종료)	"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손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2156)	1심: 진행 중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송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6561)	1심: 진행 중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이OO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17028)	1심: 진행 중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대한은박지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0383)	1심: 진행 중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2008	주식처분 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디엠파트너스 외 1명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3276)	1심: 진행 중	"
2008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전OO가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4453)	1심: 진행 중	"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임OO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7018)	1심: 진행 중	"

#### 4. ' 08.8월말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 현황

(사건명, 사건내용, 담당법무법인명 및 변호사명, 진행내역)

##### □ '08.8월말 진행 중인 소송 현황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불 포함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소송담당 (소송비용)	진행 내역
1	손해배상	동아정기 발행주식에 투자한 신OO 외 169명이 유가증권 심사과실 등 주장 (2004가합2964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2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플래닛팔이가 제재 과징을 주장 (2006구합13961)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진행 중
3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외 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2006구합15684)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4	부당이득금반환 등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실채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2006가합42509)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5	손해배상	경기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권OO가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2006가합49593)	"	1심: 진행 중
6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처분 과징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6구합29270)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7	손실보전금 등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부산) 조흥금고를 인수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2007가합42810)	법무법인 세종 (9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8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경제개혁연대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2007구합35166)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9	손해배상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등 금융기관 예금자인 진솔건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요구(2007가합79195)	법무법인 세종 (600만원)	1심: 국가 승 2심: 진행

10	불합격처분 취소	권OO 외 41명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38028)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남OO이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2007구합43228)	"	1심: 진행 중
12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은 동양증권 퇴직자인 김OO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7구합45408)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13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손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2156)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4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송OO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6561)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5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이OO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2008구합17028)	정부법무 공단 (250만원)	1심: 진행 중
1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대한은바지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0383)	금감원 법무실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17	주식처분 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디엠파트너스 외 1명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3276)	"	1심: 진행 중
18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전OO가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4453)	"	1심: 진행 중
1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임OO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7018)	"	1심: 진행 중

## 5. 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및 임직원이 참여하는 현황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관련예산, 주요활동내역, 위원 인적사항)

###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이유	설치근거	예산	주요활동내역
공적자금 기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관리 심의	공적자금상환기금 법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 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금융중심지법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심의
대부업 정책협의회	대부업 관련 정책, 감독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	대부업정책협의 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실태파악 및 상시 관리, 불법사금융 단속 등
시장효율화 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된 사항 심의	증권선물거래소 법 제25조제1항	-	증권/선물시장의 수수료 변경 및 전산설비투자 관련 사항 심의
공인회계사자격 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 요사항을 심의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	공인회계사시험 의 선발인원 결 정 등 심의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	징계사유(감사 또 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 등)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 6. 06년- 08년 8월말 현재, 산하 위원회 회의개최내역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 □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공적자금 기금운용심의회	07.2. 0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심의 07.6 08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08.2. 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심의 08.6 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 08.4.30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임명 및 간담회 · 08.6.30 : 금융중심지3개년기본계획 등 논의 · 08.7.30 :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등 논의(서면)	-
대부업 정책협의회	06.12.26, 07.6.5, 07.11.5, 08.1.29, 08.6.3, 08.9.9 :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논의관련 정 책, 감독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
시장효율화 위원회	07.2.2 : 거래소 시장관리시스템 구축 심의 07.8.1 : 거래소 차세대 전산실 구축 관련 심의 07.9.21 : 거래소 시장관리시스템 구축 심의를 위한 기술소위원회 구성 07.11.6 : 거래소 차세대시장시스템 추진계획 심의(시장관리시스템, 전산실 구축 등) 08.2.20 : 10년국채선물 수수료 심의 08.5.2 :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심의 08.7.9 : 돈육선물 수수료 심의 07.9.17 :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심의	-

위원회명	회의개최내역	소요예산
공인회계사자격 제도심의위원회	·08.1.4 : 공인회계사시험의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의 심의	-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07.3.7 :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의결 ·07.12.6 :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의결	-

## 7.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내부규정

☐ 별도규정 없음



**8. 05년 ~ 08년 8월말 현재, 임직원 훈포상 내역**  
**(일시, 훈포상자명, 훈포상 사유, 훈포상 내용) 훈포상규정**

□ 임직원 훈포상 내역(05년 ~ 08년 8월말 현재)

(2008. 8. 31 현재)

포상일시	훈포상자명	훈포상 사유	훈포상 내용
2005.12.30	김용범	금융채무불이행자대책유공	근정포장
2005.12.31	김용환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
2005.12.31	이경하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5.12.31	유재수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2005.12.31	김동환	우수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02.07	고승범	업무유공	대통령표창
2006.02.07	이동훈	업무유공	국무총리표창
2006.06.23	김세정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08.02	송현도	업무유공	대통령표창
2006.12.31	이정하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2006.12.31	이홍민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12.31	김종락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6.12.31	정채웅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
2007.05.16	윤창호	규제개혁유공	대통령표창
2007.06.30	김동희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7.12.31	김주현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
2007.12.31	이미희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7.12.31	조미남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7.12.31	박성진	우수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8.06.20	최윤정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2008.06.20	송동식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 별첨 : 훈포상규정(상훈법령, 정부표창규정)

## 9. 08년 연두업무 보고자료

☐ 첨부 참조 (별도 제출)

## 10. '06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발간자료 현황

### ☐ 발간자료 현황

연번	담당부서	자료명	간행일자	비고
1	감사담당관	금융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08.5	
2	금융구조개선과	공적자금관리 백서	'08.9	매년 발간
3	은행과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08.8	
4	공정시장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08.5	
5	혁신행정과	성과관리시행계획	'08.7	
6	혁신행정과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08.7	
7	혁신행정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08.6	

## 11. '07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 □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07년도	161	82	55	9	18	-	79
'08년8월말 현재	126	73	46	7	20	1	52

\*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된 건수 포함

## 12. 현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및 활성화 방안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불안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파산(9.15) 및 美 구제금융법안 부결(9.29) 등 미국발 악재로 인한 국내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중
  -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 9.22~12.31간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공매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9.24, 9.30 발표)
  - 10.1일부터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
- \* 결제불이행 위험이 큰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은 이미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공매도시 결제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대차거래시 담보비율 상향 조정, 대차거래 공시 강화 등 관련 규제를 강화

- 중국·중동 등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외 IR 시행을 통해 외자 유치 지원
- 이와 함께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처벌

□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우리나라 증시는 美 구제금융법안 부결 등 미국발 시장 충격에 대하여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 구제금융법안 부결 이후 주요국 증시 하락폭(%)

미국 (DOW)	영국 (FTSE)	일본 (Nikkei)	호주 (All ORD)	대만 (TWI)	한국 (KOSPI)
△6.98	△5.30	△4.12	△4.30	△3.54	△0.57

-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응해 나갈 것임

### 13.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금융위 입장

-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경우 주식거래 활성화 및 투자수익 제고 등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임
- 다만, 증권거래세에 대한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4. 퇴직연금의 투·투자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

□ 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 勞使의 의견을 수렴한 후

○ 확정기여형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적립금으로 투·투자가능한 대상자산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을 제외하고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의무화

\* 확정기여형 · 개인퇴직계좌 주식투자금지는 시행령(§17②)사항

○ 확정급여형은 금융위규정(감독규정) 제정시 구 금감위와 노동부가 사전협의하여 주식투자한도를 30%로 제한

\* 확정급여형의 주식투자한도는 법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감독규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개정을 위해선 노동부와 사전협의 필수

□ 금년 초(2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 확정급여형의 주식형펀드 투자제한 등 일부 규제를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완화한 바 있음

\* 확정급여형의 주식형펀드 투자한도 : 30→50% 등. 다만 확정급여형의 주식투자한도(30%) 및 확정기여형의 주식투자금지는 종전과 같음

□ 향후에도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 주관부서인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



이 성 남 의원



## 1.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공매도 규제 실시 국가의 사례

### 1. 미 국

- (기존) SEC 규정은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장 15일까지 결제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Naked Short Sale 가능하였음
- (최근 규제강화) 주가 급락,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
  - 08.7.21부터 29일간 19개 대형 금융주\*에 대하여 Naked Short Sale 금지
    - \* Freddie Mac, Fannie Mac, Lehman,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등
  - 08.9.18~10.17간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공매도시 T+3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반드시 양도하도록 의무화(Naked Short Sale 금지)
  - 08.9.19~10.8간 한시적으로 799개 금융주에 대하여 모든 유형의 공매도(Covered Short Sale 포함)를 금지

## 2. 영 국

- ☐ (기존) 공매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 없음
- ☐ (최근 규제 강화) 공매도로 인한 시장혼란 우려를 인정하고 美 SEC와 보조를 맞춰 관련 규제 강화
  - 08.9.18~09.1.16일간 금융주에 대한 추가적인 net short position 확대를 금지하고
  - 9.23일부터 해당 기업 유통주식의 0.25%를 초과하는 net short position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일 공시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

## 3. 네덜란드

- ☐ 08.9.22부터 3개월간 Euronext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주에 대하여 Naked short sale 금지(Covered Short Sale만 허용)

## 4. 호 주

- ☐ (기존) Naked Short Sale은 호주증권거래소(ASX) 규정으로 지정된 증권만 10% 한도(주식수 기준)내에서 가능
- ☐ (최근 규제강화) 9.18일 ASX 지정 증권 List에서 모든 증권을 삭제하여 Naked Short Sale 전면 금지
  - 9.22부터 정부가 정하는 날까지 모든 상장종목에 대하여 Covered Short Sale을 포함한 공매도 전면 금지
  - 다만, 30일 경과 후 비금융주에 대한 Covered Short Sale의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

## 2.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 1. 국내 자격증 제도 현황

□ [붙임1], [붙임2], [붙임3] 참조

[붙임1] 국내 보험관련 자격증 제도 및 정비연혁

자격증 명칭	취득조건 및 절차	시험 과목	연간합격자수	주관 기관	실시시기	관련법	정비연혁
보험 계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  * 보험수리 업무에 대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실무수습 면제	붙임 참조	<p>&lt;2007년 선발인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리사 : 80명</li> <li>▪ 손해사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 40명</li> <li>- (2종) 4명</li> <li>- (3종 대인) 204명</li> <li>- (3종 대물) 60명</li> <li>- (4종) 101명</li> </ul> </li> </ul> <p>※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p>	금융 감독원 및 보험 개발원	<p>매년 변동</p> <p>※ 2007년도의 경우 1차 : 3월 2차 : 7월에 실시</p>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 칙 등	1988년부터 시험에 합 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 에 등록하도록 변경
손해 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  *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실무수습 면제						2003년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에서 보험 계리사 및 손해사정 사로 명칭 변경
보험 중개사	시험합격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		<p>&lt;2007년 선발인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보험중개사 : 42명</li> <li>▪ 손해보험중개사 : 11명</li> <li>▪ 제3보험중개사 : 23명</li> </ul> <p>※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p>		<p>매년 변동</p> <p>※ 2007년도의 경우 10월에 실시</p>		1997년 도입되어,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2003년 보험중개인에서 보험중개사로 명칭 변경

[붙임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1)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중 택일 (2) 보험수학 (3) 외국어(영어 및 일어중 택일)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1) 보험이론 및 실무 (2) 회계학 (3) 보험수리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종 목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제1종(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1) 보험업법 (2)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이론 (3) 회계학 (4) 영어 (5)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1) 손해사정이론 (2)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해상·항공·운송보험 등)	(1) 보험업법 (2) 해상보험이론 (3) 회계학 (4) 영어 (5)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1) 손해사정이론 (2)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3종 (자동차보험)	대인 (1) 보험업법 (2) 자동차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 의학이론	(1)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손사고편)
	대물 차량 (1) 보험업법 (2) 자동차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1)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제4종(상해·질병·간병보험)	(1) 보험업법 (2) 제3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 의학이론	(1) 손해사정이론 (2)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대 분 류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3)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4)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손 해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 (제5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 행동규범
	(2)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3) 손해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4) 손해보험 2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선박·운송보험, 항공· 우주보험, 재보험
제 3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3) 제3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4)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



### [붙임3] 증권관련 자격증

자격증 종류	목적	주관
증권투자상담사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식, 채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권유 및 투자상담을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선물거래상담사	일반고객을 상대로 선물시장에서 선물·옵션거래의 위탁권유 및 투자상담을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협회
금융자산관리사 (자산설계전문인력)	고객의 재무설계와 투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고객별로 종합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의 투자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재무위험관리사	주식, 채권, 선물·옵션 및 기타 장외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을 측정, 평가, 통제하여 당해회사의 재무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증권분석사	증권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펀드판매인력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 업무 및 취득을 권유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자산운용협회연수원 증권연수원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운용전문인력	일반운용전문인력, 부동산전문인력, SOC전문인력 등이 있으며, 신탁재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정의 교육 또는 시험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	자산운용협회
판매인력	판매회사(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선물사, 종금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임직원등에게 소정의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	자산운용협회

### 3.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 현황 및 공익기금 조성 진행상황

“붙임 참조”

붙임 : 1.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 현황  
2. 공익기금 조성 진행상황. 끝

## **<붙임 1>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 현황**

□ 생보사 상장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능력이 확대되는 등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 증권시장 입장에서조차 우량 기업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

□ 05년 하반기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생보사 상장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 이에 따라 06.1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보사 상장 추진체계 논의

○ 현행법과 규정체제하에서 생보사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심사·결정하는 만큼

○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자문위')를 설치한 후

○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자문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함

□ 06.2월 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 보험, 회계, 재무분야 등  
각계 중립적 전문가로 상장자문위를 구성

□ 상장자문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청취(06.6월)를 거친  
후 공청회 (06.7월)를 개최하여 상장관련 기본 입장을 공표

○ 학술세미나(06.12월)를 통해 배당적정성 모형(Asset  
Share모형) 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 결과를 발표

⇒ 이 과정에서 학계, 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등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50여 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

□ 상장자문위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07.1월)

□ 국회(재경위)에서도 생보사 상장관련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07.3.5)

□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후

○ 금융감독위원회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07.4.11)

□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련법규에 따라 재경부와 협의하여  
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함(07.4.27)

## < 참고 1> 상장규정 개정절차 및 관련 법규

- ◇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 상장규정에는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함(증권거래법§88)
- ◇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금감위가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115)

## 〈붙임 2〉 공익기금 조성 진행 상황\*

※ 공익기금 조성은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생보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협회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협회 담당자 : 박경미 팀장, tel : 2262-6673)

### 1. 추진배경

□ 07.4월 생명보험업계는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건전한 생명보험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사회공헌을 추진기로 합의하고 이를 대외 발표 (보도자료 배포)

⇒ 공동사회공헌은 복지사업의 대대적인 전개를 통한 업계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생보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든든히 하는데 의의가 있음.

### 2. 주요경과

□ 07.11.20 :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참조> 협약 주요내용

- 협약 당사자 : 생명보험 17개사
- 운영기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기타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사회공헌위원회 (9명으로 구성)
- 사회공헌사업 출연 규모 및 방식

출연규모 및 기간	- 1조 5,000억원 / 20년간 출연 * 조기 달성시 출연기간 단축 가능, 미달시 출연기간 연장
재원출연 기준	- 직전사업년도 세무상 이익 * 세무상 이익의 0.25%~1.5%
출연 면제	- 세무상 결손시/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시

□ 2007.12.27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sup>※</sup>」 설립

※ 보건복지부 허가, 이사장 : 이시형

□ 2008. 3.31 : 「재단」,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기획재정부)

□ 2008. 5 : 생보협회 내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설치

○ 「기금」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

□ '07년 재원조성내역 (총 274.6억원)

※ 출연세부내역

(단위 : 천원)

	1차 출연 (2008.1월)	2차 출연 (2008.3월)	3차 출연 (2008.5월)	합 계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10,000,000	16,333,745	0	26,333,745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	0	0	1,129,607	1,129,607
합계	10,000,000	16,333,745	1,129,607	27,463,352

□ 주요추진일정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요추진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
① 자살예방사업 지원	- 자살예방 역학조사 - 생명존중 캠페인 및 홍보 - 자살예방관련 교육 및 고위 험군에 대한 위기개입 등	지원신청서 심사중	10억원
② 희귀·난치성	-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	공고6월	30억원

질환지원	- 치료비 및 특수치료제 등 의료사업 지원 - 진료협력체계구축 등	지원9월	
③ 저소득 치매 노인 지원	- 치매관련 편견 및 인식개선 - 치매노인 및 가족대상 재가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치매에 대한 연구지원 등	공고6월 지원10월	10억원
④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가정 지원	- 미숙아 예방 교육 - 미숙아 치료 및 재활 - 유/사산 예방관련 캠페인 등	공고7월 지원10월	10억원
⑤ 사회적 의인 지원	- 사회적 의인 및 가족대상 지원	9월이후	10억원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주요추진사업 (08.9월 이후 시행)

- 장학, 학술, 교육분야 사업
-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 사회복지사업 등 시행 예정



#### 4.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관련 규정,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완화의 근거와 목적

□ 현행 준법감시인 관련 업권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임과 역할은 대동 소이함

은행법시행령	<p>제17조의3 (준법감시인)</p> <p>① 삭제 &lt;2002.8.21&gt;</p> <p>② 삭제 &lt;2002.8.21&gt;</p> <p>③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li> <li>2. 당해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li> <li>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금융기관이 겸영하는 금융업무</li> </ol> <p>⑤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6.23]</p>
증권거래법시행령	<p>제37조의5 (준법감시인)</p> <p>① 삭제 &lt;2001.7.7&gt;</p> <p>② 삭제 &lt;2001.7.7&gt;</p> <p>③ 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증권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li> <li>2. 당해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증권업무와 그 부수업무</li> <li>3. 당해 증권회사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하고 있는 금융업무</li> </ol> <p>⑤ 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9.8]</p>
보험업법시행령	<p>제23조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lt;개정 2005.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 제2항 제1호·제4호 내지 제17호, 제20호, 제23호 내지 제33호에 규정된 법률</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산림조합법」</li> <li>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li> <li>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li> <li>5. 「담보부 사채 신탁법」</li> <li>6.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li> </ol> <p>② 법 제17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li> <li>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li> <li>3. 모집 및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업무</li> <li>4.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li> <li>5.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li> <li>6.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li> <li>7. 재보험에 관한 업무</li> <li>8.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li> </ol> <p>③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	---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 제도 완화는 민간전문가가 중심의 「금융규제심사단」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이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현행 준법감시인 제도는 전 업권에 걸쳐 의무화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인)과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 이에 감사위원회와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 임직원이 10인이하의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한 개선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5. 금융위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 일시/ 장소/ 행사면/ 주요참석대상/ 주요내용/ 강연  
료(기고료)

☐ 첨부 참조

## 위원장 강연 및 간담회 관련

### < 취임 이후, 강연 현황 >

개최일	개최장소	행사명	주최자	강연 내용	강연비
03월 19일 롯데호텔		제70차 한경미래니임 포럼	한국경제신문	새정부의 금융정책방향	-
03월 26일 신라호텔		매경 국제금융컨퍼런스	매일경제신문	새정부의 금융정책과제	-
04월 24일 신라호텔		전경연 경제정책위원회	전경연	새정부의 금융정책과제	1,000,000
05월 09일 신라호텔		삼성 Global Investors Conference	삼성증권	새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1,000,000
05월 22일 롯데호텔		세계저축은행협회(WSB) 아태지역총회	세계저축은행협회	저축은행의 중요성과 역할	-
05월 23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제25회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무역협회	새정부의 금융정책방향	1,000,000
05월 23일 부산 롯데호텔		동남권광역경제포럼	부산상공회의소	새정부의 금융정책방향	-
06월 05일 프레스센터		제34회 한국언론재단포럼(KPF)	한국언론재단	금융산업 경쟁력강화와 규제개혁	-
06월 09일 조선호텔		세계증권협회(CSA)연차총회	세계증권협회	글로벌 자본시장환경과 국내자본시장 발전방향	956,000
06월 17일 롯데호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CIAIS)한영만찬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글로벌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정책방향	-
06월 18일 롯데호텔		제18차 조선경제포럼	조선일보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500,000
06월 19일 창경궁		ICGN연례컨퍼런스	ICGN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	-
06월 20일 그랜드힐튼호텔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금융학회	사회제도 개혁과 금융발전	956,000
06월 27일 프라자호텔		코리아인코노미포럼	중앙데이일리	금융정책방향	1,000,000
08월 28일 조선호텔		경총포럼	경총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700,000
09월 11일 삼국회의소		대한상의조찬강연	대한상의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956,000
09월 22일 롯데호텔		금융경영인조찬강연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리스크 중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956,000
09월 30일 조선호텔		증권연구원 국제컨퍼런스	한국증권연구원	최근 금융시장 현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478,000

### < 취임 이후, 간담회 참석 현황 >

개최일	개최장소	행사명	주최자	간담회 내용	사례비
03월 14일 태평로클럽		외국계CEO 간담회	금융위	금융관련 규제 정비	-
03월 20일 금융위		기자간담회	금융위	향후 금융정책 방향	-
03월 25일 은행회관		은행간담회	금융위	은행정책 방향	-
03월 27일 산은캐피탈		증권자산운용간담회	금융위	증권자산운용정책 방향	-
04월 02일 프레스센터		보험간담회	금융위	보험정책 방향	-
04월 0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금융간담회	금융위	소비자금융정책 방향	-
04월 23일 금융위		기자간담회	금융위	방미 성과 설명	-
04월 2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간담회	금융위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07월 02일 기획재정부		경제장관 간담회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
07월 17일 은행회관		은행장간담회	금융위	금융시장현황 인식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
08월 25일 금융위		기자간담회	금융위	금융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 과제	-
09월 08일 금융위		기자간담회	금융위	금융위기설의 실체와 향후 대응방향	-

## 6. 금융위원회 출범후 신설된 각종 소속 위원회 및 기획단 현황

- 발족일시/위원명단(학력/주요경력)/발족사유/존속기간/운영현황(개최일, 참석위원, 논의내용 등)

□ 발족일시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2008.4.30

□ 위원명단 : 붙임참고

□ 발족 사유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속으로 설치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을 추진

□ 존속기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이며 연임 가능

□ 운영현황

개최일	참석위원	논의내용	비고
2008년 6월 30일	총 22명 참석 *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 해양부 차관, 성균관대 경영대학장 불참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 및 '금융 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에 대해 심의 (2)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명단[08.9.09일 현재]

구분	성명	현 직위	주요경력
민간 위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동원금융지주 사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민상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한국지점 대표	동서증권 영업총괄본부 본부장(부사장)
	윤영각	삼성KPMG그룹 대표	삼성컨설팅 대표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화재 대표이사
	전성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감위 비상임위원
	정계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로버트 클렘코스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한미은행장
당연직 (정부)	전광우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울산과학기술대 이사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문성우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정종수	노동부 차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당연직 (유관 기관)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진동수	수출입은행장	재정경제부 차관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한국은행 감사
	민유성	산업은행총재	리먼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 대표
	진영옥	한국투자공사장	한화손해보험 부회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금감위 부위원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삼성전기 사외이사
	윤대순	자산운용협회장	한화투자신탁 대표

## 7. 現 기획재정부 등의 ‘금융허브’ 추진 연혁, 평가, 금융허브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결과

### ① 금융허브 추진 연혁

#### < 지난 4년간('04~'07) 주요 추진내용 >

- '03년 12월 수립한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

\* 1단계('04~'07): 금융허브 기반 구축

2단계('08~'10): 특화금융허브 완성(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3단계('11~'15):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

-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05.6, '07.7 2차례),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추진위원회(3차례) 및 분과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 개최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9.2월 시행), 외환자유화('09년 조기완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3),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등 추진

#### < 금년도 주요 추진내용 >

- '08년 3월 금융허브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
- '08년 6월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08~'10년)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심의
- '08년 9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 ※ 금융허브 주요 일지

- 2003.2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12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
- 2003.12 대통령주재 32차 국정과제회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 2005.6 1차 금융허브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 2005.7 한국투자공사 설립
- 2005.10 금융허브추진체계 구축(전체위원회, 실무위원회,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 2005.12 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 2005.12 국제세미나 “금융허브 구축과 자본시장의 발전”
- 2006.1 금융허브 지원팀(fn HUB Korea) 출범
- 2006.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추진
- 2006.3 금융전문대학원(KAIST) 개원
- 2006.6 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 2006.11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경위 상정
- 2006.12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국회제출
- 2007.1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한 영문금융법령 무료제공
- 2007.3 금융허브 영문 홈페이지 개설(<http://www.fnhub.go.kr>)
- 2007.7 2차 금융허브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 2007.11 3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 2007.12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9.2 시행)
- 2007.12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2008.3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2008.6 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2008.7 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2008.9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 ② 금융허브 추진 실적 평가 :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도 있었으나 개선·보완의 여지도 있음

### ①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 부진

\* KDI 설문조사(07.2) 결과, 금융허브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

### ②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상당부분은 제도적인 과제로서 실제 이행에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③ 금융의 국제화·증권화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 ④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미흡

### 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규제는 크게 개선 되었으나 은행 및 보험사 관련 규제의 개선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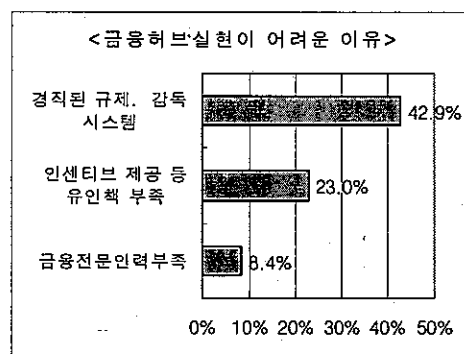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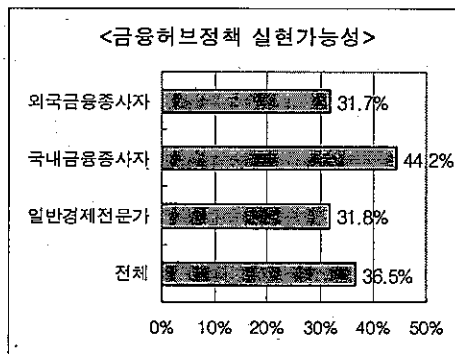
## ③ 금융허브 관련 연구용역(구 재정경제부에서 의뢰)

용역과제명	작성기관	제출연도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BHP Korea	2008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07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한국금융연구원	2007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 관련 행정의 국제화	한국금융연구원	2007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7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연구	한영회계법인	2006
금융집적지역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채권연구원	2006

\* 한국투자공사에서 의뢰

#### 4] 금융허브 추진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KDI, 07.2)

- 그간의 금융허브 추진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융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고,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도 낮다(긍정적 답변 비율 : 36.5%)고 평가
- 금융허브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경직적 규제감독 시스템'(42.9%), '적극적 유인책 부족'(23.0%) 등을 지적



## 8.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여부,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

- ☐ 통신·유통회사 등 비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 ☐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금산분리 원칙 등 현행 소유규제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① 예대업무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대부분 허용할 예정  
이므로 별도의 특례를 줄 논리는 약함
  - ② 미국, 영국 등에서 도입초기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겪은  
점을 교훈삼아 우선은 금융업 영위경험이 충분한 자가 진입  
토록 하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③ 아울러, 현행유지 하더라도 비금융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
  - ④ 해외에서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금융회사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일본에서 지급결제 업무에 특화한 일부은행(Sony bank, Seven bank)에 산업자본소유 허용

## 9. 07년 8월~08년 9월 현재, 연구용역 내역

- 용역명, 기간, 금액, 계약서, 결과보고서

□ 연구용역 내역은 첨부과 같음

- 07년 연구용역내역은 舊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연구용역을 취합한 것임

\*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08년 3월 출범

첨부 1. 연구용역 목록

2. '08년도 연구용역 계약서(별도제출)

3.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별도제출)

**첨부 1.**

**연구용역 목록**

□ 2007년 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1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 08.03.04	45	한국증권 연구원 (노희진)
2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07.12.18~ 08.0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충열)
3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31	30	한국금융 연구원 (이병윤)
4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 07.12.28	29	한국금융 연구원 (이상재)
5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조사	07.10.01~ 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준)
6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방안	07.09.07~ 07.12.20	21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신인석)
7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 07.12.20	33	BHP 코리아(주) (한국회)
8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09.21~ 07.12.20	28.5	한국법제 연구원 (박찬호)
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05~ 07.12.20	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상일)
10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20	28.5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 이저리 (강동원)
11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09.05~07.12.20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12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07.10.26~ 07.12.17	38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13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02~ 07.12.17	19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14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07~ 07.12.07	10	케이티지엘에스(주) (위명숙)

# □ 2008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 목	기 간	금 액	수행 기관 (연구자)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04 ~ 08.10. 3	3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08.7.21 ~ 08.12.20	40	아주대학교 (이진국)
3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 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01 ~ 08.12.24	40	법무법인(유)태평양 (정의중)
4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08.8.13 ~ 08.12.12	37	언스트앤영어브바이 저리(주) (정태수)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08. 09.02 ~08.11.21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강흠)
6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 템 개선 연구용역	08.8.0 6 ~08.11. 4	46	(사)국제금융센터 (오창석)
7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 구용역	08.7.28 ~ 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환김영도)
8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11 ~8.29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10. 금융위원회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포함)

☐ 2007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 불임



<붙임>

## 2007-2008.6 감사원 감사결과

기 간	제 목	결 과 (주요 처분요구 사항)	비고
2008. 2~3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舊 금감위
2008. 1~2	기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舊 금감위
2007.12 ~2008. 1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舊 재경부
2007. 9~11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舊 재경부
2007. 6~7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여비규정」을 초과한 공무국외여행 경비 지급이 없도록 주의(주의)	舊 재경부
2007. 4~6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舊 재경부

## 11. 공공기관 경영계약의 목적 및 내용, 체결한 계약서 사본일체

□ 공공기관 경영계약은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장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간 체결('07년 도입)

○ '08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발표(5.13일)한 바와 같이 경영 계약의 내용\*에 3년 단위 경영목표 외에 1년 단위 경영 계획서\*가 포함되고

\* '07년에는 경영계약에 3년 단위 경영 목표만이 포함

- 경영계약 체결 범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이 포함

\*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관 준정부기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두차례에 걸쳐 경영계약 체결식(8.13일, 9.22일)을 개최하여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 모든 경영계약 체결 대상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

□ 기관별 경영계획서의 주요내용은

① (예금보험공사) (i)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운영, (ii) 파산 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iii) 경비 절감

② (자산관리공사) (i) 기금의 효율적 정리, (ii) 개인성과관리 체계 구축 (iii) 조직·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강화

- ③ (신용보증기금) (i) 신용보증 지원규모의 확대, (ii)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구축, (iii) 건전재정 기반 강화, (iv) 경영 및 업무효율화 등
- ④ (기술보증기금) (i) 기술혁신기업에 핵심역량 집중, (ii) 기술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수요 확대, (iii) 기금업무의 특화·전문화, (iv) 조직·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
- ⑤ (한국주택금융공사) (i) 예산절감, (ii) 자산건전성 제고, (iii)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 ⑥ (증권예탁결제원) (i) 조직·예산운용의 효율화, (ii) 수수료 개편을 통한 증권거래비용 절감, (iii) 전자증권제도 도입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
- ⑦ (산업은행) (i) 민영화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 (ii) 주요산업 자금공급 기능 수행, (iii)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 (iv) 리스크를 반영한 경영관리체계 구축
- ⑧ (기업은행) (i)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ii)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iii) 적정수익 실현 및 경영합리화 등

□ 경영계획서상 과제를 1년 동안 수행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 평가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분

- 경영계획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조치,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 12.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

### □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발생분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중

<첨부 1>

##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십만원, 억원)

은행명	2005년		2006년		2007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0.21	7.17	0.20	7.68	0.23	4.88
농협중앙회	21.98	289.42	9.29	153.49	8.77	151.97
신한은행	12.85	153.66	8.61	201.97	5.35	107.21
우리은행	9.23	105.83	11.45	127.96	5.94	107.01
SC제일은행	6.21	84.14	9.73	92.60	2.18	51.10
하나은행	6.15	93.91	2.81	88.53	3.61	90.40
기업은행	4.76	59.71	4.37	61.40	4.23	73.13
국민은행	20.26	302.64	15.60	115.15	12.99	71.93
외환은행	7.42	86.04	6.37	69.36	5.38	75.55
한국씨티은행	2.70	18.03	5.58	57.56	1.81	19.77
수협중앙회	0.45	6.96	0.55	10.26	0.41	10.09
대구은행	0.98	25.82	1.01	30.57	0.72	27.48
부산은행	5.08	29.91	2.64	27.65	2.46	31.03
광주은행	—	—	2.34	13.54	—	—
제주은행	0.07	.33	0.10	0.47	0.09	0.39
전북은행	0.97	11.10	0.84	11.74	0.78	9.66
경남은행	1.28	9.16	1.03	6.55	1.29	9.55
총 계	100.60	1,283.83	82.52	1076.48	56.24	841.14

주 1) 2008. 2. 4 현재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자료임

주 2)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첨부 2>

##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11.6	56.2	10.6	99.8	21.3	175.2
알리안츠	110.4	130.5	78.1	132.3	47.8	160.6
삼성	293.0	4821.0	208.0	1757.0	179.0	3498.0
흥국	57.2	92.8	50.6	83.0	45.7	176.1
교보	328.7	1468.2	209.8	1361.0	176.0	5919.6
우리아비바	5.6	11.5	3.6	10.8	4.6	9.3
미래에셋	62.4	128.0	57.8	112.1	64.1	127.3
금호	28.9	44.1	29.3	39.4	39.4	48.2
동부	5.5	16.9	4.0	11.0	6.0	12.6
동양	77.0	57.0	54.0	87.0	52.3	262.0
메트라이프	54.7	39.9	27.4	35.1	35.5	45.7
푸르덴셜	12.1	10.5	13.5	16.6	11.5	20.9
신한	113.0	96.0	77.0	72.0	58.0	65.0
PCA	3.1	1.8	3.0	2.8	3.9	3.8
뉴욕	1.4	2.2	1.7	2.9	1.2	3.1
ING	23.7	43.3	23.8	54.9	25.8	66.0
SH&C	-	-	0.4	0.8	1.4	10.4
녹십자	8.0	19.1	4.3	24.6	3.6	21.3
라이나	119.0	37.2	97.0	36.1	100.0	40.6
AIG	46.7	34.1	58.9	41.4	66.1	45.3
하나HSBC	0.6	0.0	2.5	0.8	4.1	2.0
KB	1.8	4.2	0.6	3.7	1.1	7.4
총 계	1,364.4	7,114.5	1,015.9	3,985.1	948.5	10,720.5

\*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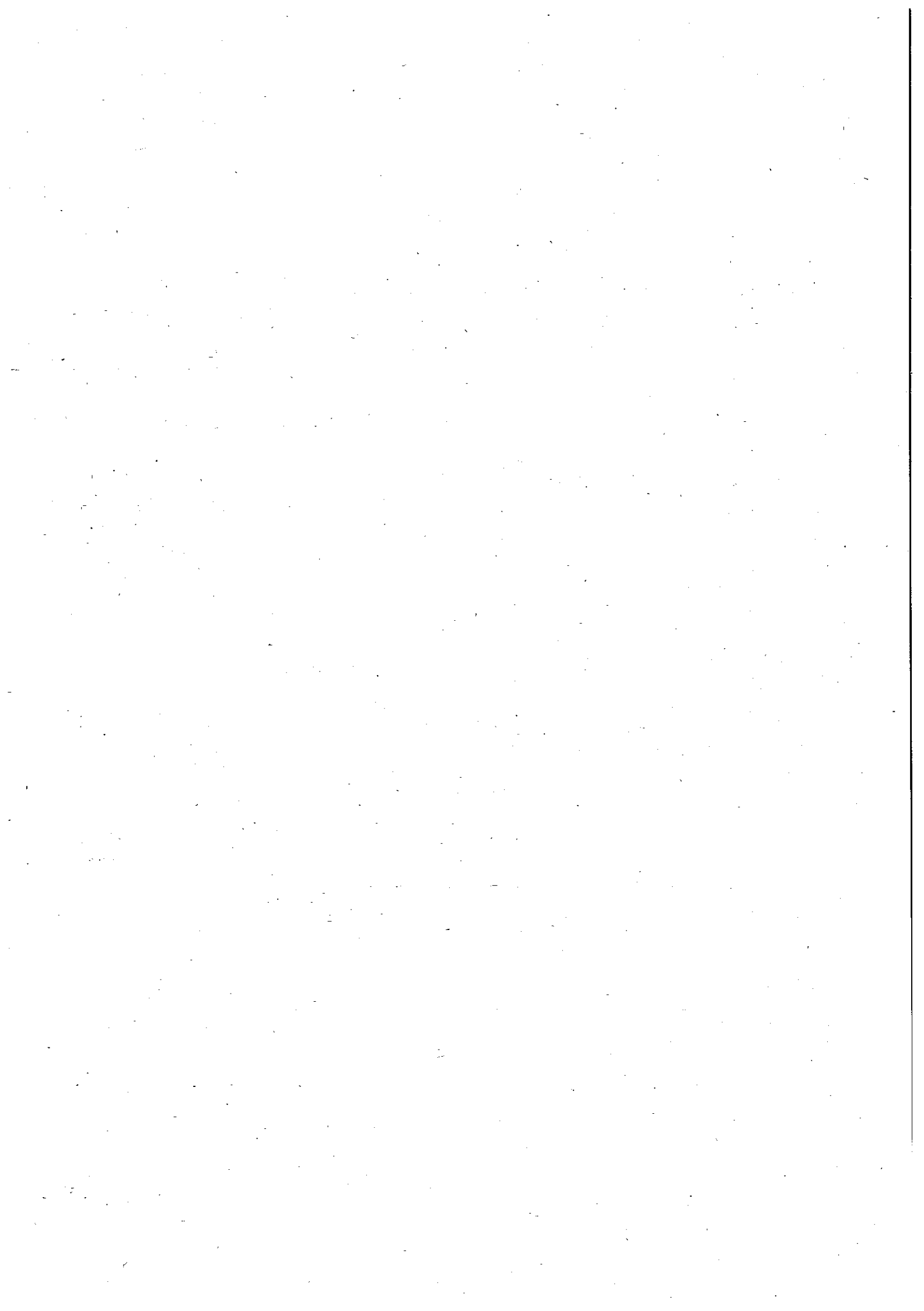
<첨부 3>

##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 험 사 명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4.9	30.4	4.7	31.2	14.5	83.4
한화	4.8	18.8	5.0	17.1	5.1	18.3
롯데	3.6	14.0	2.7	9.9	2.0	9.5
그린	2.0	8.0	2.0	6.0	2.0	6.0
흥국쌍용	15.4	18.8	9.6	14.6	7.3	12.4
제일	9.0	24.0	4.8	16.0	4.0	15.0
삼성	101.6	446.0	66.2	380.0	65.8	733.0
현대	22.0	78.0	17.0	58.0	17.0	46.0
LIG	21.7	90.1	17.9	71.3	22.9	93.0
동부	27.0	75.0	20.0	60.0	26.0	78.0
총 계	212.5	803.4	149.9	664.1	165.8	1,094.8

\*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이 성 헌 의원



# 1.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제17조와 18조에 의해 적발한 내역일체(최근 3년간)

## 1. ○○증권 공매도규정 위반 회원감리 실시

☐ 감리실시일 : '07. 6. 26 ~ 28

☐ 지적사항 : 공매도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공매도 주문 수탁

○ '07.1.2~5.31 기간중 주식워런트증권의 공매도 주문을 보유여부의 확인 및 공매도 구분표시 없이 수탁 처리

☐ 조치내용 : 「회원주의」

## 2. '07년 업무규정(공매도규정 포함) 준수여부 점검

☐ 점검시기 : 2007. 7. 9 ~ 8. 14 (회원당 2~3일간)

☐ 대상회원 : 11개 회원

☐ 확인내용

○ 자체 기준에 의한 위탁증거금 면제기관에 대해 미예탁 증권 매도시 공매도 구분표시를 생략하고 호가 제출

☐ 조치내용

- 2개 회원에 대해 공매도 구분표시 관련 「시정요구」

☐ 후속조치

-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관련규정의 준수 등을 포함한 「회원의 현물시장 업무규정 등 준수의무 관련 유의사항」 통보('07.10.1)

3. △△증권 공매도규정 위반 회원감리 실시

☐ 감리실시일 : '07. 11. 20 ~ 21

☐ 지적사항 : 공매도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공매도 주문 수탁

- '07. 11. 20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미예탁증권의 매도 주문을 수탁받아 호가 제출

☐ 조치내용 : 「현지주의조치」

\* 발생원인이 단순 전산장애이고, 공매도 수량 경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증권선물거래소 권영일 팀장, 3774-9251)

1-1. 금융위원회 08-4차 69호 안건, 증권선물위원회  
08-4차 89호 안건 일체에 대한 자료

- ☐ 요청하신 자료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한 개인 및 기업정보 등을  
제외한 안건 일체\*를 송부합니다.(별도제출)

\*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금융위, 증선위 안건

## 2. 리먼브라더스 증권과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증권 서울지점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 및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 ☐ 금융위는 (가칭)리먼브라더스 증권과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증권 서울지점 사이의 영업양수도 및 (가칭)리먼브라더스 증권에 대한 증권업 예비 허가를 08.5.9일 승인한 바 있음
- ☐ 그러나 이후 리먼 측은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한 바 없으며,
  - 따라서 영업양수도 계약 및 증권업 영업은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허가사의 본허가 신청여부는 회사자율 판단 사항

### 3. 회의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의 경위에 대한 자료

- 서울중앙지점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전 임원(○○○ 이사, '08.2.25 의원해직)이 UC아이콜스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사례금 1억원을 받고 동사 주식 25만주(거래대금: 55억원)를 동경소재 리먼그룹 해외 계열사인 LBF(Lehman Brothers Finance)의 펀드매니저를 통해 대량매수하도록 중개한 혐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여 기소한 바 있음

#### 4.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예비인가 관련, 증선위 에서 보류된 것이 금융위에서 예비인가가 내려진 경위에 대한 자료

-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17)
  - 또한 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소관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등을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음(§19)
-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예비허가와 관련, 당시 증선위에서는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없으며,
  - 소관 사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되, 금감원에서 전직 임원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금융위원회 논의시 보고하라는 내용의 심의 의견이 있었음



## 5. 금융위의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예비인가 관련 회의록 상의 법무부 유권해석의 경위에 대한 자료

- 금융위 회의록에서 지점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리먼브러더스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 등과 관련하여,
  - 법무부 유권해석상 지점은 ELS, ELW 등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질의 응답이 있었음
- 05.6월 법무부에서는 외국 증권사의 지점은 회사의 영업소 중 하나로서, 영업활동의 본거가 되지만 제3자와의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 지점 명의로 파생결합증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6-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1조의 2에 의거 보존되는 문서 리스트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1조의 2에 의거 보존되는 문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서면회의 포함) 안건 목록 : 별첨
- 1차~65차 회의 의결서 및 의사록
- 서면 1차~36차 회의 의결서

## (별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안 건 명	종류
1차	2001. 2. 1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재경부)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예금보험공사)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자산관리공사)	보고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	보고
2차	2001. 2. 27	매각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보고	보고
		대한생명 매각추진방안	보고
		공적자금 운용계획 보고(예금보험공사)	보고
		현대·삼신·한일생명보험㈜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서면1	2001. 3. 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
3차	2001. 3. 20	대한생명 매각추진방안	의결
		서울은행 매각추진방안	의결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기준(자산관리공사)	보고
		공적자금 운용계획 보고(자산관리공사)	보고
4차	2001. 3. 22	현대·삼신·한일생명보험㈜에 대한 처리방안	의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지원방안	의결
5차	2001. 3. 28	현대·삼신·한일생명보험㈜에 대한 처리방안	의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지원방안	의결
6차	2001. 4. 20	서울은행 매각추진방안	의결
		서울보증보험㈜의 처리방안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세칙안	의결
		서울은행 매각추진방안 심사보고	보고
7차	2001. 5. 16	서울보증보험㈜의 처리방안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세칙안	의결
서면2	2001. 5. 28	KAMCO 제4차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계획	의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통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채권매각 계획	의결
		2001년도 제1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특별채권 매각계획	의결
		㈜전로종합유류 기업채권 개별매각 계획	의결
		한국금속공업㈜의 3개 기업채권 개별 매각계획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 시	안 건 명	종류
8차	2001. 6. 19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상환기일 연장 보고	보고
9차	2001. 6. 26	서울은행 매각관련 중간 심사보고	보고
		KAMCO 제4차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계획(안) 심사보고	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통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채권 매각계획(안) 심사보고	보고
		2001년도 제1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특별채권 매각계획(안) 심사보고	보고
		㈜진로종합유류 기업채권 개별매각 계획(안) 심사보고	보고
		한국금속공업㈜의 3개 기업채권 개별 매각계획(안) 심사보고	보고
10차	2001. 7. 18	서울은행 매각추진방안(DBCP 투자의향서 검토 보고)	의결
		서울보증보험㈜ 처리방안(삼성차대지급분추가출자)	의결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 보고	보고
		12개 금융기관 1/4분기 MOU 이행점검 보고	보고
		서울보증보험㈜의경영정상화계획이행등에 관한 보고	보고
		3개 부실 손해보험회사 매각추진 현황 보고	보고
		서울은행 매각관련 DBCP 투자의향서 검토 보고	보고
11차	2001. 8. 7	대우 해외현지법인 채권 회수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활용방안	의결
		대한생명보험㈜에 대한 추가출자(안) 보고	보고
		대한생명 매각추진방안 심사보고	보고
12차	2001. 8. 29	공적자금관리백서안	의결
		대우채권 담보주식을 활용한 부실채권 조기회수 계획(안)	의결
13차	2001. 9. 12	농축협 합병에 따른 농협중앙회에 대한 자금지원안	보고
14차	2001. 9. 19	서울보증보험㈜ 추가 출자안	의결
		조흥은행 및 우리금융지주회사 일부 지분의 조기 매각 방안	의결
		2001.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15차	2001. 9. 26	한빛은행, 서울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등 6개 은행 2차 자금지원(안)	의결
		조흥은행 및 우리금융지주회사 일부 지분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방안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16차	2001. 10. 10	2001년도 제2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특별채권 매각 계획(안)	의결
		서울은행 매각관련 DBCP와의 협상결과 심사보고	보고
17차	2001. 11. 17	2002년 공적자금 수급 전망과 대책	보고
18차	2001. 12. 4	평화은행 개혁안에 대한 보고(안)	보고
19차	2002. 1. 7	국제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처리방안	의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 시	안 건 명	종류
20차	2002. 2. 8	예금보험공사 보유 은행주식 매각방안	의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통한 대우캐피탈㈜ 채권 매각계획(안)	의결
		조흥은행 및 우리금융지주회사 일부 지분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방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1. 3/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21차	2002. 2. 27	리젠트화재보험(주)에 대한 처리방안	의결
		금강화섬(주) 기업채권 개별매각 계획(안)	의결
22차	2002. 3. 14	리젠트화재보험(주)에 대한 처리방안	의결
		금강화섬(주) 기업채권 개별매각 계획(안)	의결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 수립일정 보고	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통한 대우캐피탈(주) 채권 매각계획 심사결과	보고
23차	2002. 3. 29	서울 및 제일은행 해외채권 회수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활용방안	의결
		서울은행·대한생명 매각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의 공개 시기 연기(안)	의결
		신한금융지주회사앞 제주은행 일부지분 매각 심사결과	보고
24차	2002. 5. 24	리젠트화재보험(주)에 대한 처리방안 재심의안 상정여부에 대한 검토보고 및 의결	의결
		서울은행 매각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의 공개시기 연기(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부실채권 매입기준	보고
		서울 및 제일은행 해외채권 회수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활용방안 심사결과	보고
		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의 투자제안서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1. 4/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25차	2002. 6. 19	정리금융공사 채권매각 계획안	의결
		서울은행 매각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의 공개시기 연기(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상환기일 연장보고	보고
		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의 투자제안서 심사결과	보고
26차	2002. 6. 27	정리금융공사 보유 담배인삼공사 주식 매각방안	의결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보고	보고
		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의 투자제안서 최종 심사결과	보고
27차	2002. 8. 6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의 공개시기 연기(안)	의결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조흥은행 주식 2002년 하반기 매각방안	의결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 인수후보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 시	안 건 명	종 류
28차	2002. 8.19	정리금융공사 보유 담배인삼공사 주식 매각방안	의결
		경남기업(주) 출자전환주식 매각계획(안)	의결
		합작 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계획(안)	의결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인수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선정방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담배인삼공사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인수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선정관련 경과보고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29차	2002. 9. 5	정리금융공사 보유 담배인삼공사 주식 매각방안	의결
		합작 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계획(안)	의결
		공적자금관리 백서안	의결
		대한생명보험(주)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
		2002. 1/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30차	2002.9.13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인수자 선정(안)	의결
		대한생명보험 매각(안)	의결
		2002년도 제1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특별채권 매각계획(안)	의결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상 결과·보고	보고
		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과의 최종협상 결과	보고
31차	2002.9.18	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과의 최종협상 결과	보고
32차	2002.9.23	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과의 최종협상 결과(수정안)	보고
		대한생명보험 매각(안)	의결
서면3	2002.11.5	서울은행 합병후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 매각방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경남기업(주) 주식 매각방안	의결
		서울은행 합병후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 매각방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경남기업(주)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서면4	2002.11.21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33차	2003.1.16	2003년도 제1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특별채권 매각계획	의결
		합작 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계획(안)	의결
		금강화섬(주) 기업채권 개별매각 추진 결과 보고	보고
		조흥은행 민영화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34차	2003.1.23	조흥은행 민영화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채권 매각결과 보고	보고
		2002. 2/4, 3/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안건명	종류
35차	2003.3.25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출자전환주식 매각 계획(안)	의결
		2003년도 제2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대우종합기계㈜ 채권 매각 계획(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주식의 주식예탁증서(GDR) 발행에 의한 매각 계획(안)	의결
		현투증권 매각추진 경과보고	보고
서면5	2003.4.28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36차	2003.5.12	합작 구조조정전운회사(JV-CR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계획(안)	의결
		서울주철공업㈜ 채권 개별매각 추진경과 및 향후 처리방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출자전환주식 일괄 매각계획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주식의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의한 매각계획	의결
		2003년 예금보험공사 보유 은행주식 매각 방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주)갑을 출자전환주식 매각결과 보고	보고
		대우채권 담보주식(교보생명보험)의 EB발행을 통한 현금화방안 중단 보고	보고
		2002. 4/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37차	2003.5.29	예금보험공사 보유 하나은행 지분 매각일정 연기(안)	의결
38차	2003.6.19	예금보험공사 보유 조흥은행 주식 매각(안)	의결
		조흥은행 민영화관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상 결과 보고	보고
39차	2003.7.25	2003년도 제2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대우종합기계㈜ 채권 매각 계획(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한국개발리스㈜ 주식 매각(안)	의결
		ABS 발행을 통한 정리금융공사 보유 외화자산 매각계획(안)	의결
		2003년도 제2차 원화 ABS 발행에 의한 대우종합기계㈜ 채권 매각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한국개발리스㈜ 주식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2003.1/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서면6	2003.8.27	공적자금관리 백서안	의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40차	2003.10.29	현투증권 매각관련 푸르덴셜금융과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경과 및 공적자금 지원안 보고	보고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 처리방안	보고
서면7	2003.11.7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 처리방안	의결
41차	2003.11.18	현투증권 매각방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진로 기업채권 매각계획(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벽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방법변경(추가) 계획(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진로 기업채권 매각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벽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방법변경(추가)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출자전환주식의 효율적 매각방안	보고
		조흥은행 민영화관련 신한금융지주의 인수후 경영계획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안건명	종류
		2003년 2/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경영정상화약정 관리개선방안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보고(2003년3/4분기)	보고
		한투,대투증권 매각추진방안 심사결과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기능강화방안	보고
42차	2003.12.17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 대우상용차㈜출자전환주식 매각계획(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 대우상용차㈜출자전환주식 매각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현대증권처리방안	보고
		경영정상화약정(MOU) 관리개선방안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개선방안	보고
43차	2004.1.16	2004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	의결
		2004년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	의결
		경영정상화약정(MOU) 관리개선방안	보고
		2003.3/4분기 경영정상화약정(MOU)이행실적 점검결과보고	보고
		2004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 심사결과	보고
		2004년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서면8	2004.1.29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개정 추진	의결
서면9	2004.2.12	공적자금운용현황 보고	보고
서면10	2004.2.24	현투증권(주) 매각협상 추진현황	보고
44차	2004.3.12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 통한 정리금융공사보유 외화자산매각계획(안)	의결
		정리금융공사보유 ㈜신동방 보유증권 매각계획(안)	의결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 통한 정리금융공사보유 외화자산매각계획(안)심사결과	보고
		정리금융공사보유 ㈜신동방 보유증권 매각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서면11	2004.4.14	현투증권(주) 매각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의 공개 시기 연기(안)	의결
45차	2004.6.15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 경남기업㈜ 출자전환 잔여주식 매각계획안	의결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관련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보고	보고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관련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보고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2004년1/4분기)	보고
		2003.4/4분기 경영정상화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 경남기업㈜ 출자전환 잔여주식 매각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서면12	2004.6.25	정리금융공사 보유 신호유화㈜ 유가증권 매각계획(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신호유화㈜ 유가증권 매각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46차	2004.7.14	한투·대투증권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한투·대투증권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현투증권㈜ 매각 완료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 시	안 건 명	종 류
서면13	2004.8.26	200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안)	의결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케이피케이칼 출자전환주식 매각계획 변경(안)	의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2004년 2/4분기)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케이피케이칼 출자전환주식 매각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47차	2004.10.27	대우종합기계㈜ M&A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대우종합기계㈜ M&A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48차	2004.10.29	한투증권 매각관련 동원금융지주와의 주요 협상결과	보고
서면14	2004.12.16	현투증권, 한투증권, 대투증권 매각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의 공개 시기 연기(안)	의결
		2004. 1/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2004. 2/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2004년 3/4분기)	보고
		한보철강 채권 매각 결과 보고	보고
49차	2005.1.11	대우종합기계㈜ M&A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안)	의결
		2005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 계획	의결
		200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	의결
		대우종합기계㈜ M&A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안) 심사결과	보고
		2005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 계획 심사결과	보고
		200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 심사결과	보고
		공적자금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보고	보고
서면15	2005.1.12	대우종합기계㈜ M&A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수정(안)	의결
50차	2005.2.18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일부지분 매각(안)	의결
		한투증권 주식 매매계약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의결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일부지분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한투증권 주식 매매계약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심사결과	보고
		2004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2004년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서면16	2005.3.4	㈜현대오토넷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현대오토넷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서면17	2005.3.5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 제일은행 주식 매각(안)	의결
서면18	2005.4.16	대우종합기계㈜ M&A 거래종결안	의결
		대우종합기계㈜ M&A 거래종결안 심사결과	보고
51차	2005.4.29	대투증권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의결
		대투증권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심사결과	보고
		2004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 시	안 건 명	종류
52차	2005.7.27	현대오토넷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의결
		현대오토넷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심사결과	보고
		2005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2005년도 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서면19	2005.8.12	8개 상호저축은행 지원금증액청구소송 관련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안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서면20	2005.8.26	2005년 공적자금관리백서(안)	의결
		2005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53차	2005.10.12	정리금융공사 보유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매각(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서면21	2005.11.1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현황	보고
서면22	2005.11.22	대우캐피탈㈜CRV 보유자산매각결과보고	보고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하이닉스반도체 주식매각결과보고	보고
		2005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서면23	2005.12.30	신한금융지주 주식매각방안	의결
		신한금융지주 주식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2005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공적자금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보고	보고
54차	2006.1.16	서울보증보험 감자방안	의결
		2006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의결
		200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의결
		서울보증보험 감자방안 심사결과	보고
		2006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200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서면24	2006.2.21	2006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의결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관련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보고	보고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관련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5. 3/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대우건설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보고
55차	2006.3.15	예금보험공사 보유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매각(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대우건설 주식 매각(안)	의결
		예금보험공사 보유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대우건설 주식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5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안 건 명	종류
56차	2006.4.7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안)	의결
57차	2006.5.9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2005. 4/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공적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보고
서면25	2006.5.30	대한생명보험 매각관련 사후관리방안	보고
58차	2006.6.9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의결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서면26	2006.6.15	정리금융공사 보유 ㈜하이닉스반도체 주식매각(안)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하이닉스반도체 주식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59차	2006.6.20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60차	2006.6.22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서면27	2006.6.29	한투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분 지급안	보고
		한투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분 지급(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안 보고	보고
		2006. 1/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
서면28	2006.8.29	2006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안)	의결
		대한투자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액 지급안 보고	보고
		대한투자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액 지급(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61차	2006.11.10	(주)대우건설 M&A 관련 실사조정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의결
		(주)대우건설 M&A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대우정밀 출자전환주식 매각결과 보고	보고
		2006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보고
62차	2006.12.22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안)	의결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6년도 3/4분기 공적자금운용현황 보고	보고
서면29	2007.2.9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 매각(안)	의결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안)	의결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6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 시	안 건 명	종류
63차	2007.3.9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시한 연장 동의(안)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기본계획(안)	의결
		2007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의결
		200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시한 연장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기본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7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서면30	2007.4.3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세부 매각(안)	의결
64차	2007.5.14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안)	의결
		한국전력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의결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안)	의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안)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한국전력주식 매각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 및 매각주관사 선정방안(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결과 보고	보고
		2006년도 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보고
		2006년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공적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보고
서면31	2007.5.18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서면32	2007.6.1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중 일부개정(안)	의결
서면33	2007.7.9	(주)대우건설 M&A 관련 실사조정 사후정산(안)	의결
		한국전력 주식 매각 세부계획(안)	의결
		대한생명보험(주) 관련 안건의 공개 시기 연기(안)	의결
		(주)대우건설 M&A 관련 실사조정 사후정산(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한국전력 주식 매각 세부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서면34	2007.8.29	2007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안)	의결
서면35	2007.10.8	쌍용건설(주) 출자전환주식 매각 방안(안)	의결
		쌍용건설(주) 출자전환주식 매각 방안(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7년 상반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2007년도 1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차수	일 시	안 건 명	종류
서면36	2007.11.26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의결
		예금보험공사 보유 제주은행 보통주 매각방안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예금보험공사 보유 제주은행 보통주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65차	2008.1.11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2008년 정기재계산 추진일정 보고	보고
		2007년도 2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보고
		2007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 6-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부칙 제7111호에 따라 보존되는 문서 리스트의 제출

☐ 구조개혁기획단이 설치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 구조개혁기획단 기록물 목록 첨부

☐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한 민간기구로서 해당 기록물은 당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성규)이 보관하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참조 : 기록물 인계인수서 사본)

☐ 금융감독기구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서 등

- 해당 기록물 없음

### < 구조개혁기획단 기록물 목록 >

처리과	기록물 제목	관리번호	생산연도
감독정책과	문서접수대장	1-1160040-40-1998-000001	1998
감독정책과	1998 문서 발송부	1-1160040-40-1998-000002	1998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1	1-1160040-40-1998-000003	1998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2	1-1160040-40-1998-000004	1998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3	1-1160040-40-1998-000005	1998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4	1-1160040-40-1998-000006	1998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5	1-1160040-40-1998-000007	1998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6	1-1160040-40-1998-000008	1998
감독정책과	예산안 신청 관련 1	1-1160040-40-1998-000009	1998
감독정책과	예산안 신청 관련 2	1-1160040-40-1998-000010	1998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	1-1160040-40-1998-000011	1998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기타 관련철II	1-1160040-40-1998-000012	1998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기타 관련철III	1-1160040-40-1998-000013	1998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	1-1160040-40-1998-000014	1998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I	1-1160040-40-1998-000015	1998
감독정책과	용역일지	1-1160040-40-1999-000003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1	1-1160040-40-1999-000004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2	1-1160040-40-1999-000005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3	1-1160040-40-1999-000006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4	1-1160040-40-1999-000007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5	1-1160040-40-1999-000008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6	1-1160040-40-1999-000009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7	1-1160040-40-1999-000010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8	1-1160040-40-1999-000011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9	1-1160040-40-1999-000012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10	1-1160040-40-1999-000013	1999
감독정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철 11	1-1160040-40-1999-000014	1999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	1-1160040-40-1999-000015	1999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I	1-1160040-40-1999-000016	1999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II	1-1160040-40-1999-000017	1999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V	1-1160040-40-1999-000018	1999
감독정책과	기업개선 작업 관련철	1-1160040-40-1999-000019	1999
감독정책과	5대계열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통보 및 해소실적 관련철	1-1160040-40-1999-000020	1999
감독정책과	채무보증해소 실적 관련철	1-1160040-40-1999-000021	1999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기타 관련철V	1-1160040-40-1999-000022	1999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	1-1160040-40-1999-000023	1999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I	1-1160040-40-1999-000024	1999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II	1-1160040-40-1999-000025	1999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V	1-1160040-40-1999-000026	1999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V	1-1160040-40-1999-000027	1999
감독정책과	민원문서등록 관련철I	1-1160040-40-1999-000028	1999
감독정책과	민원문서등록 관련철II	1-1160040-40-1999-000029	1999
감독정책과	구조단 운영세칙 관련	1-1160040-40-2000-000001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	1-1160040-40-2000-000002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I	1-1160040-40-2000-000003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II	1-1160040-40-2000-000004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V	1-1160040-40-2000-000005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V	1-1160040-40-2000-000006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VI	1-1160040-40-2000-000007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VII	1-1160040-40-2000-000008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VIII	1-1160040-40-2000-000009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IX	1-1160040-40-2000-000010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관련철X	1-1160040-40-2000-000011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 기타 관련 XI	1-1160040-40-2000-000012	2000
감독정책과	민원문서등록 관련철	1-1160040-40-2000-000013	2000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	1-1160040-40-2000-000014	2000
감독정책과	문서등록 관련철II	1-1160040-40-2000-000015	2000
감독정책과	대우자동차 처리 직원들의 의견 반영에 대한 청원 건 관련철	1-1160040-40-2000-000016	2000
감독정책과	1차 Bidding 검토철 관련철I	1-1160040-30-1998-000001	1998
감독정책과	1차 Bidding 검토철(II)	1-1160040-30-1998-000002	1998
감독정책과	1차 Bidding 검토철 관련철III	1-1160040-30-1998-000003	1998
감독정책과	2차 Bidding 검토철 관련철I	1-1160040-30-1998-000004	1998
감독정책과	워크아웃 관련철I	1-1160040-30-1998-000005	1998
감독정책과	기타 관련철	1-1160040-30-1999-000001	1999
감독정책과	자금세탁 업무 관련철	1-1160040-30-1999-000002	1999
감독정책과	무상자금(Grant Fund) 관련철	1-1160040-30-1999-000003	1999
감독정책과	워크아웃 관련철II	1-1160040-30-1999-000004	1999
감독정책과	기타(채무보증) 관련철I	1-1160040-30-1999-000005	1999
감독정책과	기타(채무보증) 관련철II	1-1160040-30-1999-000006	1999
감독정책과	워크아웃 관련철III	1-1160040-30-2000-000001	2000
감독정책과	2차사업관련검토 관련철	1-1160040-30-2000-000002	2000
감독정책과	2차사업보고서	1-1160040-30-2000-000003	2000
감독정책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1-1160040-30-2000-000004	2000
감독정책과	한.EU 조선협상 관련철 I	1-1160040-30-2000-000005	2000
감독정책과	한.EU 조선협상 관련철II	1-1160040-30-2000-000006	2000
감독정책과	한.EU 조선협상 관련철III	1-1160040-30-2000-000007	2000
감독정책과	한.EU 조선협상 관련철IV	1-1160040-30-2000-000008	2000
감독정책과	한.EU 조선협상 관련철V	1-1160040-30-2000-000009	2000
감독정책과	대우일반 관련철I	1-1160040-30-2000-000010	2000
감독정책과	대우일반 관련철II	1-1160040-30-2000-000011	2000
감독정책과	대우일반 관련철III	1-1160040-30-2000-000012	2000
감독정책과	항공 관련철	1-1160040-30-2000-000013	2000
감독정책과	기타사항 관련철	1-1160040-30-2000-000014	2000
감독정책과	대우자동차 관련철I	1-1160040-30-2000-000015	2000
감독정책과	대우자동차 관련철II	1-1160040-30-2000-000016	2000
감독정책과	워크아웃 관련철IV	1-1160040-30-2000-000017	2000
감독정책과	문서등록대장	1-1160040-10-1999-000001	1999
감독정책과	민원사무처리부	1-1160040-10-2000-000001	2000
감독정책과	문서등록대장	1-1160040-10-2000-000002	2000
감독정책과	문서등록대장	1-1160040-10-2000-000003	2000
감독정책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철 I	1-1160040-10-2000-000004	2000
감독정책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철II	1-1160040-10-2000-000005	2000
증권감독과	허가취소(한남, 한남루신, 장은, 등폐)	1-1160043-40-1999-000001	1999
보험감독과	외화금융관련 현안사항	1-1160044-40-1998-000002	1998
보험감독과	IMF / IBRD	1-1160044-40-1998-000003	1998
보험감독과	보증보험 구조조정	1-1160044-40-1998-000004	1998
보험감독과	보증보험 합병 I	1-1160044-40-1998-000005	1998
보험감독과	보증보험 처리방안	1-1160044-40-1998-000006	1998
보험감독과	계약이전관련 조세감면법 개정 요청	1-1160044-40-1998-000007	1998
보험감독과	4개 보험사 계약이전	1-1160044-40-1998-000011	1998
보험감독과	구조조정 업무관계철 (I)	1-1160044-40-1998-000012	1998
보험감독과	진행상황보고 (1)	1-1160044-40-1998-000013	1998
보험감독과	진행상황보고 (2)	1-1160044-40-1998-000014	1998
보험감독과	생보사 1차 구조조정 관련철 (I)	1-1160044-40-1998-000015	1998
보험감독과	생보사 1차 구조조정 관련철 (II)	1-1160044-40-1998-000016	1998
보험감독과	생보사 1차 구조조정 관련철 (III)	1-1160044-40-1998-000017	1998
보험감독과	생보사 (1)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1-1160044-40-1998-000018	1998



보험감독과	생보사 (2)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1-1160044-40-1998-000019	1998
보험감독과	생보사 (3)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1-1160044-40-1998-000020	1998
보험감독과	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	1-1160044-40-1998-000021	1998
보험감독과	경영정상화 계획 관련	1-1160044-40-1998-000022	1998
보험감독과	이행각서 (대한보증, 한국보증)	1-1160044-40-1998-000023	1998
보험감독과	보증보험 수정 정상화 계획	1-1160044-40-1998-000025	1998
보험감독과	계약이전 법률검토	1-1160044-40-1999-000002	1999
보험감독과	부실생보사 구조조정 (1)	1-1160044-40-1999-000003	1999
보험감독과	외국인 면담일지	1-1160044-40-1999-000004	1999
보험감독과	부실생보사 구조조정 (2)	1-1160044-40-1999-000012	1999
보험감독과	부실생보사 구조조정 (3)	1-1160044-40-1999-000013	1999
보험감독과	진입제도 개선방안	1-1160044-40-1999-000015	1999
보험감독과	보도자료	1-1160044-40-1999-000016	1999
보험감독과	대기업의 제2금융지배	1-1160044-40-1999-000017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MOU	1-1160044-40-1999-000018	1999
보험감독과	IBRD 총재 면담	1-1160044-40-1999-000019	1999
보험감독과	기 타	1-1160044-40-1999-000020	1999
보험감독과	대외관계	1-1160044-40-1999-000021	1999
보험감독과	생보사 MOU	1-1160044-40-1999-000022	1999
보험감독과	생보사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대생)	1-1160044-40-1999-000023	1999
보험감독과	생보(MOU) 분석 및 협상전략	1-1160044-40-1999-000007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2	1-1160044-40-1999-000024	1999
보험감독과	1차 대생입찰 수발신 문서 (II)	1-1160044-40-1999-000025	1999
보험감독과	한화 입찰 제안서	1-1160044-40-1999-000026	1999
보험감독과	경영정상화 세부이행계획	1-1160044-40-1999-000028	1999
보험감독과	제2차 입찰 수발신 문서 1	1-1160044-40-1999-000031	1999
보험감독과	제2차 입찰 수발신 문서 2	1-1160044-40-1999-000032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1	1-1160044-40-1999-000033	1999
보험감독과	대생 · 국민생명 참고자료	1-1160044-40-1999-000034	1999
보험감독과	3차 입찰 수발신 (I)	1-1160044-40-1999-000035	1999
보험감독과	3차 입찰 수발신 (II)	1-1160044-40-1999-000036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계열사 1	1-1160044-40-1999-000037	1999
보험감독과	사전의견 진술절차 등	1-1160044-40-1999-000038	1999
보험감독과	행정1부 준비서면	1-1160044-40-1999-000039	1999
보험감독과	행정법원 제출자료	1-1160044-40-1999-000040	1999
보험감독과	행정 13부 답변서	1-1160044-40-1999-000041	1999
보험감독과	관리명령 행정심판 답변서	1-1160044-40-1999-000042	1999
보험감독과	계열사 관련 자료	1-1160044-40-1999-000043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매각관련 1차 입찰 수발신	1-1160044-40-1999-000044	1999
보험감독과	대생 행정소송 1	1-1160044-40-1999-000045	1999
보험감독과	2차 발송대장	1-1160044-40-1999-000046	1999
보험감독과	파나콤 1	1-1160044-40-1999-000047	1999
보험감독과	파나콤 2	1-1160044-40-1999-000048	1999
보험감독과	파나콤 3	1-1160044-40-1999-000049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처리상황 1	1-1160044-40-1999-000050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처리상황 2	1-1160044-40-1999-000051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 보고서 (4)	1-1160044-40-1999-000052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 보고서 (1)	1-1160044-40-1999-000053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보고서 (2)	1-1160044-40-1999-000054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 보고서 (3)	1-1160044-40-1999-000055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 보고서 (5)	1-1160044-40-1999-000056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 보고서 (6)	1-1160044-40-1999-000057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 보고서 (7)	1-1160044-40-1999-000058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경영정상화계획 1	1-1160044-40-1999-000059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경영정상화계획 2	1-1160044-40-1999-000060	1999
보험감독과	생보사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1)	1-1160044-40-1999-000061	1999

보험감독과	생보사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2)	1-1160044-40-1999-000062	1999
보험감독과	자문사 선정 관련철	1-1160044-40-1999-000063	1999
보험감독과	5개사 매각 관련철 (1)	1-1160044-40-1999-000064	1999
보험감독과	5개사 매각 관련철 (2)	1-1160044-40-1999-000065	1999
보험감독과	자문 계약서 원본 (부실 생보사 매각)	1-1160044-40-1999-000066	1999
보험감독과	6개 생보사 예보채권 우선지원 관련	1-1160044-40-1999-000067	1999
보험감독과	조선생명 매각철 (1)	1-1160044-40-1999-000068	1999
보험감독과	동아생명 (1)	1-1160044-40-1999-000008	1999
보험감독과	조선생명	1-1160044-40-1999-000069	1999
보험감독과	한덕생명 매각철 (1)	1-1160044-40-1999-000070	1999
보험감독과	한덕생명 (관계회사/고려증권소송)	1-1160044-40-1999-000071	1999
보험감독과	태평양생명 매각철 (1)	1-1160044-40-1999-000072	1999
보험감독과	태평양생명 매각철 (II)	1-1160044-40-1999-000073	1999
보험감독과	5개 생보사 국내 투자자 관련철	1-1160044-40-1999-000076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매각 서신철 1	1-1160044-40-1999-000077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매각 서신철 2	1-1160044-40-1999-000078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매각 서신철 4	1-1160044-40-1999-000079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매각 서신철 3	1-1160044-40-1999-000080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인수의향제출 요청서신철	1-1160044-40-1999-000081	1999
보험감독과	자산부채평가 결과 보고	1-1160044-40-1999-000082	1999
보험감독과	5개사 생보사 매각 관련	1-1160044-40-1999-000083	1999
보험감독과	국민 MOU 관련 서신철	1-1160044-40-1999-000084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일일실사 현황 1	1-1160044-40-1999-000085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MOU (1)-1	1-1160044-40-1999-000009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일일실사 현황 2	1-1160044-40-1999-000086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MOU (1)	1-1160044-40-1999-000087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MOU (2)	1-1160044-40-1999-000088	1999
보험감독과	한성생명 품의문, 보고서	1-1160044-40-1999-000089	1999
보험감독과	한성생명 (LG화재 참여)	1-1160044-40-1999-000090	1999
보험감독과	법률 검토1	1-1160044-40-1999-000091	1999
보험감독과	법률 검토2	1-1160044-40-1999-000092	1999
보험감독과	민원서류철 (조선생명 관련)	1-1160044-40-1999-000093	1999
보험감독과	흥국생명 (MOU)	1-1160044-40-1999-000094	1999
보험감독과	IMF 협의	1-1160044-40-1999-000095	1999
보험감독과	한성생명 (LG 관련)	1-1160044-40-1999-000096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소송관련 1	1-1160044-40-1999-000097	1999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관련자료	1-1160044-40-1999-000098	1999
보험감독과	해외 공문철	1-1160044-40-1999-000010	1999
보험감독과	법률자문 용역 제안서	1-1160044-40-1999-000099	1999
보험감독과	보험회사 회계 관련	1-1160044-40-1999-000100	1999
보험감독과	감사원 지적사항 (생보사 구조조정)	1-1160044-40-1999-000101	1999
보험감독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 시행규칙	1-1160044-40-1999-000102	1999
보험감독과	1999년 6월 금감위 부의 관련	1-1160044-40-1999-000103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1-1160044-40-1999-000104	1999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II	1-1160044-40-1999-000105	1999
보험감독과	생보상장	1-1160044-40-1999-000108	1999
보험감독과	국민-뉴욕 매각 검토철	1-1160044-40-1999-000109	1999
보험감독과	5개사 매각관련	1-1160044-40-1999-000110	1999
보험감독과	5개사 매각관련	1-1160044-40-1999-000111	1999
보험감독과	대생부실금융기관결정 등 관련 공문 사본 제	1-1160044-40-1999-000112	1999
보험감독과	생보사 구조조정 관련철 (III)	1-1160044-40-2000-000001	2000
보험감독과	럭키생명(신한생명)	1-1160044-40-2000-000002	2000
보험감독과	법률검토 2	1-1160044-40-2000-000007	2000
보험감독과	6개 부실생보사 경영정상화계획	1-1160044-40-2000-000008	2000
보험감독과	소송관련철	1-1160044-40-2000-000009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품의문 · 보고서 (8)	1-1160044-40-2000-000010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소송현황	1-1160044-40-2000-000045	2000
보험감독과	생보사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3)	1-1160044-40-2000-000011	2000
보험감독과	5개사 회계실사 및 가치평가 추진 자료철	1-1160044-40-2000-000012	2000
보험감독과	5개사 매각 관련철 (3)	1-1160044-40-2000-000013	2000
보험감독과	생보사 구조조정 관련 법률 자문	1-1160044-40-2000-000014	2000
보험감독과	동아생명 매각철 (1)	1-1160044-40-2000-000015	2000
보험감독과	조선생명 (2)	1-1160044-40-2000-000016	2000
보험감독과	조선생명 실사현황 (일일보고)	1-1160044-40-2000-000017	2000
보험감독과	동아생명 계리실사	1-1160044-40-2000-000018	2000
보험감독과	동아생명 실사현황	1-1160044-40-2000-000019	2000
보험감독과	동아생명 (II)	1-1160044-40-2000-000046	2000
보험감독과	노조 관련철	1-1160044-40-2000-000020	2000
보험감독과	5개사 대주주 면담철	1-1160044-40-2000-000021	2000
보험감독과	한덕생명 매각철 (II)	1-1160044-40-2000-000047	2000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1-1160044-40-2000-000003	2000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매각 서신철 4	1-1160044-40-2000-000022	2000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실사 계약서	1-1160044-40-2000-000023	2000
보험감독과	두원생명 일일보고	1-1160044-40-2000-000024	2000
보험감독과	한성생명 (질의)	1-1160044-40-2000-000025	2000
보험감독과	하트포드(Hartford) 관련철	1-1160044-40-2000-000026	2000
보험감독과	자산관리공사 미수채권 매각	1-1160044-40-2000-000027	2000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MOU 서신철	1-1160044-40-2000-000028	2000
보험감독과	경영정상화 세부 이행계획 (서울보증, 대한생	1-1160044-40-2000-000029	2000
보험감독과	생보사 매각	1-1160044-40-2000-000031	2000
보험감독과	금융지주회사 겸업화	1-1160044-40-2000-000032	2000
보험감독과	동아생명 자본감소 및 금호생명의 동아생명 흡수합병	1-1160044-40-2000-000048	2000
보험감독과	서한철	1-1160044-40-2000-000049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검토자료 1	1-1160044-40-2000-000050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검토자료 2	1-1160044-40-2000-000051	2000
보험감독과	대생 소송진행 상황철	1-1160044-40-2000-000034	2000
보험감독과	대생 경영정상화 방안	1-1160044-40-2000-000052	2000
보험감독과	CBO 발행관련 서울보증 질의	1-1160044-40-2000-000058	2000
보험감독과	경영정상화 조치 참고철	1-1160044-40-2000-000063	2000
보험감독과	태평양 법무법인	1-1160044-40-2000-000035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경영정상화방안	1-1160044-40-2000-000064	2000
보험감독과	대생요청사항	1-1160044-40-2000-000065	2000
보험감독과	예보채권 매각시 공적자금 지원방식	1-1160044-40-2000-000036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참고자료 2	1-1160044-40-2000-000066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참고자료 3	1-1160044-40-2000-000067	2000
보험감독과	조선생명 본계약	1-1160044-40-2000-000037	2000
보험감독과	동아생명 본 계약철 I	1-1160044-40-2000-000038	2000
보험감독과	한덕생명 계리실사	1-1160044-40-2000-000068	2000
보험감독과	태평양생명	1-1160044-40-2000-000004	2000
보험감독과	한덕생명 실사진행 현황	1-1160044-40-2000-000039	2000
보험감독과	태평양 본계약철	1-1160044-40-2000-000069	2000
보험감독과	태평양생명 계리평가	1-1160044-40-2000-000070	2000
보험감독과	태평양생명 실사 현황	1-1160044-40-2000-000071	2000
보험감독과	예보채 평가	1-1160044-40-2000-000072	2000
보험감독과	국민생명 협상철	1-1160044-40-2000-000073	2000
보험감독과	현대의 조선·한국생명 인수 및 합병 (I)	1-1160044-40-2000-000040	2000
보험감독과	국민·SK 매각 관련철	1-1160044-40-2000-000074	2000
보험감독과	삼신생명 (I)	1-1160044-40-2000-000075	2000
보험감독과	두원생명 (파산 관련)	1-1160044-40-2000-000076	2000
보험감독과	현대의 조선·한국생명 인수 및 합병 (II)	1-1160044-40-2000-000077	2000
보험감독과	공적자금	1-1160044-40-2000-000078	2000
보험감독과	공문서철 4	1-1160044-40-2000-000079	2000

보험감독과	본계약서철 (양해각서)	1-1160044-40-2000-000041	2000
보험감독과	변호사 의견 (질의)	1-1160044-40-2000-000042	2000
보험감독과	공문철	1-1160044-40-2000-000080	2000
보험감독과	대우관련 공적자금 지원(서울보증에 대한 예 보공사의 출자요청 건)	1-1160044-40-2000-000081	2000
보험감독과	서울보증 경영정상화계획 근거	1-1160044-40-2000-000082	2000
보험감독과	서울보증의 경영정상화 촉진방안	1-1160044-40-2000-000083	2000
보험감독과	대한생명 신동아 출자승인	1-1160044-40-2000-000085	2000
보험감독과	조선생명 매각철	1-1160044-40-2000-000093	2000
보험감독과	공문철	1-1160044-40-2000-000094	2000
보험감독과	종금사 발전방안	1-1160044-40-2000-000095	2000
보험감독과	법무자문 선정 관련철	1-1160044-40-2000-000044	2000
보험감독과	위헌제청사건	1-1160044-30-1999-000001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위헌심판 관련	1-1160044-30-2000-000001	2000
보험감독과	보험관련 법령	1-1160044-10-1998-000001	1998
보험감독과	새마을금고법 및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관	1-1160044-10-1998-000002	1998
보험감독과	농협의 자동차 책임공제 참여 관련	1-1160044-10-1998-000003	1998
보험감독과	법적문제 검토	1-1160044-10-1999-000001	1999
보험감독과	주택저당화(MBS)	1-1160044-10-1999-000002	1999
보험감독과	금융·기업구조조정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1-1160044-10-1999-000003	1999
보험감독과	채신금융관련법	1-1160044-10-1999-000004	1999
보험감독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I (1)	1-1160044-10-1999-000005	1999
보험감독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I (2)	1-1160044-10-1999-000006	1999
보험감독과	보험 인허가 규정 (I)	1-1160044-10-1999-000007	1999
보험감독과	보험소유 지배구조 I	1-1160044-10-1999-000008	1999
보험감독과	보험소유 지배구조 II	1-1160044-10-1999-000009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1	1-1160044-10-1999-000010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2	1-1160044-10-1999-000011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3	1-1160044-10-1999-000012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4	1-1160044-10-1999-000013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5	1-1160044-10-1999-000014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6	1-1160044-10-1999-000015	1999
보험감독과	보험감독규정1	1-1160044-10-1999-000016	1999
보험감독과	보험감독규정2	1-1160044-10-1999-000017	1999
보험감독과	생보공개1	1-1160044-10-1999-000018	1999
보험감독과	생보공개2	1-1160044-10-1999-000019	1999
보험감독과	재경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1-1160044-10-1999-000020	1999
보험감독과	ROSC	1-1160044-10-1999-000021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시행령 I	1-1160044-10-1999-000022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 인허가규정 II	1-1160044-10-1999-000023	1999
보험감독과	보험업 인허가규정 III	1-1160044-10-1999-000024	1999
보험감독과	대우채권 손실처리	1-1160044-10-1999-000025	1999
보험감독과	규제개혁 I	1-1160044-10-1999-000026	1999
보험감독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개정	1-1160044-10-1999-000027	1999
보험감독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1160044-10-1999-000028	1999
보험감독과	상법개정법률(안)검토 의회	1-1160044-10-1999-000029	1999
보험감독과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	1-1160044-10-1999-000030	1999
보험감독과	공제통합방안	1-1160044-10-2000-000001	2000
보험감독과	한일생명 경영정상화계획서 및 의견제출서 등	1-1160044-10-2000-000006	2000
보험감독과	자동차보험	1-1160044-10-2000-000002	2000
보험감독과	정관변경 인가(생보협회)	1-1160044-10-2000-000003	2000
보험감독과	금산법 유권해석	1-1160044-10-2000-000004	2000
보험감독과	부실보험사 처리1	1-1160044-10-2000-000005	2000
보험감독과	문서등록대장	1-1160044-10-2000-000007	2000
보험감독과	부실보험사 처리2	1-1160044-10-2000-000008	2000
보험감독과	부실보험사 처리3	1-1160044-10-2000-000009	2000
보험감독과	부실보험사 처리4	1-1160044-10-2000-000010	2000

보험감독과	2단계 경제 운용 계획	1-1160044-10-2000-000011	2000
보험감독과	신동아화재 처리방안	1-1160044-10-2000-000012	2000
보험감독과	신뢰성공제사업관련	1-1160044-10-2000-000013	2000
보험감독과	신탁중앙회 공제 규정	1-1160044-10-2000-000014	2000
보험감독과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1-1160044-10-2000-000015	2000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시행령 I	1-1160044-10-2000-000016	2000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시행령 II	1-1160044-10-2000-000017	2000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시행령 III	1-1160044-10-2000-000018	2000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시행령 IV	1-1160044-10-2000-000019	2000
보험감독과	규정정비방안	1-1160044-10-2000-000020	2000
증권감독과	국민선물	1-1160043-30-1998-000005	1998
증권감독과	농협선물 본허가 신청	1-1160043-30-1998-000006	1998
증권감독과	대우선물 본허가	1-1160043-30-1998-000007	1998
증권감독과	동양선물 본허가 신청	1-1160043-30-1998-000008	1998
증권감독과	부은선물 선물거래업	1-1160043-30-1998-000009	1998
증권감독과	삼성생명(동양) 투자신탁운용 설립허가	1-1160043-30-1998-000010	1998
증권감독과	삼성선물 본허가	1-1160043-30-1998-000011	1998
증권감독과	선물거래업 영업폐지인가 신청	1-1160043-30-1998-000012	1998
증권감독과	외국증권사 지정설치 허가 (SG)	1-1160043-30-1998-000004	1998
증권감독과	은행국채 매매허가1	1-1160043-30-1998-000013	1998
증권감독과	은행국채 매매허가2	1-1160043-30-1998-000014	1998
증권감독과	자기매매추가 1	1-1160043-30-1998-000015	1998
증권감독과	자기매매추가 2	1-1160043-30-1998-000016	1998
증권감독과	자기매매추가 3	1-1160043-30-1998-000017	1998
증권감독과	제일선물 본허가	1-1160043-30-1998-000018	1998
증권감독과	현대선물 본허가 신청	1-1160043-30-1998-000022	1998
증권감독과	합회중개지정운영규정승인, 포스트증권(주) 이	1-1160043-30-1998-000001	1998
증권감독과	LG선물 본허가	1-1160043-30-1998-000024	1998
증권감독과	TS선물 본허가2	1-1160043-30-1998-000025	1998
증권감독과	지방투신 설립허가 1	1-1160043-30-1999-000001	1999
증권감독과	주가선물업 허가	1-1160043-30-1999-000002	1999
증권감독과	위탁회사 허가 2	1-1160043-30-1999-000003	1999
증권감독과	선물업 영업폐지	1-1160043-30-1999-000004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 경영인가1	1-1160043-30-1999-000005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 경영인가2	1-1160043-30-1999-000009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 경영인가3	1-1160043-30-1999-000010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 경영인가5	1-1160043-30-1999-000006	1999
증권감독과	투신운용사 해산인가	1-1160043-30-1999-000007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 경영인가4	1-1160043-30-1999-000011	1999
증권감독과	나라종금	1-1160043-30-1999-000013	1999
증권감독과	운용시설립 예비허가(태관에셋)2	1-1160043-30-1999-000019	1999
증권감독과	운용시설립 예비허가(태관에셋)3	1-1160043-30-1999-000020	1999
증권감독과	제일투자신탁증권(주)의 인수업 허가신청 철회	1-1160043-30-1999-000021	1999
증권감독과	중앙종금	1-1160043-30-1999-000022	1999
증권감독과	주은투신운용겸업인가	1-1160043-30-1999-000030	1999
증권감독과	제일·국은투신운용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	1-1160043-30-1999-000031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 예비인가 1	1-1160043-30-1999-000034	1999
증권감독과	투자자문 겸영인가	1-1160043-30-1999-000035	1999
증권감독과	한국선물과 대한선물합병예비인가	1-1160043-30-1999-000036	1999
증권감독과	한맥선물(주)	1-1160043-30-1999-000038	1999
증권감독과	한맥선물회사 인가	1-1160043-30-1999-000039	1999
증권감독과	환은SSB	1-1160043-30-1999-000040	1999
증권감독과	IMM	1-1160043-30-1999-000042	1999
증권감독과	KTb	1-1160043-30-1999-000043	1999
증권감독과	LG투자증권과 LG종금 합병인가	1-1160043-30-1999-000044	1999
증권감독과	운용시설립 예비허가(태관에셋)1	1-1160043-30-2000-000002	2000

증권감독과	한국자금중개㈜ 채권중개 업무 경영허가	1-1160043-30-2000-000004	2000
증권감독과	TS선물 본허가1	1-1160043-30-2000-000007	2000
증권감독과	(가칭)한국도이치증권㈜ 예비설립허가신청서	1-1160043-30-2000-000008	2000
증권감독과	디지털증권중개㈜ 예비허가 신청서	1-1160043-30-2000-000010	2000
증권감독과	리딩투자증권 본허가	1-1160043-30-2000-000011	2000
증권감독과	리젠트증권 주식인수승인 신청	1-1160043-30-2000-000012	2000
증권감독과	맥쿼리선물㈜ 본허가	1-1160043-30-2000-000013	2000
증권감독과	법정증권중개(주) 법정투자자문증권(주) 법정인가	1-1160043-30-2000-000014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본허가 2	1-1160043-30-2000-000017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본허가 3	1-1160043-30-2000-000018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본허가 6	1-1160043-30-2000-000019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본허가 7	1-1160043-30-2000-000020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예비허가 1	1-1160043-30-2000-000021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예비허가 2	1-1160043-30-2000-000022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예비허가 3	1-1160043-30-2000-000023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예비허가 4	1-1160043-30-2000-000024	2000
증권감독과	운용사설립 예비허가 5	1-1160043-30-2000-000025	2000
증권감독과	전환증권사의 운용자회사 설립허가 1	1-1160043-30-2000-000026	2000
증권감독과	전환증권사의 운용자회사 설립허가 2	1-1160043-30-2000-000027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1	1-1160043-30-2000-000030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2	1-1160043-30-2000-000031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3	1-1160043-30-2000-000032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4	1-1160043-30-2000-000033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5	1-1160043-30-2000-000034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6	1-1160043-30-2000-000035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7	1-1160043-30-2000-000036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8	1-1160043-30-2000-000037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9	1-1160043-30-2000-000038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겸업허가 신청서류 10	1-1160043-30-2000-000039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경영허가 신청서 1	1-1160043-30-2000-000040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경영허가 신청서 2	1-1160043-30-2000-000041	2000
증권감독과	증권회가 예비설립허가 신청서(리딩투자증권)	1-1160043-30-2000-000005	2000
증권감독과	증권업 경영허가 신청서 3	1-1160043-30-2000-000042	2000
증권감독과	투자자문사 합병인가	1-1160043-30-2000-000045	2000
증권감독과	피데스증권중개 예비허가 및 피데스 투자자문 출자승인	1-1160043-30-2000-000046	2000
증권감독과	한국선물거래(주)의 선물업 예비, 본허가 1	1-1160043-30-2000-000047	2000
증권감독과	한국선물거래(주)의 선물업 예비, 본허가 2	1-1160043-30-2000-000048	2000
증권감독과	한국선물과 대한선물 합병본인가	1-1160043-30-2000-000049	2000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접수등록대장	1-1160043-40-1998-000001	1998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접수문서-접수대장	1-1160043-40-1998-000002	1998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99년 문서등록	1-1160043-40-1999-000002	1999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등록접수대장	1-1160043-40-1999-000003	1999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접수문서	1-1160043-40-1999-000004	1999
증권감독과	장은증권 행정심판	1-1160043-40-1999-000005	1999
증권감독과	문서인계철	1-1160043-40-2000-000001	2000
증권감독과	대우계열 채권 매입요청	1-1160043-40-2000-000002	2000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등록문서	1-1160043-40-2000-000003	2000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등록접수대장	1-1160043-40-2000-000004	2000
증권감독과	구조개혁기획단 문서접수문서	1-1160043-40-2000-000005	2000
증권감독과	한투,대투 필수이행사항	1-1160043-40-2000-000006	2000
증권감독과	신세기투신 영업정지	1-1160043-30-1998-000002	1998
증권감독과	외국사의 국내투신사 지분 참여(A·C한화투신)	1-1160043-30-1998-000003	1998
증권감독과	증권관련 문서철 1	1-1160043-30-1998-000019	1998
증권감독과	증권관련 문서철 2	1-1160043-30-1998-000020	1998
증권감독과	증권관련 문서철 3	1-1160043-30-1998-000021	1998
증권감독과	BTI 자본금감액	1-1160043-30-1998-000023	1998

증권감독과	공사채등록기관 등록 신청서	1-1160043-30-1999-000012	1999
증권감독과	모건은행 증권업 경영	1-1160043-30-1999-000014	1999
증권감독과	삼성증권	1-1160043-30-1999-000015	1999
증권감독과	선물거래소 규정승인	1-1160043-30-1999-000016	1999
증권감독과	선물회사 관리	1-1160043-30-1999-000017	1999
증권감독과	외환투신 지분변경	1-1160043-30-1999-000018	1999
증권감독과	증권관련 문서철 1	1-1160043-30-1999-000023	1999
증권감독과	증권관련 문서철 2	1-1160043-30-1999-000024	1999
증권감독과	증권업	1-1160043-30-1999-000025	1999
증권감독과	코리아 RB증권중개	1-1160043-30-1999-000026	1999
증권감독과	크레디 리요네	1-1160043-30-1999-000027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 건물이전 승인	1-1160043-30-1999-000028	1999
증권감독과	월드에셋 투자자문 겸업승인	1-1160043-30-1999-000029	1999
증권감독과	조흥투신신운용의 출자자 지분변경 동의	1-1160043-30-1999-000032	1999
증권감독과	투신사 구조조정	1-1160043-30-1999-000033	1999
증권감독과	한국선물협회관련철	1-1160043-30-1999-000037	1999
증권감독과	합병(LG증권) 신청서류	1-1160043-30-1999-000008	1999
증권감독과	HSBC	1-1160043-30-1999-000041	1999
증권감독과	외국위탁회사 국내사무소 설치(크레딧 스위스 에셋 매니지먼트)	1-1160043-30-2000-000001	2000
증권감독과	투신사 합병(삼성)	1-1160043-30-2000-000003	2000
증권감독과	동양선물지분변경승인	1-1160043-30-2000-000009	2000
증권감독과	대한투신증권수익증권 판매회사 등록	1-1160043-30-2000-000015	2000
증권감독과	외국위탁회사 국내사무소 설치	1-1160043-30-2000-000016	2000
증권감독과	주식취득승인신청	1-1160043-30-2000-000028	2000
증권감독과	㈜TS선물 주요주주 지분변경승인	1-1160043-30-2000-000029	2000
증권감독과	증권회사 출자승인 3	1-1160043-30-2000-000006	2000
증권감독과	증권회사 출자승인 1	1-1160043-30-2000-000043	2000
증권감독과	증권회사 출자승인 2	1-1160043-30-2000-000044	2000
증권감독과	한국증권중개㈜	1-1160043-30-2000-000050	2000
증권감독과	한국채권중개(임원선임 및 출자자 추가)	1-1160043-30-2000-000053	2000
증권감독과	CJ-TARA 출자승인	1-1160043-30-2000-000055	2000
증권감독과	Gerala Far East 선물영업 반납	1-1160043-30-2000-000057	2000
증권감독과	한국증권중개(주) 예비설립허가 1	1-1160043-30-2000-000051	2000
증권감독과	한국증권중개(주) 예비설립허가 2	1-1160043-30-2000-000052	2000
증권감독과	ABN Amro 아시아증권 서울지점 업종추가 허가신청서	1-1160043-30-2000-000054	2000
증권감독과	E*SUN증권중개(주) 예비허가 신청서	1-1160043-30-2000-000056	2000
보험감독과	릴라이언스 허가철 1	1-1160044-40-1998-000008	1998
보험감독과	생명보험사업 분허가 신청서(제 부속서류)	1-1160044-40-1998-000009	1998
보험감독과	AGF 국내지점 내허가 및 내허가 취소	1-1160044-40-1998-000001	1998
보험감독과	선박건조선급금 이행보증사업 허가철	1-1160044-40-1998-000010	1998
보험감독과	보험회사 구조조정 부의안건	1-1160044-40-1998-000024	1998
보험감독과	LG생명 내허가 신청 (II)	1-1160044-40-1998-000026	1998
보험감독과	대신생명 보험사업 허가철	1-1160044-40-1999-000001	1999
보험감독과	생보사 허가 취소 (재정경제부철)	1-1160044-40-1999-000005	1999
보험감독과	LG생명 내허가 신청 (I)	1-1160044-40-1999-000006	1999
보험감독과	릴라이언스 허가철 2	1-1160044-40-1999-000011	1999
보험감독과	현대생명 내허가 신청	1-1160044-40-1999-000014	1999
보험감독과	채권추심업 허가 검토 (서울보증)	1-1160044-40-1999-000027	1999
보험감독과	페더럴 손보 내허가 신청서	1-1160044-40-1999-000029	1999
보험감독과	금감위안건(가)의 부속서류(인인인인) 허가	1-1160044-40-1999-000030	1999
보험감독과	금감위 안건 (I) (6개 생보사)	1-1160044-40-1999-000074	1999
보험감독과	금감위 안건 (II) (6개 생보사)	1-1160044-40-1999-000075	1999
보험감독과	페더럴 인슈어런스 컴퍼니 국내지점 예비허가 신청서 1	1-1160044-40-1999-000106	1999

보험감독과	페더럴 인슈어런스 컴퍼니 국내지점 예비허가 신청서 2	1-1160044-40-1999-000107	1999
보험감독과	금감위 안건 (6개 생보사 관련)	1-1160044-40-2000-000006	2000
보험감독과	생보업인허가 I	1-1160044-40-2000-000030	2000
보험감독과	로알 & 선 얼라이언스 국내지점 예비허가 신청서 1	1-1160044-40-2000-000053	2000
보험감독과	페더럴 손보 허가	1-1160044-40-2000-000033	2000
보험감독과	로알 & 선 얼라이언스 국내지점 예비허가 신청서 2	1-1160044-40-2000-000054	2000
보험감독과	로알 & 선 얼라이언스 손보내허가 I	1-1160044-40-2000-000055	2000
보험감독과	로알 & 선 얼라이언스 손보내허가 II	1-1160044-40-2000-000056	2000
보험감독과	비질런트보험 보험계약이전 인가	1-1160044-40-2000-000057	2000
보험감독과	현대해상의 전자서명인증 등록대행업 허가	1-1160044-40-2000-000059	2000
보험감독과	동양화재 전자서명인증 등록대행업 부수업무 허가	1-1160044-40-2000-000060	2000
보험감독과	전자서명인증 등록대행업 부수업무 허가(동부, 제일, 삼성, 교보)	1-1160044-40-2000-000061	2000
보험감독과	전자서명인증 등록대행업 부수업무 허가 (신동아, 삼성)	1-1160044-40-2000-000062	2000
보험감독과	두원생명 허가 취소	1-1160044-40-2000-000005	2000
보험감독과	제일 · 프랑스생명 합병인가 신청	1-1160044-40-2000-000043	2000
보험감독과	SK생명보험(주)의 국민생명보험(주) 및 한덕생명보험(주) 흡수합병 인가	1-1160044-40-2000-000084	2000
보험감독과	전자서명인증 등록대행업 부수업무허가 (교보, 삼성)	1-1160044-40-2000-000086	2000
보험감독과	중앙생명 국내재보험업 허가(교보, 삼성)	1-1160044-40-2000-000087	2000
보험감독과	퀵론재보험 국내지점 예비허가1	1-1160044-40-2000-000088	2000
보험감독과	민헨 재보험 예비설립 허가	1-1160044-40-2000-000089	2000
보험감독과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예비허가 신청서(퍼스트 아메리칸) 1	1-1160044-40-2000-000097	2000
보험감독과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예비허가 신청서(퍼스트 아메리칸) 2	1-1160044-40-2000-000090	2000
보험감독과	외국재보험사의 국내지점 설치를 위한 예비허가신청서 (스위스 재보험)	1-1160044-40-2000-000091	2000
보험감독과	코리아디렉트자동차보험(주) 예비허가	1-1160044-40-2000-000092	2000
보험감독과	퍼스트 아메리칸 설립 허가	1-1160044-40-2000-000096	2000
보험감독과	시드니 리 주재사무소 허가	1-1160044-30-1998-000001	1998
은행감독과	신탁회사 설립인가(주택공제부동산)	1-1160041-40-1998-000001	1998
은행감독과	주택공제조합 부동산신탁 인가자료	1-1160041-40-1998-000002	1998
은행감독과	생보부동산신탁 인가신청(내인가신청서 반력)	1-1160041-40-1998-000003	1998
은행감독과	생보3사 부동산신탁업 내인가(생보부동산)	1-1160041-40-1998-000015	1998
은행감독과	생보3사 부동산신탁업 내인가(생보부동산 신탁사)	1-1160041-40-1998-000016	1998
은행감독과	인가취소 청문(경기은행 동화은행 인가취소)	1-1160041-40-1998-000069	1998
은행감독과	인가취소 청문관련	1-1160041-40-1998-000070	1998
은행감독과	국민 · 장기 합병인가 신청서	1-1160041-40-1998-000150	1998
은행감독과	내쇼날카나다은행 서울사무소 신설인가	1-1160041-40-2000-000107	2000
비은행감독과	충북지역 상호신용금고 "서울, 청주, 진천상창" 합병건	1-1160050-40-2000-000001	2000
비은행감독과	조흥 행정소송 본안 I	1-1160050-30-1998-000002	1998
비은행감독과	할부금융업 등록신청서 I	1-1160050-30-1998-000004	1998
비은행감독과	신기술업 등록신청서	1-1160050-30-1998-000005	1998
비은행감독과	조흥(부산) 소송 II	1-1160050-30-1998-000006	1998
비은행감독과	리스업 등록신청서 I	1-1160050-30-1998-000008	1998
비은행감독과	리스업 등록 신청서 III	1-1160050-30-1998-000009	1998
비은행감독과	등록신청서(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1-1160050-30-1998-000022	1998
비은행감독과	할부금융업 등록신청서 II	1-1160050-30-1998-000023	1998
비은행감독과	리스업 등록 신청서 IV	1-1160050-30-1998-000026	1998
비은행감독과	리스업 등록 신청서 II	1-1160050-30-1999-000002	1999



비은행감독과	유니온, 신동화, 아람 금고 신규 설립신청	1-1160050-30-1999-000014	1999
비은행감독과	여전업 등록말소등	1-1160050-30-1999-000009	1999
비은행감독과	㈜제은, 제주금고 합병	1-1160050-30-1999-000016	1999
비은행감독과	여전업 등록	1-1160050-30-1999-000018	1999
비은행감독과	산업리스 합병	1-1160050-30-1999-000010	1999
비은행감독과	충북지역 신용금고 합병신청	1-1160050-30-1999-000021	1999
비은행감독과	한솔금고 부국금고 합병1	1-1160050-30-2000-000001	2000
비은행감독과	대구지역 신용금고 합병신청	1-1160050-30-2000-000006	2000
비은행감독과	강원지역 신용금고 합병신청	1-1160050-30-2000-000008	2000
비은행감독과	부산지역 신용금고 합병철회	1-1160050-30-2000-000012	2000
비은행감독과	업무지도·감독일반	1-1160050-10-1998-000001	1998
비은행감독과	국보·제일상호신용금고 관리명령(출국금지)	1-1160050-10-1998-000002	1998
비은행감독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대장/등록증	1-1160050-10-1998-000003	1998
비은행감독과	할부금융업 등록대장/등록증	1-1160050-10-1998-000004	1998
비은행감독과	시설대여업 등록대장/등록증	1-1160050-10-1998-000005	1998
비은행감독과	조흥금고 가처분소	1-1160050-10-1999-000001	1999
비은행감독과	상주시신협 신설합병	1-1160050-10-1999-000015	1999
비은행감독과	한솔금고의 부국금고 주식취득관련, 공정위	1-1160050-10-1999-000026	1999
비은행감독과	비씨카드 주식취득승인	1-1160050-10-2000-000001	2000
비은행감독과	삼성벤처 주식취득	1-1160050-10-2000-000002	2000
비은행감독과	㈜TG벤처의 다른회사(해외) 주식취득신청	1-1160050-10-2000-000003	2000
비은행감독과	삼성카드의 올렛주식취득 승인신청	1-1160050-10-2000-000004	2000
비은행감독과	삼성카드 주식취득	1-1160050-10-2000-000005	2000
비은행감독과	TG벤처 주식취득	1-1160050-10-2000-000006	2000
은행감독과	내셔널카나다은행 서울지점 폐쇄인가	1-1160041-40-2000-000108	2000
은행감독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예비인가	1-1160041-40-2000-000110	2000
은행감독과	부동산신탁사 인가 관련철회	1-1160041-40-2000-000114	2000
은행감독과	크레디리요네은행 부산지점 폐쇄인가	1-1160041-40-2000-000117	2000
은행감독과	홍콩상하이은행 서초지점 신설인가	1-1160041-40-2000-000119	2000
은행감독과	Citi은행 분당지점 설치 인가	1-1160041-40-2000-000120	2000
은행감독과	중국공상은행서울사무소 폐쇄, 서울지점 신설 인가	1-1160041-30-1998-000002	1998
은행감독과	금전채권신탁업무 인가	1-1160041-30-1998-000006	1998
은행감독과	신탁업 경영인가(ABN AMRO)	1-1160041-30-1998-000008	1998
은행감독과	홍콩상하이은행 삼성, 압구정지점 신설인가	1-1160041-30-1998-000003	1998
은행감독과	외은지점 인가기준	1-1160041-30-1998-000011	1998
은행감독과	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 서울지점 폐쇄인가	1-1160041-30-1998-000012	1998
은행감독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 신설인가	1-1160041-30-1998-000013	1998
은행감독과	요꼬하마은행서울사무소 폐쇄인가	1-1160041-30-1998-000014	1998
은행감독과	이전인가	1-1160041-30-1998-000015	1998
은행감독과	은행인가 취소	1-1160041-30-1998-000016	1998
은행감독과	코오롱·한성(새한) 신용정보 내허가 관련철회	1-1160041-30-1998-000017	1998
은행감독과	최대주주변경(동양신용정보, 종로신용조사) 인가 관련철회	1-1160041-30-1998-000019	1998
은행감독과	허가사항변경 관련철회	1-1160041-30-1998-000004	1998
은행감독과	LG(미래)신용정보 허가·내허가 관련철회	1-1160041-30-1998-000005	1998
은행감독과	국민 신용정보 최대주주 변경 인가 관련철회	1-1160041-30-1998-000020	1998
은행감독과	외은지점인가철회	1-1160041-30-1999-000002	1999
은행감독과	신탁업 일부변경 인가 등	1-1160041-30-1999-000004	1999
은행감독과	아시아신용정보 설립 예비허가 관련철회Ⅲ	1-1160041-30-1999-000013	1999
은행감독과	외은지점 폐쇄 이전인가	1-1160041-30-1999-000005	1999
은행감독과	UBS 서울지점 인가	1-1160041-30-1999-000006	1999
은행감독과	금융기관합병인가(2)	1-1160041-30-1999-000014	1999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 허가변경 관련철회	1-1160041-30-1999-000007	1999
은행감독과	외은지점 폐쇄 이전인가	1-1160041-30-1999-000008	1999
은행감독과	대우신용정보 서울지점 폐쇄 및 사무소 이전 인 가	1-1160041-30-1999-000015	1999
은행감독과	금융기관합병내인가(2)	1-1160041-30-1999-000016	1999

은행감독과	광주은행 · 광은상호신용금고 합병인가	1-1160041-30-1999-000018	1999
은행감독과	국민은행 · 3개 상호신용금고 합병인가	1-1160041-30-1999-000019	1999
은행감독과	나텍시스은행 서울사무소 신설인가	1-1160041-30-1999-000020	1999
은행감독과	포스코은행 지점폐쇄 및 지점사무소 신설인가	1-1160041-30-1999-000021	1999
은행감독과	미쓰비시신탁은행 서울지점 폐쇄인가	1-1160041-30-1999-000022	1999
은행감독과	사쿠라은행 서울지점 폐쇄인가	1-1160041-30-1999-000023	1999
은행감독과	신탁업인가철	1-1160041-30-1999-000024	1999
은행감독과	조흥 · 강원 합병인가	1-1160041-30-1999-000025	1999
은행감독과	주택은행 · 주은상호신용금고 합병인가	1-1160041-30-1999-000026	1999
은행감독과	주택은행 · 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 합병인가	1-1160041-30-1999-000027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 합병인가	1-1160041-30-1999-000029	1999
은행감독과	코오롱, 한성(새한) 신용정보 본허가 관련철	1-1160041-30-1999-000031	1999
은행감독과	주은신용정보 설립 예비허가 관련철 I	1-1160041-30-1999-000032	1999
은행감독과	주은신용정보 설립 예비허가 관련철 II	1-1160041-30-1999-000033	1999
은행감독과	새일신용정보 설립(내허가)관련철 II	1-1160041-30-1999-000034	1999
은행감독과	중앙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II	1-1160041-30-1999-000035	1999
은행감독과	솔로몬신용정보 설립(예비)허가 관련철 II	1-1160041-30-1999-000036	1999
은행감독과	KM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II	1-1160041-30-1999-000037	1999
은행감독과	나래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II	1-1160041-30-1999-000038	1999
은행감독과	탐신용정보설립내허가(철회) 관련철	1-1160041-30-1999-000039	1999
은행감독과	세종신용정보 설립(예비)허가 관련철 III	1-1160041-30-1999-000040	1999
은행감독과	새일신용정보 설립(내허가)관련철 I	1-1160041-30-1999-000041	1999
은행감독과	중앙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I	1-1160041-30-1999-000042	1999
은행감독과	나래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1-1160041-30-1999-000010	1999
은행감독과	새한신용조사소 최대주주변경인가 관련철	1-1160041-30-1999-000043	1999
은행감독과	나래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I	1-1160041-30-1999-000044	1999
은행감독과	전산심사 인가관련 처리상황통보 관련철	1-1160041-30-1999-000011	1999
은행감독과	서울보증보험 채권추심업 내허가 관련철	1-1160041-30-1999-000045	1999
은행감독과	KM 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I	1-1160041-30-1999-000046	1999
은행감독과	아시아신용정보 설립 예비허가 관련철 II	1-1160041-30-2000-000001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 법률, 허가지침 관련철	1-1160041-30-2000-000002	2000
은행감독과	한국신용평가정보(허가사항변경)관련철 I	1-1160041-30-2000-000017	2000
은행감독과	메트로은행 부산지점 설치인가	1-1160041-30-2000-000003	2000
은행감독과	퍼스트인터내셔널은행 서울사무소 신설인가	1-1160041-30-2000-000005	2000
은행감독과	국민 신용정보업 허가 관련철	1-1160041-30-2000-000006	2000
은행감독과	최대주주변경 인가신청서 관련철	1-1160041-30-2000-000018	2000
은행감독과	국제신용정보 설립(예비)허가 관련철	1-1160041-30-2000-000007	2000
은행감독과	솔로몬신용정보 설립(예비)허가 관련철 I	1-1160041-30-2000-000008	2000
은행감독과	내소날카나다은행·국내사무소 신설 예비인가 신청서	1-1160041-30-2000-000024	2000
은행감독과	미스피어손은행 서울사무소 신설인가	1-1160041-30-2000-000011	2000
은행감독과	생보부동산신탁사 신탁업 인가	1-1160041-30-2000-000026	2000
은행감독과	캐나다로알은행 서울지점 폐쇄인가	1-1160041-30-2000-000028	2000
은행감독과	파리바은행 서울지점 폐쇄인가	1-1160041-30-2000-000029	2000
은행감독과	코람데오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신청서 관련철	1-1160041-30-2000-000033	2000
은행감독과	코람데오 신용평가 허가 신청 관련철	1-1160041-30-2000-000034	2000
은행감독과	코람데오 신용평가 인가신청 관련철	1-1160041-30-2000-000035	2000
은행감독과	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 관련철	1-1160041-30-2000-000039	2000
은행감독과	세종신용정보 설립(내허가) 관련철 I	1-1160041-30-2000-000013	2000
은행감독과	새한신용조사소 채권추심업 및 상호변경 허가 관련철	1-1160041-30-2000-000014	2000
은행감독과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업, 상호변경)허가 관련철	1-1160041-30-2000-000015	2000
은행감독과	솔로몬신용정보 설립(예비)허가 관련철 III	1-1160041-30-2000-000042	2000
은행감독과	솔로몬신용정보 설립(예비)허가 관련철 IV	1-1160041-30-2000-000043	2000
은행감독과	한국통신허가인허가 관련철	1-1160041-30-2000-000045	2000
은행감독과	골드만삭스 허가신청관련철	1-1160041-30-2000-000050	2000
은행감독과	뉴욕은행 부산지점 이전인가	1-1160041-10-1999-000001	1999

은행감독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이전인가	1-1160041-10-1999-000003	1999
은행감독과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이전인가	1-1160041-10-2000-000002	2000
비은행감독과	투금사에 대한 종금사 인가	1-1160050-40-1998-000001	1998
비은행감독과	대구지역 조일, 갑을, 동아, 수평 금고 합병에 비인가	1-1160050-40-2000-000002	2000
의사국제과	감리위원회 위원장 조치 I	1-1160051-40-1998-000002	1998
의사국제과	감리위원회 위원장 조치 II	1-1160051-40-1998-000003	1998
의사국제과	감리위원회 위원장 조치 III	1-1160051-40-1998-000004	1998
의사국제과	구조개혁기획단 관련	1-1160051-40-1998-000001	1998
의사국제과	이행계획서 이첩	1-1160051-40-1998-000005	1998
의사국제과	성업공사 관련	1-1160051-40-1998-000006	1998
의사국제과	회의록 작성 검토	1-1160051-40-1998-000007	1998
의사국제과	해외출장관련(OECD 출장등)	1-1160051-40-1998-000008	1998
의사국제과	외국인 단기금융상품 개방	1-1160051-40-1998-000009	1998
의사국제과	제7차 증선위(공문)	1-1160051-40-1998-000019	1998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1-1160051-40-1998-000035	1998
의사국제과	제10차 금감위 (조치기안공문)	1-1160051-40-1998-000055	1998
의사국제과	제10차 금감위 (조치시행사본)	1-1160051-40-1998-000056	1998
의사국제과	계약이전결정서 수정본	1-1160051-40-1998-000061	1998
의사국제과	계약이전결정서 최종본	1-1160051-40-1998-000062	1998
의사국제과	제16차 금감위 공문	1-1160051-40-1998-000066	1998
의사국제과	제19차 금감위 공문	1-1160051-40-1998-000070	1998
의사국제과	제20차 금감위 공문	1-1160051-40-1998-000072	1998
의사국제과	조치관련 공문서	1-1160051-40-1999-000001	1999
의사국제과	제21차 증선위 공문	1-1160051-40-1999-000003	1999
의사국제과	제13차 금감위 공문	1-1160051-40-1999-000004	1999
의사국제과	장은증권 관련	1-1160051-40-1999-000005	1999
의사국제과	기타공문서(재산등록관련)	1-1160051-40-1999-000006	1999
의사국제과	감리위원회 위원장 조치 I	1-1160051-40-1999-000013	1999
의사국제과	동방페레그린 (주) 관련	1-1160051-40-1999-000007	1999
의사국제과	증선위원장 해석제정 I	1-1160051-40-1999-000008	1999
의사국제과	파산관재인 관련	1-1160051-40-1999-000014	1999
의사국제과	증선위원장 해석제정 II	1-1160051-40-1999-000015	1999
의사국제과	회의록 작성 검토	1-1160051-40-1999-000016	1999
의사국제과	감사인 선임 보고	1-1160051-40-1999-000017	1999
의사국제과	해외출장관련(OECD 원탁회의)	1-1160051-40-1999-000018	1999
의사국제과	사전 협의 18	1-1160051-40-1999-000071	1999
의사국제과	금융기간 공문서 19차	1-1160051-40-1999-000073	1999
의사국제과	대한생명 (주) 관련	1-1160051-40-1999-000096	1999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I	1-1160051-40-1999-000097	1999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II	1-1160051-40-1999-000098	1999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III	1-1160051-40-1999-000099	1999
의사국제과	증선위원장 해석제정 III	1-1160051-40-2000-000001	2000
의사국제과	31차 후속사항	1-1160051-40-2000-000005	2000
의사국제과	감리위원회 위원장 조치 I	1-1160051-40-2000-000006	2000
의사국제과	감리위원회 위원장 조치 II	1-1160051-40-2000-000007	2000
의사국제과	감리위원회 위원장 조치 III	1-1160051-40-2000-000008	2000
의사국제과	조치사항에 대한 재심청구	1-1160051-40-2000-000009	2000
의사국제과	재심청구서(대투·한투)	1-1160051-40-2000-000010	2000
의사국제과	파산관재인 관련	1-1160051-40-2000-000011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1	1-1160051-40-2000-000093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2	1-1160051-40-2000-000094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3	1-1160051-40-2000-000095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4	1-1160051-40-2000-000096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5	1-1160051-40-2000-000097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6	1-1160051-40-2000-000098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7	1-1160051-40-2000-000099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8	1-1160051-40-2000-000100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9	1-1160051-40-2000-000101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10	1-1160051-40-2000-000102	2000
의사국제과	합 동 간 담 회	1-1160051-10-1999-000001	1999
의사국제과	간 담 회(1) 4차	1-1160051-10-1999-000002	1999
의사국제과	간 담 회(2)	1-1160051-10-1999-000003	1999
의사국제과	제 9차합동간담회	1-1160051-10-1999-000004	1999
의사국제과	제10차합동간담회	1-1160051-10-1999-000005	1999
의사국제과	제11차 간담회	1-1160051-10-1999-000006	1999
의사국제과	제12차합동간담회	1-1160051-10-1999-000007	1999
의사국제과	제13차합동간담회	1-1160051-10-1999-000008	1999
의사국제과	제14차합동간담회	1-1160051-10-1999-000009	1999
의사국제과	감리결과 위원장조치	1-1160051-10-1999-000010	1999
의사국제과	감리결과 위원장조치 III	1-1160051-10-1999-000011	1999
의사국제과	회계사 징계위원회	1-1160051-10-2000-000001	2000
의사국제과	제 1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2	2000
의사국제과	제 2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3	2000
의사국제과	제 3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4	2000
의사국제과	제 4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5	2000
의사국제과	제 5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6	2000
의사국제과	제 6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7	2000
의사국제과	제 7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8	2000
의사국제과	제 8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09	2000
의사국제과	제 9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0	2000
의사국제과	제10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1	2000
의사국제과	제11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2	2000
의사국제과	제12차합동간담회 I	1-1160051-10-2000-000013	2000
의사국제과	제12차합동간담회 II	1-1160051-10-2000-000014	2000
의사국제과	제13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5	2000
의사국제과	제14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6	2000
의사국제과	제15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7	2000
의사국제과	제17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8	2000
의사국제과	제18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19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20	2000
의사국제과	제20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21	2000
의사국제과	제21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22	2000
의사국제과	제22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23	2000
의사국제과	제23차합동간담회	1-1160051-10-2000-000024	2000
의사국제과	제24차합동간담회 I	1-1160051-10-2000-000025	2000
의사국제과	제24차합동간담회 II	1-1160051-10-2000-000026	2000
의사국제과	제24차합동간담회 III	1-1160051-10-2000-000027	2000
의사국제과	문서등록대장	1-1160051-10-2000-000028	2000
비은행감독과	오성금고 인가	1-1160050-30-1998-000001	1998
비은행감독과	조흥금고(부산) III 인가	1-1160050-30-1998-000003	1998
비은행감독과	대천금고 영업인가	1-1160050-30-1998-000010	1998
비은행감독과	원주금고(강원) 인가	1-1160050-30-1998-000011	1998
비은행감독과	인가취소금고 재산실사자료(우양, 대청, 금정, 신경기, 충남)	1-1160050-30-1998-000012	1998
비은행감독과	대원금고(경북) 영업인가	1-1160050-30-1998-000013	1998
비은행감독과	충일서산금고 영업인가	1-1160050-30-1998-000014	1998
비은행감독과	영업인가 취소(동아, 삼원, 경일, 신일, 일신)	1-1160050-30-1998-000015	1998
비은행감독과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취소(금정, 신경기, 충남, 대청, 우양)	1-1160050-30-1998-000016	1998
비은행감독과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I (기산, 동화)	1-1160050-30-1998-000017	1998
비은행감독과	금고 영업인가 취소(영주, 부민)	1-1160050-30-1998-000018	1998
비은행감독과	정관변경 업무방법서 인가	1-1160050-30-1998-000019	1998
비은행감독과	종금사 인가취소 청문회 관련철	1-1160050-30-1998-000020	1998

비은행감독과	종금사 영업정지 인가취소 II	1-1160050-30-1998-000007	1998
비은행감독과	종금 영업정지 인가취소 3	1-1160050-30-1998-000021	1998
비은행감독과	신탁인가 취소(오근장)	1-1160050-30-1998-000024	1998
비은행감독과	신탁 신규인가	1-1160050-30-1998-000025	1998
비은행감독과	대구국민금고 합병인가	1-1160050-30-1998-000027	1998
비은행감독과	수원금고 인가(주.전)	1-1160050-30-1999-000001	1999
비은행감독과	해동금고(경기) 영업인가	1-1160050-30-1999-000003	1999
비은행감독과	새문양금고 인가	1-1160050-30-1999-000004	1999
비은행감독과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취소(중앙, 올리브, 호남, 경부)	1-1160050-30-1999-000005	1999
비은행감독과	부산2금고 영업인가	1-1160050-30-1999-000006	1999
비은행감독과	㈜전환 신탁금고 인가(주·전)	1-1160050-30-1999-000011	1999
비은행감독과	금고 인가취소 I (유남, 우신금고)	1-1160050-30-1999-000007	1999
비은행감독과	금고 인가취소 II (화신, 조치원, 대화)	1-1160050-30-1999-000012	1999
비은행감독과	쌍인 외 8개 금고 인가취소	1-1160050-30-1999-000013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	1-1160050-30-1999-000008	1999
비은행감독과	㈜충은, ㈜대전금고 합병인가	1-1160050-30-1999-000019	1999
비은행감독과	제은, 제주금고 합병인가	1-1160050-30-1999-000020	1999
비은행감독과	㈜충은, 대전 금고 합병인가	1-1160050-30-1999-000015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목포)	1-1160050-30-1999-000017	1999
비은행감독과	뉴스테이트 합병인가	1-1160050-30-2000-000002	2000
비은행감독과	(제주)삼일금고 인가취소	1-1160050-30-2000-000003	2000
비은행감독과	(경남)충무금고 인가취소	1-1160050-30-2000-000004	2000
비은행감독과	신충북, 부일금고 인가취소 1	1-1160050-30-2000-000005	2000
비은행감독과	강원지역 신용금고 합병 예비인가 신청	1-1160050-30-2000-000007	2000
비은행감독과	㈜동아금고 합병인가	1-1160050-30-2000-000009	2000
비은행감독과	신한국금고 영업인가 신청	1-1160050-30-2000-000010	2000
비은행감독과	제일상호신용금고 합병인가 신청 1	1-1160050-30-2000-000011	2000
비은행감독과	(대전)신탁, (부산)신탁, (대전)대전금고 인가취소	1-1160050-30-2000-000013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울산중앙)	1-1160050-30-2000-000014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원주밝음)	1-1160050-30-2000-000015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서원주)	1-1160050-30-2000-000016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수원권선)	1-1160050-30-2000-000017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병영)	1-1160050-30-2000-000018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한울)	1-1160050-30-2000-000019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수안보)	1-1160050-30-2000-000020	2000
비은행감독과	부산소재 4개 금고 합병인가(예비) (삼보, 대동, 동남, 북산금고)	1-1160050-30-2000-000021	2000
비은행감독과	(부산) 삼보, 대동, 동남, 북산금고 합병인가	1-1160050-30-2000-000022	2000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인월)	1-1160050-10-1999-000002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태릉)	1-1160050-10-1999-000003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정읍대건)	1-1160050-10-1999-000004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연제)	1-1160050-10-1999-000005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도동)	1-1160050-10-1999-000006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전방)	1-1160050-10-1999-000007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금산)	1-1160050-10-1999-000008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철원)	1-1160050-10-1999-000009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하동)	1-1160050-10-1999-000010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동해)	1-1160050-10-1999-000011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한국공항)	1-1160050-10-1999-000012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양덕)	1-1160050-10-1999-000013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대전)	1-1160050-10-1999-000014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부여군)	1-1160050-10-1999-000016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월평)	1-1160050-10-1999-000017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여수동산)	1-1160050-10-1999-000018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진천)	1-1160050-10-1999-000019	1999
비은행감독과	신탁 합병인가(무극)	1-1160050-10-1999-000020	1999

비은행감독과	신협 합병인가(원주세교)	1-1160050-10-1999-000021	1999
비은행감독과	신협 합병인가(무안남부)	1-1160050-10-1999-000022	1999
비은행감독과	신협 합병인가(반도)	1-1160050-10-1999-000023	1999
비은행감독과	신협 합병인가(성주)	1-1160050-10-1999-000024	1999
비은행감독과	신협 합병인가(울산중부)	1-1160050-10-1999-000025	1999
비은행감독과	온누리(성일)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1-1160050-10-1999-000027	1999
비은행감독과	영국신협 합병인가	1-1160050-10-1999-000028	1999
의사국제과	제1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1998-000010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1998-000011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증선위 안건 III	1-1160051-40-1998-000012	1998
의사국제과	제2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13	1998
의사국제과	제3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14	1998
의사국제과	제4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15	1998
의사국제과	제5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16	1998
의사국제과	제6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17	1998
의사국제과	제7차 증선위 안건(안건)	1-1160051-40-1998-000018	1998
의사국제과	제8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0	1998
의사국제과	제9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1	1998
의사국제과	제10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2	1998
의사국제과	제11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3	1998
의사국제과	제12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4	1998
의사국제과	제13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5	1998
의사국제과	제14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6	1998
의사국제과	제15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7	1998
의사국제과	제16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8	1998
의사국제과	제18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29	1998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30	1998
의사국제과	제20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31	1998
의사국제과	제21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8-000032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8-000033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8-000034	1998
의사국제과	증선위 의사록·의결서	1-1160051-40-1998-000036	1998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결서	1-1160051-40-1998-000037	1998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사록	1-1160051-40-1998-000038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금감위 안건 III	1-1160051-40-1998-000039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금감위 안건 IV	1-1160051-40-1998-000040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금감위 안건 V	1-1160051-40-1998-000041	1998
의사국제과	제1차 금감위 안건 VI	1-1160051-40-1998-000042	1998
의사국제과	제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43	1998
의사국제과	제3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8-000044	1998
의사국제과	제3차 금감위 안건 (조치)	1-1160051-40-1998-000045	1998
의사국제과	제4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46	1998
의사국제과	제5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47	1998
의사국제과	제6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48	1998
의사국제과	제7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49	1998
의사국제과	제8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8-000050	1998
의사국제과	제8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8-000051	1998
의사국제과	제9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52	1998
의사국제과	제10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8-000053	1998
의사국제과	제10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8-000054	1998
의사국제과	제11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57	1998
의사국제과	제1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58	1998
의사국제과	제13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8-000059	1998
의사국제과	제13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8-000060	1998
은행감독과	동남은행 경영정상화계획(부록)	1-1160041-40-1998-000012	1998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부속자료	1-1160041-40-1998-000013	1998

은행감독과	한일은행 부표	1-1160041-40-1998-000014	1998
은행감독과	문서등록1	1-1160041-40-1998-000017	1998
은행감독과	문서등록2	1-1160041-40-1998-000018	1998
은행감독과	담보부사채 신탁업	1-1160041-40-1998-000019	1998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1	1-1160041-40-1998-000020	1998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2	1-1160041-40-1998-000021	1998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3	1-1160041-40-1998-000022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1	1-1160041-40-1998-000023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10	1-1160041-40-1998-000024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11	1-1160041-40-1998-000025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12	1-1160041-40-1998-000026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13	1-1160041-40-1998-000027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2	1-1160041-40-1998-000028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3	1-1160041-40-1998-000029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4	1-1160041-40-1998-000030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5	1-1160041-40-1998-000031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6	1-1160041-40-1998-000032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7	1-1160041-40-1998-000033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8	1-1160041-40-1998-000034	1998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9	1-1160041-40-1998-000035	1998
은행감독과	민원목록철	1-1160041-40-1998-000036	1998
은행감독과	조흥·외환 향후 조치계획	1-1160041-40-1998-000037	1998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결정서	1-1160041-40-1998-000038	1998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수정	1-1160041-40-1998-000039	1998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결정서 전문	1-1160041-40-1998-000040	1998
은행감독과	정리은행 의견서	1-1160041-40-1998-000041	1998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업무처리지침	1-1160041-40-1998-000042	1998
은행감독과	통지공문	1-1160041-40-1998-000043	1998
은행감독과	신탁관련 I	1-1160041-40-1998-000044	1998
은행감독과	신탁제도 개선	1-1160041-40-1998-000045	1998
은행감독과	강원·충북·평화·제주 자료	1-1160041-40-1998-000046	1998
은행감독과	경영정상화계획 추진실적(12개 이달)	1-1160041-40-1998-000047	1998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사후 관리	1-1160041-40-1998-000048	1998
은행감독과	구조 조정안 (자체)	1-1160041-40-1998-000049	1998
은행감독과	구조조정 III	1-1160041-40-1998-000050	1998
은행감독과	구조조정 관련 '보도자료'	1-1160041-40-1998-000051	1998
은행감독과	구조조정 (II)	1-1160041-40-1998-000052	1998
은행감독과	구조조정 관련 '보도자료'	1-1160041-40-1998-000053	1998
은행감독과	권고·조치 관련	1-1160041-40-1998-000054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경영진단보고서(비계량-부록)	1-1160041-40-1998-000055	1998
은행감독과	금융 구조조정(IV)	1-1160041-40-1998-000056	1998
은행감독과	금융구조조정 비용 (보도자료 등)	1-1160041-40-1998-000057	1998
은행감독과	동남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1-1160041-40-1998-000058	1998
은행감독과	보도자료	1-1160041-40-1998-000059	1998
은행감독과	부실채권 현황	1-1160041-40-1998-000060	1998
은행감독과	부실채권규모 추정 자료	1-1160041-40-1998-000061	1998
은행감독과	신탁 처리방안	1-1160041-40-1998-000062	1998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중자 및 합병 검토	1-1160041-40-1998-000063	1998
은행감독과	융역진행상황 보고(하반기)	1-1160041-40-1998-000064	1998
은행감독과	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평가회계법인 선정결과보고	1-1160041-40-1998-000065	1998
은행감독과	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평가회계법인 선정결과보고	1-1160041-40-1998-000066	1998
은행감독과	은행 인원 감축 계획	1-1160041-40-1998-000067	1998

은행감독과	은행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1998년 6월 은행 구조조정 관련)	1-1160041-40-1998-000068	1998
은행감독과	일반은행의 재산·채무 실사결과	1-1160041-40-1998-000071	1998
은행감독과	정리은행 관련	1-1160041-40-1998-000072	1998
은행감독과	중소기업 지원관련(정리은행)	1-1160041-40-1998-000073	1998
은행감독과	지방은행등	1-1160041-40-1998-000074	1998
은행감독과	참고자료 (Contingency Plan) 관련	1-1160041-40-1998-000075	1998
은행감독과	퇴출은행 관련 공적자금 투입 내역	1-1160041-40-1998-000076	1998
은행감독과	하나·보람 합병 지원	1-1160041-40-1998-000077	1998
은행감독과	하반기 경영진단 방안	1-1160041-40-1998-000078	1998
은행감독과	합병비율 산정관련 자료(참고자료)	1-1160041-40-1998-000079	1998
은행감독과	행정소송(1)	1-1160041-40-1998-000080	1998
은행감독과	행정소송(2)	1-1160041-40-1998-000081	1998
은행감독과	회계법인 용역진행 상황보고 (상반기)	1-1160041-40-1998-000082	1998
은행감독과	IBM 관련철	1-1160041-40-1998-000083	1998
은행감독과	TOR	1-1160041-40-1998-000084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5	1-1160041-40-1998-000085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6	1-1160041-40-1998-000086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7	1-1160041-40-1998-000087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8	1-1160041-40-1998-000088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0	1-1160041-40-1998-000089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5	1-1160041-40-1998-000090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9	1-1160041-40-1998-000091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 경영진단보고서(비계량-부록)	1-1160041-40-1998-000092	1998
은행감독과	대구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093	1998
은행감독과	대동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094	1998
은행감독과	동남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095	1998
은행감독과	동화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096	1998
은행감독과	부산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097	1998
은행감독과	상업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098	1998
은행감독과	신한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099	1998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0	1998
은행감독과	장기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1	1998
은행감독과	전북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2	1998
은행감독과	제주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3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경영진단 보고서(비계량-부 록)130850과 동일	1-1160041-40-1998-000104	1998
은행감독과	주택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5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6	1998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7	1998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8	1998
은행감독과	하나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09	1998
은행감독과	한미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10	1998
은행감독과	한일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11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 경영정상화계획	1-1160041-40-1998-000112	1998
은행감독과	동남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	1-1160041-40-1998-000113	1998
은행감독과	동화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	1-1160041-40-1998-000114	1998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	1-1160041-40-1998-000115	1998
은행감독과	제주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	1-1160041-40-1998-000116	1998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	1-1160041-40-1998-000117	1998
은행감독과	한일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	1-1160041-40-1998-000118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19	1998
은행감독과	동화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0	1998
은행감독과	상업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1	1998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2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3	1998
은행감독과	제주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4	1998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5	1998
은행감독과	한일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6	1998
은행감독과	(주)대동은행 재산실사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7	1998
은행감독과	경기은행 핵심예금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8	1998
은행감독과	동화은행 핵심예금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29	1998
은행감독과	동화은행 재산실사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30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 내부통제제도 평가 및 개선안수립	1-1160041-40-1998-000131	1998
은행감독과	무수익 여신 정리계획(대동)	1-1160041-40-1998-000132	1998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내부통제제도 평가보고 및 개선의견	1-1160041-40-1998-000133	1998
은행감독과	대동은행 핵심예금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	1-1160041-40-1998-000134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경영전망 및 계획수립 전제조건	1-1160041-40-1998-000135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1-1160041-40-1998-000136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5개년 경영정상화계획 요약본	1-1160041-40-1998-000137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5년간 추정재무제표	1-1160041-40-1998-000138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지구계획 및 계수계획의 산출근거	1-1160041-40-1998-000139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지구계획 및 계수계획의 산출근거	1-1160041-40-1998-000140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한라계열 부실여신의 처리 전망과	1-1160041-40-1998-000141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인력 및 점포추가감축계획(이사회요구사항)	1-1160041-40-1998-000142	1998
은행감독과	은행경영개선을 위한 설문(금감위)	1-1160041-40-1998-000143	1998
은행감독과	NPLS	1-1160041-40-1998-000144	1998
은행감독과	B.B LAW 검토	1-1160041-40-1998-000145	1998
은행감독과	업무보고 참고 1	1-1160041-40-1998-000146	1998
은행감독과	리스자회사 정리방안	1-1160041-40-1998-000147	1998
은행감독과	공문서철	1-1160041-40-1998-000148	1998
은행감독과	공문서철	1-1160041-40-1998-000149	1998
은행감독과	(공통) 조치/이행상황보고 (위원장 지시사항)	1-1160041-40-1998-000151	1998
은행감독과	12개은행에 대한 금감위 부의안 I (조건부 승)	1-1160041-40-1998-000152	1998
은행감독과	13개은행에 대한 금감위 부의안 II (조건부 승인)	1-1160041-40-1998-000153	1998
은행감독과	5개 정리은행 관련 참고자료("인수철저"대통령지시사항 관련 실적 등)	1-1160041-40-1998-000154	1998
은행감독과	제일·서울 2 (일반사항)	1-1160041-40-1998-000155	1998
은행감독과	제일·서울 1	1-1160041-40-1998-000005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	1-1160041-40-1998-000156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	1-1160041-40-1998-000157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3	1-1160041-40-1998-000158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30	1-1160041-40-1998-000159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	1-1160041-40-1998-000160	1998
은행감독과	B.B 검토 1	1-1160041-40-1998-000161	1998
은행감독과	실사보고서 추가자료	1-1160041-40-1998-000162	1998
은행감독과	문서발송철	1-1160041-40-1998-000163	1998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사전검토	1-1160041-40-1998-000164	1998
은행감독과	정리은행 금감위 부의안	1-1160041-40-1998-000165	1998
은행감독과	신탁업무대행 계약서	1-1160041-40-1998-000166	1998
은행감독과	제일·서울 재정 소요 추정(3)	1-1160041-40-1998-000167	1998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8-000168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	1-1160041-40-1998-000169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	1-1160041-40-1998-000170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4	1-1160041-40-1998-000171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IV	1-1160041-40-1998-000172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V	1-1160041-40-1998-000173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 경영진단 보고서(비계량 부록)	1-1160041-40-1998-000174	1998
은행감독과	경기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75	1998
은행감독과	경남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76	1998
은행감독과	재산실사 및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77	1998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핵심예금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78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자회사 경영정상화 계획	1-1160041-40-1998-000179	1998
은행감독과	경기은행 재산실사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80	1998
은행감독과	동남은행 재산실사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81	1998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재산실사 평가보고서	1-1160041-40-1998-000182	1998
은행감독과	동화은행 내부통제 검토보고서	1-1160041-40-1998-000183	1998
은행감독과	금융구조조정	1-1160041-40-1998-000006	1998
은행감독과	대동은행 내부통제 검토보고서	1-1160041-40-1998-000184	1998
은행감독과	한미은행 수정실사보고서	1-1160041-40-1998-000185	1998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	1-1160041-40-1998-000186	1998
은행감독과	한국상업은행 경영정상화계획 1	1-1160041-40-1998-000187	1998
은행감독과	한국상업은행 경영정상화계획 2	1-1160041-40-1998-000188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 5개년 추정재무제표 2	1-1160041-40-1998-000189	1998
은행감독과	경기은행 경영진단보고서	1-1160041-40-1998-000190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1	1-1160041-40-1998-000191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2	1-1160041-40-1998-000007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7	1-1160041-40-1998-000192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6	1-1160041-40-1998-000193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8	1-1160041-40-1998-000194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9	1-1160041-40-1998-000195	1998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96	1998
은행감독과	동남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97	1998
은행감독과	동화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98	1998
은행감독과	한국상업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199	1998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200	1998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201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202	1998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203	1998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204	1998
은행감독과	광주은행 경영진단 보고서	1-1160041-40-1998-000205	1998
은행감독과	퍼스트 보스턴 관련철 1	1-1160041-40-1998-000206	1998
은행감독과	퍼스트 보스턴 관련철 2	1-1160041-40-1998-000207	1998
은행감독과	퍼스트 보스턴 관련철 3	1-1160041-40-1998-000208	1998
은행감독과	퍼스트 보스턴 관련철 4	1-1160041-40-1998-000209	1998
은행감독과	솔로몬 브라더스 관련철 1	1-1160041-40-1998-000210	1998
은행감독과	솔로몬 브라더스 관련철 2	1-1160041-40-1998-000211	1998
은행감독과	솔로몬 브라더스 관련철 3	1-1160041-40-1998-000212	1998
은행감독과	화이트 & 케이스 LLP	1-1160041-40-1998-000213	1998
은행감독과	재경원 한국 금융연구원 세계은행	1-1160041-40-1998-000214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의 합병 및 발전과제	1-1160041-40-1998-000215	1998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8-000216	1998
은행감독과	CBK-Hanil Bank Monitoring Team	1-1160041-40-1998-000217	1998
은행감독과	JP모건 관련철 2	1-1160041-40-1998-000218	1998
은행감독과	JP모건 관련철 3	1-1160041-40-1998-000219	1998
은행감독과	은행구조조정 후속조치방안	1-1160041-40-1998-000220	1998
은행감독과	솔로몬 스미스 바니 관련철	1-1160041-40-1998-000221	1998
은행감독과	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의 합병 및 발전과제	1-1160041-40-1998-000222	1998
은행감독과	Guidelines for Transformation	1-1160041-40-1998-000223	1998
은행감독과	메릴린치 관련철	1-1160041-40-1998-000224	1998
은행감독과	삼일회계법인	1-1160041-40-1998-000225	1998
은행감독과	모건스탠리 관련철	1-1160041-40-1998-000226	1998
은행감독과	모건스탠리 아시아 리미티드	1-1160041-40-1998-000227	1998
은행감독과	문서접수2	1-1160041-40-1999-000001	1999
은행감독과	문서등록3	1-1160041-40-1999-000072	1999
은행감독과	문서등록4	1-1160041-40-1999-000073	1999
은행감독과	공람문서(7,8,9월)	1-1160041-40-1999-000074	1999
은행감독과	감사원 일일감사	1-1160041-40-1999-000002	1999

은행감독과	금융인 재취업 활성화 검토	1-1160041-40-1999-000003	1999
은행감독과	99년 하반기 법령개정	1-1160041-40-1999-000075	1999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사후처리 I	1-1160041-40-1999-000004	1999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사후처리 II	1-1160041-40-1999-000005	1999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법률검토	1-1160041-40-1999-000006	1999
은행감독과	동화면세백화점	1-1160041-40-1999-000007	1999
은행감독과	금융구조조정 계획	1-1160041-40-1999-000008	1999
은행감독과	기아특수강 전환사채 인수 여부(충청은행 지 급보증)	1-1160041-40-1999-000076	1999
은행감독과	금융구조조정 비용(종합)	1-1160041-40-1999-000009	1999
은행감독과	부실채권 규모	1-1160041-40-1999-000010	1999
은행감독과	13개은행(일반)	1-1160041-40-1999-000011	1999
은행감독과	계약이전 : 대출연계 가수금처리	1-1160041-40-1999-000012	1999
은행감독과	관리인(감자명령 부의안)	1-1160041-40-1999-000013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1	1-1160041-40-1999-000014	1999
은행감독과	소송(1)	1-1160041-40-1999-000077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9	1-1160041-40-1999-000015	1999
은행감독과	제일 협상안 비교 3	1-1160041-40-1999-000078	1999
은행감독과	제일실사 1	1-1160041-40-1999-000079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매각관련 예보 앞 공문	1-1160041-40-1999-000080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1	1-1160041-40-1999-000016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2	1-1160041-40-1999-000081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3	1-1160041-40-1999-000082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4	1-1160041-40-1999-000017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1999.3/4)	1-1160041-40-1999-000083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018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6	1-1160041-40-1999-000019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8	1-1160041-40-1999-000084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0	1-1160041-40-1999-000085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6	1-1160041-40-1999-000020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3	1-1160041-40-1999-000086	1999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법 시행령 규칙 개정협의	1-1160041-40-1999-000087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	1-1160041-40-1999-000088	1999
은행감독과	금감위 의결사항/공적자금백서	1-1160041-40-1999-000089	1999
은행감독과	문서접수1	1-1160041-40-1999-000090	1999
은행감독과	문서접수2	1-1160041-40-1999-000091	1999
은행감독과	문서접수3	1-1160041-40-1999-000092	1999
은행감독과	문서접수4	1-1160041-40-1999-000093	1999
은행감독과	문서접수6	1-1160041-40-1999-000021	1999
은행감독과	문서접수5	1-1160041-40-1999-000094	1999
은행감독과	문서접수7	1-1160041-40-1999-000095	1999
은행감독과	문서등록1	1-1160041-40-1999-000096	1999
은행감독과	문서등록2	1-1160041-40-1999-000097	1999
은행감독과	공람문서(10,11,12월)	1-1160041-40-1999-000098	1999
은행감독과	기타문서1	1-1160041-40-1999-000099	1999
은행감독과	기타문서철1	1-1160041-40-1999-000022	1999
은행감독과	기타문서2	1-1160041-40-1999-000100	1999
은행감독과	기타문서3	1-1160041-40-1999-000101	1999
은행감독과	기타문서철2	1-1160041-40-1999-000102	1999
은행감독과	문서철	1-1160041-40-1999-000103	1999
은행감독과	문서철	1-1160041-40-1999-000104	1999
은행감독과	문서철(발송)	1-1160041-40-1999-000105	1999
은행감독과	민원서류 인수인계 대장	1-1160041-40-1999-000106	1999
은행감독과	법률안검토	1-1160041-40-1999-000107	1999
은행감독과	서무	1-1160041-40-1999-000108	1999
은행감독과	접수문서(7,8월)	1-1160041-40-1999-000109	1999
은행감독과	접수문서(9,10월)	1-1160041-40-1999-000110	1999

은행감독과	공문서철(누락분)	1-1160041-40-1999-000023	1999
은행감독과	접수문서(11월)	1-1160041-40-1999-000111	1999
은행감독과	접수문서(12월)	1-1160041-40-1999-000112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1	1-1160041-40-1999-000024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2	1-1160041-40-1999-000113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3	1-1160041-40-1999-000114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4	1-1160041-40-1999-000115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5	1-1160041-40-1999-000116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6	1-1160041-40-1999-000117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7	1-1160041-40-1999-000118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8	1-1160041-40-1999-000119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9	1-1160041-40-1999-000120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외부)2	1-1160041-40-1999-000121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외부)3	1-1160041-40-1999-000122	1999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외부)4	1-1160041-40-1999-000123	1999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1	1-1160041-40-1999-000124	1999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2	1-1160041-40-1999-000125	1999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3	1-1160041-40-1999-000126	1999
은행감독과	법령검토	1-1160041-40-1999-000127	1999
은행감독과	생산문서 현황철	1-1160041-40-1999-000025	1999
은행감독과	서울·제일은행	1-1160041-40-1999-000026	1999
은행감독과	서무관련 문서철	1-1160041-40-1999-000128	1999
은행감독과	위원장 지시사항	1-1160041-40-1999-000129	1999
은행감독과	신탁관련 II	1-1160041-40-1999-000027	1999
은행감독과	신탁관련 수/발신	1-1160041-40-1999-000028	1999
은행감독과	충북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130	1999
은행감독과	합병은행 세제감면	1-1160041-40-1999-000131	1999
은행감독과	은행권 「감자」	1-1160041-40-1999-000029	1999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II	1-1160041-40-1999-000132	1999
은행감독과	정리은행 사후관리 I	1-1160041-40-1999-000133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13	1-1160041-40-1999-000134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지원(1)	1-1160041-40-1999-000135	1999
은행감독과	참고자료 II (은행 구조조정 관련)	1-1160041-40-1999-000136	1999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국가배상」 신청사건	1-1160041-40-1999-000030	1999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031	1999
은행감독과	평화은행(참고철)	1-1160041-40-1999-000032	1999
은행감독과	행정소송(동남은행) 계약이전결정등 취소청구	1-1160041-40-1999-000033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5	1-1160041-40-1999-000137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6	1-1160041-40-1999-000138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7	1-1160041-40-1999-000139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8	1-1160041-40-1999-000034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9	1-1160041-40-1999-000140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0	1-1160041-40-1999-000141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1	1-1160041-40-1999-000142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2	1-1160041-40-1999-000143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3	1-1160041-40-1999-000144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4	1-1160041-40-1999-000145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5	1-1160041-40-1999-000146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7	1-1160041-40-1999-000035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6	1-1160041-40-1999-000147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8	1-1160041-40-1999-000148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9	1-1160041-40-1999-000149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20	1-1160041-40-1999-000150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21	1-1160041-40-1999-000151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22	1-1160041-40-1999-000036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23	1-1160041-40-1999-000152	1999

은행감독과	본계약서 II	1-1160041-40-1999-000153	1999
은행감독과	NB측에 송부자료 I	1-1160041-40-1999-000154	1999
은행감독과	NB와 교환자료 II	1-1160041-40-1999-000155	1999
은행감독과	NB와 교환자료 III	1-1160041-40-1999-000156	1999
은행감독과	NB와 교환자료 IV	1-1160041-40-1999-000157	1999
은행감독과	NB와 교환자료 V	1-1160041-40-1999-000158	1999
은행감독과	NB와 교환자료 VI	1-1160041-40-1999-000159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MOU 검토 I	1-1160041-40-1999-000037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MOU 검토 II	1-1160041-40-1999-000160	1999
은행감독과	금감원 실사·금감위 부의 (제일·서울)	1-1160041-40-1999-000161	1999
은행감독과	회의록 I (제일은행)	1-1160041-40-1999-000162	1999
은행감독과	회의록 II	1-1160041-40-1999-000163	1999
은행감독과	회의록 III	1-1160041-40-1999-000164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1998년11월~12월	1-1160041-40-1999-000038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매각관련 Morgan Stanley 자료	1-1160041-40-1999-000039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행정소송	1-1160041-40-1999-000165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감자명령	1-1160041-40-1999-000166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2	1-1160041-40-1999-000167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3	1-1160041-40-1999-000168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4	1-1160041-40-1999-000169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5	1-1160041-40-1999-000170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6	1-1160041-40-1999-000171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7	1-1160041-40-1999-000172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8	1-1160041-40-1999-000173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9	1-1160041-40-1999-000174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10	1-1160041-40-1999-000175	1999
은행감독과	서울 - 실사 및 평가 I	1-1160041-40-1999-000176	1999
은행감독과	서울 - 실사 및 평가 II	1-1160041-40-1999-000177	1999
은행감독과	서울 - 실사 및 평가 III	1-1160041-40-1999-000178	1999
은행감독과	서울 - HSBC에 송부자료 I	1-1160041-40-1999-000179	1999
은행감독과	서울 - HSBC에 송부자료 II	1-1160041-40-1999-000180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MOU 협상 I	1-1160041-40-1999-000181	1999
은행감독과	MOU(서울)	1-1160041-40-1999-000182	1999
은행감독과	서울 - MOU 협상 1 (HSBC측 자료)	1-1160041-40-1999-000183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제출자료	1-1160041-40-1999-000184	1999
은행감독과	서울 - 삼일 회의록	1-1160041-40-1999-000185	1999
은행감독과	Transparency (Seoul Bank)	1-1160041-40-1999-000040	1999
은행감독과	회의록 서울	1-1160041-40-1999-000186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위탁경영관련 후보기관의 연락	1-1160041-40-1999-000187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감자명령	1-1160041-40-1999-000188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위탁경영 외부 자문기관	1-1160041-40-1999-000189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위탁경영 관련 내부자료 Mgt Arrangement	1-1160041-40-1999-000190	1999
은행감독과	제일 협상안 비교 1	1-1160041-40-1999-000191	1999
은행감독과	제일 협상안 비교 2	1-1160041-40-1999-000192	1999
은행감독과	제일실사 2	1-1160041-40-1999-000193	1999
은행감독과	제일실사 3	1-1160041-40-1999-000194	1999
은행감독과	제일실사 4	1-1160041-40-1999-000195	1999
은행감독과	제일실사 5	1-1160041-40-1999-000196	1999
은행감독과	제일실사 6	1-1160041-40-1999-000197	1999
은행감독과	제일실사 7	1-1160041-40-1999-000198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고정자산	1-1160041-40-1999-000199	1999
은행감독과	제일매각관련 법률검토사항	1-1160041-40-1999-000041	1999
은행감독과	자회사(제일은행)	1-1160041-40-1999-000200	1999
은행감독과	제일매각관련 법률 검토사항	1-1160041-40-1999-000201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관련 MSBC와의 본계약서 관련 자료	1-1160041-40-1999-000202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실사(1)	1-1160041-40-1999-000203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실사(Ⅱ)	1-1160041-40-1999-000204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관련(Ⅰ)	1-1160041-40-1999-000205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관련(Ⅱ)	1-1160041-40-1999-000206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관련(Ⅲ)	1-1160041-40-1999-000207	1999
은행감독과	제일·서울 감자 관련철	1-1160041-40-1999-000208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실사 Ⅰ	1-1160041-40-1999-000209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관련 HSBC 자료	1-1160041-40-1999-000210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 MS 계약	1-1160041-40-1999-000042	1999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실사(Ⅲ)	1-1160041-40-1999-000211	1999
은행감독과	HSBC 요청자료	1-1160041-40-1999-000212	1999
은행감독과	HSBC 국내지점	1-1160041-40-1999-000213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본계약서 및 disclosure Schedule 관련철	1-1160041-40-1999-000214	1999
은행감독과	비용추천	1-1160041-40-1999-000215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매각관련 법무법인 자료 Ⅰ	1-1160041-40-1999-000043	1999
은행감독과	KFB 매각일지	1-1160041-40-1999-000216	1999
은행감독과	금융구조조정 소요비용 (제일·총괄)	1-1160041-40-1999-000217	1999
은행감독과	제일 - 협상 진행 결과	1-1160041-40-1999-000218	1999
은행감독과	KFB 본 계약서	1-1160041-40-1999-000219	1999
은행감독과	NEW BRIDGE 소개	1-1160041-40-1999-000220	1999
은행감독과	감자 및 증자(제일은행) Ⅱ	1-1160041-40-1999-000221	1999
은행감독과	자산부채 실사 및 가치평가 Ⅰ	1-1160041-40-1999-000222	1999
은행감독과	자산부채 실사 및 가치평가 Ⅱ	1-1160041-40-1999-000223	1999
은행감독과	KFB 후속자료(Ⅰ)	1-1160041-40-1999-000224	1999
은행감독과	KFB 후속자료(Ⅱ)	1-1160041-40-1999-000225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4	1-1160041-40-1999-000044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5	1-1160041-40-1999-000045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6	1-1160041-40-1999-000226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17	1-1160041-40-1999-000227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0	1-1160041-40-1999-000228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1	1-1160041-40-1999-000229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4	1-1160041-40-1999-000230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5	1-1160041-40-1999-000231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1999-000232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1999-000233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2	1-1160041-40-1999-000046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1999-000234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1999-000235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1	1-1160041-40-1999-000236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4	1-1160041-40-1999-000047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5	1-1160041-40-1999-000048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7	1-1160041-40-1999-000237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8	1-1160041-40-1999-000238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0	1-1160041-40-1999-000239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5	1-1160041-40-1999-000049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4	1-1160041-40-1999-000050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1	1-1160041-40-1999-000240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2	1-1160041-40-1999-000241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051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5	1-1160041-40-1999-000242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6	1-1160041-40-1999-000243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7	1-1160041-40-1999-000244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245	1999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관련 서류철(2)	1-1160041-40-1999-000052	1999
은행감독과	국민은행 경영 지배구조철	1-1160041-40-1999-000053	1999
은행감독과	금융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1-1160041-40-1999-000054	1999
은행감독과	AMC 방안	1-1160041-40-1999-000246	1999

은행감독과	AMC 참고	1-1160041-40-1999-000247	1999
은행감독과	AMC 상세	1-1160041-40-1999-000248	1999
은행감독과	업무보고 참고 3	1-1160041-40-1999-000055	1999
은행감독과	제99-3차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49	1999
은행감독과	제99-2차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0	1999
은행감독과	제99-1차 이사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1	1999
은행감독과	제99-2차 이사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2	1999
은행감독과	제99-3차 이사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3	1999
은행감독과	제99-4차 이사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4	1999
은행감독과	제99-5차 이사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5	1999
은행감독과	제99-6차 이사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6	1999
은행감독과	제99-7차 이사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57	1999
은행감독과	공람문서(2월)	1-1160041-40-1999-000258	1999
은행감독과	공람문서(3월)	1-1160041-40-1999-000259	1999
은행감독과	공람문서(4,5,6월)	1-1160041-40-1999-000260	1999
은행감독과	정리은행 선정	1-1160041-40-1999-000056	1999
은행감독과	금감위 부의안	1-1160041-40-1999-000057	1999
은행감독과	회사채지급보증	1-1160041-40-1999-000058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1	1-1160041-40-1999-000059	1999
은행감독과	고정자산처리	1-1160041-40-1999-000261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2	1-1160041-40-1999-000060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3	1-1160041-40-1999-000262	1999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4	1-1160041-40-1999-000263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2	1-1160041-40-1999-000061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3	1-1160041-40-1999-000062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1999.1/4)	1-1160041-40-1999-000264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1999.2/4)	1-1160041-40-1999-000265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063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0	1-1160041-40-1999-000064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1999-000266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1	1-1160041-40-1999-000267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065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1160041-40-1999-000066	1999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3	1-1160041-40-1999-000268	1999
은행감독과	국민·장기 신용	1-1160041-40-1999-000067	1999
은행감독과	제99-2차 감사위원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69	1999
은행감독과	제99-3차 감사위원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70	1999
은행감독과	제99-2차 경영발전 및 보상위원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71	1999
은행감독과	제99-4차 경영발전 및 보상위원회 의사록	1-1160041-40-1999-000272	1999
은행감독과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1-1160041-40-1999-000273	1999
은행감독과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1-1160041-40-1999-000274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이행실적 추가자료	1-1160041-40-1999-000275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이행실적 별첨자료	1-1160041-40-1999-000276	1999
은행감독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서 및 필수 이행사항(조흥)	1-1160041-40-1999-000277	1999
은행감독과	충청은행 계약이전 대상관련 추가명세	1-1160041-40-1999-000278	1999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기반	1-1160041-40-1999-000279	1999
은행감독과	KOREAN CAPITAL MARKET	1-1160041-40-1999-000280	1999
은행감독과	아더앤더슨 관련철 1	1-1160041-40-1999-000281	1999
은행감독과	아더앤더슨 관련철 2	1-1160041-40-1999-000282	1999
은행감독과	OECD/EC 주최 워크샵 참석 준비자료	1-1160041-40-1999-000283	1999
은행감독과	JP모건 관련철 1	1-1160041-40-1999-000284	1999
은행감독과	퇴출은행 관련 Q&A	1-1160041-40-2000-000002	2000
은행감독과	소송기록부 및 소송현황표	1-1160041-40-2000-000014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관련철 26	1-1160041-40-2000-000015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9	1-1160041-40-2000-000052	2000
은행감독과	경남은행 경영개선계획서	1-1160041-40-2000-000053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경영개선계획	1-1160041-40-2000-000054	2000
은행감독과	광주은행 경영개선 계획서(수정)	1-1160041-40-2000-000055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수정경영개선 계획	1-1160041-40-2000-000056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이행실적 참고자료	1-1160041-40-2000-000057	2000
은행감독과	광주은행 경영개선계획평가 사전보고서	1-1160041-40-2000-000058	2000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경영개선계획평가 사전보고서	1-1160041-40-2000-000059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수정경영개선 계획	1-1160041-40-2000-000060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경영개선계획평가 사전보고서	1-1160041-40-2000-000061	2000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경영개선계획평가 사전보고서	1-1160041-40-2000-000062	2000
은행감독과	제주은행 경영개선계획평가 최종보고서	1-1160041-40-2000-000063	2000
은행감독과	광주은행 경영개선 계획서	1-1160041-40-2000-000064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경영개선계획평가 사전보고서	1-1160041-40-2000-000065	2000
은행감독과	문서접수2	1-1160041-40-2000-000003	2000
은행감독과	문서	1-1160041-40-2000-000016	2000
은행감독과	문서접수1	1-1160041-40-2000-000066	2000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내부)10	1-1160041-40-2000-000017	2000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외부)1	1-1160041-40-2000-000018	2000
은행감독과	문서수신철(외부)5	1-1160041-40-2000-000019	2000
은행감독과	민원관련 문서철4	1-1160041-40-2000-000020	2000
은행감독과	감자관련 협의	1-1160041-40-2000-000021	2000
은행감독과	공람문서1	1-1160041-40-2000-000067	2000
은행감독과	공람문서2	1-1160041-40-2000-000068	2000
은행감독과	공람문서3	1-1160041-40-2000-000069	2000
은행감독과	사후관리 / 파산재단	1-1160041-40-2000-000004	2000
은행감독과	퇴출은행 소송	1-1160041-40-2000-000022	2000
은행감독과	5개 정리은행 인수인계	1-1160041-40-2000-000070	2000
은행감독과	2단계계획 및 세무계획 (1단계 경과 포함)	1-1160041-40-2000-000071	2000
은행감독과	5개 정리은행 인수·인계 내용	1-1160041-40-2000-000072	2000
은행감독과	광주은행	1-1160041-40-2000-000073	2000
은행감독과	국회의원 질의 답변 관련	1-1160041-40-2000-000074	2000
은행감독과	제일은행매각 일반 24	1-1160041-40-2000-000023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11	1-1160041-40-2000-000024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12	1-1160041-40-2000-000075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13	1-1160041-40-2000-000076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14	1-1160041-40-2000-000077	2000
은행감독과	서울위탁기관 선정 LOI 등	1-1160041-40-2000-000025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 위탁 (위원장 결재)	1-1160041-40-2000-000026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매각 종합 15	1-1160041-40-2000-000078	2000
은행감독과	감자 및 종자(제일)	1-1160041-40-2000-000005	2000
은행감독과	제일은행 매각관련 법무법인 자료 II	1-1160041-40-2000-000027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 자문계약 체결(I)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28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 자문계약 체결(II)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79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 자문계약 체결(III)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80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 자문계약 체결(IV)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81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 자문계약 체결(V)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82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자문 지행사항(I)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83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자문 지행사항(II)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84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자문 지행사항(III)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85	2000
은행감독과	서울은행 구조개선자문 지행사항(IV) - 도이 치은행	1-1160041-40-2000-000086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18	1-1160041-40-2000-000006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19	1-1160041-40-2000-000029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28	1-1160041-40-2000-000087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29	1-1160041-40-2000-000088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1999.4/4)	1-1160041-40-2000-000089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2000.1/4)	1-1160041-40-2000-000090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091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092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2000.2/4)	1-1160041-40-2000-000093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4	1-1160041-40-2000-000030	2000
은행감독과	한빛·조흥 Mou 수정	1-1160041-40-2000-000094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6	1-1160041-40-2000-000095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9	1-1160041-40-2000-000096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1999.4/4)	1-1160041-40-2000-000097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031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2000.1/4)	1-1160041-40-2000-000098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099	2000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관련 서류철	1-1160041-40-2000-000007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00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01	2000
은행감독과	문서등록1	1-1160041-40-2000-000008	2000
은행감독과	부산은행 관련 서류철	1-1160041-40-2000-000102	2000
은행감독과	평화은행 수정경영 개선계획서	1-1160041-40-2000-000103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공적공공자금 지원현황	1-1160041-40-2000-000104	2000
은행감독과	기타문서철	1-1160041-40-2000-000105	2000
은행감독과	기타서류철	1-1160041-40-2000-000106	2000
은행감독과	대통령·위원장 지시사항 문서	1-1160041-40-2000-000109	2000
은행감독과	문서발송1	1-1160041-40-2000-000111	2000
은행감독과	문서발송2	1-1160041-40-2000-000112	2000
은행감독과	문서수발대장 사본	1-1160041-40-2000-000009	2000
은행감독과	신탁계정의 고유계정 차입승인	1-1160041-40-2000-000032	2000
은행감독과	민원회신철1	1-1160041-40-2000-000113	2000
은행감독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1160041-40-2000-000115	2000
은행감독과	전자금융거래 관련철	1-1160041-40-2000-000116	2000
은행감독과	한국부동산신탁 현안보고	1-1160041-40-2000-000118	2000
은행감독과	문서등록대장(은행팀)	1-1160041-40-2000-000121	2000
은행감독과	문서접수대장(은행팀)	1-1160041-40-2000-000122	2000
은행감독과	동남은행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 참고용	1-1160041-40-2000-000033	2000
은행감독과	민사소송(충청은행) - 손해배상청구	1-1160041-40-2000-000034	2000
은행감독과	손해배상(1999-15123) 충청은행	1-1160041-40-2000-000123	2000
은행감독과	참고자료 (경기은행 퇴출 관련)	1-1160041-40-2000-000010	2000
은행감독과	행정소송 (동화은행) - 계약이전결정 등 취소	1-1160041-40-2000-000011	2000
은행감독과	참고자료 IV(행정소송 관련)	1-1160041-40-2000-000035	2000
은행감독과	정리금융기관	1-1160041-40-2000-000124	2000
은행감독과	행정소송(대동은행) - 계약이전 결정등취소청	1-1160041-40-2000-000012	2000
은행감독과	Steering Committee	1-1160041-40-2000-000125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26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27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2000.3/4)	1-1160041-40-2000-000128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29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30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31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관련철	1-1160041-40-2000-000036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 Mou 진척상황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32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3	1-1160041-40-2000-000133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32	1-1160041-40-2000-000013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8	1-1160041-40-2000-000037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27	1-1160041-40-2000-000134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35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2000.2/4)	1-1160041-40-2000-000136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37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38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2000.3/4)	1-1160041-40-2000-000139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2000.3/4)	1-1160041-40-2000-000140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41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42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43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관련철	1-1160041-40-2000-000038	2000
은행감독과	조흥은행 Mou 진척 상황 보고 (이사회)	1-1160041-40-2000-000144	2000
은행감독과	제주은행 관련 서류철	1-1160041-40-2000-000145	2000
은행감독과	공문	1-1160041-40-2000-000146	2000
은행감독과	경남은행 관련철	1-1160041-40-2000-000147	2000
은행감독과	금융노동조합	1-1160041-40-2000-000148	2000
은행감독과	사전점검(회계법인)	1-1160041-40-2000-000149	2000
은행감독과	수정경영개선계획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1-1160041-40-2000-000150	2000
은행감독과	제주은행 수정경영개선 계획	1-1160041-40-2000-000151	2000
은행감독과	문서접수1	1-1160041-40-2000-000152	2000
은행감독과	문서등록2	1-1160041-40-2000-000153	2000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경영개선계획	1-1160041-40-2000-000154	2000
은행감독과	LETTER OF INTENT	1-1160041-40-2000-000001	2000
은행감독과	외환은행 별첨 경영개선계획	1-1160041-40-2000-000155	2000
은행감독과	제주은행의 현안사항	1-1160041-40-2000-000156	2000
은행감독과	명칭변경 등	1-1160041-30-1998-000001	1998
은행감독과	특별유보금의 신탁보수 취득 승인	1-1160041-30-1998-000007	1998
은행감독과	모간은행 서울지점	1-1160041-30-1998-000009	1998
은행감독과	야스다 신탁은행 서울지점 폐쇄	1-1160041-30-1998-000010	1998
은행감독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지정 관련철 II	1-1160041-30-1998-000018	1998
은행감독과	경기은행소송 참고철	1-1160041-30-1998-000021	1998
은행감독과	한양은행(가칭) 사업계획서	1-1160041-30-1999-000001	1999
은행감독과	지역신용보증조합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지정 관련철 I	1-1160041-30-1999-000003	1999
은행감독과	경기은행 소송 관련철	1-1160041-30-1999-000017	1999
은행감독과	집중기관 등록 관련철	1-1160041-30-1999-000009	1999
은행감독과	주민등록전산조회심사 관련철	1-1160041-30-1999-000012	1999
은행감독과	하나은행의 한국종합금융(주)의 주식소유 승인	1-1160041-30-1999-000028	1999
은행감독과	합병금융기관 중복부동산 확인	1-1160041-30-1999-000030	1999
은행감독과	뱅크스트러스트 지점폐쇄 및 신탁폐지	1-1160041-30-2000-000004	2000
은행감독과	고려신용정보 신용조회업 신청 철회안 관련철	1-1160041-30-2000-000019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 참고자료관련철	1-1160041-30-2000-000020	2000
은행감독과	대구신용정보 관련철 I	1-1160041-30-2000-000009	2000
은행감독과	대구신용정보 관련철 II	1-1160041-30-2000-000021	2000
은행감독과	대구신용정보 관련철 III	1-1160041-30-2000-000022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 겸업승인 관련철 I	1-1160041-30-2000-000010	2000
은행감독과	주택은행의 ING생보 주식소유 승인	1-1160041-30-2000-000012	2000
은행감독과	기업은행의 기은금고 출자승인 협의	1-1160041-30-2000-000023	2000
은행감독과	대구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승인	1-1160041-30-2000-000025	2000
은행감독과	주택은행의 주은창투 주식소유 승인	1-1160041-30-2000-000027	2000
은행감독과	평화은행의 금융전산회사 주식소유 승인	1-1160041-30-2000-000030	2000
은행감독과	한미은행의 자산운용회사 주식소유 승인	1-1160041-30-2000-000031	2000
은행감독과	한빛은행의 SPC출자 협의	1-1160041-30-2000-000032	2000
은행감독과	코람데오 신용정보업 인사 신청 관련철	1-1160041-30-2000-000036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 관련철 I	1-1160041-30-2000-000037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 관련철 II	1-1160041-30-2000-000038	2000

은행감독과	삼성신용정보(철회)관련철	1-1160041-30-2000-000040	2000
은행감독과	대한신용정보(채권추심업 철회) 관련철	1-1160041-30-2000-000041	2000
은행감독과	솔로몬신용조회업 신청,철회안 관련철	1-1160041-30-2000-000044	2000
은행감독과	대구신용정보 관련철Ⅳ	1-1160041-30-2000-000046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협회 관련철	1-1160041-30-2000-000047	2000
은행감독과	주민등록전산정보이용심사 관련철	1-1160041-30-2000-000016	2000
은행감독과	서울보증보험(채권추심업)관련철	1-1160041-30-2000-000048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업무운영규정 관련철	1-1160041-30-2000-000049	2000
은행감독과	부동산신탁사 관련철	1-1160041-10-1999-000002	1999
은행감독과	법령해석 관련철	1-1160041-10-2000-000001	2000
은행감독과	외국금융기관 지점이전 신고	1-1160041-10-2000-000003	2000
은행감독과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철	1-1160041-10-2000-000004	2000
의사국제과	제14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63	1998
의사국제과	제15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64	1998
의사국제과	제16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65	1998
의사국제과	제17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67	1998
의사국제과	제18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68	1998
의사국제과	제19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69	1998
의사국제과	제20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71	1998
의사국제과	제21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73	1998
의사국제과	제2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74	1998
의사국제과	제23차 금감위 안건Ⅰ	1-1160051-40-1998-000075	1998
의사국제과	제23차 금감위 안건Ⅱ	1-1160051-40-1998-000076	1998
의사국제과	제24차 금감위 안건Ⅰ	1-1160051-40-1998-000077	1998
의사국제과	제24차 금감위 안건Ⅱ	1-1160051-40-1998-000078	1998
의사국제과	제25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8-000079	1998
의사국제과	제26차 금감위 안건Ⅰ	1-1160051-40-1998-000080	1998
의사국제과	제26차 금감위 안건Ⅱ	1-1160051-40-1998-000081	1998
의사국제과	제3차 금감위 안건Ⅱ	1-1160051-40-1998-000082	1998
의사국제과	제17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02	1999
의사국제과	제1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09	1999
의사국제과	제2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19	1999
의사국제과	제3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20	1999
의사국제과	제4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21	1999
의사국제과	제5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22	1999
의사국제과	제6차 증선위 안건Ⅰ	1-1160051-40-1999-000023	1999
의사국제과	제6차 증선위 안건Ⅱ	1-1160051-40-1999-000024	1999
의사국제과	제7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25	1999
의사국제과	제8차 증선위 안건Ⅰ	1-1160051-40-1999-000026	1999
의사국제과	제8차 증선위 안건Ⅱ	1-1160051-40-1999-000027	1999
의사국제과	제9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28	1999
의사국제과	제10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29	1999
의사국제과	제11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30	1999
의사국제과	제12차 증선위 안건Ⅰ	1-1160051-40-1999-000031	1999
의사국제과	제12차 증선위 안건Ⅱ	1-1160051-40-1999-000032	1999
의사국제과	제12차 증선위 안건Ⅲ	1-1160051-40-1999-000033	1999
의사국제과	제13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34	1999
의사국제과	제14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35	1999
의사국제과	제15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36	1999
의사국제과	제16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37	1999
의사국제과	제17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38	1999
의사국제과	제18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39	1999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40	1999
의사국제과	제20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41	1999
의사국제과	제21차 증선위 안건Ⅰ	1-1160051-40-1999-000042	1999
의사국제과	제21차 증선위 안건Ⅱ	1-1160051-40-1999-000043	1999

의사국제과	제22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1999-000044	1999
의사국제과	제23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45	1999
의사국제과	제23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46	1999
의사국제과	제 1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10	1999
의사국제과	제24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47	1999
의사국제과	제 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48	1999
의사국제과	제 3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11	1999
의사국제과	제 5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12	1999
의사국제과	제 4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49	1999
의사국제과	제 6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50	1999
의사국제과	제 6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51	1999
의사국제과	제 7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52	1999
의사국제과	제 8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53	1999
의사국제과	제 8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54	1999
의사국제과	제 9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55	1999
의사국제과	제 10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56	1999
의사국제과	제 10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57	1999
의사국제과	제 11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58	1999
의사국제과	제 1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59	1999
의사국제과	제 13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60	1999
의사국제과	제 13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61	1999
의사국제과	제 14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62	1999
의사국제과	제 14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63	1999
의사국제과	제 15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64	1999
의사국제과	제 16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65	1999
의사국제과	제 16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66	1999
의사국제과	제 16차 금감위 안건 III	1-1160051-40-1999-000067	1999
의사국제과	제 17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68	1999
의사국제과	제 17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69	1999
의사국제과	제 18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70	1999
의사국제과	제 19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72	1999
의사국제과	제 20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74	1999
의사국제과	제 21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75	1999
의사국제과	제 2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76	1999
의사국제과	제 23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77	1999
의사국제과	제 24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78	1999
의사국제과	제 25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79	1999
의사국제과	제 25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80	1999
의사국제과	제 25차 금감위 안건 III	1-1160051-40-1999-000081	1999
의사국제과	제 25차 금감위 안건 IV	1-1160051-40-1999-000082	1999
의사국제과	제 26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83	1999
의사국제과	제 26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84	1999
의사국제과	제 26차 금감위 안건 III	1-1160051-40-1999-000085	1999
의사국제과	제 27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86	1999
의사국제과	제 27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87	1999
의사국제과	제 28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88	1999
의사국제과	제 28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89	1999
의사국제과	제 29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90	1999
의사국제과	제 30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91	1999
의사국제과	제 30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92	1999
의사국제과	제 31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1999-000093	1999
의사국제과	제 31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1999-000094	1999
의사국제과	제 3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1999-000095	1999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의사록	1-1160051-40-1999-000100	1999
의사국제과	증선위 서면의결 의사록 외결서	1-1160051-40-1999-000101	1999
의사국제과	증선위 의사록 · 의결서	1-1160051-40-1999-000102	1999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결서	1-1160051-40-1999-000103	1999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사록 I	1-1160051-40-1999-000104	1999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사록 II	1-1160051-40-1999-000105	1999
의사국제과	제24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02	2000
의사국제과	제 31차 금감위 안건 III	1-1160051-40-2000-000003	2000
의사국제과	제2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04	2000
의사국제과	제1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12	2000
의사국제과	제1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13	2000
의사국제과	제3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14	2000
의사국제과	제4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15	2000
의사국제과	제5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16	2000
의사국제과	제5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17	2000
의사국제과	제6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18	2000
의사국제과	제7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19	2000
의사국제과	제8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0	2000
의사국제과	제9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1	2000
의사국제과	제10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2	2000
의사국제과	제11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3	2000
의사국제과	제12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24	2000
의사국제과	제12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25	2000
의사국제과	제13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6	2000
의사국제과	제14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7	2000
의사국제과	제15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8	2000
의사국제과	제16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29	2000
의사국제과	제17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30	2000
의사국제과	제17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31	2000
의사국제과	제18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32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33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34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공문 I)	1-1160051-40-2000-000035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공문 II)	1-1160051-40-2000-000036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공문 III)	1-1160051-40-2000-000037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공문 IV)	1-1160051-40-2000-000038	2000
의사국제과	제19차 증선위 안건 (공문 V)	1-1160051-40-2000-000039	2000
의사국제과	제20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40	2000
의사국제과	제21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41	2000
의사국제과	제22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42	2000
의사국제과	제24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43	2000
의사국제과	제25차 증선위 안건	1-1160051-40-2000-000044	2000
의사국제과	제26차 증선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45	2000
의사국제과	제26차 증선위 안건 III	1-1160051-40-2000-000046	2000
의사국제과	제 1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47	2000
의사국제과	제 1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48	2000
의사국제과	제 2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49	2000
의사국제과	제 2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50	2000
의사국제과	제 3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51	2000
의사국제과	제 3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52	2000
의사국제과	제 4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53	2000
의사국제과	제 4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54	2000
의사국제과	제 4차 금감위 안건 III	1-1160051-40-2000-000055	2000
의사국제과	제 5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56	2000
의사국제과	제 6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57	2000
의사국제과	제 6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58	2000
의사국제과	제 7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59	2000
의사국제과	제 7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60	2000
의사국제과	제 8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61	2000

의사국제과	제 8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62	2000
의사국제과	제 9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63	2000
의사국제과	제 10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64	2000
의사국제과	제 10차 금감위 II	1-1160051-40-2000-000065	2000
의사국제과	제 11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66	2000
의사국제과	제 11차 금감위 II	1-1160051-40-2000-000067	2000
의사국제과	제 12차 금감위 I	1-1160051-40-2000-000068	2000
의사국제과	제 12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69	2000
의사국제과	제 12차 금감위 III	1-1160051-40-2000-000070	2000
의사국제과	제 13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71	2000
의사국제과	제 14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72	2000
의사국제과	제 14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73	2000
의사국제과	제 15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74	2000
의사국제과	제 15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75	2000
의사국제과	제 16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76	2000
의사국제과	제 17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77	2000
의사국제과	제 18차 금감위 I	1-1160051-40-2000-000078	2000
의사국제과	제 18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79	2000
의사국제과	제 19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80	2000
의사국제과	제 19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81	2000
의사국제과	제 20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82	2000
의사국제과	제 21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83	2000
의사국제과	제 22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84	2000
의사국제과	제 23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85	2000
의사국제과	제 24차 금감위 안건	1-1160051-40-2000-000086	2000
의사국제과	제 25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87	2000
의사국제과	제 25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88	2000
의사국제과	제 26차 금감위 안건 I	1-1160051-40-2000-000089	2000
의사국제과	제 26차 금감위 안건 II	1-1160051-40-2000-000090	2000
의사국제과	제 26차 금감위 안건 III	1-1160051-40-2000-000091	2000
의사국제과	제 26차 금감위 안건 IV	1-1160051-40-2000-000092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서면의결 의사록	1-1160051-40-2000-000103	2000
의사국제과	증권위 서면의결 의사록	1-1160051-40-2000-000104	2000
의사국제과	증권위 의사록 · 의결서	1-1160051-40-2000-000105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결서	1-1160051-40-2000-000106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사록 I	1-1160051-40-2000-000107	2000
의사국제과	금감위 의사록 II	1-1160051-40-2000-000108	2000
감독정책과	문서접수대장	1-1160040-40-1999-000001	1999
감독정책과	문서등록대장	1-1160040-40-1999-000002	1999
감독정책과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인가자명부 대장	1-1160040-40-2000-000017	2000

## 7.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학 력, 경력포함),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 일체, 심의회 관련 예결산내역

□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학력	주요경력
당연 (공무원)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인창고, 서울대 경제 미 하버드대 경제학(박 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중앙고, 서울대 경제 미 위싱턴대 경영학(석 사)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경북고, 경북대 경제 미 시리큐스대 경제학(박 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관
당연	윤한근	한국은행 부총재보	전주고, 서울대 경영 미 노스캐롤라이나 경제학 (석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	조인제	예금보험공사 이사	대구상고 건국대 경영학과	신용보증기금 이사 08.8 예보 이사
“	권경성	한국자산관리 공사 이사	용산고 성균관대 법대	자산관리공사 기업매각부장 자산관리공사 이사
위촉 (민간인)	안수현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대, 서울대 법대(박사)	충북대 법대교수 외국어대 법대교수(07.10~)
“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미 조지워싱턴대 통계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박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4차회의 이후는 안전에 대한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회의록은 없습니다.

\* 붙임 : 1차 ~ 3차 회의록 및 관련 안전 : 별도제출

□ 심의회관련 예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고
예산액	-	3,400	1,760	1,760	760	1,200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집행액	200	200	300	300	600	600	민간위원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 지급



## 이 정 희 의 원



1. 지난 1년간 산업은행과 ‘미국 리먼 브라더스사 인수전’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서 일체

2.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관련하여

(1) 산업은행을 은행계 IB, 즉 CIB로 산업은행을 육성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계획 관련서류

(2) 은행계 IB의 구체적 모습은, 개념상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일반 IB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련자료

(3) 은행계 IB 아래에 있는 은행은, 구체적으로 일반은행과 달리 어떤 규제를 받는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지 및 지주회사 아래 있는 은행과 소속증권사 간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한 방화벽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인지 자료

(4) 민영화 계획서

□ (질의1. 관련) 7.26일 산은으로부터 리먼과의 협의에 대해 전언 받고, 7.27일 관련 (구두)보고를 받았으며,

○ 이후 3차례(8.1, 8.13, 9.2일)에 걸쳐 협의 진전상황 등을 (서면)보고 받은 바 있음

○ 다만, 동 문건은 향후 미국측(美정부 및 리먼 등)과의 분쟁 소지나 국제 거래관계에서의 관례\* 등을 감안, 비공개함이 바람직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 통상적으로 거래관계 CA(Confidential Agreement; 비밀유지약정서)상 거래내용의 일방적인 공개는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측면

□ (질의2. 관련) 다음과 같이 세부 답변 드립니다

- (1) 정부는 '08.6.2일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민영화하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을 마련 발표하였음

- 동 방안은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산은과 국내 선도 증권사인 대우증권을 지주사 체제로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CIB를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방안에 따라 산은이 현재 구체적인 CIB로의 전환 및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2) IB는 통상 始發이 은행인가 금융투자회사인가에 따라 은행계 IB와 증권계 IB로 구분할 수 있음

- 은행계 IB\*는 안정적인 은행업무 수익 등을 바탕으로 고객인 기업들에게 회사채 발행, M&A 등의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 은행계 IB : Citi Group, Deutsche Bank, BOA, UBS 등

- 증권계 IB\*는 M&A나 증권 인수·주선 등 특화된 분야에서 Reputation과 Network를 확보한 후 PI(Principal Investment)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증권계 IB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등

- 최근 리스크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낸 미국의 증권계 IB와는 달리 은행계 IB는 안정적인 은행영업 기반 위에 증권회사의 IB업무를 연계·확대하며 위험이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산은은 그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다수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은행계 IB인 지주사형태의 CIB(Corporate & Investment Bank :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그룹) 체제로 전환할 계획
- (3) 은행계 IB 하에서의 은행과 일반은행간에 적용법과 관리감독 규정상의 차이는 없음
  - 다만, 산은은 지주회사체제 전환이후 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민영화 이행기간 중에는 산은법 체제를 유지할 계획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과 소속증권사 간 위험전가 차단\*이 가능하며
    - \* 자회사간의 출자 및 불량자산 거래 금지, 신용공여 시 일정한도 초과 금지 및 적정담보 확보(금융지주회사법 48조) 등
  - 또한, 기본적으로는 지주회사체제가 母子회사체제 보다 은행과 증권회사 간의 위험전이(risk contagion) 차단에 유리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 지주회사체제하의 경우 (순수)지주회사가 일종의 차단벽(firewall)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자회사에 비해 증권회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은행에 덜 전이되는 측면

- 이 밖에, 지주회사체제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자회사간 위험전가 차단 노력도 함께 기울일 생각임

\* 리스크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자회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리스크전이 및 확대 방지

○ (4) 산은 민영화 계획서 : 별첨 1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 (08.6.2)]

---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방안

---

2008. 6.

금 융 위 원 회

## I. 산은 민영화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의 의의

- ◇ 산은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금융을 新성장산업화하는 적극적 전략
- ◇ 아울러 시장친화적인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추진

□ 산은 민영화는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CIB : Corporate & Investment Bank) 육성」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산은과 국내 선도 증권사인 대우 증권을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 마련
-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인 IB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의 발전도 도모

\* 향후 고부가가치 모험·혁신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자본 (Risk Capital)을 공급하는 IB의 발전은 필수요건



## □ 산은 민영화는 금융산업 재편 촉발 및 발전의 계기로 작용

- 국내 금융회사들은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소매금융\* 위주의 획일화된 업무에 안주

\* 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업무에 치중,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 위주 영업이 지속되어 경쟁력 제고가 담보된 상태

\* 글로벌 은행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50%\*이상이나, 국내은행은 2.5% ('06년) 불과 (Citi : 51%, HSBC : 56%, UBS : 91%)

- 산은지주사는 Global Player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대형화 및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타 금융회사들에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벤치마크로 기능

⇒ 국내 금융회사들의 M&A, 신규업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경쟁력 강화를 선도

## □ 금융의 성장산업화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 제공

- 산은지주사 육성을 통해 금융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여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초 제공

\* IB산업은 속성상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역내외 M&A추진 등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유도

## □ 새로운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제 마련

- 산은 민영화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정책금융기관(KDF)을 설립

\* 미국·유럽 등도 정부의 직접지원은 최소화하고 시장친화적인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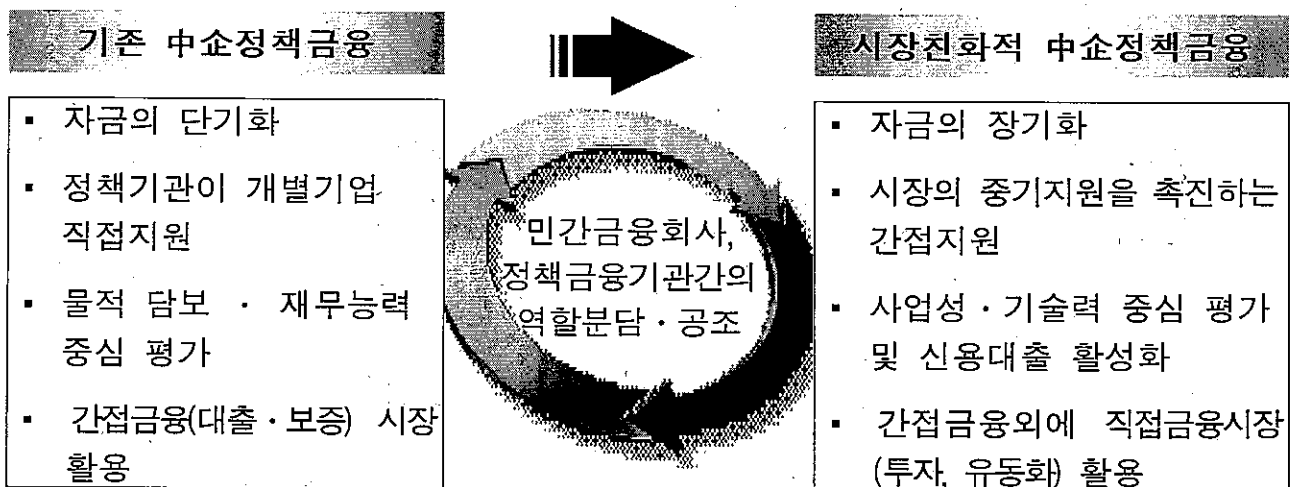
- 산은의 외자조달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등을 이어 받아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

- 시장의 기업선별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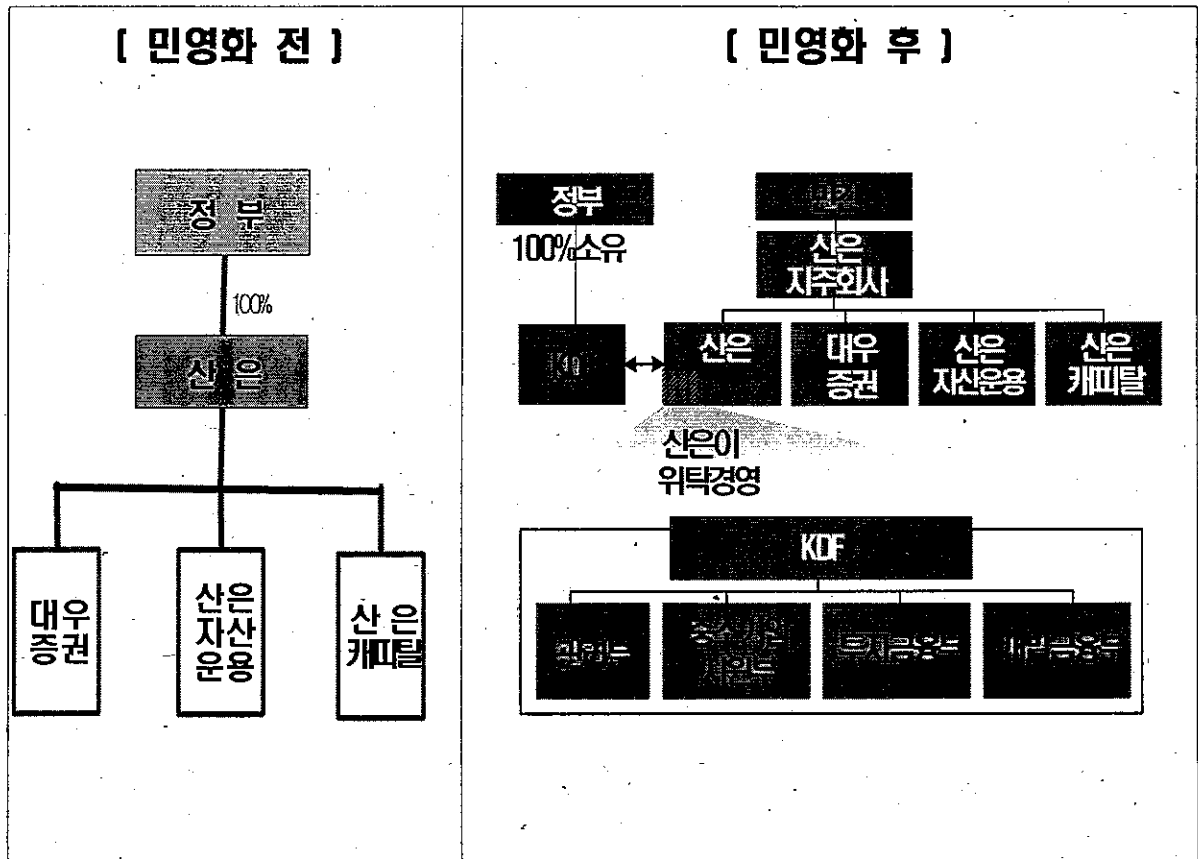
- 시장접근이 가능한 성장형 중소기업은 민간금융회사가 스스로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민간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일부 신용보강(50%) 및 유동화 등 활용

- 자본시장을 활용한 지원 방식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도모



## ◆ 산업은행 민영화 후의 모습 ◆



정책금융·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있고, 상업금융의 비중이  
점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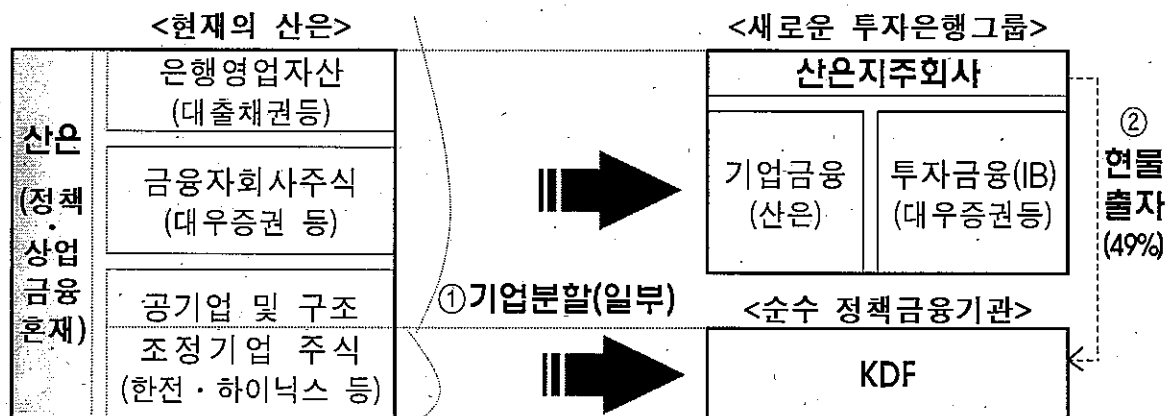
상업금융 → 지주회사형 IB로  
민영화  
정책금융 → 親시장적 정책금융  
기관으로 재탄생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금융의 발전 제약

완전한 시장마찰 해소로  
민간금융 발달을 촉진

## II. 추진 계획

- 産銀을 기업분할하여 산은지주사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08.12)
  - 산은 지주회사는 산은, 대우증권 등 금융 자회사로 구성
  - 산은 자산 중 구조조정기업(하이닉스 등) 및 공기업(한전 등) 주식 일부와 부채를 분할하여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 KDF설립 직후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KDF 앞으로 현물출자하여 동 지분을 우선 매각



-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 지분(49%) 매각(2009~2010년)
  - 다양한 방식(상장전 투자유치[Pre-IPO Investment], 상장, Block Sale 등)으로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에 활용
  -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IB업무 능력을 제고
- 산은지주사 지배지분(51%) 매각(2011~2012년)
  - 투자은행 업무를 통해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추구하려는 국내·외 민간금융회사, 컨소시엄(연기금, PEF 등 참여) 등에 지배지분 매각

---

### Ⅲ. 산은 대외채무의 처리 방안

---

-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 추진
  -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항(산은법 §44)은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존속
  -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될 경우 제한적으로 정부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 추진

\* 기존 채무의 차환 등 일정용도 및 한도 내 발행 허용(국회 사전동의 필요)

---

### Ⅳ. 산은지주사의 투자은행 전환

---

- 산은지주사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체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
  - (규제완화) 업무계획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구불예금 수취 허용 등 다양한 업무제한 완화 추진
  - (지배구조) 성공적인 민영화에 연계된 인센티브 보상을 활용하여 우수인력(국내외 IB전문가 등)을 유치하고, 정부는 정부자산 관리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민영화 과정을 모니터링
  - (대형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 추가적인 M&A추진

## V. 한국개발펀드(Korea Development Fund) 운영 방안

□ (조직) 설립초기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하여 조직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

\* 산은 민영화 완결시점에서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여 KDF와 기존 정책금융기구와의 역할재정립 방안 검토

□ (주요업무)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도입하고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이어받아 수행

○ (중소지원) 中企지원방식을 「전대·재보증·투융자」로 전환하여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를 활용

- KDF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대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는 대상기업을 심사하여 금리결정 및 대출실행

- 동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DF가 신용보강(전대채권의 약 50%) 및 유동화를 지원

-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특화\*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원프로그램도 개발\*\*

\* KDF는 일부 신용보강시 민간이 선별·지원가능한 B~BBB등급을, 기존기관은 신용등급·업력미달기업, 기술기업등 보다 정책금융영역에 집중

\*\* 기보의 기술력담보대출에 시중은행과 Co-financing등 검토

○ (기타 정책금융영역)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외자조달 창구 역할 등 민간과 경쟁되지 않는 영역에서 기타 정책금융 기능 수행

□ (재원 확보)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대금 및 기업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주식 매각자금 등을 활용

## VI. 향후 계획

구분	산은 민영화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08년 6월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안 발표</li> <li>• 해외투자자 설명회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안 발표</li> </ul>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입법절차 산은법 개정안</li> <li>• 산은 지배구조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입법절차(KDF법안)</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안 국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안 국회 제출</li> </ul>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심의</li> </ul>
11~12월	(국회 통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은 인적분할</li> <li>• 산은지주사 설립</li> </ul>	(국회 통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은 인적분할을 통한 한국개발펀드(KDF) 설립</li> </ul>
'0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은지주 주식(49%) KDF 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사 주식 49% 확보</li> </ul>
'09년 2월 ~ '10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F 지분 49% 매각* 추진</li> <li>* 상장전 투자유치, 상장, 블록세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49%) 매각대금 확보</li> </ul>
'11년 이후 ~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지분 매각으로 임기내 민영화 완료</li> </ul>	

### 3.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직후 현재까지 대책회의 등 회의록 사본

- ① 금융위원회는 리먼 브러더스 및 메릴린치 부실 가능성, AIG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 추석 당일(9.14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금융시장 파급경로 예측 및 Exposure 파악, 향후 대응방향 마련 등 시장 불안에 철저히 대비
  - ② 또한, 추석연휴 직후 시장 개장 전(9.16일 07:30) 긴급 금융위를 개최하여 리먼브러더스은행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를 취하고
    - 금융감독원 감독인력을 파견하여 재산상태를 실사하고 자금거래 결제 상황 등을 점검 및 통제
  - ③ 9.16일 8시 재정부 주관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여하여 美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더불어 정부의 공동대응상황을 대외적으로 발표
  - ④ 이후, 재정부 및 한은과 금융·외환시장 대책반을 구성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
  - 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금융당국간 「합동대책팀」을 구성(9.16일)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 중
    - \* 9.16(화) 발족하고 9.17(수)부터 매일 금융시장상황 점검 중
- ※ 이 중 9.16일 긴급 금융위 회의록(② 관련)은 별첨으로 제출  
- 여타 대책회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회의록 부재



별첨

## 제4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9. 1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9월 16일(화) 07:40~07:5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나. 의사진행

□ 의안 제199호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안』, 의안 제200호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및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관리인을 보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상 관리인을 파견하지는 않고, 은행의 경우 감독원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실사 내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증권의 경우에도 감독원 및 거래소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

⇒ 원안 의결함

## 5. 폐 회

위원장이 2008년도 금융위원회 제4차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위원장	전 광 우
간 사	조 인 강

#### 4. 산은 민영화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관련

- (1) 산업은행을 민영화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KDF 운영관련 자료
- (2) 신용평가 C등급 중소기업의 금융정책 방안
- (3) 독일의 온랜딩 방식 관련한 실사 자료, 조사 자료, 회의 자료
- (4) 기보, 신보,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C등급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등 공기능 강화방안 자료

#### [질의 (1) 관련]

- ☐ 산은 민영화로 신설되는 KDF는 주로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종전 산은과는 달리 중소기업지원을 확대·강화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
  - 수행 방식은 이미 중소기업과의 고객점점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 능력을 활용한 간접 지원방식(온랜딩)으로 지원
  - 민간금융회사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민간·정책금융간의 경쟁관계가 없는 방식을 도입
- ☐ KDF의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업력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
  - KDF는 민간금융회사가 신용심사를 통하여 스스로 선별·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공급, 벤처투자 등 지원
  - 이경우, 기존의 신·기보는 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

### [질의 (2) 관련]

- ☐ KDF와 기존 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C등급 기업 등 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신·기보, 중진공 등 기존 기관이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
  - KDF는 정책기관과 민간의 간극을 메우는 징검다리 역할 수행
    - 어느 정도 업력을 보유한 성장가능성 있는 중간 영역업체를 KDF가 민간상업금융기관을 중개금융기관으로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신·기보, 중진공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보다 정책적인 영역(예: C등급 기업, 기술·창업기업)에 집중하여 지원
- ☐ KDF와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각 기관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 집중하게 되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금액도 증가
  - 결국, 전체적으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정책금융체제 구축

### [질의 (3) 관련]

- ☐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별첨 2 > : KfW/EIF 등의 온랜딩 관련 조사자료(산업은행)

#### [질의 (4) 관련]

□ KDF와 신·기보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유도

○ KDF는 정책기관과 민간의 간극을 메우는 정검다리 역할 수행

- 어느 정도 업력을 보유한 성장가능성 있는 중간 영역업체\*를 KDF가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 예 : B~BBB등급, 일정업력(5년) 보유 중소기업

○ 신·기보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보다 정책적인 영역\*에 집중하여 지원

\* 신용등급·업력 등이 취약하거나 기술평가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기업

- 현재 중진공 대출은 94.2%가 C등급 이하(07년)

- 신·기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08.6.11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 별첨 참고)

< 별첨 3 > :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08.6.11)

## 5. 코스콤 관련

- (1) 3년간 코스콤이 고객사와 계약해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금액
- (2) 코스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3) 코스콤의 비정규직 직원 비율

☐ 의원님 요청사항에 대해 코스콤에 전달하여 코스콤이 작성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1. 3년간 코스콤이 고객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금액

구 분	건 수	금 액
계약해지 손실	2건	0.6억원

### 2. 코스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구 분	인원(명)	정규직 전환시 추가부담액	비 고
파견인력	39	4.8억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 간 제	13	-	
도급 (하청)	533	128.1억원	
합 계	585	132.9억원	

#### ※ 비용 산출 기준

- 급여 :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를 정규직 급여에 적용
- 기타비용 :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 연차휴가보상금

### 3. 코스콤의 비정규직 직원 비율

(단위 : 명)

구 분	직 원 (정규직)	비정규직			하 청 (도급)	비정규직 직원 비율
		파 견	기간제	소계		
인 원	500	39	13	52	533	10.4%

## 6.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관련

- 제정 관련 회의 서류 일체
- 제정 관련 검토했던 외국제도 관련 서류 일체
- 리먼 부도이후 자동법 시행 관련하여 회의서류 일체

□ 첨부 참조

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관련 회의 자료를 송부합니다.

- 06.2.17일 자통법 제정방안 기자단 세미나 자료
- 06.4.26일 자통법 1차 공청회 자료
- 06.5.4일 자통법 2차 공청회 자료
- 06.5.12일 자통법 3차 공청회 자료
- 06.5.16일 자통법 4차 공청회 자료
- 07.3.30일 자통법 대토론회 자료  
: 별도제출

② 제정 관련 외국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음

- 영국, Financial Services Act 1986,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호주,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 싱가포르, Securities and Futures Act
- 홍콩,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 미국, Securities Act of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의 증권규제(홍문사, 김건식·송옥렬), 미국증권관계법(박영사, 석명철)
- 독일, Securities Trading Act

③ 리먼 부도 이후 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

7.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 변경승인 9차 의사록, 승인 신청서 및 심사자료 일체를 요청

□ 제9차 금융위 의사록을 송부드리며,

- 승인신청서 및 승인심사자료 일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기업정보 등을 제외한 자료를 송부합니다.(별도 제출)

## 8. 금융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액수·건수에 대한 추산 및 금융 차명거래와 도명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

□ “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부모와 자녀간 또는 형제와 자매간 가계자금을 예치하여 사용하는 것 등. 다만,  
금융기관 직원이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

○ 따라서, 차·도명거래에 대한 액수·건수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추산은 곤란함

□ 다만, 차명거래가 조세회피 수단, 뇌물 등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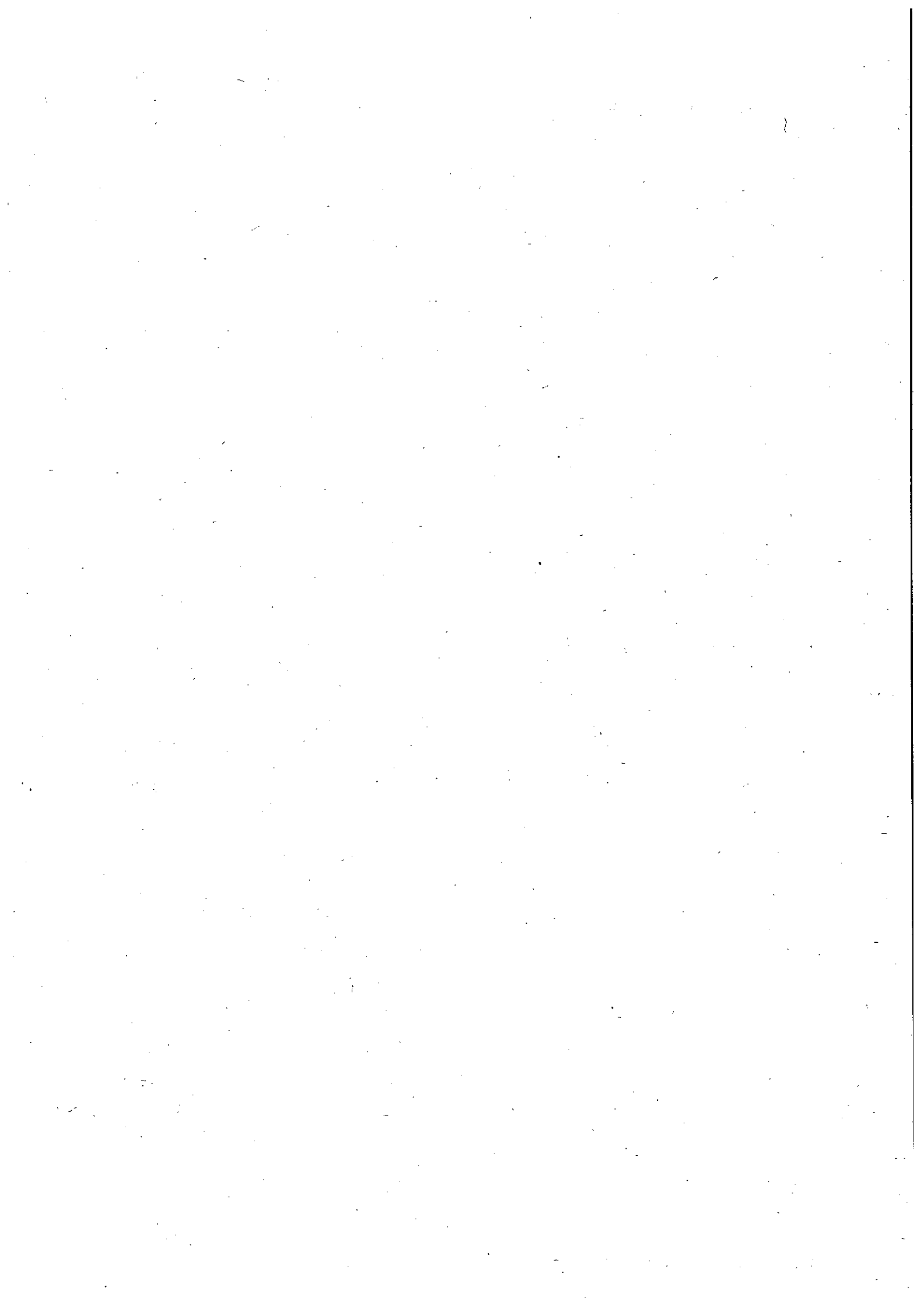
○ 정부는 2001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의거래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범죄수익규제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제정 (01.11.28)

□ 또한, 도명거래의 경우 도명거래자는 주민법\*에 의한 처벌 및  
도명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며,

○ 금융기관 종사자가 실명확인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하였다면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됨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 이진복의원





1. '00년 이후 ' 08.9월 현재까지 환율변동 따른  
금융위의 금융시장 및 기업 안정 조치 내역 일체
2. '00년 이후 ' 08.9월 현재까지 환율변동 따른  
금융시장 및 기업 안정 위한 금융위의 제도/정책  
수립 및 개선 내역
3. '00년 이후 ' 08.9월 현재까지 기업대상 설문  
조사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4. '07년 이후 ' 08.9월 현재까지 재경부와 송수  
신한 공문서 목록 일체

☐ 해당 문서목록 첨부

## 2007년도 금융위 기록물 등록대장

구분	등록일자	등록번호	문서번호	제목	수신자(발신자)
접수	2007.12.28-17:59	1160040001923	감독정책과-1923	중앙부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협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생산	2007.10.22-14:17	1160040001584	감독정책과-1584	감사 참고자료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대통령비서실장
생산	2007.09.27-17:23	1160048003928	혁신행정과-3928	금융감독위원회 전화번호 변경 알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총무과),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생산	2007.09.19-21:24	1160048003852	혁신행정과-3852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휴가 실시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생산	2007.08.01-19:26	1160048003176	혁신행정과-3176	청와대 출입증 발급 신청	대통령경호실
접수	2007.07.23-10:43	1160040001104	감독정책과-1104	감사 참고자료 통보	대통령비서실
접수	2007.03.23-15:28	1160048001246	혁신행정과-1246	파견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의견 통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생산	2007.03.08-10:10	1160048001004	혁신행정과-1004	감사자료 이첩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대통령비서실
접수	2007.02.27-18:16	1160048000851	혁신행정과-851	감사자료 이첩	대통령비서실
생산	2007.02.22-15:49	1160048000773	혁신행정과-773	4급 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접수	2007.02.09-17:11	1160048000628	혁신행정과-628	공무원 교체 파견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생산	2007.02.08-16:13	1160048000593	혁신행정과-593	파견 공무원 교체 의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 ☐ 붙임 문서와 같이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소관)

2008. 10.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 (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 (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舊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 (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촉진
- (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재정립 방안 보완
- (7) 금융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
- (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 (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p>⇒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완료('08.3.28일)</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 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 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 현재 일부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제공하고 있음</p> <p>○ 아울러, 동 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p> <p>□ 향후, 보험상품 범위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포함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할 계획</p> <p>○ 보험사 이외에 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p> <p>* '08년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시 반영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p> <p>* 간단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신망으로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도록 하는 시스템</p> <p>○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7.11)하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하였고,</p> <p>○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이전에 원권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였으며</p> <p>○ 또한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시 재단이 휴면예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소외계층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 복지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li> <li>*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을 분석하고 금융소외자의 현황을 종합 조회하여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li> <li>○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코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li> <li>-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li> </ul> </li> </ul>

## 2. 舊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 혁신 추진</p> <p>각 국책금융기관에 대한예산 승인시 경영혁신을 감안하 여 지출수준을 합리적으 로 통제</p>	<p>□ 국책금융기관의 객관적 경영실적 평가 및 공정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책금융 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 (’06.11월)</p> <p>* 경영·예산·회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p> <p>○ 동 심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승인시 반영</p> <p>- 경영평가는 ’07년에 파일럿테스트를 실시 하였고(’07.9월), ’08년부터 정식평가 실시 (’08.5월)</p> <p>- ’08년도 예산 승인시 총4회의 심의회를 거쳐 예산 승인</p>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보완</p> <p>'07년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에 제시된 국책은행간 업무중복 해소나 상업금융기관과의 차별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시장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08.6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하고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 발표</p> <p>□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하여 중소기업 전문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영화 추진</p> <p>○ 다만, 지배지분 매각은 KDF 설립 등 중소기업 금융체제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p> <p>금융중심지 조성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관련 자격증 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무전문지식과 윤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자격증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실시현황 등을 '08년 국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p>	<p>□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KAIST 금융대학원에 '08년 20억을 출연할 예정</p> <p>○ KAIST 금융대학원에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기위한 금융전문가 과정을 설치 (100명, '07년)</p> <p>* '09년도에는 10억을 지원할 예정</p> <p>○ 협회 차원에서 금융업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과목을 강화하도록 함</p> <p>○ 자격증제도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의 취지를 살려 통폐합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p> <p>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공익재단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p> <p>○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p> <p>-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p> <p>-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p> <p>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대한 대책 마련</p>	<p>□ 저축은행, 여전사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LTV(50%~60%), DTI(투기지역 6억원이상 APT, 40%) 규제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p> <p>□ M&amp;A 통한 부실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p> <p>○ 부실저축은행 인수자에 대한 영업구역외 지역에 지점설치 허용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p> <p>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방카 슈랑스 도입이후 대출 연계한 보험권유행위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의 보험판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카 슈랑스의 부작용 발생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7.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정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 (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 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 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 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 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 (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 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
-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
- (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 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었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
- (10) 수도권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
-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 (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보험사의 실패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
- (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
- (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 (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
-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 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
- (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
- (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경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 '06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정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p>	<p>□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DCDS) 취급과 관련하여 재정부와 협의 진행중</p> <p>* DCDS :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납부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서비스 (Debt Cancellation &amp; Debt suspension)</p> <p>○ 대출자의 사망, 질병시 채무를 면제하는 신용 서비스는 보험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DCDS 허용여부에 대해 금감위·재정부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p> <p>□ 최근 신용보호서비스 등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p> <p>○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 구분기준을 포함하여 재정부와 DCDS 허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할 예정</p>
<p>(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외 자본을 동등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p> <p>○ 국제화·개방화,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p> <p>○ 연기금의 활용, PEF의 활성화 등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 할 것</p>	<p>□ 외환은행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취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합병('04.2월)되어 보험대리점(Tele-Marketing 영업)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외환은행이 라이나생명 및 ACE 아메리칸화재보험 한국지점으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고 있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모집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한 것임</li> </ul> </li> <li>○ 반면, 과거 국민카드가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흡수합병('03.9월) 이후 국민은행이 더 이상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사유가 국민카드에게 있는 경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li> <li>- 신한생명 및 SK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거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은행의 귀책이라고 판결('05.12.15 및 '06.1.11)함에 따라</li> <li>-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하였기 때문임</li> </ul> </li> </ul> <p>□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 위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합병되기 전에 Tele-Marketing 영업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외환은행이 승계하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수수료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및 동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p>(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에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p>	<p>□ 인천공항 등 개항장 및 주요 거점 점포에서 '06. 11월 이후 외국동전환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p> <p>□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국통화자료실)에 '외국동전 환전 사용방법 안내' 및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안내' 자료를 게시('06.12.15)</p> <p>&lt; 외국동전환전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등 개항장의 외국동전환전 서비스 개시('06.11.1~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우리, 신한, 외환)</li> <li>- 김포공항(신한)</li> <li>- 김해공항(신한, 부산)</li> <li>- 대구공항(대구)</li> <li>- 제주공항(제주)</li> </ul> </li> <li>○ 은행연합회의 외국동전환전 안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동전 환전시 사용방법 등 참고사항 기재</li> <li>-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게시 (총 12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제주)</li> </ul> </li> </ul>
<p>(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은 크게 유가증권시스템, 코스닥시스템, 선물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p> <p>○ 유가증권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은 백업시스템(D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p> <p>*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시스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선물시스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완료('09.1. 예정)된 후 백업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임</p> <p>&lt; 선물시스템의 백업시스템 구축 지연 사유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현재 운영중인 선물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3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차세대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 백업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사용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 낭비 발생</p> </div> <p>□ 이에 따라, 선물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데이터 백업 및 원격지 소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p> <p>□ 또한, 선물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에 대비한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p>
<p>(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p>	<p>□ 금융감독원은 2004년~2005년 기간중 총 990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p> <p>○ 임원 : 460명(해임권고 37, 직무정지 63, 문책경고 147, 주의적경고 213)</p> <p>*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저축은행·신협·농수축 단위 조합에 대한 문책조치임</p> <p>○ 직원 : 530명(면직 38, 정직 43, 감봉 181, 견책 268)</p> <p>□ 금감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조치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금융업종별로 상이</p> <p>○ 은행·보험사·여전사·신탁 회사 : 임원문책 중 경고(문책주의적 경고)와 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은행법 §54, 보험업법 §134①, 여신전문금융업법 §53④, 신탁업법 §26의2①,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신탁·농수축협 단위조합 :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li> </ul> <p>(상호저축은행법 §24① 및 동법 시행령 §26①, 신용협동조합법 §84①, §95 및 동법 시행령 §24①)</p> <p>* '06.5.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06.8.4 시행)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조치 권한 및 직원에 대한 면직조치 권한은 금감원에서 금감위 권한으로 변경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중금금융지주 : 금감위가 조치권 행사 (증권거래법 §53⑤ 및 동법 시행령 §36의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2①, 금융지주회사법 §57①)</li> </ul> <p>□ 참고로 2004.2월~4월중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임직원(1,500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문책조치 하였다'고 지적하였는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1999.4월~2002.11월 기간중 금융관련법상 위탁근거 없이 금감원장이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한 실적임</li> </ul> <p>□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금융관련 법령상 금감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위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직접 제재조치권을 행사하고 있음</p>
<p>(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p>	<p>□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 검토</li> <li>□ 다만, 포인트 마케팅은 카드사의 자율 영업 사항인 만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li> <li>○ 감독당국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지도</li> </ul> <p>&lt; T/F 진행 상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 8개 카드사*, 소비자단체(YMCA, 소비자보호원), 여전협회, 김재홍 의원실</li> <li>* 비씨,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li> <li>○ 진행경과 : '06.12월부터 '07.2.7.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진행 중 ('07.2.14. 7차회의 개최예정)</li> <li>○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인트 관련 주요내용을 약관에 명시</li> <li>- 기타 포인트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li> </ul> </li> </ul>
<p>(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법§186①)</li> <li>○ 롯데쇼핑의 경우 우리홈쇼핑 주식취득 계약을 2006.8.2.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당일 신고하였으므로 공시위반으로 보기 어려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향후 감독당국은 신뢰받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중요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시토록 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지연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강화토록 하여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할 것임</p>
<p>(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 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p>	<p>□ LG카드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06.9~10월중 탈퇴회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9월중 실시한 은행연합회와의 정보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은행연합회 탈퇴(유효기간 만료회원)통보가 누락된 탈퇴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통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li> </ul> <p>&lt; 추가 통보 인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9.27 : '06.8월 만기회원 45,230명</li> <li>- '06.10.4 : '04.3월 만기회원 34,937명</li> </ul> <p>※ LG카드는 탈퇴·해지 구분 운영을 '06.11월 폐지</p> <p>□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LG카드에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카드사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사하도록 지도하였음('07.1월)</p>
<p>(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p>	<p>□ 증권선물위원회는 수도약품공업(주)의 한스바 이오메드(주) 인수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한 개인투자자가 수도약품공업(주) 주식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06.7.19)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음('06.12.20)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div data-bbox="670 436 1452 660"> <p>□ '권력형 게이트'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다만, 골드뱅크 인수를 추진하였던 '김홍주'씨와 관련된 저축은행 대출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p> </div> <div data-bbox="694 683 1452 974"> <p>○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원 초과하여 111억원을 대출</li> <li>→ '02.11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4명 제재조치</li> </ul> </div> <div data-bbox="694 996 1452 1332"> <p>○ 새누리저축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103억원 초과하여 174억원을 대출</li> <li>→ '02.12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임직원 3명 제재조치 (검사기간중 한도초과분 전액 해소)</li> </ul> </div> <div data-bbox="670 1355 1452 1523"> <p>□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불법대출 취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고 추진중에 있음</p> </div> <div data-bbox="694 1545 1452 1982"> <p>○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0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 국세청 통보</li> <li>-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li> <li>-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 도입 추진</li> <li>-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li> </ul>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개발·운영 등</li> <li>○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인수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li> <li>- 저축은행 임원 결격사유 확대(해임·징계면직된 자→금감위 조치&lt;직무정지 등&gt;를 받은 자)</li> <li>- 당해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지 등</li> </ul> </li> </ul> <p>* 입법예고('06.10)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既 반영</p>
<p>(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 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p> <p>*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 임직원의 임금 등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결정사항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에는 시중은행과 달리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을 제외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다만 2006년 종합검사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적용받아 방안한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li> </ul>
<p>(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개인금융부채</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p>	<p>대비 가치분소득 추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가계대출규모 대비 총당금비율(Coverage ratio)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차주별 소득분포 및 부채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대폭 확충</li> <li>- 기존의 부정기 통계(14종)를 정기 통계로 전환하고, 신규 통계(32종)를 추가(총 46종 추가)</li> </ul>
<p>(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5일 상장자문위가 최종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음</li> <li>□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출하면, 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li> </ul>
<p>(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지점·점포별로 부여된 고유ID로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회목적화면에서 특정목적*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침</li> <li>* 본인조회/여신심사/신용카드심사/공공목적/추심/기타 등 6개</li> <li>○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목적 중 ‘기타’를 초기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여타 조회목적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타’ 코드가 자동 선택되도록 운영함으로써</li> <li>○ ‘기타’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결과 과다 신용조회 및 신용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조회코드를 세분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 하였으며,</p> <p>○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조회코드를 기존의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여 '07.3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p> <p>* 본인조회/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법원제출/조세관련제출/기타 법률관련 제출/민원/채권추심</p> <p><input type="checkbox"/>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신용정보 조회 시</p> <p>○ 특정 조회목적코드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조회목적에 따른 해당코드를 정확히 입력토록 지도하겠음</p>
<p>(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p> <p><input type="checkbox"/> 국내 금융경제 여건과 금융소비자의 수용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07.3.2.부터 실시하고,</p> <p>○ 향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Road Map)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p> <p>&lt; 주요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li> <li>○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적용기준 마련, 운영 등</li> </ul>
<p>(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 등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공동인수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 건의('06. 11.)</p> <p>*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일정비율(예: 150%) 이상일 경우 그 초과 손해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p>
<p>(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추가 소득공제혜택(100만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li> </ul>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0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li> </ul>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p> <p>&lt; 장애인보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의 실효성 확보 및 판매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li> </ul> </li> <li>* 협회 및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제도 및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안내 실시('07.2)</li> <li>○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li> </ul> </li> </ul>
<p>(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경쟁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06년)</li> <li><input type="checkbox"/> '07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 등과 협의할 예정</li> </ul>
<p>(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용도 평가시 신용조회 기록 반영여부 등은 자체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li> <li><input type="checkbox"/> 다만, 신용조회기록이 과다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객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비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에 이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체에 대해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토록 하였으며(05.1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li> </ul> </li> <li>○ 동 사항을 전 권역의 금융회사가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함(06.10)</li> </ul> <p>□ 또한,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예정(07년중)</p>
<p>(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RBC제도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시험운행을 거칠 예정이며,</li> <li>○ 시행시기도 국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li> </ul>
<p>(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p>	<p>□ '06.10.9 코스콤(주)의 KOSPI200 지수선물(12월물) 시세제공 오류 원인은 코스콤 내 지수선물분배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용(I/O) 메모리 부족인 것으로 확인</p> <p>* 동 시간중 선물거래법상 시세공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가 산출한 시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콤은 KRX가 산출하는 시세정보의 1차 이용자로써 KRX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간접이용자(증권사 HTS 등)에 제공</li> <li>○ 코스콤과 KRX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콤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는 코스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업무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시세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li> </ul> </li> </ul> <p>⇒ 거래소로 하여금 코스콤의 정보분배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정보 분배채널의 다양화를 유도('06.10월)</p> <p>※ 코스콤은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직후 송수신용시스템의 메모리를 확장하였으며(128M → 256M) 주요 프로그램의 취약 예상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스크 업그레이드 교체완료(9G→18G) '06.12월</li> <li>- 現 지수선물분배시스템 교체 예정: '07.8월</li> </ul> <p>□ 한편, 거래소 선물시장의 경우 현물시장과 달리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09.1월 예정) 백업시스템도 가동할 예정</li> </ul>
<p>(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p>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05.2.22부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물배상 가입금액별 가입구성비 : 3천만원 이하(54%), 5천만원(17%), 1억원이상(29%)</li> </ul> </li> <li>□ 최근 외제차 및 고급 국산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차량을 파손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배상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li> <li>□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입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아 1억원이상 고액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물배상 보험료 : 3천만원(123천원), 5천만원(130천원), 1억원(133천원)</li> </ul> </li> <li>□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대물배상담보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선택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li> </ul>
<p>(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개설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동의를 징구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중에 동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li> </ul> </li> <li>□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에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음</li> </ul>
<p>(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은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li> </ul> </li> <li>□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의 1차적 상환재원인 차주의 미래소득을 대출취급 시점에서 평가함과 아울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예 : 실직, 폐업 등)에 대비한 2차 상환재원인 담보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li> </ul> </li> </ul>
<p>(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은행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점시스템인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li> <li>□ 한편, 동 시스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량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설명변수를 도출하고 평점(scorecard)형태로 변환</li> </ul> </li> </ul> </li> <li>□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07.1.31) 도입을 계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강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신용평가시스템의 精度와 여신업무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li> </ul>
<p>(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 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기지보험 도입 결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경우(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 등) 보험 가입시 LTV 한도 상향 조정(60%→80%)</li> </ul> </li> <li>□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06.12)</li> <li>□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발표(0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DTI, 부채비율 등의 자율적 활용)</li> <li>○ 은행권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월중)한 후 3월부터 시행</li> </ul> </li> </ul>
<p>(28) 신협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협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측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최대한도의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하고</li> <li>○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곤란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li> </ul> </li> <li>□ 이러한 원칙하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신협업계의 경영여건 및 전망, 국가재정 여건 등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p>□ 한편, 신탁중앙회는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노력방안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07.2.2, 금감위 기송인)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에 앞서 관계부처와 감독당국신탁중앙회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07.3월)하여 신탁측의 경영 개선계획이행을 적극 유도하고</li> <li>○ 경영개선계획 이행성과를 보아가며 재정자금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탁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li> </ul>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p>□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의 분포대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5급 27명중 2명을 가등급에 배정한 것임</li> </ul> <p>□ 가등급으로 평정된 2명중 1명은 금년 4월에 수습공무원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다른 1명은 임용후 근무기간이 짧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서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li> </ul>
<p>(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계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li> </ul> <p>※ 연구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 중앙대 신인석 교수</li> <li>- 일정 : '07년 3월말 완료 예정</li> </ul>
<p>(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p>	<p>□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적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출신인사가 대주주인 좋은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감독·검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검찰고발,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음</li> </ul> <p>□ 앞으로 감독당국은 감사원 제척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 출신인사가 인수하거나 재직 중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감독·검사할 예정임</p> <p>* 금감원 출신인사와 일정기간 동일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감사원을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p>
<p>(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p>	<p>□ 감독당국은 접수된 민원을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첩처리하는 민원비율이 '04년 27.3%, '05년 26.3%, '06년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p>	<p>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 등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은 감독당국이 개입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이첩 처리가 불가피한 점이 있음</li> <li>- 다만, 이 경우 이첩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보이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li>□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 민원인간의 자율적인 합의·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li> <li>○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민원 내용이 사실조사 및 판단 등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한하여 자율조정을 허용하고 있음</li> <li>○ 다만, 자율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li> </ul>
<p>(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추심회사는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교부받아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를 파악하여 추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li> <li>□ 감독당국은 사전심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령상 점검사항인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여부와</li> <li>○ 신용정보법상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인 「상법」상 상사채권인지 여부 및 추심위임자가 금융회사 등 적법한 위임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결과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주요 심사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향후 감독당국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임점 검사시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관리실태, 개인 정보 유출방지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li> <li>□ 한편,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전산자료를 교부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산자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li> </ul>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 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 ('0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06.6월~10월)</li> </ul> </li> <li>&lt;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주요내용 &gt;</li> <li>□ 자동차 보험 손해를 악화에 대응하여 보험 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덤펍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하는 등의 감독강화</li> <li>○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data-bbox="694 291 1468 761"> <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  <input type="checkbox"/>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 </div> <div data-bbox="694 795 1021 840">&lt; 향후 추진계획 &gt;</div> <div data-bbox="694 884 1468 1030"> <input type="checkbox"/> 개별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div>
<p>(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div data-bbox="694 1075 1468 1400"> <input type="checkbox"/> 금융업무의 국제화·고도화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세칙 제32조*에 의거 해외 우수 대학에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분야(예: 경영학, MBA, 경제학, 법학 등)로 연수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음 </div> <div data-bbox="750 1433 1468 1624"> <p>* 연수세칙 제32조(해외학술연수)  “해외학술연수는 경제학, 경영학(MBA 포함), 법학 등 감독원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분야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실시”</p> </div> <div data-bbox="694 1657 1468 1982"> <input type="checkbox"/>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학술연수원이 미국 MBA위주로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미국 MBA 선발인원을 해외학술과정 모집인원의 50%로 제한하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IT 등과 같이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지식을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임
(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p>□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0월말 현재 화보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95%로 대부분 가입된 실정</li> </ul> <p>□ 다만, 지하철 지하상가, 재래시장 등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일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시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통보하여</li> <li>○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li> </ul>
(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	<p>□ 자기자금 여부, 경영참가의사 여부, 계좌추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금감원 조사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주요 판단사실 등에 대해 소명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지원의 자금 대부분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경영참여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li> <li>○ 스펙트럼DVD 경영권 양수도 협상 과정 및 인수자금의 출처, 매매행태 등을 종합</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판단해 볼 때 주가상승을 위해 하지원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첩하였음</p> <p>□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및 새로이 발견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자금의 계산주체를 하지원으로 보고 하지원에게 주식 인수당시에는 경영참가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것임</li> </ul> <p>□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이므로 조사의 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검찰의 강제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감독당국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p> <p>□ 동 건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p>(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p>	<p>□ 개별적인 조사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검찰에 대한 지원인력 파견, 검찰의 감독당국에 대한 법률자문관(현직 검사) 파견 등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p>	<p>□ 감독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한 체계 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는 것이 필요한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은 가능한 한 모두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나</li> <li>○ 검찰도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건별로 처리 기간에 편차가 많이 있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기록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li> <li>○ 향후 감독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사건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판결문을 입수한 후 향후 조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임</li> </ul> <p>□ 이러한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현행 조사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p> <p>※ 검찰이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단위 : 건)</div> <table><tr><th>처리유형</th><th>2004년</th><th>2005년</th><th>2006년</th></tr><tr><td>기소<sup>1)</sup></td><td>85</td><td>76</td><td>30</td></tr><tr><td>불기소<sup>2)</sup></td><td>18</td><td>17</td><td>3</td></tr><tr><td>수사중<sup>3)</sup></td><td>63</td><td>93</td><td>99</td></tr><tr><td>총계</td><td>166</td><td>186</td><td>132</td></tr></table> <div>주 1) 구공판, 구약식 2)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 등</div>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div><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 및 혐의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혐의자의 명예와 신용 훼손 우려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측면이 있음</div> <div><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신종주가조작으로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안을 주가조작으로 본 전례를 찾기 어려움</div> <div>※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도권약품공업의 대주주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06.7.19)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06.12.20)</div>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div><input type="checkbox"/> 금산분리 원칙은 국내·외 법인에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div> <div>* 금산분리원칙은 범정부차원의 금산분리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div>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	<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은행의 자율결정사항으로 판단됨</p> <p>□ 감독당국은 지난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사회내 집행위원회(4명)에 내국인 이사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p> <p>○ SC제일은행은 동 집행위원회에 내국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룹본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07.3월경에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내국인 이사의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p>
<p>(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 감독당국은 '06년중 SC제일은행 등 5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바 있음</p> <p>* SC제일·대구·광주·제주·신한은행 (제주·신한은행은 현재 검사서 작성중)</p> <p>○ 점검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적이 미흡한 SC제일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신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음</p> <p>(☞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p> <p>* '04.11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있음</p> <p>□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p> <p>*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p>	<p>□ SC제일은행이 리스크담당임원의 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SC그룹본부(런던)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여신신청업체(법인)의 일부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p> <p>* 매출액, 영업이익, 세후당기순이익, 총부채,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법인의 재무정보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시장에 공시된 것이며</li> <li>○ 법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li> </ul> <p>□ 다만, 감독당국은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과정이 사전승인 형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지난 '06.10.20. 국정감사시 SC제일은행장(존 필메리디스)도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li> </ul> <p>□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방지 노력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p>
<p>(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p>	<p>□ Free Board 활성화방안 마련('06.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성인(market maker) 제도 도입</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 상장시 혜택 부여 등 정규시장과 가교역할 강화</li> <li>○ 공사·퇴출요건 완화 등 Free board 기업부담 경감</li> </ul>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지정 처리요구사항	지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p>	<p>□ 현행 공사법상 기금 청산시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p> <p>○ '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배분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p> <p>*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조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3.7조원)</p> <p>□ '06.12.30자 공사법 개정으로 '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3.5조원에 대하여는 상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산시 잔여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 계류중인 법안 내용(신학용 의원 대표발의)</b></p> <p>① 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의 재계산 결과에 따라 면제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보며, 공적자금 상환기금출연금은 채무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계산 후에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함</p> <p>②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p> <p>③ 각 출연금 및 융자금 반환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 기여금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p> </div>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p>	<p>□ 공사는 '03년 신용카드사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의거 대량의 카드채권을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03년도 업무계획을 초과하여 부실채권을 인수</li> </ul> <p>□ 향후 재무건전성을 감안한 인수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업무계획 보다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p>
<p>(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정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비상장 물납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성이 낮은 한계성*으로 물납금액 보다 낮게 매각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일간지에 물납주식 매각 홍보 광고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월중 광고 예정</li> </ul> </li> <li>○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2월초 개최 예정</li> </ul> </li> </ul> <p>* 비상장법인의 상당수는 소수의 친인척·지인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세업체로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적</p> <p>□ 주식물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부에 건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공사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추심활동을 수행토록 주기적 교육 실시</li> <li>○ 과잉·불법 추심행위 수행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또는 직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li> </ul> <p>□ 추심위임업체에 대한 감독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정기간담회를 통한 과잉·불법추심행위 예방교육 실시</li> <li>○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 조치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 위임계약서」에 반영('06.12.1)</li> </ul> <p>□ 향후에도 공사는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p> <p>→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민원신청 및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p>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05.7.20 공사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사업 수행근거는 마련(투자 방법·한도 등을 규정하는 법령은 '06.1.30 개정 완료) 되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 정비 및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국외투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일정 기간 소요</li> </ul> <p>□ '06년도 하반기 안정적인 해외부실채권 투자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발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MOU 체결(9.15)</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협의회 구성 및 JV-AMC 설립 등 중국 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10.26)</li> <li>○ 원활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 주도로 국내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협의회 구성(12.15)</li> </ul> <p>□ 현재 중국 4대 국영 AMC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MOU 체결(07.1.15) 및 자산실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부실채권투자를 실행할 예정</li> </ul> <p>□ 아울러 공사는 고위험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사업 추진</p>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p>□ 공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10 New 비전으로 “가치를 재창조 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로 설정('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비전과 전략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111조원의 인수·정리, 개인 신용불량자 약 36만명 지원, 국유재산 8만 필지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역량과 인프라의 기반 하에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05)</li> <li>○ 아울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별도로 “비전 실행 TF팀”을 설치하여 사업, 조직, 인사, 성과평가 4대 부문으로 세분화한 35개 실천과제를 선정('06)</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추진과제별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높임</p> <p>□ '07년 현재 공사는 비전 및 전략의 실행 1단계 연도부터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시행</p> <p>○ '07년 경영목표*에 중장기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수립('06.12) → 년중 추진</p> <div data-bbox="724 824 1430 116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07년 경영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자산관리회사로의 도약</li> <li>•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li> <li>•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li> <li>• 고객만족경영의 실천</li> <li>• 성과중심의 책임 경영</li> </ul> </div> <p>○ 전략과제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07.1) → 사업별 본부 전담제 도입</p> <p>○ 조직·개인별 목표 부여 및 BSC(균형성과표) 적용('07.2)</p> <p>○ 전문인력의 채용 및 기존직원 업무 직군제 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착수('07.1~)</p> <p>□ 비전 실행 성과의 철저한 점검 및 목표 재설정</p> <p>○ 공사의 주요 회의기구(이사회 및 전략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비전 및 전략의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행</p> <p>○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와 성과 미달시 별도 TF팀을 설치하여 실행목표 및 추진방향 수정</p>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6. 4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청회통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L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 (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
- (12) 제3자 명의 CD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것
- (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 할 것
- (15) 역모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영세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 (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
- (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
- (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 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할 것
-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6) 환치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 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 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금감원 감사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 (2) 온비드의 장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3) 특별채권 매각 관련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 매각 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 (4) 공매처분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할 것
- (5)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6) 공사의 해외 진출 사업 추진 대책을 보고할 것

- (7) 한마음금융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8) 무담보채권 위임 관련 공사 자체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 실효성 여부 및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압류재산 공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 (11) 임직원 비위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12) 대우채권 2조 8천억원의 적자 발생 원인과 대책을 보고할 것
- (13) 경영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방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 (14) 국외연수 비용을 자산매수자가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할 것
- (15) (주)로이젠의 거제도 골프장 소유 관계를 검토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것
- (16) 압류재산 조세 업무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보고할 것
- (17) 임금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 (18) 부동산사업부의 업무량 대비 인원 과다와 관련 예산편성시 축소방안을 보고할 것
- (19)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국세물납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20)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라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수립계획을 보고할 것
- (21)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22) 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역의 역할에 관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23) 국내에 진출해 있는 M&A 부띠끄의 실태 파악과 매커니즘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
- (24) 현재 부실채권 매각방식의 문제점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5) 공사가 매입한 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경영권 매입주체의 상시적인 배임·횡령 등의 사고에 휘말리고 있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위한 매각 방식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경영주체를 찾아주고 회사 정상화를 돕기 위한 우리 사주제 등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05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법16조의4, 은행법시행령11조의3, 은행업감독규정16조의2에 의거하여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05년말기준 결산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06년 상반기중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시행할 계획*임 * 적격성심사는 매반기 정기적으로 실시(은행법 제16조의4)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마련('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책임 공시 자율추진</li> <li>○ 윤리경영 및 관계형 대출 활성화</li> <li>○ 휴면예금 등을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li> </ul>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국회의결에 따라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금감위(원)·재경부·한국외환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가 진행중임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b>[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 ]</b> <input type="checkbox"/> '05.1.26 금감원은 여성 피조사자에게 음주한 상태에서 밤늦게 전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05.2.16 해당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금감원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품위 손상 등에 대하여 매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함을 적극 주장</p> <p>□ '05.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고,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도록 명령(구제명령)</p> <p>○ '05.5.6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06.1.2 중앙노동위원회도 금감원의 재심신청을 기각</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고, '06.3.2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낮추어 “정직” 처분(현재 해당 직원은 출근이 정지되고 있음)</p> <p>□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p>

시장 처리요구사항	시장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p> <p>□ 헤르메스 시세조종 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물산 주식 대량보유자인 헤르메스의 펀드 매니저가 국내 일간신문과의 인터뷰('04.11.26)를 자청하여 삼성물산의 M&amp;A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04.12.1)되게 한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04.12.3)한 사실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04.12.17)</li> <li>○ 조사결과, 헤르메스 펀드매니저가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보유주식을 원활히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헤르메스 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 D증권사 K직원을 고발('05.7.22)하였음</li> </ul> <p style="margin-left: 40px;">* 검찰은 수사결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를 기소('06.1.31.)</p> <p>□ 위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05.9.22~10.11)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p> <p>(자체 진상조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르메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투자 펀드임에도 삼성물산이 헤르메스를 투기적 M&amp;A펀드로 몰아갔고 금감원의 조사는 특정 재벌 펀들기의 일환이었다는 의혹 관련</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르메스펀드의 삼성물산 주식매도 직후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감독당국도 헤르메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특정 재벌 편들기나 보호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li> <li>-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도 감독당국의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li> <li>○ 국내 D증권사 K직원을 고발하면서 동 증권사를 조치하지 않아 조치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 관련</li> <li>- D증권사 K직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헤르메스 펀드 매니저의 위법행위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K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D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업원·대리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묻는 증권거래법 제215조(양벌규정)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D증권사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li> <li>* D증권사 K직원은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재경부 등 지역·서민금융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상반기중) *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의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L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세제혜택 부여는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임 <input type="checkbox"/> LTV규제 완화는 부동산시장 동향, 일반은행 모기지 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LTV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에 근거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의 개정 필요성 여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05년 중 다음과 같이 워크아웃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이행 실태를 점검 ① 공동 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 ② 은행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③ 워크아웃제도 홍보 ④ 경영진의 관심 및 담당자의 인식도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06년에는 서베이 실시 등 워크아웃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1/4분기중) 채권은행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워크샵을 개최(3/4분기중)하여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등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p>
<p>(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p>	<p>□ 분기별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BIS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신속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병, 제3자인수 및 퇴출 등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음</p>
<p>(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 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는 내·외부에서 협의사항을 통보한 기업 및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p> <p>□ 무작위 표본선정은 엑셀프로그램의 난수발생기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이 공개적으로 직접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음</p> <p><b>(2005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에는 총 204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87사</li> <li>- 연결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5사</li> <li>- 결합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2사</li> </ul> </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실시 회사는 모집단에서 제외</li> <li>- 모집단 형성시 무작위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감사투입시간 등을 혼용</li> </ul> </li> <li>(2006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감리대상을 확대하여 감리 사각지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사 → 280사(37% 증가)</li> </ul> </li> <li>○ 장기간 감리미 실시 회사, 자본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은 회사 등의 선정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표본 추출 모집단 형성을 검토</li> </ul> </li> </ul>
<p>(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편취 및 위조 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CD발행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CD를 발행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출하여 관련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05.11.11)</li> <li>○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는 동시에 CD업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li> </ul> </li> <li>○ 위규행위와 관련된 직원(5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문책' 등의 조치를 하였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2) 제3자 명의 CD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18조 및 동 「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있음</p> <p>□ 따라서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에 대해서도 상기규정에 따라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조치하였음('05.11.11)</p> <p>○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p> <p style="padding-left: 40px;">*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p> <p>○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책' 등 합당한 조치를 동일하게 취하도록 조치의뢰</p> <p>□ 앞으로도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전 금융권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조치</p>
<p>(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향을 마련하도록 할 것</p>	<p>□ 불건전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유통 방지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05.12.23)</p> <p>○ 금융기관 금지사항에 CD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 짐</p> <p style="padding-left: 20px;">- 비정상적인 CD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p> <p style="padding-left: 20px;">- CD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거래처의 재무제표 분식,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 할 것</p>	<p>□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 등 전자 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전 권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보안 대책」을 수립('05.9)하여 시행중에 있음</p> <p>(전자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PC에 해킹차단 프로그램 의무적 설치</li> <li>○ 보안카드 비밀번호 확대를 통한 일회용비밀번호 (OTP: One time password)기능 강화</li> <li>○ 보안전담기구 및 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 도입과 운영을 위한 OTP통합인증센터 설립 추진</li> <li>○ 보안수준별 거래한도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뱅킹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차등 적용</li> </ul> </li> <li>○ 금융소비자의 보안의식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관리 유의사항 등 '전자금융이용자 정보보호수칙'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전자금융 이용방법을 홍보</li> </ul> </li> </ul>
<p>(15) 역모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재정경제부 주도로 당정협의를 거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06.2.16)</p> <p>□ 금년 중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07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임</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3년이하 징역 등)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li> </ul> <p>*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 및 이용목적 제한,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 부여, 신용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관리규정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p> <p>□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한 내부관리기준 및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불법접근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 중</p> <p>□ 또한 최근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은 '05.11월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각 금융회사가 한층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운영</li> <li>- 고객신용정보처리 업무 위탁 등 고객정보 외부 제공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및 약정이행상태 점검</li> <li>- 고객의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권한 도입 등</li> </ul> </li> </ul> <p>□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관리·보호인 지정 및 전화수신거부 신청 창구 마련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06.4월 이후 시행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은행 감독이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업무 취급결과 늘어나는 위험자산을 BIS 비율 산정시 반영하고</li> <li>○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li> <li>○ 부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은행감독장치를 적용하고 있음</li> </ul> <p>□ 최근 금융겸업화 진전으로 은행의 부수업무가 증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업무 수행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06년 2/4분기)</li>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BIS비율 산정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li> </ul>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근에는 보험사기의 수법도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p> <p>⇒ 전담조직(보험조사실)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의 방지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업계의 방지 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2006년 주요 추진 보험사기 방지대책</p> <p><b>(적발강화 측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혐의정보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 실시</li> <li>- 조직적 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지시스템의 성능을 개선</li> </ul> </li> <li>○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li> </ul> </li> </ul> <p><b>(예방활성화 측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보험범죄 신고방법 등 대응요령 전파를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li> </ul> </li> <li>○ 보험사기 예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융소비자,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 대상 예방교육 실시</li> <li>- 보험사기 조사실무교육을 통한 조사 전문인력 양성</li> </ul> </li> </ul>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05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 중심으로 전자민원창구를 대폭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Q 대폭확충 및 단순질의성 상담에 대한 즉답 시스템 구축 등</li> </ul> </li> <li>□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 평가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직원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민원업무에 반영</li> </ul> </li> <li>□ 금융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정식 처리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자율조정 기회를 부여 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0~‘06.3(필요시 3개월 연장) 기간중 민원 처리 우수 8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li> </ul> </li> <li>□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제공범위, 민원서류 제출시 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마련</li> </ul> </li> <li>□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감축을 위해 민원처리 모범규준 제정 및 적용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처리조직, 민원처리절차, 민원예방 및 사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총 7장, 31개 조항으로 구성</li> </ul> </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우수회사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감축 노력, 금융교육 시스템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우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로 활용</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상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을 전담할 전문상담원제도 도입</li> <li><input type="checkbox"/> 소비자단체 임직원을 일일상담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명예옴부즈만제도 도입</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연수 등을 강화하고 법률·의료자문 및 외부 용역을 확대</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부당한 소 제기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소송지원제도 적극 추진</li> <li><input type="checkbox"/>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첩민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의 전자이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li> </ul> </li> </ul>
<p>(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영세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CBBW의 공모발행시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BW의 전환권 등에 대한 내용, 발행절차,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목적 및 발행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함</li> </ul> </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또한, CBBW의 사모발행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사채의 내용, 자금조달의 목적, 사채발행 방법, 전환에 관한 내용 등의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며</p> <p>○ 특히 배정받는 특정인의 성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발행권면총액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음</p> <p>□ 경영세습을 위한 CBBW 발행은 그 특성상 사모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p> <p>○ 이러한 CB 등의 사모발행을 통한 이익공여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를 통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40)</p> <p>□ 공시측면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발행시의 공시를 강화하여 그 투명성을 확충하는 한편 사모발행시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CB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이전의 투명한 공시 및 공시를 통한 상법 및 세법상의 규율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겠음</p> <p>* 현재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단지 '특수관계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임</p>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p>□ '05.11.30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경우와 예치금을 포함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p> <p>○ '05.11.30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344억원 초과하였으나 12월 중 1조 167억원 감축하여 은행법상 한도이내를 유지</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p> <p>*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씨티그룹캐피탈을 의미하며, 동사는 '04.12.29 씨티리스가 씨티파이낸셜을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임</p>	<p>□ 한국씨티은행의 그룹계열사인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리의 적정성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임</li> </ul> <p>□ '05년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05.10.12 ~11.10)시 동 내용을 점검한 결과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여신금리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씨티캐피탈의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p> <p>(AA등급 금융채금리 + 35bp 적용)</p> <p>⇒ 따라서 금감원에서의 별도 조치 사항은 없음</p> <p>□ 다만,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자금소요액 대비 지원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2.28현재 신용공여한도는 7,350억원(대출잔액은 3,280억원)인데 반해, 미사용한도가 4,070억원임</li> <li>○ 한편,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시 「씨티그룹간의 여신공여 승인규정」에 의거 신용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됨</li> </ul> <p>⇒ 따라서 금감원은 씨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시 여신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신용조사 실시)하도록 관련 내규의 개선을 지도할 예정임</p> <p>* '05년 종합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반영</p> <p>※ 동행은 '05.12.29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4,500억원으로 감축한 바 있음</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p>	<p>□ 금융감독원이 공기업과 외국은행간의 사적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소송 제기 등이 필요한 실정임</li> <li>○ 또한 외국은행의 거래행태에 부당한 점은 있으나 동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외국은행이 공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제반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치 않아 환수대상 금액을 확정하기 곤란</li> <li>○ 다만, 관련 외국은행들로 하여금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를 공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정형파생 상품거래로 전환토록 지도함으로써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과도한 위험을 해소하였음</li> </ul> <p>□ 금융감독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관련 검사결과를 '05.9.28 감사원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p> <p>□ 또한 장외파생상품 부당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을 통보('05.10.5)하고, 파생상품거래 담당자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05.10.20)</li> </ul> <p>- 거래의 적정성 및 거래 상대방의 법률적 권한 (Legal Capacity) 등의 확인의무와 리스크 등 중요정보의 충분한 고지의무</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보완(별첨 참조)하여 은행이 공기업 등 거래자에게 부당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도화('05.12.23)</li> <li>○ 또한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도이치, BNP파리바, 바클레이즈)과 재발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0.7)</li> <li>- 1차 점검결과 양해각서 내용이 대체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으며 부당한 비정형파생상품거래의 신규 취급은 없었음</li> </ul> <p>(별첨)</p> <p>&lt;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주요개정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건전 영업행위(세칙 64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하거나 리스크와 잠재적 손실에 영향이 있는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li> </ul> </li> <li>□ 금융거래(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세칙 65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li> <li>○ 의사결정에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li> <li>○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는 내재된 개별 거래의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의 거래권한 보유여부를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li> <li>○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고, 비정형 파생상품은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li> <li>○ 비정형파생상품거래 매월말 거래평가서를 송부</li> <li>○ 거래관련 자료를 보관</li> </ul>
<p>(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 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05.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영업전략개인신용위험 평가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li> </ul> </li> <li>□ 따라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기준이 없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자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하지 않고 있음</li> </ul> </li> <li>□ 다만 정책수행을 위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가 필요하며 국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경위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의 제작성을 정부(재경부)에 요청('05.9월)</li> <li>○ 필요시 일정 금액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파악하여 代用통계로 활용</li> <li>* 3개월이상 연체중 50만원 이상 또는 50만원 미만 2건이상</li> </ul> </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div data-bbox="614 302 1436 515">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 심사제도 활성화 방안'('04.12월)을 마련,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하는 등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div> <div data-bbox="630 548 1436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업체에 대한 내부심사결과를 분석하고 및 동 분석결과를 공시</li> <li>○ 신용등급별 기준수익률과 실제시장수익률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를 공시</li> <li>○ 신용등급 예측정보의 유의성을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 공시 등</li> </ul> </div> <div data-bbox="614 963 1436 1064">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사의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상기 제도 개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계속사항) </div> <div data-bbox="614 1097 1436 1400">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지정요건(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新BIS 협약 시행('07년말) 후 동 요건에 따른 ECAI 지정시 상기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감안하겠음</li> </ul> </div>
(26) 환치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div data-bbox="614 1467 1436 1624"> <input type="checkbox"/> 정부의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른 해외송금한도 폐지 등으로 일반기업·개인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등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 </div> <div data-bbox="614 1657 1436 1870"> <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정보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혐의 거래 자동검색을 위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추진중 </div> <div data-bbox="670 1915 1436 1993"> <p>* 「외국환거래법」 개정('05.11.23)으로 금년부터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정보 이용 가능</p> </div>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감시시스템」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 정보 등을 DB화하여 거래분산송금 등 불법·이상 징후 외환거래를 자동검색</li> <li>- 「상시감시시스템」개발 및 운영을 위해 외환 심사반 신설</li> <li>□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 등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이 관련거래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은행의 안내 미흡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li> <li>○ 외환거래 설명회(상·하반기 각1회)</li> <li>○ 은행 외환업무지도·점검(하반기 1회)</li> </ul>
<p>(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감법 제15조 제1항은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증선위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li> <li>○ 여기서 ‘필요한’의 의미는 모든 외감법상의 위반 행위를 전부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의 대상 선택에 있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내지는 일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li> <li>○ 본 감리제외 방침의 적용요건(기업회계기준·실질에 맞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충족시킨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 감리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감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인 “기업회계 투명성”에 완전히 부합하게 되는 점</li> <li>② 또한 실무적으로도 계정분류오류 정도는 회계 정보 오류의 중요성이 낮아 처벌의 중요도도 떨어지는 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외감법 제15조 제3항은 감리업무의 집행에 수반하는 구체적 기준, 감리대상의 선정, 감리의 구체적 절차, 조치수준 등 집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 정립권을 금감위에게 부여하고 있음</p> <p>□ 상기 외감법상의 적법한 규정정립수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외감규정은 본 방침이전에도 이미 감리 조치의 감경·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p> <p>○ 규정 제58조 제4항은 동 규정제정 당시('99.3.12)부터 “발생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p> <p>- 금번 감리제외(조치유예) 제도의 조치 감경·면제 근거는 조치시행이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음</p> <p>□ 또한 본 방침이전에도 제48조 제2항 각호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금번 규정개정은 감리 미실시 사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p> <p>□ 금번조치는 엄벌주의보다는 집단소송법이 유예되었음을 기회로 감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한 것으로 선진유도 행정을 그 수단으로 하되, 엄격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악용소지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임</p> <p>○ 다만, 국정감사시 지적된 제도의 악용문제는 이미 실무지침을 통하여 시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은 현재 없다고 판단됨</p>

시장 처리요구사항	시장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시중 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경위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li> <li>□ 또한, 감독당국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li> <li>○ 회계감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감리방식도 변경하고 표본감리대상 기업도 대폭적으로 확대 선정('04년 120사 → '05년 204사)하여 감리를 실시중에 있음</li> </ul> </li> <li>□ 감독당국은 금년에도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감리대상기업을 '05년의 204사(상장법인의 약15%)에서 280사(상장법인의 18%)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li> <li>- 혐의기업감리(30사 예상) 감안시 총 감리기업은 310사(상장법인의 약 20%)가 됨</li> <li>○ 감사인의 회계감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li> <li>- '06.3월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하반기에 Pilot Test를 실시할 예정</li> </ul> </li> </ul>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금감원 감사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p>	<p>□ 공사는 '05.4.28자 금감위 조치요구서 접수 후 관련법령 및 내규에 의거 공매재산 취득양태 (재산종류, 취득건수, 취득가액 및 업무관련성)를 기준으로</p> <p>○ 대상자 19명 전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처분</p> <p>※ 징계처분 내역</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정직</th> <th>감봉</th> <th>견책</th> <th>경고</th> <th>주의</th> <th>합계</th> </tr> <tr> <td>인원 (명)</td> <td>3</td> <td>5</td> <td>2</td> <td>4</td> <td>5</td> <td>19</td> </tr> </table> <p>※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가 불용 처분한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li> <li>- 징계 양정시 포상 등이 있을 경우 감경이 가능함에도 엄정한 기강확립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경 적용 없이 대상 직원 전원 중징계</li> </ul>	구 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합계	인원 (명)	3	5	2	4	5	19
구 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합계									
인원 (명)	3	5	2	4	5	19									
<p>(2) 온비드의 장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p>	<p>□ 발생 가능한 장애별 안정성 제고 대책을 '03년부터 마련·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p> <p>○ 자연재해 : 중요 시스템의 이중화, 자료의 정기적 백업 및 분석 시행</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재해 및 장애 : 2중의 방화벽 설치, 침입 탐지시스템 및 침입차단프로그램 사용</li> <li>○ 시스템 장애 및 기반구조 장애 : 자가발전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지사 확대 운영('05.12), 통신망의 이중화 및 정기적인 사용량 측정 시행</li> <li>○ 외부연계 장애 : 지불결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운영('04.7), 담당자간 비상연락 체계 운영</li> <li>□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주관계 서비스」('05.5), 「장애발생 통보 프로그램 및 보안관계시스템」을 도입하여('06.2)</li> <li>○ 24시간 시스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li> </ul>
(3) 특별채권 매각 관련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 매각 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1999-1 국제입찰에서는 경제적 매각 규모 달성을 위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을 일부 포함시켰으나, 1999-2 국제입찰부터는 포함시키지 않음</li> <li>○ 또한 '01년 이후부터는 국제입찰 매각 실적이 없으며 특별채권을 포함하는 모든 채권 매각시 원칙적으로 보증서 있는 채권은 매각에서 제외 하였으며 매각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매수자가 보증서 관련 회수액을 공사에 이전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조건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공매처분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할 것</p>	<p>□ 공사는 조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관리 업무를 확대 수행(배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업무)하여 정부의 조세행정 지원·징세 비용절감 및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대행수수료 체계는 '00.12.19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경영수지 대비 작간 접 경비 부담액을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40억원의 손실이 발생</li> <li>○ 이에 따라 정부(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06.2.9부터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li> </ul> <p style="margin-left: 40px;">* 매각금액의 2% → 2.8%</p> <p>□ 또한,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 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을 제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와 국세청 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종이문서 폐지('05.8.1)</li> <li>○ 공매통지서 등 자동우편봉합기 발송('05.12.5)</li> <li>○ 정원외 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li> </ul>
<p>(5)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p>	<p>□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체계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의 지역별(본사 및 권역별 6개지방팀) 전담관리체계를 통한 현장위주의 직접 관리 조직체제 구축 시행('06.2.1)</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유형별*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재산별 최적 관리방안 수립으로 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재산, 활용·수익재산, 처분·매각대상재산</li> </ul> </li> <li>○ 위탁확대로 증가되는 업무량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현행 전산시스템을 전면 확대·재구축('06.11, 개발완료 예정)</li> <li>○ 국유지 개발 사업분야 전문인력(변호사, 건축사 등) 보강 및 교육활동 강화를 통한 직원 전문성 제고</li> <li>○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괄청에 법령 개정 건의 및 반영('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부시 보증금 등 예치(10백만원 이상) 및 분납기준 상향조정(1백만원 초과)</li> <li>- 경쟁을 통한 매각 및 대부(임대)경우 전자입찰(OnBid) 의무화 등</li> </ul> </li> <li>○ 업무절차개선 및 체납자 관리 등 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효율적관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상금 부과시 공시송달제도 도입</li> </ul> </li> </ul> <p>□ 향후에도 국유재산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반영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공사의 해외 진출 사업 추진 대책을 보고할 것</p>	<p>□ 기본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우리나라와의 지역연계성 및 시장 잠재성이 높은 동북아지역에 핵심역량을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대만·일본·베트남시장을 초기 목표시장 (틈새시장)으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li> <li>- 동북아 부실채권시장을 선도하여 해외부실채권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 창출</li> </ul> </li> <li>○ 해외부실채권시장 진출이 동북아 금융허브구축 지원 및 공사의 노하우 발전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투자 전문기관(IB, 연기금,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및 세계적인 사업망과 노하우를 갖춘 회계법무법인 등과 전략적 업무 제휴 추진</li> </ul> </li> </ul> <p>□ 부문별 해외사업의 전략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투자는 공사 초기 사업임을 감안, 사업 핵심요소(인력, Deal Sourcing, Fund Raising, 자산관리 및 리스크관리) 등 대내외 인프라의 확충에 주력</li> <li>○ 직접 투자의 초기 Track Record 시현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해외 IB가 참여하는 시범적 투자펀드 조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부문은 투자사업 시장조성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旣 컨설팅 실적이 있는 국가 중심으로 실질적 수익창출 도모</li> <li>- ADB, AfDB 등 컨설턴트로 등록된 국제기구 적극 활용</li> </ul> </li> <li>○ 직원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및 KOICA(국제협력단)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사업 강화로 수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부문 교육기관으로서 인지도 확보 및 피연수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으로 사업진출 토대 구축</li> </ul> </li> </ul> <p>□ 해외투자사업 손실(리스크) 최소화를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 최소화</li> <li>○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20/100으로 총 투자한도를 제한하였으며,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li> </ul> <p>□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지원과 연계한 해외사업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정보센터 구축, 구조조정포럼 개최 준비 및 국내 구조조정자산운용업 육성 지원 등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지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한마음금융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p>□ 기한의 이익 상실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2월말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건수는 5만 1천 여건으로서 전체 대부건수(183,948건) 대비 28%에 이르고 있고, 매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li> </ul> <p>□ 기한의 이익 상실자의 부활 제도 도입 및 조건 완화를 통한 구제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3월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자에 대한 부활 제도를 도입하고, 콜센터를 통한 부활 안내 TM·SMS 발송 및 최고 등의 방법으로 연체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음</li> <li>○ 특히 '05. 9월부터는 배드뱅크 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자에 대한 부활조건을 완화 및 조기 상환시 일정률의 할인제도(할인율 : 6%)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1.1부터는 콜센터 연체전담 TM반을 운영, 기한의 이익 상실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li> </ul> </li> </ul> <p>※ 기한의 이익 부활 현황('06.2월말 기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05.3~12월</th><th>'06.1월</th><th>'06.2월</th><th>계</th></tr> <tr> <td>건수</td><td>6,757</td><td>1,306</td><td>994</td><td>9,057</td></tr> <tr> <td>금액</td><td>2,817</td><td>435</td><td>472</td><td>3,724</td></tr> </table>	구분	'05.3~12월	'06.1월	'06.2월	계	건수	6,757	1,306	994	9,057	금액	2,817	435	472	3,724
구분	'05.3~12월	'06.1월	'06.2월	계												
건수	6,757	1,306	994	9,057												
금액	2,817	435	472	3,724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무담보채권 위임 관련 공사 자체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p>	<p>□ 채권추심기관에 무담보채권 추심·회수위임과 관련하여 공사는 '05. 8월부터 수수료를 동종업계 평균 수준인 24%로 인상하고, 위임기관별 회수목표를 부여하여 관리함과 동시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월까지의 위임기관별 회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실적 부진 위임기관에 대하여는 과감히 위임계약을 해제하는 등</li> <li>○ 위임기관 간 채권 회수 경쟁체제 유도를 통해 아웃소싱 채권의 회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li> </ul> <p>□ 한편, 위탁관리 채권의 공사 자체 회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인력 수급 및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관리기관간의 실적 평가기간('06.3~8월) 종료 후 탈락업체 보유 채권에 대한 공사 직접 관리 여부를 경영 여건과 회수율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임</li> </ul>
<p>(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 실효성 여부 및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의 실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도 공사가 수행한 기초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마무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05.5.9~'05.11.8)간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 약15.6만명 대비 57%에 해당하는 약8.9만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함</li> <li>□ 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의 과잉추심 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협약」 상 채권금융기관 준수사항에 의거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를 중단하도록 약정되어 있음</li> <li>○ 이를 위반한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동 협약에 의거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과잉 추심 사례는 발생치 않고 있음</li> </ul> </li> </ul>
(10) 압류재산 공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행성과와 공사의 직·간접비 대비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함</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28 : 수익제고 및 비용절감 방안 수립</li> <li>○ '05.3.29 : 공매대행 수수료를 개선방안 보고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li> <li>○ '05.3.30~12.31 : 수수료를 개선방안 제출·협의</li> <li>○ '06.2.9 ~ : 변경 수수료 제도 시행</li> </ul> <p>□ 수수료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매각금액의 2%→ 2.8%로 상향 조정*  - 단 매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수수료 조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채납자에 대한 비용 부담 및 국가 재정 수입 안정 기여</p>
(11) 임직원 비위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p>□ 임직원 비위 방지대책 마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03.12.19)하고 이를 위반 시 엄격한 징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비위 를 원천적으로 봉쇄함</li> <li>○ 공매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취득금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원이 본인의 계산하에 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입찰시스템(OnBid)을 개선하여 임직원 및 직계 존·비속의 응찰을 원천적으로 제한</li> <li>○ 매월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행사실시 및 윤리경영 책자 발간을 통한 임직원 윤리 의식 제고</li> <li>○ 윤리경영 교육강화 및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발굴 시행</li> </ul> <p>* 청렴서약제, 클린카드제, 임직원 재산취득 방지교육 주기적 실시, 공직기강 확립 계획의 추진실적 감독기관 정기보고</p>																					
(12) 대우채권 2조 8천억원의 적자 발생 원인과 대책을 보고할 것	<p>□ 대우채권 인수·정리 현황('05.12월말 기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조원)</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인 수</th> <th colspan="3">정 리</th> <th colspan="2">보 유</th> </tr> <tr> <th>채권액</th> <th>매입액</th> <th>채권액</th> <th>매입액</th> <th>현금회수</th> <th>채권액</th> <th>매입액</th> </tr> <tr> <td>35.8</td> <td>12.7</td> <td>6.7</td> <td>4.1</td> <td>5.8</td> <td>29.1</td> <td>8.6</td> </tr> </table> <p>□ 향후 회수 예상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 주식에 대하여 '05.12월말 현재 시가로 매각을 가정하고 계열사별 채무상환계획상의 회수금액을 합하여 향후 6.4조원이 추가 회수 될 것으로 추정</li> </ul>	인 수		정 리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현금회수	채권액	매입액	35.8	12.7	6.7	4.1	5.8	29.1	8.6
인 수		정 리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현금회수	채권액	매입액																
35.8	12.7	6.7	4.1	5.8	29.1	8.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2월말 현재 회수한 5.8조원을 포함하면 총 12.2조원이 회수 예상되어 투입액 12.7조원 대비 96% 회수율 예상됨</li> <li>□ 따라서 공사는 주요 경영정상화 기업의 가치제고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로 대우채권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li> </ul>
(13) 경영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방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관리위원회는 출자 주주(정부, 금융기관)의 위임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관리감독적 기능과 공사 경영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서 설치되었음</li> </ul> </li> <li>□ 경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사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인적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수년 내에 투입한 공적자금 관리업무의 종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경우에 공사법 개정을 통하여 동 위원회의 공사 이사회와의 통합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추진코자 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국외연수 비용을 자산 매수자가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할 것</p>	<p>□ JV파트너의 국외연수비용 제공은 공사에 직접 금전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금융기법 연수를 위한 과정설계, 강사 섭외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li> <li>○ 대부분의 보유자산을 정리한 현재로서는 유사한 계약구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i> </ul> <p>□ JV투자자의 국외 연수 교육프로그램 제공 목적은 상호 발전적 협력차원에서 공사 직원의 자산유동화 AMC운영 등과 같은 최신 금융기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사 직원들의 다양한 금융기법 습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외연수를 실시토록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재무자문사의 주관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의 국외 연수 지원이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li> </ul>
<p>(15) (주)로이젠의 거제도 골프장 소유 관계를 검토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것</p>	<p>□ (주)로이젠*은 거제도 골프장 예정부지 21만 평(698,327㎡)을 '04.7.9 학교법인 지성학원으로부터 59억원에 매입, 소유권을 취득</p> <p>* 주주는 75%의 지분을 가진 에이원컨트리클럽(주)와 25%의 지분을 가진(주)필코리아리미티드로 구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사는 채권보전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 등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이젠은 (주)대우 및 김우중 前회장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으로서 현행법상 직접적인 채권보전조치는 불가능하나</li> <li>○ 공사는 김우중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퍼시픽인터내셔널이 소유한 필코리아리미티드 주식 10만주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득하였음</li> </ul> <p>□ 향후 공사는 10개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추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주)로이젠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코자 함</li> </ul>
(16) 압류재산 조세 업무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보고할 것	<p>□ 공사는 조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관리 업무를 확대 수행(배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업무)하여 정부의 조세행정 지원·징세 비용절감 및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대행수수료 체계는 '00.12.19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경영수지 대비 직간접 경비 부담액을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40억원의 손실이 발생</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div>○ 이에 따라 정부(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06.2.9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div> <div>* 매각금액의 2% → 2.8%</div> <div>□ 또한,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을 제고함</div> <div>○ 공사와 국세청간 '압류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종이문서 폐지('05.8.1)</div> <div>○ 구매통지서 등 자동우편봉합기 발송('05.12.5)</div> <div>○ 정원외 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div>															
(17) 임금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div>□ 공사는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div> <div>&lt; 인력 구조조정 실시 &gt;</div> <div>□ 인력구조조정 내용</div> <div>(단위 : 명)</div> <table><tr><td>구 분</td><td>'03</td><td>'04</td><td>'05</td><td>'06</td></tr><tr><td>정 원</td><td>1,177</td><td>1,077</td><td>997</td><td>907</td></tr><tr><td>(전년대비)</td><td>△50</td><td>△100</td><td>△80</td><td>△90</td></tr></table>	구 분	'03	'04	'05	'06	정 원	1,177	1,077	997	907	(전년대비)	△50	△100	△80	△90
구 분	'03	'04	'05	'06												
정 원	1,177	1,077	997	907												
(전년대비)	△50	△100	△80	△9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data-bbox="619 324 1125 369">&lt;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gt;</p> <div data-bbox="619 443 1460 1086"> <p data-bbox="619 443 1460 616">□ 유사기능 수행조직의 통폐합 및 부점별 적정 팀 모형 분석을 통한 팀 운용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46 672 1460 840">○ '06.2.1자 조직개편시 기업개선부, 해외채권관리부, 특별채권부 등 3개 부점을 기업개선부로 통합</li> <li data-bbox="646 907 1460 1086">○ '06.2.1자 조직개편시 부점별 적정 팀 모형 분석을 통한 팀 운영방안 도출로 총 팀수를 '05년말 대비 24팀 축소 운영</li> </ul> </div> <p data-bbox="619 1176 1125 1220">&lt;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gt;</p> <div data-bbox="619 1294 1460 1937"> <p data-bbox="619 1294 1077 1339">□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46 1377 1460 1556">○ 비서·서무지원 업무 등 비핵심 업무의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정원인력의 핵심업무 집중으로 효율성 제고</li> </ul> <p data-bbox="619 1624 1109 1668">□ 후선부서 투입인력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46 1702 1460 1825">○ 후선부서 투입인력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가용인력의 영업부점 배치로 효율성 제고</li> </ul> <p data-bbox="619 1881 949 1926">□ 임금피크제 도입</p>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data-bbox="619 327 954 371">&lt; 향후 추진계획 &gt;</p> <div data-bbox="619 450 1461 1021"> <p data-bbox="619 450 1461 551">□ 업무·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설계와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p> <ul data-bbox="639 595 1461 696"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595 1461 696">○ 정규직, 연봉제 적용범위 확대 추진(현재 정규직 1·2급)</li> </ul> <p data-bbox="619 775 1414 819">□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p> <ul data-bbox="639 864 1461 1021"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864 1461 102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 강화 및 사후평가 실시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적정성 제고</li> </ul> </div>
<p data-bbox="132 1111 600 1335">(18) 부동산사업부의 업무량 대비 인원 과다와 관련 예산편성 시 축소 방안을 보고할 것</p>	<div data-bbox="619 1111 1461 1951"> <p data-bbox="619 1111 1062 1155">□ 부동산사업부 주요업무</p> <ul data-bbox="639 1200 1461 1503"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1200 1461 1301">○ 신규부동산 매입 및 컨설팅, 보유부동산 임대 및 시설관리</li> <li data-bbox="639 1335 1430 1379">○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및 신규사업방안 기획</li> <li data-bbox="639 1413 1461 1503">○ 국유부동산 및 보유부동산 개발에 따른 건축 업무 등</li> </ul> <p data-bbox="619 1581 935 1626">□ 현재 인력 운영</p> <ul data-bbox="639 1671 1461 1951"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1671 1461 1771">○ 모든 보유부동산에 대한 시설관리를 아웃소싱 하고 있고</li> <li data-bbox="639 1805 1461 1951">○ 대부분의 인력은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에 투입되고 있음</li> </ul>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운용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 시범개발사업 3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li> <li>○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검토 및 신규 개발물건 발굴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li> <li>○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국유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력운용이 필요한 상황임</li> </ul>
<p>(19)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국세물납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p>	<p>□ 물납은 조세의 현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의 합법적 탈세 시비, 장기 미매각에 따른 국고회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li> </ul> <p>□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물납허용 기준 강화, 물납가액 산정방식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총괄청(재경부)에 건의('05.1)</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건의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619 394 1460 1066"> <thead> <tr> <th data-bbox="619 394 884 443">구 분</th><th data-bbox="884 394 1460 443">개선 의견</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19 443 884 568">① 물납허용기준 강화</td><td data-bbox="884 443 1460 568">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td></tr> <tr> <td data-bbox="619 568 884 775">② 물납청구범위 개선</td><td data-bbox="884 568 1460 775">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td></tr> <tr> <td data-bbox="619 775 884 891">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td><td data-bbox="884 775 1460 891">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td></tr> <tr> <td data-bbox="619 891 884 1066">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td><td data-bbox="884 891 1460 1066">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td></tr> </tbody> </table> <p>□ 향후 공사는 물납법인에 대한 관리강화와 시장 현실에 맞는 다양한 매각방식을 개발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기에 국고가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p>	구 분	개선 의견	① 물납허용기준 강화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	② 물납청구범위 개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	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	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	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	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
구 분	개선 의견										
① 물납허용기준 강화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										
② 물납청구범위 개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										
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	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										
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	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										
<p>(20)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라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수립계획을 보고할 것</p>	<p>□ 「철도청잡종재산 활용도제고 및 관리효율화 방안」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재산을 활용, 처분, 보존재산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가능재산은 대부계약 갱신, OnBid를 통한 공개입찰 대부(임대)로 대부율을 극대화하고</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 대상재산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필요시 수의계약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매각 극대화</li> <li>- 보존재산은 소관청 관리환(도로, 구거), 처분제한 재산의 단기대부(도로부지 등) 추진</li> <li>○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작지, 야적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선정하여 공개입찰 대부를 추진</li> <li>□ 도로용지(보존재산)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이 개정('05.2)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12.31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총괄청 소관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li> <li>○ '92년 이전에 결정된 도로시설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국유지에 대하여도 사업시행 시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li> </ul> </li> </ul>
(21)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외환위기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대규모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영입했던 기업·금융 구조조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재교육 및 직무개발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로 신규, 전문인력 육성</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97년도 이후 공사가 금융·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정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업무 경험을 쌓은 우수 잠재 인력 보유 중임</p> <p>□ 국외부실채권 시장 진출 등 신규 업무수행시 국제적인 금융전문인력 및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할 경우에는</p> <p>○ 국외투자사업 전문분야 인력수요와 공사내 대체가능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 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p>
<p>(22) 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p>	<p>□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공사 내부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p> <p>○ 경영관리위원회는 공사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방침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등</p> <p>○ 경영관리감독적 기능 이외에 사외이사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p> <p>○ 한편, 경영관리위원회는 공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이사회와는 심의의결범위 등 그 기능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은 미미하여 향후 수년 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이 이루어 질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존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사 이사회와의 통합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함</p>
<p>(23) 국내에 진출해 있는 M&amp;A 부띠끄의 실태 파악과 매커니즘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p>	<p>□ 일반적으로 M&amp;A부띠끄는 소액의 자본금과 소수의 인력으로 한정된 업종 내 기업의 지분(주식)을 중심으로 M&amp;A 중개·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는 주로 증권회사 출신들이 사업자 등록 관련 법률상 기타 법인으로 설립하여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M&amp;A 중개를 하고 있으며</li> <li>○ M&amp;A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법이 제정되자 일부 M&amp;A부띠끄들이 참여하고 있음</li> </ul> <p>□ M&amp;A부띠끄 범주에 Hedge Fund, 사모펀드(PEF), 벌처펀드 등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회계법인들이 별도의 사업부문(Division)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금융부문(Corporate Finance)은 M&amp;A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M&amp;A부띠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공사 해외 사업의 경우, 국외소재 부실채권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 국외부실자산이 투자대상이며</p> <p>○ M&amp;A부띠끄가 중개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주식 등과는 구별하여야 되며</p> <p>○ 아직까지 부실자산투자 부문에서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M&amp;A부띠끄는 알려져 있지 않음</p> <p>□ 따라서 공사는 국외부실자산투자사업과 관련 향후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펀드, IB 및 기타 기관투자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임</p>
<p>(24) 현재 부실채권 매각방식의 문제점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매각 가능 채권은 대우계열사 관련 기업채권의 출자전환 주식이 대부분이며, 동 주식을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M&amp;A 등의 방식에 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p> <p>○ 공사가 주관하여 매각하는 기업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는 물론 해당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국민경제 기여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p> <p>□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이 기대되는 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의 토대 마련은 조성된 것으로 보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 매각시, 우리 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자금 등을 해당기업이 지원해줄 경우 동 금액만큼 기업가치 및 매각 금액을 하락시켜 공적자금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li> <li>○ 따라서 주주이익 및 기업가치가 침해되지 않고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li> </ul>
<p>(25) 공사가 매입한 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경영권 매입주체의 상시적인 배임·횡령 등의 사고에 휘말리고 있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위한 매각 방식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경영주체를 찾아주고 회사정상화를 돕기 위한 우리 사주채 등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의 매각 시에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및 해당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도모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수자에게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li> <li>○ 인수자 결정시 매각금액 뿐만 아니라 인수 후 인수자의 경영 및 사업 계획, 인수자와 해당기업 간의 시너지, 관련산업 연관효과,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투자자를 선정 매각하고 있음</li> <li>□ 한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나,</li> <li>○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 매각의 경우 주주이익 및 기업가치가 침해되지 않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li> </ul>

## 6.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별첨 참조

## 〈공정시장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일정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05.6.30	
		<input type="checkbox"/> 회계 부정행위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 <input type="checkbox"/>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자산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 리감리업무를 직접 수행		
		<input type="checkbox"/>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발행인으로 부터 받은 분담금 중 한국회계기준 원에 지원하는 비율을 그 분담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 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 립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	2007.4.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 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구정비*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 상장법인	2008.7.29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외하고 주석을 추가 <input type="checkbox"/> 지배·종속의 관계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 상향조정 ○ 7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단축 ○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정기주총 4주전	입 법 예고중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규모가 큰 금융기관(8천억원 이상)에 대하여 일부 대형 회계법인만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 <input type="checkbox"/>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건별 기재사항을 총애만 기재토록 하는 등 작성부담을 완화	2006.3.10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제한의 완화 ○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정 ○ 감사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당해회사의 자산매도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006.3.10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input type="checkbox"/>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6.6.12	
		<input type="checkbox"/>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대체 시험(토플·토익·텝스)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처리되는 바, ○ 2006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험 형태인 토플 IBT(Internet Based Test) 시험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토플 시험의 실시방식에 IBT시험을 추가	2007.2.12	
		<input type="checkbox"/>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7.3.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정비	2008.7.29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2006.3.10.)됨에 따라 ○ 동 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의 제출 방법을 정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2006.7.5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 〈글로벌금융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령	금융중심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 차등을 규정한 법 령으로 금융중심 지의 지정절차, 금 융중심지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 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	2008.3.22 시행	



## 〈금융정책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금융감독기구 의설치등에관 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담금 산정방 법의 개선(영 제 12조제1항)</li> <li>○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개편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li> <li>○예산 및 결산 공시제도 마련 (영 제12조의2 신설)</li> </ul>	2007.5.16	
개정	금융위원회 의설치등에관 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li> </ul>	2008.7.29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li> </ul>	2006.3.29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li> </ul>	2007.10.23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 으로서 자산총액 기준 신설(영 제 3조의4 신설)</li> <li>○금융기관의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설정 요건 신설(영 제 5조의4부터 제5</li> </ul>	2007.11.12	

		<p>조의7까지 신설)</p> <p>○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영 제13조 제1항제4호나목 신설, 영 제15조 제1항제1호 등)</p>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p>○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2.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7.29	
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8572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부실장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추가하고,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p>	2007.10.31	

		<p>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하도록 하며,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 견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p>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금융 위원 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2.29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7.29	

## 보험업법령 최근 3년간 개정현황

### 〈보험업법 시행령〉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가.보험계약의 청약자 가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그 청약 철회하는 경우 보 험회사의 의무사항 나.보험회사의 자 회사 범위 확대 다.보험회사 주요 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	2007.8.17	
"	"	가.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의 요건 신설 나.대주주가 발행 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 조치 사유 신설	2008.1.20	
"	"	2008년 4월 1일부 터 금융기관보험대 리점 등에서 개인 보장성 보험, 자동 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삭제 등	2008.3.28	
"	"	가.보험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 나.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다.자산·손익 구분 계리 방식 마련	2008.6.15	

## 〈보험업법 시행규칙〉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8761호, 2005. 3.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종전에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인·허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5.3.31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	2008.3.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에 따른 일부개정	2008.8.4	

## 〈산업금융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분의 15이하→100분의 20이하</li> </ul> </li> <li>○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소재전문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li> </ul> </li> <li>○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li> </ul>	'06. 1. 1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대한 여신한도를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 30으로 완화</li> </ul>	'06. 6.22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li> </ul> </li> </ul>	'06.12.29	
개정(안) 입법예고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15% → 금융위가 정한 요건 충족 및 금융위 승인시 은행 자기자본의 30%</li> </ul> </li> </ul>	'08. 9.12 (입법예고)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타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05. 8.26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비율 상향 조정 및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시 차등요율 적용	'06. 1.24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 하는 것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06. 2.22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금융 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요율 중 기준요율을 하향조정	'07. 7. 1	
개정	기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출연 금액 개정	'07. 6. 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농협·수협중앙회) 출연요율 상향 조정	'06. 1.2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농·수·산림 회원조합 출연개시)	'06.10. 1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농협·수협중앙회 출연대상 대출금 조정 및 출연요율 상향 조정	'07. 7. 1	

## 〈은행과〉

구 문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 일자 (폐지 일자)	기 타
개정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추심이체의 경우 출금 동의의 방법을 추가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08.7.9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 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 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 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 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 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 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 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려는 것임	07.7.1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 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 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 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07.1.1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대상연령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 및 보증요율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7.4.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요율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0.125퍼센트를 적용하되, 그 밖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0.260퍼센트를 적용하고,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	07.5.3	

		<p>위변제받는 금액이 출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 <math>\pm 0.04</math>퍼센트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p>		
--	--	--	--	--

## 〈자본시장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상장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에 관한 요건을 근로자복지 기본법과 일 원화	'05.12.9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증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제 도의 도입에 따른 승인대 상, 승인절 차 등을 규 정	'06.1.27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상장법 인의 임직원 이 금감위로 부터 해임권 고, 고발 또 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스톡옵 션 취소 근 거 마련	'06.3.30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금감원이 증권사 또는 유가증 권 발행인으 로부터 징수 하는 분담금 의 한도, 초	'07.5.16	

		과분의 처리 등을 규정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전자자금이체업무 를 증권사의 업무로 명시	'07.6.2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대주주가 증권사 에게 위법행 위를 요구하 거나 부당한 조건의 거래 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등 대 주주의 부당 행위를 금지	'08.1.1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규칙	정부·예보로부터 취득한 자사 주를 대상으 로 교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을 배제한 것 외에, 기타 용어 및 규 정체계 정비 등으로서 특 기 사항 없 음	'06.11.8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현물시장에서 이 득을 얻기 위해 선물시 장에서 시세 조종을 하는 역방향 시세 조종을 불공	'07.12.20	

		정 거래 행 위 로 명시하는 등 규제 정 비		
개정	선물 거래 법 시 행령	대주주가 선물업 자에게 위법 행위를 요구 하거나 부당 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주주의 부 당행위를 금 지	'08.1.18	
개정	선물 거래 법 시 행령	일반상품 선물거 래의 대량보 유 보고기 준, 보고사 항, 보고시 한 등을 규 정	'08.4.30	

## 〈자산운용과〉

구 분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개정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06.1.27)	<input type="checkbox"/>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 주주의 범위 및 요건 신설 등	‘06.1.30
	상동(‘06.2.9)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6.2.9
	상동(‘06.4.27)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등	‘06.4.27
	상동(‘06.12.29)	<input type="checkbox"/>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7.1.1
	상동(‘07.6.28)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확대	‘06.7.4
	상동(‘07.12.28)	<input type="checkbox"/>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위한 요건을 완화 등	‘07.12.28
	상동 (08.1.18)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8.1.20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규칙 (‘06.5.9)	<input type="checkbox"/>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내대리 인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 정함	‘06.5.9
	상동(‘08.1.8)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외국에서 설립한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의 임원 겸직 허용 등	‘08.1.8
	상동(‘08.3.3)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3.3
	신탁업법 시행 령(05.11.25)	<input type="checkbox"/>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이 신탁 업을 겸영시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 적용할 근거 마련	‘05.11.25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폐지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폐지	‘09.2.4
	간접투자자산운 용법 시행규칙	상 동	‘09.2.4
	신탁업법 시행령	상 동	‘09.2.4

## 〈중소서민금융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확대	2008.1.18.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의 활성화와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	2006.5.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를 조정	2008.1.18.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6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 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 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 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 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조회방 법을 다양화	2006.7.1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면이나 공인전자 서명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신 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하는 방식 등을 추가	2008.3.22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7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으로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11월 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중앙회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p>	2007.11.22.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협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이 지급불능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인 5000만원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p>	2008.6.25.	

		중앙회 타 회계에 대하여도 신탁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도록 함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5.9.1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2007.10.4.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0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2008.3.28.	

## 7.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 '06.1.1일 이후 '08.8.31일까지 舊재정경제부·舊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총469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

※ 舊재정경제부 2673건(57%), 舊금융감독위원회 316건(7%), 금융위원회 1701건(36%) 처리 완료

###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 의	상담안내	질 의	청 원	소 계
'06	재경부	32건	256건	259건	655건	1202건
	금감위	9건	26건	16건	64건	115건
'07	재경부	117건	357건	276건	548건	1298건
	금감위	12건	35건	15건	108건	170건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497건	810건	934건	2449건	4690건



# 이 한 구 의원



# 1.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목록

☐ 별첨 참조

<별첨>

#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8. 3. 6 ~ 9. 30)

보도일자	제 목
08. 3. 6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추진
08.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8. 3. 1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08. 3. 14	금융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08. 3. 18	베어스텐스 관련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져 평가 및 대응
08. 3. 18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08. 3. 20	[참고자료]한경미래니엄포럼 강연자료
08. 3. 20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08. 3. 21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
08. 3. 24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08. 3. 24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08. 3. 2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과의 상견례 개최
08. 3.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 주최 “국제 금융 컨퍼런스” 강연



보도일자	제 목
08. 3. 26	텔런트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08. 3. 2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CEO와 상견례 개최
08. 3. 27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
08. 3. 28	[금융위 의결안건]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3. 28	[금융위 의결안건]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
08. 3. 31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08. 3. 31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4. 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70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
08. 4. 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회사 CEO와 상견례 개최
08. 4. 2	2008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4. 3	매일경제 제1면 「산은지분 5% 외국계에 먼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08. 4. 3	금융산업에 거는 새정부의 기대와 우리의 다짐
08. 4. 4	금융위원장과 중소서민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
08. 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08. 4. 8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보도일자	제 목
08. 4. 10	08.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이상이 금융분야
08. 4. 1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8. 4. 11	[금융위 의결안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점사결과 처리안 의결
08. 4. 17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추진방안
08. 4. 17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제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축사
08. 4.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모두말씀
08. 4. 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경련 강연 말씀자료
08. 4. 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미 성과 관련 기자회견담화
08. 4. 24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개최
08. 4. 25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08. 4. 28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08. 4. 29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08. 4. 2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말씀자료
08. 4. 3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08. 5.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자	제 목
08. 5. 2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5. 6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진
08. 5. 7	금융위 소관 산하기관 재신임 심사 결과
08. 5. 9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08. 5. 9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08. 5. 15	금융위원회 「스승의 날」 맞이 장애인 학교 방문
08. 5. 19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08. 5. 19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전성 현황 점검회의 개최
08. 5. 20	공시.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T/F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08. 5. 2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IB 대상"축사
08. 5. 21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 등
08. 5. 2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5.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WSB(세계저축은행협회) 제14회 아.태지역총회 개최축사
08. 5. 22	신용카드 가맹점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강화 지도 및 향후 추진 계획
08. 5.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②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
08. 5.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①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보도일자	제 목
08. 5.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 말씀자료
08. 5. 23	대한생명보험(주) 및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경영 인가
08. 5. 23	KITA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08. 5. 23	벨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08. 5. 26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08. 5. 26	제16차 애그몽 그룹 총회 개막, 국무총리 개막연설
08. 5. 2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08. 5. 27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의장 선출
08. 5. 29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2차) 보도자료
08. 5. 29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TV 주최“헤지펀드 컨퍼런스”기조연설
08. 5. 29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08. 5. 29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제16차 애그몽 총회 만찬 환영사
08. 5. 30	제16차 애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결과
08. 5. 30	교차모집 시행 준비현황
08. 5. 30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08. 6. 2	전광우 금융위원장 Chatham House 강연 및 유럽계 IB초청 런던라운드테이블 개최

별도일지	제 목
08. 6. 2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3차) -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2	산은 수장, 26년여 만에 민간 전문가 임명으로 성공적인 산은 민영화 및 공기업 인사채신의 계기를 마련
08. 6. 2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
08. 6. 2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08. 6. 3	2008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6. 4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08. 6. 4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사금융 실태조사)
08. 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08. 6. 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4차) - 서민금융(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5	단위 신탁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추진
08. 6. 5	여전업 발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 검토
08. 6. 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5차) -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 강연
08. 6. 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ICOSA(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 제21차 연차총회 기조연설
08. 6. 9	은행의 자회사 대출상품 판매 대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비고일자	제 목
08. 6. 10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축사
08. 6. 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CSA(세계증권업협회 협의회)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08. 6. 11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발표
08. 6. 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국제 컨퍼런스”축사
08. 6. 11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6차 보도자료-공시, 신용정보 관련 규제 등)
08. 6. 12	영진약품공업(주) 등 11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08. 6. 12	중국 은행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가능토록 협의 추진 계획
08. 6. 12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개최
08. 6. 12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발표자료
08. 6. 12	신용회복 지원 기록 삭제 관련 추가조치 시행
08. 6. 12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금 확정
08. 6. 12	전광우 금융위원장,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중 양국 우량기업의 상대국 거래소 상장을 제안
08. 6. 13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지원방안
08. 6. 13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중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키로 중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합의
08. 6. 16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보도일자	제 목
08. 6. 16	홍국생명보험(주)의 홍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08. 6. 16	엠펙러스자산운용(주) 등 4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08. 6. 16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08. 6. 17	전광우 금융위원장 IAIS Triannual Meeting 환영 만찬
08. 6. 17	대부업자 등록 갱신 관련 안내
08. 6. 17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7차 보도자료-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1)
08. 6. 1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08. 6. 18	제18차 조선경제포럼 위원장님 강연
08. 6. 19	금융위원회, 캄보디아 재경부와 정보공유 및 고위급회담에 관한 MOU 체결
08. 6. 2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ICGN 서울 연차총회 만찬사 연설
08. 6. 20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결과
08. 6. 20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08. 6. 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8차) -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1)
08. 6. 24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처리 방안
08. 6. 24	외환카드 추가조작 항소심 선고 판결 관련
08. 6. 25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보도일자	제 목
08. 6. 2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6. 25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08. 6. 25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 개정
08. 6. 2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9차) 및 추가 금융규제 개선사항 - 자본시장 규제 개선사항
08. 6. 26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
08. 6.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 연설
08. 6. 2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08. 6. 27	기업은행 감사 임명
08. 6. 27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08. 6. 27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08. 6. 27	(주)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08. 6. 30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0차) -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08. 6. 30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08. 6. 30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08. 7. 1	금융민원센터 개소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개통



비도일자	제 목
08. 7. 1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발간
08. 7. 2	2008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7.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예고
08. 7. 11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등
08. 7. 11	금융위 제1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08. 7. 11	동부화재의 동부증권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08. 7. 11	메리츠자산운용(주) 등 3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08. 7. 14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8. 7. 15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08. 7. 15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 개최
08. 7. 17	은행장간담회 개최
08. 7.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08. 7. 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08. 7.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8. 7. 2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보도일자	제 목
08. 7. 23	아이메카(주)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08. 7. 2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08. 7. 24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08. 7. 2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08. 7. 25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08. 7. 25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인허가
08. 7. 25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예비인가
08. 7. 25	증권업 및 선물업 경영허가안 의결
08. 7. 25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08. 7. 25	하나대투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
08. 7. 25	비엔지증권중개(주)의 대주주 승인
08. 7. 2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입법예고
08. 7. 28	공기업 특위 업무보고 관련 자료
08. 7. 31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08. 8. 1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보도일자	제 목
08. 8. 4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08. 8. 6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08. 8. 7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임명
08. 8. 12	HSBC,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관련 보완자료 제출
08. 8. 13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08. 8. 1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
08. 8. 14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보도자료
08. 8.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08. 8. 19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08. 8. 20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08. 8. 2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8. 21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08. 8. 22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임명 제청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 임명
08. 8. 25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과제
08. 8. 2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8. 8. 26	중국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한국자본시장 IR 개최

연월일차	제 목
08. 8. 26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08. 8. 26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08. 8. 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 참보협인 대상 축사
08. 8. 2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40회 경총포럼」 강연
08. 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08. 9. 2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08. 9. 2	「2008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08. 9. 5	2008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영현황
08. 9. 5	코스피 200선물 24시간 거래 추진(선물거래 야간시장 개설)
08. 9. 8	정기국회 업무보고자료
08. 9. 9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08. 9.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08. 9.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08. 9.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8. 9. 9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개소
08. 9. 9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제출

보도일자	제 목
08. 9. 10	메디에스엔피(주)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08. 9. 11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자료 송부
08. 9. 11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소 및 은행별 금융애로 상담반 가동
08. 9.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 규정개정 승인
08. 9. 12	CJ투자증권(주) 및 CJ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9. 15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08. 9. 16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
08. 9. 16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대책팀 구성·운영
08. 9. 18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시장 편입
08. 9. 19	HSBC, 론스타와의 계약 파기 관련
08. 9.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강연
08. 9. 22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차)
08. 9. 24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08. 9. 2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08. 9. 26	(가칭)(주)KB금융지주회사 및 (가칭)한국투...

보도일자	제 목
08. 9. 26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08. 9. 26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08. 9. 26	상호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08. 9. 29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08. 9. 3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08. 9. 30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 2.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08. 3. 6 ~ 9. 30)

보도일자	제 목
08. 3. 24	이데일리,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종창씨 추천』
08. 3. 25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대감에 5일째 상승』 (08.3.25)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3. 26	서울경제 『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08.3.26) 제하의 기사 관련
08. 3. 31	한국경제 「한국판 골드만 삭스 물거품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1	문화일보 「금융사 분담금 축소.....퇴직자 민간취업 제한은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7	매일경제 「저축은행에 신탁·외환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17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보도 관련
08. 4. 22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이번주 회비 갈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08. 4. 22	중앙일보 제1면 「공기업 매각 중간사, 국내 IB(투자은행)에 우선권」 제하 기사 관련
08. 4. 25	동아일보 「2012년부터 은행거래 자금 실소유자 확인」 제하 기사 (08.4.25 B 2면) 관련

보도일자	제 목
08. 5. 2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
08. 5. 7	아시아경제, "금융위-금감원'氣 싸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5. 7	동아일보 「퇴직연금 피담」 제하 기사(08.5.7 B 2면) 관련
08. 5. 7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관련 보도 참고 자료
08. 5. 9	연합인포맥스 「전광우 금융위원장, "다음달 금리인하 얘기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5. 13	매일경제 제a11면 「産銀지주; 3년내 우체국금융 인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08. 5. 16	매일경제 제a05면 「금융위;법무부'포이즌필'도입 합의」 제하 기사 관련
08. 5. 19	서울경제 A3면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 FTA 복병되나」 제하 기사 관련
08. 5. 20	이데일리 「밥그릇싸움에 산업만 명든다」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1	이데일리 「제2의 송례문 되지 않으려면」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1	이데일리 「10년째 내부파벌싸움」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08. 5. 23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 (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일자	제 목
08. 5. 26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판 「HSBC는 외환은행(KEB) 문제 해결을 주목」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5. 28	헤럴드경제, 금융'낙하산인사'부활 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08. 6. 4	헤럴드경제 제1면 및 제6면 「우리.;기업銀 2012년까지 매각」 제하 기사 등 관련
08. 6. 4	이데일리 「NDF 규제확대..“환율하락 심리 저지 역할”」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12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24	서울신문 「인터넷 뱅크 설립때 실행제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6. 27	서울경제 「은행'방카'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1	연합뉴스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3	한국경제 제a25면 「외환銀, 산업은행 품으로?」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08. 7. 24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8	서울경제(7.28일자 인터넷판) 「예대울 한도설정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7. 29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 지연”취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보도일자	제 목
08. 7. 30	연합뉴스(2008.7.30, 06:01)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08. 7. 30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응
08. 8. 13	「.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통폐합」 제하 기사 관련
08. 8. 19	“신·기보 1~2년 뒤 통합 추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8. 25	“금융위 국제·국내 금융 기능 통합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08. 8. 26	08. 3. 24아시아경제(08.8.26 인터넷판) “금융위, HSBC 외환銀 인수 추석 前 승인 보도해명자료
08. 9. 2	2009.9.1(월) The Time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제하 기사 관련
08. 9. 4	연합뉴스(08.9.4 인터넷판), 문화일보(08.9.4) “금융시장 혼란속 금융위 어디있나”
08. 9. 9	서울경제(08.9.9 인터넷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08. 9. 9	한국경제 제 a38면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08. 9. 16	연합뉴스 「'펀드런'나면 한은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제하 기사 관련

비밀일지	제 목
08. 9. 23	KBS 「 공매도 무방비 」 제하 기사 관련
08. 9. 26	머니투데이(08.9.26 1면),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08. 9. 29	국제신문(08.9.29 1~3면), 「금융중심지'부산탈락 說」 등 제하의 기사 관련

## 2. 부동산 PF문제 관련

B. 2002년~2008.8월말 연도별 금융권별 금융위원회에 대해 부동산PF 문제와 관련한 '공동검사요청' 및 '자료제출요구' 등과 관련해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및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내역

- 금융위원회는 예보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한 공동검사요청 및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참고로 공동검사요청 등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간 체결한 MOU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3B. 상호저축은행 PF대출과 관련하여 예보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공동검사요청 등을 받은 공문서**

□ 금융위원회는 예보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한 공동검사요청 및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참고로 공동검사요청 등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간 체결한 MOU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4-A. 지방은행 PF대출과 관련하여 예보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공동검사요청 등을 받은 공문서**

- 금융위원회는 예보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개별 지방은행의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한 공동검사요청 및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참고로 공동검사요청 등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간 체결한 MOU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5-A.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참여정부의 전략 및 정책방향(발표문 / 주요 내용)과 현 정부의 지난 대선 공약 및 인수위 내용, 현 정부 출범 후 전략 및 정책방향(발표문 / 주요 내용)을 상세히 명기하고, 2008.8월말 현재 현황 및 추진경과, 추진상의 문제점,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여 일목요연하에 작성할 것

※ 요청자료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08.8.31 정기국회에 제출한 「금융 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정부의 전략 및 정책방향

- '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9.2월 시행), 외환자유화('09년 조기완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3),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등 추진

\* 1단계(~'07): 금융허브 기반 구축

2단계('08~'10): 특화금융허브 완성(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3단계('11~'15):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

-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정책 기조 정립하에 추진전략을 설정

## (2) 현 정부의 지난 대선 공약 및 인수위 내용, 현 정부 출범 후 전략 및 정책방향

### ① 현 정부의 지난 대선 공약 및 인수위 내용

- 금융시스템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혁 :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외국에는 없는 각종 금융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
- 외환시장의 발전 :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여 외환시장의 발전과 환율의 안정 도모
- 국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 산은의 역할 중 민간에 넘겨야 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민영화
- 글로벌 금융기관 육성과 자산운용업의 활성화 :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 금융권 M&A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에도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
- 영어 및 금융인프라 확충 :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영어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

### ② 현 정부 출범 후 전략 및 정책방향

-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우리 경제력을 토대로 금융산업 규모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금융 혁신 지속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감독 체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 소유구조, 업무범위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금융 글로벌플레이어(Global Player) 출현의 기반 조성
- 금융인프라 선진화 : 자본시장 인프라, 외환제도 개혁, 금융전문인력양성 등 금융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



○ 자산운용시장의 육성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시장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해외 금융회사 및 해외전문금융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

- 금융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행정의 합리성, 회계·법률 인프라 등 사업 환경의 편의성에 중점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출입국 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영어사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

(3) 2008.8월말 현재 현황 및 추진경과, 추진상의 문제점,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①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음(08.6.30, 08.7.30)
- 향후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08년중)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08.9.1)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08.4)
  - 민간위원 위촉(08.4.30)
  - 금융중심지추진추진위원회 개최(08.6.30, 08.7.30)
-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금융규제 혁파
-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추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 예산 지원\*
    - \* 06년, '07년, '08년 정부 예산 38억원, 20억원, 20억원 출연
  -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 정책 추진('09년부터 비학위금융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

## ② 향후 추진과제

-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5-A.> 첨부자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08. 8

금 융 위 원 회

본 자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2008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目 次

I. 금융중심지추진 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II.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방향 및 기본과제

III.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1.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2. 금융인프라 선진화

3. 자산운용시장 육성

4. 금융회사등의 집적 여건 조성

# I

## 금융중심지추진 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 1. 우리나라 금융 현황

□ 지난 10년간 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

- 주식시장의 경우 거래 및 자금조달 규모 등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수준

국내 주식시장 규모비교('07년)

	시가총액	거래대금	상장기업수	조달금액
규모 (세계순위)	1.1조달러 (14)	2조달러 (9)	1,757개 (9)	169억달러 (10)

- 채권시장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육성노력에 힘입어 발행규모 증대 및 시장구조의 고도화\*가 진행

\*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비중: '03. 23.5% → '06. 34.3% → '07. 38.3%

채권발행규모 추이

단위 : 조원

	'98말	'00말	'02말	'04말	'06말	'07말
전체채권	406	468	600	711	942	982 (2.4)
국채	61	72	99	178	258	274 (4.5)
통안증권	51	67	83	143	158	150 (2.9)
회사채	123	145	156	133	158	190 (1.5)
은행채	44	49	83	112	169	210 (4.8)
기타 <sup>1)</sup>	127	135	179	145	199	158 (1.2)

주: 1) 특수채, 지방채 등      2) ( )내는 '98년 대비 '07년 발행 잔액 배율임

- 외환시장은 거래규모와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심도가 제고되었으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거래규모를 기록하는 등 괄목하게 성장

\*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규모: ('98) 40억달러 → ('07) 465억달러, 11.6배

\*\* 파생상품시장: 주가지수 옵션 세계 1위, 주가지수 선물 세계 8위 (장내거래 기준)

## □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

- 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양적인 성장('99말 대비 총자산 113%증가)과 재무구조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 은행 ROA : (FY07) 1.10% [미국 0.92%, 일본 0.58%, 영국 0.75%]

\*\* 은행 BIS비율 : (FY07) 12.28% [미국 12.23%, 영국 12.05%]

- 증권 및 자산운용업은 주식시장의 활황 및 투자저변 확대 등에 힘입어 제반 재무 지표가 개선

\* 증권사 ROE: (FY01) 5.41 → (FY07) 15.40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FY01) 208.4 → (FY07) 550.8

\*\* 자산운용사 ROA: (FY03) 10.1 → (FY07) 37.5

- 보험업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꾸준히 실적 및 건전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손보사 ROA: (FY02) 0.95 → (FY07) 2.65

###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성 추이

단위 : %

	생보산업			손보산업		
	'03.3말	'05.3말	'08.3말	'03.3말	'05.3말	'08.3말
지급여력비율	226	230	240	234	290	288
부실자산비율	16.6	5.0	2.7 <sup>1)</sup>	9.6	8.1	4.9 <sup>1)</sup>

주: 1) '07말 기준

## 2. 금융중심지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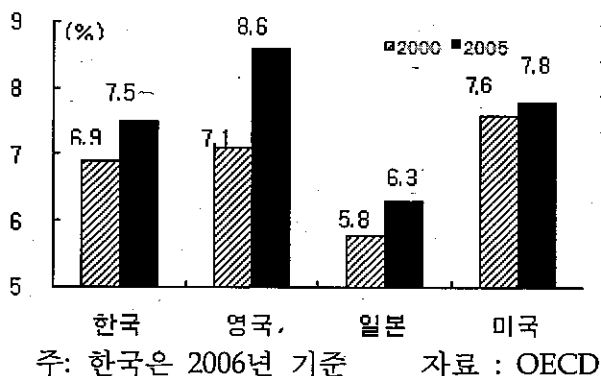
- ◆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서비스업(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 금융중심지(금융허브) 구축은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생산성 제고에 기여

### (1)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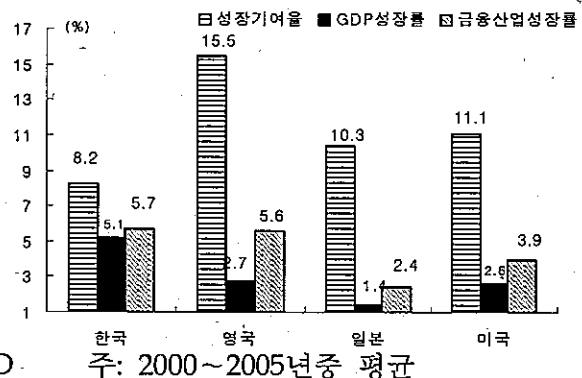
#### □ 우리나라 금융업의 성장기여 여력 충분

- 우리나라는 금융업 부가가치\*/GDP비중('00년 6.9%→'06년 7.5%)과 GDP 성장 기여율('00~'05중 평균 8.2%)이 상승 추세이나,
  - \* 피용자보수+고정자산소모+순기타생산세+영업잉여
- 영국('05년 GDP비중 8.6%, '00~'05년 성장기여율 15.5%), 미국(GDP비중 7.8%, '00~'05년 성장기여율 11.1%)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업의 성장기여 여력이 충분

금융산업 부가가치의 GDP대비 비중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



#### □ 고용창출에 기여

- 금융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06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
  - \* 총취업자중 금융업 비중: '97. 3.7%→'05. 3.26%→'06. 3.40%→'07. 3.45%(미국 4.47%('07년), 영국 4.02%('05년), 일본 2.43%('06년))



- 금융산업은 임금수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아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 영국은 '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시장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런던지역의 금융부문 종사자가 '99년 29만명에서 '06년 34만명으로 17% 증가

#### 영국의 금융서비스부문 고용현황

단위: 천명

	'99	'01	'03	'04	'05	'06
영국	1,075	1,064	1,085	1,079	1,064	1,071
런던	294	311	311	316	325	338

#### □ 고부가가치 창출

- 금융산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투입액)은 여타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며 '00년 65.7%→ '06년 71.1%로 부가가치율 상승

####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한국		일본 (05)	영국 (05)	미국 (05)
	(00)	(06)			
제조업	24.4	22.1	34.2	35.5	34.9
서비스업	58.2	57.2	68.2	54.6	60.5
금융업	65.7	71.1	76.3	51.0	56.7
전 산업	40.5	38.5	55.0	49.6	54.4

자료 : OECD

#### (2)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필요성

- 금융중심지가 구축되면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생산성이 제고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자본, 금융기관, 인력, 정보의 집적 또는 밀집(clustering)에 따른 경쟁의 증대와 함께 생산요소의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촉진

### 3.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의 경과 및 평가

- ◆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 ①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고, ② 글로벌플레이어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 이와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금융중심지(금융허브)」는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

\* 「금융중심지(금융허브)」라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법·제도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

- 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중심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

- ① '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9.2월 시행), 외환자유화('09년 조기완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3),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등 추진

\* 1단계(~'07): 금융허브 기반 구축

2단계('08~'10): 특화금융허브 완성(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3단계('11~'15):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

- ②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정책 기조 정립하에 추진전략을 설정

## ②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도 있었으나 개선·보완의 여지도 있음

### ①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 부진

- \* KDI 설문조사('07.2) 결과, 금융허브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

### ②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상당부분은 제도적인 과제로서 실제 이행에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 자본시장 발전, 금융업의 성장,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한 시일을 요함.

### ③ 금융의 국제화·증권화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 ④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미흡

- \*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출지역이 제한적이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체계나 전문성이 부족

### 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규제는 크게 개선 되었으나 은행 및 보험사 관련 규제의 개선은 미흡

### ⑥ 금융중심지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 동력이 미약

⇒ 최근, 금융허브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08.3)

## 4.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①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 시가총액, 자산운용수탁고 등에 있어 허브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50% 미만 수준에 불과

\* 시가총액('07.12, 단위:억불): (한국) 11,226 (홍콩) 26,544 (싱가포르) 5,392  
자산운용수탁고('07, 단위:억불): (한국) 3,300 (홍콩) 8,184 (싱가포르, '06) 5,810

○ 금융연관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

\* 금융자산잔액/명목GNI('07.말): (한국) 8.88% (미국) 10.25% (일본) 11.92%

○ 우리나라 금융개방도\*는 2006년말 124%로 미국(198%), 영국(760%), 일본(451%)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금융개방도 = 자본유출입 잔액/명목GDP

② (영세한 규모)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와 비교시 아직 영세한 수준

\* 총자산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현황

- 4대 은행: 미국의 13% 내외

- 5대 증권사: 미국 5대 투자은행의 1.3%

○ 각 업권별로 수익구조도 전통적인 이자수익(은행, 81%), 위탁 매매수수료(증권, 68%) 등에 과다 의존하고 국내(97%)에 편중

\* 국내은행 해외자산 비중: ('07) 3.1%

- 반면, UBS(스) 90%, Deutsche Bank(독) 79%, Citi(미) 43%

③ (경쟁력) 금감위·금감원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07.10)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

\* 세계 10대 금융강국(OECD기준):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 우리의 경우 금융시장 규모<sup>\*</sup>(9위)나, 성숙도<sup>\*\*</sup>(11위)는 상위권이나

\* 은행산업 · 자본시장 · 보험산업 규모

\*\* GDP중 금융산업비중, 금융연관비율, GDP 대비 시가총액비중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sup>\*</sup>(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sup>\*\*</sup>(25위)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세계적인 금융강국의 조기진입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화폐가치 안정성, 금융자유 및 투명성, 책임성 지수, 금융전문인력

\*\* TNI(TransNationality Index), 금융개방도, 글로벌 100대금융회사 수

※  $TNI = [(해외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 / 3$

-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2008년 스위스 IMD('08.5.15일 발표)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중 국내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1위('07년)에서 40위로 하락

④ (금융허브 경쟁력) 마스터카드가 투자환경(규제·삶의 질), 입지 여건, 금융규모 등을 평가한 도시경쟁력 순위(08.6)에서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2년 연속 9위(50개 도시)로 평가

- 반면, '08. 3월 영국 「City of London」 이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sup>\*</sup>를 발표하였는바, 전세계 59개 조사대상 도시 중 서울을 51위로 평가

\* 전세계 금융기관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와 다른 기관이 발표한 지수 (노동생산성, MBA 랭킹, 삶의 질, 규제, 세율, 임대료 등)를 통해 산출

## II

##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방향 및 기본과제

### 1. 정책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목 표	<div><div>&lt;2010년&gt; 자산운용의 규모 확충 및 국제화, 글로벌플레이어의 출현 및 국내금융시장 진입 여건 개선</div><div>⇒</div><div>&lt;2015년&gt;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금융중심지 조성</div></div>			
전 략	혁신	인프라	개방	특화
	기존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 (금융시장의 폭 과 깊이를 심화)	인력양성, 금융 클러스터 조성등 금융 산업발전 기반 구축	금 융 회 사 의 대형화 및 해외 진출 촉진, 외국금융회사 국내 진입 유도	비교우위산업인 자산운용산업 육성에 특화
원 칙	시장·민간 주도 (규제 개혁)		네트워크 강화 (중앙·지방, 관계부처간, 해외)	기반시설 마련 (금융클러스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과제	<div>①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div> <div>○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감독 서비스 구축 ○ 금융산업 제도 개선 ○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div>		<div>② 금융인프라 선진화</div> <div>○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외환시장의 제도 개선 ○ 금융전문인력 양성</div>	
	<div>③ 자산운용시장 육성</div> <div>○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 자본시장의 국제화 ○ 채권시장 고도화 ○ 지역특화금융수요개발</div>		<div>④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div> <div>○ 금융회사등 집적 및 외국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 경영 환경 개선 ○ 영어 사용환경 조성</div>	

## 2. 금융중심지정책의 목표 설정

### [1]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및 전략

□ 우리나라의 환경은 금융중심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은 아님

- 우리나라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고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등 금융인력 및 자금 등의 집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또한 대륙법계국가로서 "규정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특화된 전략을 택한다면 금융중심지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전략적 선도 분야를 선정·발전시킴으로써 선도 금융 시장이 타 금융시장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금융 중심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국제금융센터 입주기업의 1/4이 보험 자산운용업의 발전으로 "보험업"도 발전

### [2] 자산 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

- 국내 금융산업 특성의 측면

- 연기금 및 외환보유고 등 풍부한 자산운용 수요, 상대적으로 실물경제 기반이 강한 점을 적극 활용

-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비해 자산운용업의 발전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

#### ○ 자산운용업의 특성 측면

- 자산운용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적어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부작용이 적음
-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에 대한 저항감도 작음

#### ○ 선도산업으로서 갖춰야 할 파급효과 측면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등 전체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
- 여타 금융업종에 비해 시설투자 부담이 적고 이동성(mobility)이 높아 외국기관 유치도 상대적으로 용이
-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업의 기반이 강화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 나라마다 전반적인 여건은 다르므로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 중 우리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나갈 필요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 및 자산운용 규모(퇴직연금 등)가 크고 인접국가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등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 룩셈부르크는 법인세·소득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반면 자유로운 외환거래 등으로 자산운용중심지를 조성
- 아일랜드는 자산운용업의 back office에 특화하는 전략 사용



### 3. 추진 과제

#### [1]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 금융업종사자는 금융중심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07.2월 KDI 설문조사)
- ◇ 금융중심지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도 중요

- 우리 경제력을 토대로 금융산업 규모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금융 혁신 지속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감독 체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 소유구조, 업무범위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금융 글로벌플레이어(Global Player) 출현의 기반 조성

#### [2] 금융인프라 선진화

- ◇ 금융전문인력 수준이 질적으로 미흡하며 금융의 겸업화·전문화 시대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이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
- ◇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

- 자본시장 인프라, 외환제도 개혁, 금융전문인력양성 등 금융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

### [3] 자산운용시장 육성

◇ 비교우위가 있는 자산운용업에 특화하여 금융산업전반을 견인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달성에 기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시장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4]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은 금융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지 않아 역량이 분산된 데 일부 기인

- 금융중심지달성을 위해서는 대외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금융발전정책보다는 새로운 측면의 접근이 필요

- 해외 금융회사 및 해외전문금융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
  - 금융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행정의 합리성, 회계·법률 인프라 등 사업 환경의 편의성에 중점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출입국 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영어사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

## 4. 향후 미래상

### ① 금융산업을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기여

- GDP 대비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 21% → 30%이상

\*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등

### ②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출현

- 활발한 인수·합병 통해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고 경영권 시장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도 제고

- 은행지주회사 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다양한 지주회사 출현으로 금융산업 시너지 극대화

###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 금융중심지 정착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여건 개선

- 글로벌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해외 유수 금융회사들을 적극 유치해 한국을 '금융산업의 전시장'으로 자리매김

### ④ 해외기업 상장 유치, 기업가치 증대 등을 통해 아시아 자본시장을 선도

\* 아시아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07말, 십억불)

: 동경(4,330), 상해(3,694), 홍콩(2,654), 한국(1,122), 대만(664)

- 자산운용시장을 육성하여 수탁고 『500조원 시대』 달성

### Ⅲ

## 주요 분야별 추진과제

### I.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1)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개혁 및 금융 감독 서비스 구축

##### 1.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개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300여건의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

\*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08. 3~5월)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08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09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 2.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의 인적쇄신 및 감독역량 강화

□ 외부 전문인력 충원 강화

- 외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감독·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감독대응능력 강화

- 금융환경 및 감독수요 변화에 맞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
- 2012년도까지 감독전문인력 대비 외부전문인력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 잘하는 금융감독기구」 위상 정립

#### □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된 승진·보수제도의 내실화

- 인사시스템 전반(채용, 이동, 승진, 평가)에 대한 진단을 완료하고 성과에 기초한 인사시스템으로 개편
- BSC(조직성과관리제) 평가결과를 종합근무평정(조직업무 실적 평가)에 적극 반영('08년도 100% 반영)

#### □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전면 조직개편

- 본부제 조직 도입 및 감독·검사부서의 통합으로 One-Stop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중복의 해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 외국 금융규제당국과의 협력 증진

- 외국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 및 주요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

### 3.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서비스 구축

#### □ 감독 패러다임 전환(원칙중심 ← 규정중심)

- 국가별 법체계 및 규제문화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조사('08년 중)

\*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칙 중심 규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대상을 금융권역별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09~'10년)
- 원칙중심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쌍방향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준수와 관련된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시
- \* 예시1) 주식투자한도 등 자산운용관련 개별적 규제  
→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되 리스크 총량은 엄격히 감독
- \* 예시2)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영업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창구지도를 하는 관행 타파

#### □ 취약부문 중심, 서면·전산 검사 활성화

- 현장검사방식의 종합검사를 매년 10%이상 축소\*하고 리스크평가 중심의 서면검사로 점차 전환('08~'09년)
- \* 종합검사 계획 : ('08년) 60건 → ('09년) 50건 → (10년) 40건
- 리스크 평가결과에 의한 검사 운영방안 마련('08. 1/4분기)
- 금융위규정 및 매뉴얼 개정 등('08~'09년)
- 위법부당행위는 금융회사의 자체규율시스템이 처리토록 하고 금감원은 자체규율시스템 등의 운영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검사패러다임 전환

#### □ 공정위와의 중복규제 조정

- 금융당국과 공정위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안을 이행

## **(2) 금융산업 제도 개선**

### **1. 은행 소유 규제의 합리적 개선**

- ☐ 미국, EU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산업자본과 관련된 은행소유규제(4%)가 지나치게 엄격

\* (미국)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25%이상 또는 5% 이상 소유+ 사실상지배” 금지(다만, FRB는 일반적으로 10% 까지는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산업자본이 10% 까지는 소유 가능)

(영국·독일 등) 개별적 적격성 심사(사전적 소유제한 없음)

- ☐ 금산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은행소유규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 ①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
- ②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③ 규제완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및 자금고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 강화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08.9월중으로 확정된 후 '08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2.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 증권·보험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非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 허용 검토

\*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8년중)할 예정

-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非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私金庫化 등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순환출자 등의 해소를 통해 현재의 복잡한 계열회사간 출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간 중요 내부거래(material transaction)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 임원 겸직 허용, 정보공유 범위 확대 등 지주회사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3. 예금보험제도 개편

-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등을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추진

\*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08년중)



## 1.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 2. 금융상품개발·판매의 자율성 확대

- 자본시장통합법의 예의 비추에 금융권역별 상품개발 관련 자율성 확대를 추진
  - 보험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지
  -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
    - 보험업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09년)

\* (현행) 사후제출상품(90%), 사전신고상품(10%) : 모두 3단계 절차 (선임계리사 → 보험개발원 → 금감원) 절차 이행

(개선) 자율상품(75~85%) : 회사내부 검증 절차만 거치고 자율 판매  
신고상품(15~25%) : 현행 체계 유지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

### 3.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절차 단순화

- 은행의 해외영업 진출절차 간소화(사전협의 →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협의)

\*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말)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자회사 주식소유한도 완화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08.6)

#### □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친화적 지원체계 구축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을 위한 외국 금융시장의 법규, 제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08.6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설립 예정)

### 4.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 □ 시장경쟁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다양한 금융업무 겸영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선진 금융투자회사(IB)가 추구하는 영업모델 채택을 유도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진입을 활성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08. 8월) 및 시행('09. 2월)

## 5.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IB) 육성

□ 산업은행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08년)

-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산은의 기업금융 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CIB : Corporate Investment Bank) 체제 구축

\* Deutsche Bank도 '95년 본격적인 CIB 체제를 도입, 공격적인 M&A를 통하여 5년 만에 세계 상위권 투자은행(Top tier IB House)으로 발전

- 산업은행과 자회사\*를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대우증권(39.1%), 산은캐피탈(99.9%), 산은자산운용(64.3%)

-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추진('08.9)

□ 산업은행 지분 49%를 다양한 방식(상장 전 투자유치 [Pre-IPO Investment], 상장, 블록세일 등)으로 매각(~'10년)

\* 2009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되도록 하고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까지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새정부 임기 내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하여 산업은행 민영화를 완료

□ 민영화 추진 관련 보완조치 방안 병행 검토

-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 등 경영의 자율성 확대

-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산업은행 발행 대외채권의 신용도 확보 방안 강구

\*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 추진

## 6. KIC(한국투자공사) 투자 활성화

### ☐ 위탁 규모의 확대

- 공적자금의 추가위탁을 통해 운용규모를 확대

### ☐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 투자대상 자산을 KIC법이 허용하는 PEF,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
- 한국은행의 경우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다양성 허용 추진

### ☐ 운용역량 제고 및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 직접투자 비중 확대, 투자자산 다양화 등에 대비하여 국내외 우수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 추진
- 운용부문 인력에 대해서는 보수체계를 운용성과에 연계한 인센티브중심의 보수체제로 변경

## II. 금융인프라 선진화

### (1)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1. 전자증권제도 도입

- ☐ 비용 절감과 증권거래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 전자증권법제정안 국회 제출 : '08년 12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및 전자증권제도시행 : '09~'11년

#### 2.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 상장요건을 다원화하여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선택 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

\* 맞춤형 상장제도 등 시행 : '09년

- ☐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

#### 3.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 ☐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공정적인 신용정보\*를 확충)

\*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사업장정보,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가스사용량 등

- ☐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신용정보 사용 동의방식 다양화, 신용정보 사용범위 확대 등

- ☐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및 감독규정 정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8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2] 외환시장의 제도 개선

### 1. 외환거래 자유화

#### □ 외환거래의 편의성 제고

- 신고가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고기관도 외국환 은행으로 하향조정하여 외환거래시 편의를 제고
- 해외투자자와 같이 변동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변경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후보고제 도입

#### □ 비은행 금융회사에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09.2)을 지원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국제업무역량 제고

#### □ 제2단계 자유화 계획 주요조치 조기이행

- 당초 '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제2단계 자유화 계획('06년 발표) 중 주요조치를 조기추진('08년중)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는 기추진
    -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완료('08.5월)
  - 외국환 업무취급 자유화·신고면제 대상 자본거래 범위 확대 등은 12월 규정개정시 반영

#### □ 수요자 중심의 규정으로 개편

- 일반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체계를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

## 2.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 ☐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제고

- 원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제적 신인도 제고
- 국제거래에서 외국인의 원화 보유 및 결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규제를 완화

\* 경상거래·장내 증권거래시 결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비거주자간 장외 증권매매 결제 등은 불가능

### ☐ 원화국제화 로드맵 작성

-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속도와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원화국제화 장기 로드맵을 마련

\* 원화국제화의 예상효과를 검토하고자 KIEP와 공동연구 진행중

## **[3] 금융전문인력 양성**

### 1. 금융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정비

#### ☐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 금융인력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공급자인 양성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09년중)

#### ☐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 개발

- 금융인력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를 개발하여 금융인력의 수급계획 수립과 교육 훈련 수요 파악 등에 활용('08년)

## ☐ 금융인력 교육과정 개선

-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를 기초로 금융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accreditation)하는 제도 도입을 지속 검토('09년~)

## 2. 금융인력양성기관 개선

###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운영 개선('08년~)

- 산학협동·맞춤형 단기과정 등 금융회사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유도

### ☐ 금융교육·연수기관의 교육수준 제고 및 역할 정립('08년~)

- 시장의 통합화·겸업화 등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의 도입 필요

### ☐ 국제수준의 현장금융인력 양성체제 확립('08년~)

- 현장 전문인력 양성의 민간경쟁의 활성화를 유도
- 경쟁력 있는 민간 금융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유도

## 3.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실시

### ☐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을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초중등학생에서부터 군인, 일반인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도

### ☐ 금융 교육 총괄 추진체제 구축

- 기존 '금융교육추진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금융위·금감원·협회·유관부처 담당자들로 '금융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금융교육을 총괄하여 추진



### Ⅲ. 자산운용시장 육성

#### [1]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 1. 자산운용업의 전문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

□ 자본금요건을 세분화·완화하여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전문자산운용회사의 진입 활성화

○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운용대상자산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화

○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자본요건 대폭 완화

□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 자산운용사 해외법인 설립시 절차간소화(사전협의→ 사후보고)

\* 자통법에 기 반영, 09.2월 시행 예정

##### 2.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시장 참여 활성화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확대

○ 은행이 자회사를 통한 금융점업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한도를 확대

\*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고, 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08년말까지)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방식을 변경

-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사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중)

☐ 보험사의 파생상품 투자 범위 확대

-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유형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율성 제고

\* 다만, 총액한도 규제(총자산 3%)를 유지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건전성 훼손을 방지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중)

### 3. 헤지펀드의 도입

☐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및 금융회사의 투자·위험관리 기법 선진화 등을 위해 헤지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

-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시장과 감독당국의 적응능력을 감안하여 '09년말까지 적격투자자 대상 헤지펀드 도입 추진

※ 이후 제도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확대 [소수(50인미만) 일반투자자(Non-qualified Investor)에게 허용] 하고, 최종적으로는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하여 일원화 추진

### 4. 펀드 판매 채널의 확대

☐ 펀드 판매채널 확대 및 판매중개회사(Financial Planner) 허용

-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

\*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08년 하반기)

- 보험대리점 등 일반법인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09)

## 5. 퇴직연금의 활성화

- 퇴직연금제도 유연화 및 선진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제도형태 다양화 ·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 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 제도유연화, 연금계리제도 도입 등 제도 선진화 추진

- 퇴직연금제도 적용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4인 이하 사업장 및 자영인에 대한 적용확대,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검토

- 퇴직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지속 검토

- 퇴직연금 선택 근로자 세제혜택 부여 등 세제 개선 사항 지속 검토

- 퇴직연금 예금보호 적용 검토

-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검토\*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시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할 계획

## 1. 외국기업 상장 유치 활성화

- ☐ 상장 외국기업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현재 45일)을 연장하여 외국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추진('08년 하반기)
  - 자통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45일에서 60일로 연장
- ☐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공시언어 차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09년~계속)
  - 국내 투자자의 이해부족 및 번역오류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 2. 아시아 신흥국가 거래소 설립 지원 및 IT시스템 수출

- ☐ 교육 및 자문, 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캄보디아('09), 라오스('10) 등에 대한 아시아 신흥국가의 거래소 설립을 지원하여 한국형 증시모델 보급 및 연계망 확보
- ☐ 말레이시아('08) 등 신흥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시스템 수출 추진

## 3. 해외 거래소와 선물시장 연계 추진

- ☐ 거래시간 확대, 해외 투자자의 시장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KOSPI200 선물의 연계 추진('09년 하반기)
- ☐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후 유럽의 선물 거래소(Eurex)와 파생상품 연계거래 추진('10년 이후)

#### 4.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 ☐ 다양한 투자·헤지 상품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돈육('08.7), 석유제품('09.하) 등 선물상품의 기초자산 확대
- ☐ 주식 이외에 귀금속·자원·곡물 등 실물자산 등을 추적하는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추진('09.하반기)

(3)

#### 채권시장 고도화

##### 1. 합성 CDO 발행 허용

- ☐ 고수익채권 보유자가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성 CDO\*발행 허용(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8.11)

\* 합성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신용파생계약(CDS)와 유동화증권(CDO)이 결합된 상품
- 자산의 이전 없이 자산의 신용위험만 분리, SPC에 이전하고 SPC는 담보자산과 CDS 프리미엄을 기초로 합성CDO를 발행

##### 2. 회사채 정보 집적 인프라 구축

- ☐ 고수익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권의 부도율, 회수율관련 정보 집적 인프라 구축('08.하반기~'09.상반기)
  - 정보 생성기관으로부터 부도율, 회수율 산출을 위한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3.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 ☐ 콜거래 비중 축소 및 RP시장 활성화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RP 시장을 보완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 ☐ CP(기업어음)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개선

- CP의 유통성을 제고하여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고 발행정보 관리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 ☐ CD(양도성정기예금) 금리 안정화

- CD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CD 금리 안정화 유도

### 4. 채권시장 국제화

#### ☐ 통합계좌(옵니버스계좌)의 적용대상 확대

- 현재 국채·통안채 투자시에만 가능한 옵니버스 계좌 설치를 향후 회사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 현재 ICSD\*만이 옵니버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개설주체를 여타 국제보관기관까지 확대

\* ICSD(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고객(외국인투자자)을 위하여 투자국에 자기명의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 자금 등을 관리하는데 이경우의 계좌를 통합계좌(Ominbus Account)라고 지칭

□ 채권장외매매시 원화 결제 허용

○ 외국인들이 원화표시 채권을 장외거래하는 경우 원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 거래 일방이 ICSD인 경우 비거주자유원계정(비거주자의 해외용 원화계정)을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 '07년에 신규로 도입된 옴니버스 계좌제도의 정착추이를 감안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시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 [4]

#### 지역 특화 금융 수요 개발

### 1.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 □ 투자자본 확충

-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IB 기능 강화를 유도하여 구조조정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 유도
- 사모투자펀드·기업구조조정회사 등이 구조조정 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2. 동북아 개발 금융 참여 강화

####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및 EDCF·ADB 협조융자·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통해 동북아 개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08.6~'10년)

- 수출입은행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별 금융지원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 JBIC 등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공동 진출방안 모색
- 산업은행은 금융주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동북아 개발금융에 국내외 상업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

### 3. 선박금융 지원 확대

#### □ 수출입은행의 선박관련 협조융자 지원 확대

- 직접대출과 대외채무보증의 혼합지원을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



- 우량 해운업체에 대한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 강화
- 금융자문 및 주선(financial arranger) 기능 수행을 위한 전사 및 금융기관과의 networking 강화

#### □ 선박 이행성보증 시장의 선도적 역할 지속

- 시장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 보증료율 적용
- 국내조선소의 해외현지법인이 수주한 선박에 대한 이행성 보증 적극 지원

## IV. 금융회사등의 집적 여건 조성

### [1] 금융회사등 집적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 1.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지정

-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08)

\* 지자체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작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선행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08.11)

- 지정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계획의 현실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 고려

#### 2.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조성 지원

- 금융 및 관련 서비스 업종 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에 입주하는 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 시행('09~)

- 금융클러스터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 개선을 추진

\* 금융클러스터 지정 평가시 세제·건축 등 측면의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의료·교육서비스 지원 등 지자체의 금융클러스터 지원 의지 및 방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지원

### 3. 금융중심지 지원 센터 설립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에 설치('08.9월)
  - KOTRA Invest Korea 등 유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
- 지원센터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추진실적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는 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One-stop 서비스 제공)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국내외 진출입과 관련한 상담, 인허가·승인 등 애로사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여 One-stop으로 처리
  - (금융환경개선) 외국금융사 등이 제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국제적 정합성 및 경쟁력 제고
  - (수요자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화채널 운영, 지원센터 전용 웹사이트 운영, 영문자료 서비스 확대 등
  - (국내사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외국감독당국과의 MOU 체결 확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적극 활용,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진출대상 국가정보 제공 등

#### 4. 금융전문인력의 출입국 편의성 제고

#####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 유치에 위한 제도 개선

- 고급 금융인력이 고용계약 없이 입국·구직할 수 있는 비자 신설
  - (예) 세계 500대 기업(「Forbes」誌 또는 「Fortune」誌 기준)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세계 300위권 대학(「The Times」 등 기준) 졸업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 ☐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비자 발급

- (예) 최근 세계 유수 금융기업에서 경영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취업활동 지원

##### ☐ 전문직 취업비자(E-7) 발급요건 완화

- '근무경력 2년 이상 학사'에서 '현장실습 또는 근무경력 1년 이상 학사'로 요건을 완화

\* 현재 금융분야 전문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상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 중

##### ☐ "특정활동(E-7)" 자격 금융분야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1~2년 → 3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개정)

- 취업비자 발급 시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고용계약 기간과 연계하여 연장

#####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체류 환경 개선

- 금융인력 배우자의 동반비자를 국내에서 즉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등 취업절차 개선

**1. 세율 하향 조정**

- ☐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하에서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법인세율을 유지

\* 법인세율(%) : 일본 30, 한국 25(10년 20), 대만 25(10년 17.5),  
중국 25, 싱가포르 18, 홍콩 16.5

- 낮은 세율 적용구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2. 금융 관련 세제 합리화**

- ☐ 금융관련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 및 해소 추진

(예)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08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09년부터 시행할 예정

**3.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 불필요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하여 모든 조사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 납세자불평통합관리시스템 도입('08)을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세정에 피드백

-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 □ 외국 기업의 조세행정 이해증진 노력

- 외국계기업 초청 간담회를 통한 세무안내 및 애로사항 수집 해결
- 세무당국이 영문홈페이지 운영 및 책자 등 영문정보제공 확대
-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및 확대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 4.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시장개방 추진

#### □ 외국법자문사제도 도입

-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법 자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이 국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미 FTA 합의내용 중 1단계 개방 반영)
  - 외국법자문사법률 제정안 입법 재추진('08년 하반기)

####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추가 개방

- \*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2·3단계 개방 내용
- 제2단계 개방(협정 발효 후 2년 이내)
  - 국내법률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한 공동 수임, 사무처리 및 수익분배를 허용
- 제3단계 개방(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조인트벤처 합작사업체 형성 허용
  - 일정한 요건 아래 위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5. 회계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회계시장 개방 추진

- 금융회사 등이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결합재무제표 폐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등 회계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 \* 관련 법령 정비('08년 하반기), 희망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허용('09년), 모든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 도입('10년 ~)
- 회계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나은 품질의 회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 한·미FTA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외국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방안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08년 하반기)

### (3)

### 금융 회사 종사자의 영어 사용 환경 조성

#### 1. 금융법령을 영문으로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금융법령 영문서비스 제공
  - 금융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예산 및 역할을 분담하여 영문화사업 실시
    - 영문 법령, 영문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Update 실시
      - \* 영문 금융감독규정(41개)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현재 게시 중이고, 영문 법령(94개)은 '08.7월부터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

☐ 「외국환 거래규정」 영문판을 작성하여 배포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시 반영(09년)

**2. 외국 금융기관·종사자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영어서비스 제공 강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영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영어로 자문·상담
- 고충처리 간담회 등을 영어로 개최(정례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지속 추진

**3. 영어 라디오 방송 확대**

※ 지자체 중심으로 방송국을 운영,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 유치 인프라 마련

☐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주파수 확보

-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이 집중된 수도권·부산권 및 광주권은 금년중 우선 추진
- 기존 방송국의 허가제원 조정, 전파월경 차단 등을 통해 광역단위별로 영어FM방송용 신규 주파수 확보

※ FM주파수 대역은 88~108MHz(20MHz대역, 100채널)인데, 이미 허가한 방송국은 319국으로 기존 방송국 조정 없이는 주파수 확보가 어려움

☐ 기타지역 주파수 확보

- 대구, 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정밀 시뮬레이션과 TFT 구성·운영을 통해 가용 주파수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5-B,C. 가계 부채(주택담보대출) 급증문제 및 이에 따른 금융부문 부실 가능성 문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  
- 참여정부와 현정부 비교

<참여정부 주요정책>

○ 신용카드관련 주요대책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03.3.17)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07.8.30)

○ 금융채무불이행자관련 주요대책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방안(05.3.23)
- 저축은행의 소비자 금융 활성화방안 (07.7.31)

○ 주택시장관련 주요대책

- 주택시장안정대책(03.5.23)
-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03.10.30)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05.6.30)
-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05.8.30)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06.3.30)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06.11.15)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07.1.11)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07.2.1)

## <현 정부 출범 후 주요정책>

### ○ 금융채무불이행자관련 주요대책

-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신용회복 지원(08.5.28)
- 지난 2년간 성실하게 신용회복을 진행해 온 27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기록 삭제(08.6.12)

### ○ 주택시장관련 주요대책

- 강북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실태 현장 점검(08.4.11)

###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08.7.1)

- 금융회사의 대출확대·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 건전성 차원의 관리 강화
  - 가계대출은 DII/LTV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건전성 관리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 금융소외자의 창업·취업·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 사업 추진

## <평가>

### □ 가계대출 전반의 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

- 가계대출 연체율 등 건전성과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6% 수준,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Coverage Ratio)은 260% 내외

\*\* 미국 모기지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6%(서브프라임의 경우 18%) 수준

- 가계대출중 상당부분(60% 수준)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이 낮은 등 담보를 충분히 확보\*

\* LTV비율 : 한국(49% 수준), 미국(80~90% 수준)

- 다만, 금리상승과 경기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저소득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할 우려

- 대출만기 장기화<sup>1)</sup>, 만기연장률(90% 이상) 동향 점검 등 일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sup>2)</sup>도 차질 없이 추진

1) 은행 주택담보대출중 10년이상 약정만기 비중 추이(%)  
: ('04말) 20.7 → ('05말) 34.4 → ('06말) 51.0 → ('07말) 58.0

2) '08.9.2 신용회복기금(2,000억원) 출범

**5-D. 중소기업 자금난 및 이에 따른 금융부문 부  
실가능성 문제(금리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  
- 참여정부와 현정부 비교

**<참여정부 주요정책>**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 벤처활성화 대책(04.12.24)
- 벤처활성화 대책(05.6.8)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05.6.23)
- 중소기업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06.6.1)
- 기업여신에 대한 업종별 충당금 최저적립률 차등화(07.12.31)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정책기조>**

- 활기찬 시장경제
  -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 창출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 중소 금융기관 기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
  - 대기업의 거래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감시·감독

## <현 정부 출범후 주요정책>

-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08.6.11)
  -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기술·창업기업에 적합한 심사방식 및 보증제도 개발
  -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집행체계 구축
    - On-line one-stop 보증지원제도 도입
    - 제출서류 제로화
  -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 민간금융회사와 공조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08.10.1)
  -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
  - 중기Work-out의 원활한 추진
  - 중기유동성 지원 확대(자금, 보증)
  - 회사채 발행지원등 대체유동성 공급
  - 중기-대기업간 상생 협력 강화

## <평 가>

- 최근 시장금리 상승,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및 매출부진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추세, 연체율도 증가추세

(단위 : %)

구분	'04말	'05말	'06말	'07말	'08.6말	'08.7말	'08.8말
연체율	2.1	1.5	1.1	1.0	1.1	1.4	1.5

- 건설업, 유가민감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

6. 2008년 6월 11일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중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 특례보증  
제도 관련

6-A.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 특례  
보증제도’의 개요 및 운용주체,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 (개요)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  
하고 보증하여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운용주체) 기술보증기금
-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지식경제부(또는 중소기업청)  
R&D관련 예산 활용 등

6-B. '08.9월 현재까지 추진경과

6-C. 상기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금융위가 추진한  
실적

- ☐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지경부,  
중기청, 기보 등) 협의 지속('08.6월 이후)

**6-D.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09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

☐ 지경부(또는 중기청) 예산에 미포함

**6-E. '08년 9월 도입 예정이던 동 제도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 (지연사유 및 문제점) 제도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미흡

☐ (향후 추진계획)

○ 기보 단독으로 동 사업을 준비중임(08.11월중 시행 예정)

## 7. 소위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한 금융위원회 대응일지 및 근거(증빙) 자료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매일 개최하는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9월 금융위기설'의 주요 원인인 외국인 보유 채권의 9월 집중 상황도 동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금감원을 통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5.22일)

\* 주요내용 :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채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

□ 7.15일 금융시장·산업 전반에 걸쳐 외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다양한 잠재위험요인별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금감원과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 점검회의 이후 위험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해 음

□ 또한, 거시정책협의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 정부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재정부·한은 등 유관기관과도 시장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

\* 3월부터 9월초까지 거시정책협의회(장관) 총 16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차관) 총 9회, 금융시장현안점검회의(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주재) 총 9회 개최

□ 아울러, 금융위는 다양한 채널(TV, 신문, 라디오, 금융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위기설 등 우리 금융 시장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정확한 정보를 시장 및 국민들에게 적시에 전달

\* 주요사례 : 부위원장 은행권(6.12) 및 금융투자업계(6.18)간담회,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7.17) 및 기자 간담회(8.25), 축사 및 강연(8.26, 8.28), 조선일보 인터뷰(9.3) 부위원장 TV 토론회(9.5),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9.8)





# 보 도 자 료

2008. 5. 22.[목]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거시감독국 금융산업·시장팀			
책 임 자	도보은 팀장(3786-8190)	담 당 자	권창우 수석조사역(3786-8191)	
배 포 일	2008. 5. 21.(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2매

## 제 목 : 외국인 채권 만기 현황

### 1. 외국인 채권만기도래 현황

-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순매수는 스왑베이스스가 크게 확대된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07.상 4.1조원→ 하. 29.4조원→ '08.1~4월 16.4조원)

\* 스왑베이스스(1년물, bp): '07.6말 △46→ 12말 △246→ '08.3말 △295→ 4말 △209

- '08.4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잔존만기는 '08년중(5~12월중) 14.5조원(국고채 7.4조원, 통안증권 6.9조원), '09년중 15.7조원(국고채 7.7조원, 통안증권 7.5조원), '10년중 8.4조원(국고채 3.9조원, 통안증권 4.1조원) 등임

- 금년중 보유채권의 만기\*는 월평균 1조원 내외인 가운데 국고채통합 발행\*\* 영향으로 금년 9월(국고채 7.4조원, 통안증권 1.2조원)중 만기가 집중

\* '08년중 월별 만기도래규모: 5월 0.4조원→ 6월 1.2조원→ 7월 0.8조원→ 8월 0.6조원→ 9월 8.6조원→ 10월 0.6조원→ 11월 1조원→ 12월 1.2조원

\*\* 중장기 국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채 발행일을 특정일로 고정시키는 제도(예: 3년물, 6.10 및 12.10일; 5년물 3.10 및 9.10일) ('00.5월 시행)

※ '08.4말 현재 외국인 채권보유잔액 비중은 5.52%로 전년말(4.45%)대비 1.07%p 상승하였으나, 미국 27.0%('07말), 호주 58.8%(“), 일본 7.0%(“) 및 영국 32.3%('07.9말)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 (상장주식: 29.9%)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외국인 채권투자관련 주요지표

단위: 조원

	'07년중	10월	11월	12월	'08년중	1월	2월	3월	4월	잔액 (4월)
순매수	33.5	2.1	8.8	6.4	16.4	3.4	2.3	4.8	5.9	-
채권보유잔액	37.0	21.8	30.6	37.0	47.1	40.4	41.0	41.4	47.1	47.1
보유비중(%)	4.45	2.63	3.70	4.45	5.52	4.85	4.86	4.91	5.52	5.52



### 2. 향후 전망

□ 시장전문가들은 금년 9월중 외국인 채권만기가 집중되면서 외국인 채권자금 중 일부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수설)

○ 최근의 스왑베이스스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금리재정 목적의 외국인 국채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주로 기인

- 한편, 재정거래는 통상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내외금리차 및 스왑베이스스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도청산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국인 채권만기자금 이탈 등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b>금융위원회</b>	<h1>보 도 자 료</h1>	 <b>금융감독원</b>
<b>2008. 07. 15(화) 15:30시부터 보도</b>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금융감독원 거시분석국		
책 임 자	박영춘 과장(2156-9710) 최훈 과장(2156-9730) 박동순 국장(3786-8170)	담 당 자	송현도 사무관(2156-9712) 고영호 사무관(2156-9733) 이문종 팀장(3786-8180) 도보은 팀장(3786-8190)
배 포 일	2008. 7.15 (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공 보 실 (3771-5788~91)

## 제목 :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 개최

### 1. 워크숍 추진배경 및 의의

- ☐ 7.15(화) 15:30~18:3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기관의 부서장급 이상 인사 6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세계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물가불안과 경기하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초 발표된 '08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의 잠재 위험에 대해 상호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이후 양 기관 부서장급 인사간의 상견례를 겸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상황 급변시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력적 공동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려는데 의의

## 2. 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인식을 공유하였음

###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 세계 경제는 고유가, 미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
  - 신흥국 경제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기조 전환 등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페니매, 프레디맥의 부실 가능성, 7~8월 美 어닝 시즌 과정에서 금융회사 실적 악화 전망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및 레버리지 축소 등 신용경색 우려가 재차 부각

### [국내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

-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 (07.6)2.5, (08.4)4.1, (5)4.9, (6)5.5
  - \* 경상수지(백만불) : (07.5)893.1, (08.3)△110.6, (4)△1581.3, (5)△377.5
- 금융시장에서도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에 파급되면서 주가·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 국내 경기 둔화국면 진입과 맞물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가계·기업대출 등의 잠재 리스크가 부각

### 3.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평가 및 전망

-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금융시장]**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금융시장의 흡수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 급락장에서도 고객예탁금 및 주식형 펀드 순유입이 지속되고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흐름에 쫓리지 않고 성숙한 투자 의식으로 대처
    - \* 국내 주식형펀드 순유입액(조원) :
      - ('08.1~5월중) 5.4조원 → ('08.6월중) 1.7조원 → ('08.7.11) 0.6조원
  -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에 따른 투자 기회 활용에 나서는 등 수요 기반도 견실한 상황
    - \*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연간주식투자규모(조원) :
      - (06말실적) 21.9 → (07말실적) 38.4 → (08말목표) 59.6 → (09말목표) 84.2
  - 해외 기관들이 우리의 대외채무 지급능력에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5~6위권의 안정적 상황 지속(08.6월말 2,581억불)
    - \* 최근 S&P, BIS, 골드만 삭스 등은 단기외채의 외은지점 집중, 외화 유동 자산 규모 및 건전성 감독 등을 고려시 국내 상환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
- **[금융산업]**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수익성·건전성의 둔화조짐이 있고 증기대출·PF대출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회사의 수익성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도 전반적으로 견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7개 권역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3%로 낮은 수준이며 BIS 비율 등 재무구조도 건실

\* (04말)2.7%→(05말)2.1%→(06말)1.5%→(07말)1.2%→(08.3말)1.3%

-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국제 위험자산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해외 신용 EVENT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

\* 08.3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잔액(평가액 기준)은 23억달러 (금융회사 총자산의 0.01%)

-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능력도 크게 제고

□ **[종합평가]**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등 대외 요인의 상황 변동에 따라 국내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 4.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감독 방향

□ 금년 합동 워크숍에서는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가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와 위험요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 금년 하반기 중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 상호간의 유기적인 공동노력을 통해 하반기 금융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감독의 기본방향】**

- ① 대내외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으나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능력(absorbtion capacity)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 과도한 쏠림현상과 심리적 패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한 시장의 자율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
  - 다만, 시장 변동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독
- ②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제고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한편,
  - 금융회사와의 정례적 협의체 구성 등 시장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위험 감지 능력을 제고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당국의 인식과 정책방향을 정확히 전달
- ③ 상황 악화시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호한 시장안정조치 시행

## **【대응방향】**

- 국내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 실물활동과 괴리된 민간신용 증가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특히, 높은 예대율 수준과 은행채 및 CD 발행 등 시장성 수신확대를 통한 여신운용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 예대율 추이(%): ('05말)101.0→('06말)109.0→('07.6월말)118.3→('07말) 123.7 →('08.1/4) 126.0

-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최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물가상승,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협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경기침체 등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서민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및 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음

□ 미분양 증가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PF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증대될 우려와 관련,



- 건설업체에 대한 자율 금융지원협약,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협약 등 민간 자율 대응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 시공사 보증위주의 여신심사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PF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음
-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건실한 충격흡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장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 최근 대차거래 및 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과 관련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
- \*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시 증권회사의 확인의무 준수여부 및 대차거래 중개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업무적정성(담보관리 등)에 대해 일제점검 착수
- 전 세계적으로 외화 차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달방식 다양화 등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감독당국의 엄격한 유동성 관리\*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 S&P는 최근 전세계적인 외화 유동성 문제에도 국내 은행들에 대한 파급력은 당국의 엄격한 유동성 관리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08.7)
- 다만, 국제금융불안 장기화에 따라 일부 취약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외화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및 한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 적절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 각 시장 및 취약부문별 상황전개 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을 추가 보강하는 한편,

\* 가격변수 및 위험지표 변화, 취약부문 핵심 건전성 지표 변화 등을 종합하여 측정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도 금일 논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8. 08년 7월 15일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합동 워크숍’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회  
의결과, 향후 조치내역

○ 관련자료 붙임 참조

 <b>금융위원회</b>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10px 0 0 0;">2008. 07. 15(화) 15:30시부터 보도</p>	 <b>금융감독원</b>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금융감독원 거시분석국			
책 임 자	박영춘 과장(2156-9710) 최훈 과장(2156-9730) 박동순 국장(3786-8170)	담 당 자	송현도 사무관(2156-9712) 고영호 사무관(2156-9733) 이문종 팀장(3786-8180) 도보은 팀장(3786-8190)	
배 포 일	2008. 7.15 (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 (3771-5788~91)	총 8 매

## 제목 :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 개최

### 1. 워크숍 추진배경 및 의의

- 7.15(화) 15:30~18:3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기관의 부서장급 이상 인사 6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세계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물가불안과 경기하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초 발표된 '08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의 잠재 위험에 대해 상호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이후 양 기관 부서장급 인사간의 상견례를 겸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상황 급변시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력적 공동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려는데 의의

## 2. 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인식을 공유하였음

###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 세계 경제는 고유가, 미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
  - 신흥국 경제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기조 전환 등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페니매, 프레디맥의 부실 가능성, 7~8월 美 어닝 시즌 과정에서 금융회사 실적 악화 전망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및 레버리지 축소 등 신용경색 우려가 재차 부각

### [국내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

-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 (07.6)2.5, (08.4)4.1, (5)4.9, (6)5.5
  - \* 경상수지(백만불) : (07.5)893.1, (08.3)△110.6, (4)△1581.3, (5)△377.5
- 금융시장에서도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에 파급되면서 주가·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 국내 경기 둔화국면 진입과 맞물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가계·기업대출 등의 잠재 리스크가 부각

### 3.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평가 및 전망

□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금융시장]**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금융시장의 흡수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 급락장에서도 고객예탁금 및 주식형 펀드 순유입이 지속되고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흐름에 쫓리지 않고 성숙한 투자 의식으로 대처

\* 국내 주식형펀드 순유입액(조원) :

· ('08.1~5월중) 5.4조원 → ('08.6월중) 1.7조원 → ('08.7.11) 0.6조원

○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에 따른 투자 기회 활용에 나서는 등 수요 기반도 견실한 상황

\*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연간주식투자규모(조원) :

· (06말실적) 21.9 → (07말실적) 38.4 → (08말목표) 59.6 → (09말목표) 84.2

○ 해외 기관들이 우리의 대외채무 지급능력에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5~6위권의 안정적 상황 지속(08.6월말 2,581억불)

\* 최근 S&P, BIS, 골드만 삭스 등은 단기외채의 외은지점 집중, 외화 유동 자산 규모 및 건전성 감독 등을 고려시 국내 상환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

□ **[금융산업]**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수익성·건전성의 둔화조짐이 있고 증기대출·PF대출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회사의 수익성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도 전반적으로 견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7개 권역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3%로 낮은 수준이며 BIS 비율 등 재무구조도 건실

\* (04말)2.7%→(05말)2.1%→(06말)1.5%→(07말)1.2%→(08.3말)1.3%

-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국제 위험자산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해외 신용 EVENT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

\* 08.3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투자잔액\*(평가액 기준)은 23억달러 (금융회사 총자산의 0.01%)

-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능력도 크게 제고

□ **[종합평가]**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등 대외 요인의 상황 변동에 따라 국내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 4.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감독 방향

□ 금년 합동 워크숍에서는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가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와 위험요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 금년 하반기 중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 상호간의 유기적인 공동노력을 통해 하반기 금융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감독의 기본방향】

- ① 대내외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으나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능력(absorbtion capacity)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 과도한 쏠림현상과 심리적 패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한 시장의 자율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
  - 다만, 시장 변동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독
- ②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제고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한편,
  - 금융회사와의 정례적 협의체 구성 등 시장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위험 감지 능력을 제고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당국의 인식과 정책방향을 정확히 전달
- ③ 상황 악화시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호한 시장안정조치 시행

## 【대응방향】

- 국내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 실물활동과 괴리된 민간신용 증가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특히, 높은 예대율 수준과 은행채 및 CD 발행 등 시장성 수신확대를 통한 여신운용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 예대율 추이(%): ('05말)101.0→('06말)109.0→('07.6월말)118.3→('07말) 123.7 →('08.1/4) 126.0

-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최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물가상승,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경기침체 등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서민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및 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음
- 미분양 증가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PF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증대될 우려와 관련,

- 건설업체에 대한 자율 금융지원협약,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협약 등 민간 자율 대응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 시공사 보증위주의 여신심사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PF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음

□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건실한 충격흡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장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 최근 대차거래 및 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과 관련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

\*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시 증권회사의 확인의무 준수여부 및 대차거래 중개 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업무적정성(담보관리 등)에 대해 일제점검 착수

□ 전 세계적으로 외화 차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달방식 다양화 등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감독당국의 엄격한 유동성 관리\*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S&P는 최근 전세계적인 외화 유동성 문제에도 국내 은행들에 대한 파급력은 당국의 엄격한 유동성 관리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08.7)

- 다만, 국제금융불안 장기화에 따라 일부 취약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외화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및 한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 적절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 각 시장 및 취약부문별 상황전개 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을 추가 보강하는 한편,

\* 가격변수 및 위험지표 변화, 취약부문 핵심 건전성 지표 변화 등을 종합하여 측정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도 금일 논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 9.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9-A. 산업은행의 글로벌 IB화 전략에 대한 찬반논  
리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해결 방안

9-B. 산업은행의 글로벌 IB화의 성공가능성에 대  
한 평가와 그 근거, 성공전략 및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또는 필요사항

### < 21-A. 관련 >

#### 가. 관련 찬반입장 및 논리

##### □ 찬성 입장 및 논리

○ 지속적인 경제성장, 경제 글로벌화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IB산업의 중요도와 함께 IB사업기회가 증대

\* 특히, 동북아지역은 빠른 발전과 함께 IB 사업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며 사업기회 선점이 중요

○ 이미 日, 中 등은 동북아 금융중심지 선점을 위하여 투자  
은행 육성,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을 야심 차게 추진 중

- 한국도 IB분야에 既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산은 등을  
활용,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 주식모집·매출, 기업공개(IPO), M&A Deal 등 국내 고부  
가가치 기업금융업무의 외국계 IB 편중현상 심각

\* '08년 국내 주식관련 투자은행(IB) 시장의 외국계 IB 점유율은 76.5%

## □ 반대 입장 및 논리

- 국책은행으로 타성적 영업을 해온 산은이 경쟁이 치열하고 정보가 필수적인 투자은행 업무 영업을 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일천
- 최근 미국의 투자은행 실패사례 등을 통해 볼 때, 투자은행화 육성전략은 위험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나. 금융위의 입장 및 해결방안

- (산은의 역량관련) 산은은 DCM, PF, M&A 등 영역에서 국내은행 중 최상위 Positioning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우증권의 판매망 및 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양자를 결합한 지주회사체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성
- (미 투자은행 실패사례 관련)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과 함께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규제, 감독강화 등 병행 추진

## < 21-B. 관련 >

### 가. 성공가능성 평가와 근거

#### □ 국내은행 중 발전 가능성면에서 산은의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 기업금융전문은행(CB: Corporate Bank)으로서의 역량 보유
  - 산은은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장기설비자금 공급을 주도
  - \* '07년말 시설자금 대출 규모(잔액기준)는 25.9조원으로 국내시장 전체 시설자금의 23.8% 점유

○ DCM\*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 IB 노하우 보유

\* DCM(Debt Capital Market): PF, 신디케이트론 주선, M&A, 파생금융 등

- '95년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하여 PF방식에 의한 금융주선 등 국내 PF시장 선도

\* PF(Project Financing)시장 점유율은 '06년 32.5%로 선도적 지위 유지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M&A업무를 적극 추진하면서 대형 외국투자은행에 필적할만한 경쟁력 보유

\* '06년 국내 M&A시장에서 147억달러 주선으로 국내시장 1위 차지

- 기업금융 관련 Risk 헤지 등을 위한 파생상품업무 강화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 유지

\* '06년도 3년 연속 Asia Risk誌로부터 국내 최우수 파생금융 기관으로 선정

□ 산은이 보유한 역량과 국내 선도 증권사인 대우증권과의 결합시 경쟁력은 배가

- 산은의 강점인 기업고객 네트워크, DCM(Debt Capital Market)과 대우증권의 강점인 ECM(Equity Capital Market)을 결합한 CIB(Corporate & Investment Bank) 체제를 구축시 국내 수위의 경쟁력 확보 가능

< 부문별 국내 IB시장 점유율 순위(07년)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제여신 주선	산은	우리은행	Calyon	국민은행	BNP Paribas
PF주선(아태지역)	ICICI Bank	산은	국민은행	Bank of China	China Const- -ruction Bank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	SC제일은행	산은	한국씨티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M&A자문	Citi group	UBS	HSBC	Goldman Sachs	Credit Suisse
국내 회사채 주선	한국 투자증권	굿모닝 신한증권	우리 투자증권	대우증권	한누리 투자증권
국내 IPO	한국 투자증권	Merrill Lynch	굿모닝 신한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 나. 향후 전략 및 필요사항 등

###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 현재 글로벌기준으로 볼 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은행들의 고부가가치 영업부문(소위 “IB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 기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미루거나 후퇴하기 보다는 선진 IB들의 실패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9.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 9-C. KDF 출범에 대한 찬반 논리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해결 방안

- 정책금융제도로서의 필요성 vs 여타 다른 국책 금융기관의 활용
-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업무 중복
- 사실상 정책금융이 불필요한 우량·중견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집중 우려

#### < 정책금융 제도로서의 KDF 필요성 >

- ☐ KDF는 민영화될 산은이 담당해 온 정책금융 역할을 원활히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 해소
  - 산은이 수행해 온 기능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KDF가 그간 산은이 축적해 온 정책금융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계승·발전하여 수행
- ☐ 이러한 정책금융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민간과의 경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
  - 산은민영화 논의는 정책금융 수요가 축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마찰을 유발하는 업무수행 방식(자체적으로 마케팅, 심사, 승인 등을 수행하는 직접지원방식)의 문제에서 출발
  - 따라서, 독일·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간접지원 방식 도입을 통해 시장마찰 없는 선진형 정책금융 체제를 구축



## < 여타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활용 >

### 1) 수출입은행의 경우

□ 수은은 수출거래 및 해외투자 등 대외금융거래 중심의, 산은과 차별화된 역할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현재와 같이 독자적인 공적수출금융기관(ECA)으로서 강화·발전시킬 필요

○ 세계 각국의 정책금융기관들이 민간과의 경합금지, 민영화 등의 대세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CA를 통한 수출지원은 정책적 특수성을 인정받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OECD, WTO 등 대외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업무상 제약은 존재

\* OECD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업무제한  
-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재화·용역 수출에 대한 모든 공적지원에 대해 85%이내의 지원한도 설정, 5~10년 이내의 최장상환기간 규정, 금리 결정의 제한 및 원리금 상환조건의 규제 등 탄력적 업무수행을 제한

□ 국내외 비판과 마찰, 국제적 보조금 시비 등 불공정성 야기로 ECA인 수은의 다른 정책금융이나 상업금융 수행은 불가

○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Exim Bank가 개발금융 및 시장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없음

○ 따라서, 우리 경제구조상 수은은 ECA로서의 역할을 전문화 하고 타국 ECA와의 경쟁에 충실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 2) 신·기보의 경우

□ KDF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형태의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 보증 전문기관인 신·기보와는 차별화

○ KDF의 기능은 중소기업 지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은이 수행하던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승계

### \* 지원대상 예

- SOC, 지역개발 등 민간금융회사가 참여를 기피하거나 대규모 자금 수요가 예상되는 부문지원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공급, 벤처투자 등 지원
- 외자조달창구로서의 기능
- 위기시 시장 안전판 기능 등

○ 상기 지원대상에 대해 대출(간접 및 공동), 투자(간접 및 공동), 신용위험 분담(보증) 및 유동화 지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지원

## <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업무 중복 >

□ KDF와 기존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복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우선, KDF는 일부 신용보강 등으로 지원시 금융회사가 신용심사를 통하여 스스로 선별·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 예 : B~BBB등급, 일정업력(5년)보유 중소기업

- 신·기보는 금융회사의 선별·지원이 어려운 보다 정책적인 영역\*에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창업기업 등 신용등급·업력이 취약하거나 정책적 판단 필요기업

- 또한, 지원방식도 신·기보의 경우는 보증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직접 심사하여 보증여부를 결정하고 보증료를 수취하는 구조이나

- KDF는 On-lending 자금이 중소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대 및 투자를 위주로 하며, 제한적으로 On-lending 자금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방편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게 되나

- 동 보증여부를 금융회사가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증료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보증업무와는 상이한 구조

#### < 우량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집중 우려 >

- KDF의 간접지원방식은 효과적이나 우리 금융여건상 기존 우량기업 위주로 중복 대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다만, 이는 우리에게 앞서 간접지원방식을 도입한 독일 등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했던 부분으로

- 앞으로 이러한 해외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중개금융회사의 中企 지원실적 평가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

- ※ ① 성장잠재력 보유기업으로 지원대상 가이드라인을 제시
- ② 중개금융회사의 마진폭을 신용등급별로 일부 차등화 허용
- ③ KDF의 전대 자금(대출 portfolio)에 신용보강(약 50%) 지원
- ④ 산은 등 국책은행에 전대자금 배정을 높여 협조
- ⑤ 중개금융회사의 中企지원실적평가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⑤ 신용정보·기술평가 인프라 등의 개선작업을 병행

□ 또한, 이러한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KDF 설립이전에도 10월 중에 산은·기은·중진공간 2,000억원 규모의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 KDF 간접지원방식이 국내 금융현실에 성공적으로 접목 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

## 10.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관련

10-A. '08.9월 현재까지 신보와 기보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논의진행과정 및 통합의 이유와 목적 또는 필요성, 현재의 정부의 정책방향

- ☐ 신·기보 통합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최종결정할 예정

10-B. 통합에 대한 찬반 논리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0-C. 통합에 따른 중소기업 보증축소 우려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및 해결방안

### ☐ 찬반 논리

- (찬성) 중복보증의 근본적 해소,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
- (반대) 기술금융 위축가능성, 중소기업 지원 약화 우려 등

- ☐ 통합추진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통합 때문에 보증규모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고

- 보다 효율적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의 질적 개선도 도모

**10-D. 신기보 업무중복이 거의 없고,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대  
한 금융위 입장**

- ☐ 그간 중복보증 해소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특화방안(신보: 일반 보증, 기보 : 벤처·이노비즈 기업보증, '05.6) 등으로 인해 중복보증은 감소 추세임

\* 신보 중복보증 비중 (%) : ('05) 26.0 → ('06) 11.9 → ('07) 8.0 → ('08.5) 7.3  
기보 중복보증 비중 (%) : ('05) 52.9 → ('06) 26.5 → ('07) 17.7 → ('08.5) 15.2

- ☐ 다만, 신·기보를 유지하는 현 체제하에서 중복보증 문제는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황

○ 현재의 기업특성에 의한 업무영역특화는 기업특성의 가변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복보증 발생이 가능한 구조\*임

- \*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정전에는 경쟁적 보증취급 가능  
\*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만료(벤처 1년, 이노비즈 3년) 후에는 신보 보증취급 가능 등

- ☐ 한편, 신·기보는 법상 설치목적·주요업무가 유사하고, 본점·지점 등 업무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통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상 설치목적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하는 주요업무 유사

○ 본점조직의 상당부분이 유사하며 54개의 영업점이 중복 (영업점 수 : 신보 99개, 기보 54개)

**10-E. 통합무산시 신·기보 각각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 조정 등 선진화 방안**

- ☐ 구체적인 선진화방안이 확정된 이후 결정될 필요

**10-F.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금융위의 정책방안 및 연구보고서**

- ☐ 추후,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 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11.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관련

### 11-A. 도입배경 및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요, 설립요건, 9월 현재까지 추진경과

#### <도입배경>

- 현행 은행법 등에서 은행의 업무범위·리스크 정도 등과 관계없이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특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을 저해하는 측면
- ⇒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을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방안 검토 필요

#### <개요>

-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CD,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일컫음
  - 인터넷을 수단으로 행해지는 은행업을 일컫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 구분됨



### <설립요건>

- 예대업무, 지급결제 업무 등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현행 인가요건을 유사하게 적용할 예정**
- 다만, 소규모 특화은행의 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외국에 비해 **높은 최저자본금요건(시중은행 1,000억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 고려중

### <9월까지의 추진경과>

- 그동안 한은, 금감원, 업계, 연구원 등과의 **TF운영**, 금융연구원 **정책토론회(7.18)**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 은행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10월중 입법예고 예정)

## 11.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관련

### 11-B. 공인인증서 문제 및 고객개인정보 보호 등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책

#### <공인인증서 문제>

□ 일부 업계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 요구

○ 그러나 이는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  
한하여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실명법 취지에  
위배되어 허용곤란

○ 인증번호 등만 알면 인터넷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며 공인인증서 불법거래 등의 문제발생도 우려됨

□ 다만, 계좌개설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계좌개설'하는 방식, '타  
금융회사와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등의 허용여부를 검토중

## <고객개인정보 보호 등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 의무화, 비상시 재해복구계획 수립, 비밀번호 장치강화(예 : OTP 등 사용의무화) 등 고객(정보)보호와 거래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12.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관련

12-A. 도입 배경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의 개요,  
설립요건, 9월 현재까지 추진경과

12-B. 금융상품전문판매업에서 취급하게 되는 금  
융상품 내역과 9월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  
채널(판매방식)

- 금융권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융상품을 명기할 것

12-C.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의 ‘전문성 문제, 불완  
전판매, 부당 판매, 계약자 계약 승계·안  
정성 문제’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책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은 금융위원회가 09년말까지 도입(관련  
법률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 학계·업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설립요건, 취급 금융상품의 범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별첨>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계획

## <참고>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계획

### [가] 의 의

-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은 금융상품의 생산자인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를 매개하여 금융상품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업권·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

### [나] 현황 및 문제점

- ☐ 생산자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제도를 규율(각 금융업권 법령)하고 있어 1개 회사 또는 1개 금융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 가능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여러 금융권역·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 금융권역별·금융상품별로 금융소비자(또는 투자자) 보호 수준도 서로 상이

금융상품	규율내용
예·적금	수신기관(은행, 저축은행, 신탁 등)의 지점을 통한 판매를 전제하고 있어, 별도의 판매채널을 규율하고 있지 않음
대출	대출모집인 제도(은행, 여전사 등)
보험, 펀드, 신용카드	지점이 적거나 지점영업이 곤란하여 별도의 판매채널을 규율 · 보험 :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 펀드 : 판매회사(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카드 등
유가증권	증권회사(투자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지위

- ☐ 금융상품 판매업의 진입 통로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아 시장의 경쟁이 미흡
  - 이에 따라, 판매자의 생산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발생하여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다] 개선 방안

- 금융상품의 판매에 따른 생산자-판매자-소비자간의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추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

## [라] 도입의 필요성

- ① (금융소비자 측면) 금융종합자산 설계사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one-stop 종합 컨설팅 제공
  - 불완전판매 근절 등 금융상품 판매를 일관되게 규율하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
- ② (금융회사 측면) 금융소비자의 needs가 상품생산과정에 적극 반영되고, 상품판매 경쟁이 촉진되어 보다 차별화된 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
- ③ (금융산업 측면) 금융판매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확대

\* 영국의 경우, 개인자영업자 형태의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가 5~7만명 활동 중

## [마] 추진 계획

- 09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 TF 운영, 외국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09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제출

### 13. 미국 투자은행 부실 문제 관련

#### 13-B. 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3개 투자은행의 부실 및 파산 원인 분석에 준하여 산업은행의 IB화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

-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IB는 지주회사 체제하의 은행계 CIB 모델로서 안정적인 은행영업 기반 위에 증권회사의 IB업무를 연계·확대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증권계 IB”모델과는 달리 위험이 분산되어 있는 구조
  - 따라서 최근 미국 증권계 IB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CIB화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추진
- 다만, 구체적인 CIB 전략 수립시 미국 증권계 IB의 위기를 교훈삼아 다각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유도
  - 고위험을 수반한 IB의 특성상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통합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 지주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 강화
  - RAPM 및 중장기 성과에 연동한 보상 시스템 구축
    - \* 성과평가지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RAPM (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시스템 구축
  - 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전성규제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위기방지 및 관리능력 강화를 적극 모색

14. '08년 6월 11일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에  
담긴 ' 합성 CDO 및 유동화회사 보증도입 '의 개  
요 및 추진방식, 주체, 자원, 대상 기업 조건,  
2000년대 초반 신보와 기보의 P-CBO 및  
P-CLO와의 차이점 등 상세내용

□ 유동화회사 보증 신규 추진

○ (개요)

- 과거 (구)재경부 업무지침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유동화증권  
보증을 취급하였으나,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한 기업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보법 개정을 통한 상시 제도화 추진

○ (추진방식 등 기타내용)

- 법 개정이후 세부내용 확정

※ 다만, 현재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08년도  
중 업무지침에 의하여 신보를 통하여 신규 CBO 발행 추진

- (자원) 신보가 보유중인 기존 P-CBO보증의 잔여 재원을 활용
- (과거 신·기보 P-CBO의 차이점)
  - SPC가 발행하는 선순위 증권에 신보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P-CBO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
  - 다만, 과거 P-CBO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일반보증 대비 현저히 낮은 부실률 유지 가능



## □ 합성 CDO 보증

### ○ (개요)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대출채권에 내재된 신용 위험을 신용위험스왑(CDS)계약을 통해 중개기관에 이전하고, SPC는 중개기관과의 CDS계약을 통해 이전받은 신용위험을 기초로 다양한 등급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
- 바젤Ⅱ 시행 등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금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 (추진방식 등 기타내용)

- 법 개정이후 세부내용 확정

<예시>

※ 신·기보 등 보증기관은 합성CDO가 시장에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신용보강기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대상기업 조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로서 신용위험 예측이 가능한 채권

- (과거 신기보 P-CBO/CLO와의 차이점)

- P-CBO 등의 경우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산보유자가 SPC에 대상자산을 매각한 후 유동화하는 구조인 반면,
- 합성CDO는 신용위험만을 분리(CDS 계약)하여 유동화

-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후순위채 비율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용시까지 보수적으로 관리

## 15.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신용 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

□ 선진화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 추후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통합여부 등이 확정될 예정

## 16. 금융위원회에서 준비중인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 (초안)

- 국책은행, KDF,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작성할 것

□ 현재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며,

- 10월중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7. 중소기업 정책금융(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17-A.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  
개요, 개편방향**

**17-B.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중복 문제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 ☐ 추후,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  
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17-C. 2005년~2008.8월말 연도별 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중산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각각의 지원 규모, 지원업체수, 중복지원 현황

### □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현황

#### <산업은행>

(단위: 개,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	‘08.8월
업체수	1,584	1,779	1,949	1,721
공급액	46,616	60,842	73,283	65,108

#### <기업은행>

(단위: 개,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8월
업체수	143,276	144,610	146,855	149,469
공급액	186,560	230,492	280,013	175,347

#### <신용보증기금>

(단위: 개,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	‘08.8월
업체수	223,430	203,096	190,130	185,045
보증잔액	291,528	285,243	285,422	280,009
중복보증규모	76,406	34,552	23,200	19,397

#### <기술신용보증기금>

(단위: 개,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	‘08.8월
업체수	49,927	38,515	37,455	38,287
보증잔액	113,041	110,278	111,874	117,742
중복보증규모	59,834	29,242	19,822	16,660

18-O.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경쟁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장점 및 약점

□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장점 및 약점은 다음과 같음

< 장점 >

- 홍콩, 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실무경제 기반(세계13위의 경제규모)을 보유
- 연기금, 외환보유액 등 자산운용 수요 풍부
- 금융혁신의 중요요소인 IT분야 경쟁력 보유
- 97년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 결과, 금융부문 건전성 대폭 향상 및 개방 진전
- 높은 교육수준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반 보유
- 중국(동북아)과의 인접성 등 지리적 측면에서 홍콩, 싱가포르보다 유리

< 약점 >

- 우수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화된 국내금융기관 부족
- 금융 규제·감독시스템 선진화 미흡
- 금융전문인력, 교육, 언어(영어) 등 금융관련 인프라 취약
- 절대우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분야 거의 없음

## ※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 ①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 시가총액, 자산운용수탁고 등에 있어 허브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50% 미만 수준에 불과

\* 시가총액('07.12, 단위:억불): (한국) 11,226 (홍콩) 26,544 (싱가포르) 5,392  
자산운용수탁고('07, 단위:억불): (한국) 3,300 (홍콩) 8,184 (싱가포르, '06) 5,810

#### ○ 금융연관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

\* 금융자산잔액/명목GNI('07.말): (한국) 8.88% (미국) 10.25% (일본) 11.92%

#### ○ 우리나라 금융개방도\*는 2006년말 124%로 미국(198%), 영국(760%), 일본(451%)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금융개방도 = 자본유출입 잔액/명목GDP

### ② (영세한 규모)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와 비교시 아직 영세한 수준

\* 총자산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현황

- 4대 은행: 미국의 13% 내외
- 5대 증권사: 미국 5대 투자은행의 1.3%

#### ○ 각 업권별로 수익구조도 전통적인 이자수익(은행, 81%), 위탁 매매수수료(증권, 68%) 등에 과다 의존하고 국내(97%)에 편중

\* 국내은행 해외자산 비중 : ('07) 3.1%

- 반면, UBS(스) 90%, Deutsche Bank(독) 79%, Citi(미) 43%

### ③ (경쟁력) 금감위·금감원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07.10)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

\* 세계 10대 금융강국(OECD기준):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 우리의 경우 금융시장 규모\*(9위)나, 성숙도\*\*(11위)는 상위권이나

\* 은행산업 · 자본시장 · 보험산업 규모

\*\* GDP중 금융산업비중, 금융연관비율, GDP 대비 시가총액비중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25위)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세계적인 금융강국의 조기진압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화폐가치 안정성, 금융자유 및 투명성, 책임성 지수, 금융전문인력

\*\* TNI(TransNationality Index), 금융개방도, 글로벌 100대금융회사 수

※  $TNI = [(해외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3$

-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2008년 스위스 IMD('08.5.15일 발표)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중 국내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1위('07년)에서 40위로 하락

④ (금융허브 경쟁력) 마스터카드가 투자환경(규제·삶의 질), 입지 여건, 금융규모 등을 평가한 도시경쟁력 순위(08.6)에서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2년 연속 9위(50개 도시)로 평가

- 반면, '08. 3월 영국 「City of London」 이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를 발표하였는바, 전세계 59개 조사대상 도시 중 서울을 51위로 평가

\* 전세계 금융기관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와 다른 기관이 발표한 지수 (노동생산성, MBA 랭킹, 삶의 질, 규제, 세율, 임대료 등)를 통해 산출



18-P.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단계별 추진 계획, 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과 실적,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방안

< 참여정부의 금융허브정책 >

□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중심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

① '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9.2월 시행), 외환자유화('09년 조기완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3),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등 추진

\* 1단계(~'07): 금융허브 기반 구축

2단계('08~'10): 특화금융허브 완성(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3단계('11~'15):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

②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정책 기조 정립하에  
추진전략을 설정

## < 그간의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평가 >

### □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도 있었으나 개선·보완의 여지도 있음

#### ①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 부진

- \* KDI 설문조사('07.2) 결과, 금융허브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

#### ②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상당부분은 제도적인 과제로서 실제 이행에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 자본시장 발전, 금융업의 성장,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한 시일을 요함.

#### ③ 금융의 국제화·증권화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 ④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미흡

- \*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출지역이 제한적이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체계나 전문성이 부족

#### 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규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은행 및 보험사 관련 규제의 개선은 미흡

#### ⑥ 금융중심지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 동력이 미약

⇒ 최근, 금융허브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08.3)

## < 이명박 정부의 금융허브정책 방향 >

### (1) 정책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목 표	<b>&lt;2010년&gt;</b> 자산운용의 규모 확충 및 국제화, 글로벌플레이어의 출현 및 국내금융시장 진입 여건 개선		⇒	<b>&lt;2015년&gt;</b>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금융중심지 조성
전 략	<b>혁신</b>	<b>인프라</b>	<b>개방</b>	<b>특화</b>
	기존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	인력양성, 금융클러스터 조성등 금융 산업발전 기반 구축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해외 진출 촉진, 외국금융회사 국내 진입 유도	비교우위산업인 자산운용산업 육성에 특화
원 칙	시장·민간 주도 (규제 개혁)		네트워크 강화 (중앙·지방, 관계부처간, 해외)	기반시설 마련 (금융클러스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과제	<b>①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b>		<b>② 금융인프라 선진화</b>	
	○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감독 서비스 구축 ○ 금융산업 제도 개선 ○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외환시장의 제도 개선 ○ 금융전문인력 양성	
	<b>③ 자산운용시장 육성</b>		<b>④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b>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 자본시장의 국제화 ○ 채권시장 고도화 ○ 지역특화금융수요개발		○ 금융회사등 집적 및 외국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 경영 환경 개선 ○ 영어 사용환경 조성	

## (2) 금융중심지정책의 목표 설정

### 1)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및 전략

□ 우리나라의 환경은 금융중심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은 아님

- 우리나라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고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등 금융인력 및 자금 등의 집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또한 대륙법계국가로서 "규정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특화된 전략을 택한다면 금융중심지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전략적 선도 분야를 선정·발전시킴으로써 선도 금융 시장이 타 금융시장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금융 중심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국제금융센터 입주기업의 1/4이 보험 자산운용업의 발전으로 "보험업"도 발전

### 2) 자산 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

- 국내 금융산업 특성의 측면

- 연기금 및 외환보유고 등 풍부한 자산운용 수요, 상대적으로 실물경제 기반이 강한 점을 적극 활용
-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비해 자산운용업의 발전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

○ 자산운용업의 특성 측면

- 자산운용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적어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부작용이 적음
-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에 대한 저항감도 작음

○ 선도산업으로서 갖춰야 할 파급효과 측면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등 전체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
- 여타 금융업종에 비해 시설투자 부담이 적고 이동성(mobility)이 높아 외국기관 유치도 상대적으로 용이
-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업의 기반이 강화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나라마다 전반적인 여건은 다르므로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 중 우리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나갈 필요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 및 자산운용 규모(퇴직연금 등)가 크고 인접국가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등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 룩셈부르크는 법인세·소득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반면 자유로운 외환거래 등으로 자산운용중심지를 조성
- 아일랜드는 자산운용업의 back office에 특화하는 전략 사용

### (3) 추진 과제

#### 1)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 금융업종사자는 금융중심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07.2월 KDI 설문조사)
- ◇ 금융중심지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도 중요

□ 우리 경제력을 토대로 금융산업 규모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금융 혁신 지속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감독 체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 소유구조, 업무범위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금융 글로벌플레이어(Global Player) 출현의 기반 조성

#### 2) 금융인프라 선진화

- ◇ 금융전문인력 수준이 질적으로 미흡하며 금융의 겸업화·전문화 시대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이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
- ◇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

□ 자본시장 인프라, 외환제도 개혁, 금융전문인력양성 등 금융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

### 3) 자산운용시장 육성

◇ 비교우위가 있는 자산운용업에 특화하여 금융산업전반을 견인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달성에 기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시장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4)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은 금융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지 않아 역량이 분산된 데 일부 기인

- 금융중심지달성을 위해서는 대외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금융발전정책보다는 새로운 측면의 접근이 필요

□ 해외 금융회사 및 해외전문금융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 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

- 금융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행정의 합리성, 회계·법률 인프라 등 사업 환경의 편의성에 중점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출입국 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영어사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

#### (4) 향후 미래상

##### ① 금융산업을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기여

- GDP 대비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 21% → 30%이상

\*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등

##### ②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출현

- 활발한 인수·합병 통해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고 경영권 시장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도 제고

- 은행지주회사 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다양한 지주회사 출현으로 금융산업 시너지 극대화

#####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 금융중심지 정착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여건 개선

- 글로벌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해외 우수 금융회사들을 적극 유치해 한국을 '금융산업의 전시장'으로 자리매김

##### ④ 해외기업 상장 유치, 기업가치 증대 등을 통해 아시아 자본시장을 선도

\* 아시아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07말, 십억불)

: 동경(4,330), 상해(3,694), 홍콩(2,654), 한국(1,122), 대만(664)

- 자산운용시장을 육성하여 수탁고 「500조원 시대」 달성



# 이 한 정 의원



## 1.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 ☐ 2008년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현황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별도 제출)

## 2.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8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및 그 실적”

# 2008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8. 10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 II.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 III. 향후 중점 추진 과제

- 새 정부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
- 금융산업은 新성장동력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수립, 금융시장 안정, 따뜻한 사회 구축을 위한 섬기는 금융행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 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 금융시장 동향

- 작년 중순 이후 서브프라임 문제, 글로벌 침체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리먼 등 주요 IB 도산과 7,000억불 구제 금융 등 시장 불안 수시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조정

\* 서브프라임 관련 총손실 : 4,000억~5,000억불 추정(Fitch 4,010억~5,500억불, IMF 9,450억 불)

- 이러한 해외시장의 충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

- 최근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의 영향으로 1,300대 후반까지 조정
-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도 연중 최저치 4.88%(4.30일)를 기록한 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82bp 상승(10.2일 5.7%)

## 정책적 대응

- 서브프라임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금감원·금융회사 등과 시장상황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자금흐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

\* 금융위·금감원 합동 conference call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수시로 점검

- 거시경제정책협의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협의제도 구축

\* 신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정책협의회(17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11회) 등



□ 적극적인 정보 전달 및 감독 강화로 시장 불안을 완화

○ 정확한 정보전달로 시장내 불안 심리의 무분별한 확산 차단

\* 例 : KIKO 거래현황(8.1), 9월 위기설 관련 기자 간담회(9.2), 리먼·메릴린치 관련 익스포저 파악(9.15) 외화유동성등 금융현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10.6) 등

○ 은행권의 시장성 수신 PF 대출 외화 유동성 등 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例 : 시장성 수신,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변동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하반기 건전성 감독 방향 수립·발표(7.15일) 등

□ 주요 점검 지표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체제 가동과 조기 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상시 점검

○ 중점 리스크 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재정부, 금감원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샵(7.15) 개최, 금융위·금감원간 하반기 리스크 점검(7.25)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인 대응방안 모색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

\* 例 : 공매도 금지(10.1)

□ 규제금융법안 하원 통과에도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체제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 리스크 요인별 금융위험의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파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 노력 강화

○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②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 추진 실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지난 3월말부터 5월초까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 또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금융규제 혁파

\* 총 14인 : 민간 전문가 11인, 금융위 2인, 금감원 1인 (단장 : 민간전문가)

#### <주요 개선사항>

- 금융회사 업무위탁 범위 확대(총무·인사 등의 후선업무, 전산설비 등)
- 외부감사 대상 축소(자산 70억원이상 → 자산100억원 이상)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 신용카드 결제대상범위 확대(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허용
- 은행에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 보험회사에 신용스왑거래(CDS)를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범위를 헤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 등

### 향후 조치계획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 또한,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 감독  
강화 및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

\* 과징금제도 확대

### 3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 추진 실적

□ '반도체분야의 삼성전자'와 같은 금융섹터 Global Player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을 발표('08.6.3)하여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

\* 추진일정 : 산은법 개정 및 KDF 설립 입법안 마련('08.8) → 산은의 기업분할('08.12) →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2009~2010) → 산은지주사 지배지분 매각(2011~2012)

-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금융의 발전도 제약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국책은행에서 민영화된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 마련

□ 또한, 신설되는 KDF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On-lending방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형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 향후 조치계획

□ 연내에 산은법 개정과 KDF설립법이 국회통과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

-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 지분(49%) 매각을 완료하고, 임기내 지배지분 매각 및 민영화 완료

#### 4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 성과

- 선진국 수준의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

※ 8개 증권회사 및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허가

- 자본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09.2 시행)을 위하여

- 기존 투자금융업자의 인가·등록갱신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추진완료(08.8.4)
- 자통법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9편 442개 조문)을 조기에 제정(08.8.4)하여 업계 사전준비를 지원

##### 향후 계획

- 기존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의 재인가·재등록업무(450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금융위·금감원 및 관련기관 공동으로 전담 TF구성·운영, One-stop 서비스로 처리

- 자통법에 따라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를 금융투자협회로 통합(09.23까지)하고 자율규제 기능 강화

< 주요국 자본시장 현황 >

(07년 말 기준, 조, 개)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장사 (수)	기업공개 규모(신규)	유상증자 규모	채권시장**			
					국채	금융채	회사채	총계
한국	1,051.7	1,767	2.3	14.3	404	377	112	893
미국	18,690.8	5,965	71.9	71.9	5,930	13,267	2,671	21,868
영국	3,613.9	3,307	46.9	30.8	824	393	22	1,239
일본	4,374.8	3,870	0.8	17.2	6,436	841	643	7,967

\* 한국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 미국 : NYSE+NASDAQ+AMEX / 일본 : TSE+JASDAQ+OSAKA

\*\* 국채(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통안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ABS 포함)

## 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추진 실적

□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중

○ 다양한 투자·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 주식선물 (15종목)을 상장(5.6)하고 돈육선물 상장 (08.7.21)

\* 돈육선물의 상장초기 양돈농가 등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 강화

□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산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퇴출제도 개선(08.9월)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편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펀드상품 유형별로 펀드 판매보수·수수료의 비교공시 (자통법시행령) 의무화

\*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자율적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유도

○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유도

\* 수수료 20% 인하(08.5.13, 인하효과 1,110억원), 수수료 면제(9.22~12.31, 면제효과 1,026억원)

### 향후 조치계획

□ 자통법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단계적(09하반기부터)으로 도입 (금년중 개정법안 국회 상정 예정)

□ 중요 불공정사건은 공동조사(금감원·거래소간)를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강화하는 등 금년중 불공정거래·공시제도 개선

## **6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 **추진 실적**

- ☐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추진

\* 신정부 출범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자는 약 780만명으로 추정: 신용등급 7~10등급(약 720만명) + 사금융만 이용하는 자(약 57만명)

-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통해 소액 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출범(3.27일)하여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

\* 08년 하반기 6개 복지사업자를 통해 총 200억원 지원

-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 30.7만명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기에 삭제(6.2)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활동 및 취업이 가능토록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

- ☐ 대출기관 채무자의 채무재조정과 사금융 채무자의 저금리 환승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방안을 발표(7.24)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의 기부 또는 출연금 등 최대한 민간재원을 활용 (약 7,000억원)

### **향후 조치계획**

- ☐ '08년 하반기중 신용회복기금 시범사업(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을 실시하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개시

- 악성 추심행위 근절, 서민금융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도 연내 국회 제출 예정(법무부와 공동발의)

## 7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 추진 실적

□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일반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08.7.1~)

○ 인허가 등 민원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민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금융당국 관련 민원을 신청

※ 불필요한 방문·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적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회신

< 08.7.1 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08.9.30 현재) >

구 분	인 허가		등록신고		유 권 해 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317	36	370	34	169	926

### 향후 조치계획

□ 민원인 등 수요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 (예시)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SMS 서비스 등

□ 유권해석 해석사례를 공개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 노력을 추진

## 8] 적극적인 금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위상 제고

### 추진 실적

□ 금융위원장은 美國 FRB·SEC(4.17~18), 英國 FSA(5.30) 등 전 세계 금융당국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구축

○ 또한, 증권분야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및 정보교환 확대 등을 결정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APRC) 의장으로 선출

※ IOSCO APRC 의장국 진출로 국제금융계에서의 한국정부의 발언권 제고 기대

□ 지난 '08.5월 대통령 訪中 후속조치로 금융위원장 중국방문 (6.12~13)시 양국 금융당국간 금융협력방안 구체화

○ 중국 해외투자적격 은행(QDII\*)의 對韓 투자를 허용하는 협약체결 및 한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 자격(QFII\*\*) 승인

\*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의 기관투자자 중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대하여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 내국인 거래전용의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외국 기관투자자를 의미

- 중국 적격 은행의 투자허용으로 중국 자본자본 총유입액은 향후 2~3년간 60억달러로 전망(국제금융센터 추정)되고, QFII 승인(미래에셋 : 8.1일)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화

### 향후 조치계획

□ IOSCO APRC회의(10월, 발리) 주관 등 금융외교 적극 추진

□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여 적격 은행 유치활동을 전개

○ 금융당국간 정례회담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확대에 대한 중국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9] 에그몽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 추진 실적

-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테러자금조달·부패 방지를 위한 FIU의 역할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 \* 10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세계 자금세탁방지기구(FIU) 협의체
- \* 2008.5.25(일)~5.29(목),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91개국·262명 참가, 아시아 최초 개최, '역대 가장 성공적 총회' 평가(그룹 의장)

①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의지 대내외 천명

- \* 총리님의 개최식 참석과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

②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 \* 금융위원장, FIU 원장 등의 언론기고(동아, 한경, 매경),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③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IT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홍보

- \* 터키, 싱가포르 등이 공유 요청, 자금세탁방지 IT시스템 견학

④ 우리나라의 FATF가입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의 지지 확보 및 문화·사교행사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향후 조치계획

- 에그몽 총회 개최를 통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11월 중 우리나라에 대한 가입심사 예정

## ① 은행소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추진 현황

①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추진

①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②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② 증권·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면서, 시너지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추진

③ 동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교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중

### 향후 계획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확정된 후 금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②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창출기반 마련

### 추진 현황

- 그동안 신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시장 창출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5.23발표)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 향후 계획

- 향후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규정을 정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 정비

### ③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 추진 현황

-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유도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창업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中企자금지원방안\*(6.11)의 차질 없는 추진
    - \* 합성CDO 및 유동화회사 보증도입, 펀드신용평가제도 도입 등
- ☐ 중소기업 지원TF를 구성(08.5월)·운영하여 개편방안 논의
  - KDF 신설 및 보증부문 운영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선의 일부 내용을 발표
    - “산은 민영화 및 KDF 신설방안(6.2)”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F의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6.11)”에서 4대 부문 18개 과제를 설정·발표하고 세부내용을 추진 중
  - KDF 신설 등에 따른 신·기보 등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을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7.28, 8.12)

#### 향후 계획

- ☐ 추후 공개토론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을 확정
  - ※ 필요시 「신·기보법 개정안」 등 연내 국회 제출 추진
- ☐ 또한,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4 금융중심지 조성

##### 추진 현황

- ☐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를 조성을 추진
- ☐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법을 제정·시행('08.3)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
  - 두차례(6.30, 7.28) 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기본 계획안을 심의 및 금융중심지 평가기준 등 마련 지자체 통지
- ☐ '08.9월 설립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관련 인·허가등 애로사항에 대해 One-stop Service 제공

##### 향후 계획

- ☐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08.11월중)하면 금년중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
  - 지역 선정은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08.11월 지자체 신청전)
- ☐ 금융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내 입주 금융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시행('09년이후)
  - 금융중심지의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 ⑤ 금융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입법화 추진

### 추진 현황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 현재 상반기중 마련한 개혁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금융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

### 향후 계획

- '08년 하반기중 21개 관련 법안 마련 후 국회 제출 계획
  - 제정 : 한국개발펀드법(KDF 조직 및 업무 등), 불법추심방지법(심야방문 및 전화 금지 등),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등 3개
  -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한국산업은행법(대외채무 지급보증 근거 등), 은행법(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등 18개

#### 〈입법추진 대상 21개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자산유통화법,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불법추심방지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 3. 최근 3년간 예산서 및 결산서

☐ 최근 3년간 예산서 및 결산서 : 별도 제출

#### 4. 최근 3년간 국회(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 붙임 문서와 같이 최근 3년간 국회(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내드립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소관)

2008. 10.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 (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 (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舊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 (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촉진
- (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재정립 방안 보완
- (7) 금융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
- (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 (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p>⇒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완료('08.3.28일)</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 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 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 현재 일부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제공하고 있음</p> <p>○ 아울러, 동 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p> <p>□ 향후, 보험상품 범위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포함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할 계획</p> <p>○ 보험사 이외에 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p> <p>* '08년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시 반영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p> <p>* 간단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신망으로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도록 하는 시스템</p> <p>○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7.11)하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하였고,</p> <p>○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이전에 원권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였으며</p> <p>○ 또한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시 재단이 휴면예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소외계층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 복지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li> <li>*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을 분석하고 금융소외자의 현황을 종합 조회하여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li> <li>○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코 배드뱅크 등 민간 자활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li> <li>-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li> </ul> </li> </ul>

## 2. 舊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 혁신 촉진</p> <p>각 국책금융기관에 대한예산 승인시 경영혁신을 감안하 여 지출수준을 합리적으 로 통제</p>	<p>□ 국책금융기관의 객관적 경영실적 평가 및 공정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책금융 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 (’06.11월)</p> <p>* 경영·예산·회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p> <p>○ 동 심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승인시 반영</p> <p>- 경영평가는 ’07년에 파일럿테스트를 실시 하였고(’07.9월), ’08년부터 정식평가 실시 (’08.5월)</p> <p>- ’08년도 예산 승인시 총4회의 심의회를 거쳐 예산 승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보완</p> <p>'07년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에 제시된 국책은행간 업무중복 해소나 상업금융기관과의 차별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시장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08.6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하고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 발표</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하여 중소기업 전문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영화 추진</p> <p>○ 다만, 지배지분 매각은 KDF 설립 등 중소기업 금융체제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p> <p>금융중심지 조성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관련 자격증 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무전문지식과 윤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자격증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실시현황 등을 '08년 국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p>	<p>□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KAIST 금융대학원에 '08년 20억을 출연할 예정</p> <p>○ KAIST 금융대학원에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기위한 금융전문가 과정을 설치 (100명, '07년)</p> <p>* '09년도에는 10억을 지원할 예정</p> <p>○ 협회 차원에서 금융업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과목을 강화하도록 함</p> <p>○ 자격증제도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의 취지를 살려 통폐합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p> <p>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공익재단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p> <p>○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p> <p>-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p> <p>-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p> <p>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대한 대책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여전사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LTV(50%~60%), DTI(투기지역 6억원이상 APT, 40%) 규제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p> <p><input type="checkbox"/> M&amp;A 통한 부실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p> <p>○ 부실저축은행 인수자에 대한 영업구역외 지역에 지점설치 허용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p> <p>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방카 슈랑스 도입이후 대출 연계한 보험권유행위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의 보험판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카 슈랑스의 부작용 발생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7.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경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 (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 (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
-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
- (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
- (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
-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 (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
- (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
- (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 (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
-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
- (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

(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경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 '06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정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p>	<p>□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DCDS) 취급과 관련하여 재정부와 협의 진행중</p> <p>* DCDS :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납부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서비스 (Debt Cancellation &amp; Debt suspension)</p> <p>○ 대출자의 사망, 질병시 채무를 면제하는 신종 서비스는 보험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DCDS 허용여부에 대해 금감위·재정부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p> <p>□ 최근 신용보호서비스 등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p> <p>○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 구분기준을 포함하여 재정부와 DCDS 허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할 예정</p>
<p>(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외 자본을 동등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p> <p>○ 국제화개방화,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p> <p>○ 연기금의 활용, PEF의 활성화 등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 할 것</p>	<p>□ 외환은행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취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합병('04.2월)되어 보험대리점(Tele-Marketing 영업)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외환은행이 라이나생명 및 ACE 아메리칸화재보험 한국지점으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고 있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모집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한 것임</li> </ul> </li> <li>○ 반면, 과거 국민카드가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흡수합병('03.9월) 이후 국민은행이 더 이상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사유가 국민카드에게 있는 경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li> <li>- 신한생명 및 SK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거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은행의 귀책이라고 판결('05.12.15 및 '06.1.11)함에 따라</li> <li>-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하였기 때문임</li> </ul> </li> </ul> <p>□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 위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합병되기 전에 Tele-Marketing 영업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외환은행이 승계하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수수료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및 동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p>(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p>	<p>□ 인천공항 등 개항장 및 주요 거점 점포에서 '06. 11월 이후 외국동전환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p> <p>□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국통화자료실)에 '외국동전 환전 사용방법 안내' 및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안내' 자료를 게시('06.12.15)</p> <p>&lt; 외국동전환전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등 개항장의 외국동전환전 서비스 개시('06.11.1~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우리, 신한, 외환)</li> <li>- 김포공항(신한)</li> <li>- 김해공항(신한, 부산)</li> <li>- 대구공항(대구)</li> <li>- 제주공항(제주)</li> </ul> </li> <li>○ 은행연합회의 외국동전환전 안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동전 환전시 사용방법 등 참고사항 기재</li> <li>-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게시 (총 12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제주)</li> </ul> </li> </ul>
<p>(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은 크게 유가증권시스템, 코스닥시스템, 선물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p> <p>○ 유가증권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은 백업시스템(D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p> <p>*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시스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선물시스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완료('09.1. 예정)된 후 백업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임</p> <p>&lt; 선물시스템의 백업시스템 구축 지연 사유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현재 운영중인 선물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3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차세대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 백업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사용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 낭비 발생</p> </div> <p>□ 이에 따라, 선물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데이터 백업 및 원격지 소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p> <p>□ 또한, 선물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에 대비한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p>
<p>(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체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p>	<p>□ 금융감독원은 2004년~2005년 기간중 총 990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p> <p>○ 임원 : 460명(해임권고 37, 직무정지 63, 문책경고 147, 주의적경고 213)</p> <p>*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저축은행·신협·농수축 단위 조합에 대한 문책조치임</p> <p>○ 직원 : 530명(면직 38, 정직 43, 감봉 181, 견책 268)</p> <p>□ 금감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조치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금융업종별로 상이</p> <p>○ 은행·보험사·여전사·신탁회사 : 임원문책 중 경고(문책주의적 경고)와 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은행법 §54, 보험업법 §134①, 여신전문금융업법 §53④, 신탁업법 §26의2①,②)</p> <p>○ 저축은행·신탁·농수축협 단위조합 :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p> <p>(상호저축은행법 §24① 및 동법 시행령 §26①, 신용협동조합법 §84①, §95 및 동법 시행령 §24①)</p> <p>* '06.5.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06.8.4 시행)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조치 권한 및 직원에 대한 면직조치 권한은 금감원에서 금감위 권한으로 변경되었음</p> <p>○ 증권종금금융지주 : 금감위가 조치권 행사 (증권거래법 §53⑤ 및 동법 시행령 §36의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2①, 금융지주회사법 §57①)</p> <p>□ 참고로 2004.2월~4월중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임직원(1,500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문책조치 하였다'고 지적하였는 바</p> <p>○ 이는 1999.4월~2002.11월 기간중 금융관련법상 위탁근거 없이 금감원장이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한 실적임</p> <p>□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금융관련 법령상 금감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위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직접 제재조치권을 행사하고 있음</p>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	<p>□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p> <p>○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 검토</li> <li>□ 다만, 포인트 마케팅은 카드사의 자율 영업 사항인 만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li> <li>○ 감독당국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지도</li> <li>&lt; T/F 진행 상황 &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 8개 카드사*, 소비자단체(YMCA, 소비자보호원), 여전협회, 김재홍 의원실</li> <li>* 비씨,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li> <li>○ 진행경과 : '06.12월부터 '07.2.7.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진행 중 ('07.2.14. 7차회의 개최예정)</li> <li>○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인트 관련 주요내용을 약관에 명시</li> <li>- 기타 포인트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li> </ul> </li> </ul> </li> </ul>
<p>(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법§186①)</li> <li>○ 롯데쇼핑의 경우 우리홈쇼핑 주식취득 계약을 2006.8.2.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당일 신고하였으므로 공시위반으로 보기 어려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향후 감독당국은 신뢰받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중요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시토록 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지연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품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강화토록 하여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할 것임</p>
<p>(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 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p>	<p>□ LG카드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06.9~10월중 탈퇴회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9월중 실시한 은행연합회와의 정보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은행연합회 탈퇴(유효기간 만료회원)통보가 누락된 탈퇴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통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li> </ul> <p>&lt; 추가 통보 인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9.27 : '06.8월 만기회원 45,230명</li> <li>- '06.10.4 : '04.3월 만기회원 34,937명</li> </ul> <p>※ LG카드는 탈퇴·해지 구분 운영을 '06.11월 폐지</p> <p>□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LG카드에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카드사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사하도록 지도하였음('07.1월)</p>
<p>(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p>	<p>□ 증권선물위원회는 수도약품공업(주)의 한스바이오메드(주) 인수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한 개인투자자가 수도약품공업(주) 주식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06.7.19)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음('06.12.20)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div data-bbox="678 454 1458 667">□ '권력형 게이트'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다만, 골드 금고 인수를 추진하였던 '김홍주'씨와 관련된 저축은행 대출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div> <div data-bbox="699 701 1458 1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원 초과하여 111억원을 대출</li> <li>→ '02.11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4명 제재조치</li> </ul> </li> <li>○ 새누리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103억원 초과하여 174억원을 대출</li> <li>→ '02.12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3명 제재조치 (검사기간중 한도초과분 전액 해소)</li> </ul> </li> </ul> </div> <div data-bbox="678 1377 1458 1534">□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불법대출 취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고 추진중에 있음</div> <div data-bbox="699 1568 1458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 국세청 통보</li> <li>-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li> <li>-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 도입 추진</li> <li>-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진</li> </ul> </li> </ul>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개발·운영 등</li> <li>○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인수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li> <li>- 저축은행 임원 결격사유 확대(해임·징계면직된 자→금감위 조치&lt;직무정지 등&gt;를 받은 자)</li> <li>- 당해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지 등</li> </ul> </li> <li>* 입법예고('06.10)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既 반영</li> </ul>
<p>(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 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4</li> <li>○ 산업은행 임직원의 임금 등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결정사항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에는 시중은행과 달리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을 제외하고 있음</li> </ul> </li> <li>□ 다만 2006년 종합검사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적용받아 방만한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li> </ul> </li> </ul>
<p>(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개인금융부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p>	<p>대비 가치분소득 추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가계대출규모 대비 총당금비율(Coverage ratio)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차주별 소득분포 및 부채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대폭 확충</li> <li>- 기존의 부정기 통계(14종)를 정기 통계로 전환하고, 신규 통계(32종)를 추가(총 46종 추가)</li> </ul>
<p>(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5일 상장자문위가 최종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음</li> <li>□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출하면, 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li> </ul>
<p>(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지점·점포별로 부여된 고유ID로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 조회목적화면에서 특정목적*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침</li> <li>* 본인조회/여신심사/신용카드심사/공공목적/추심/기타 등 6개</li> <li>○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목적 중 ‘기타’를 초기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여타 조회목적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타’ 코드가 자동 선택되도록 운영함으로써</li> <li>○ ‘기타’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결과 과다 신용조회 및 신용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p>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조회코드를 세분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하였으며,</p> <p>○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조회코드를 기존의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여 '07.3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p> <p>* 본인조회/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법원제출/조세관련제출/기타 법률관련 제출/민원/채권추심</p> <p>□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신용정보 조회 시</p> <p>○ 특정 조회목적코드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조회목적에 따른 해당코드를 정확히 입력토록 지도하겠음</p>
<p>(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p> <p>□ 국내 금융경제 여건과 금융소비자의 수용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07.3.2.부터 실시하고,</p> <p>○ 향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Road Map)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p> <p>&lt; 주요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li> <li>○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적용기준 마련, 운영 등</li> </ul>
<p>(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 등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공동인수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 건의('06.11.)</p> <p>*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일정비율(예: 150%) 이상일 경우 그 초과 손해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p>
<p>(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추가 소득공제혜택(100만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li> </ul> <p>□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0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p> <p>&lt; 장애인보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의 실효성 확보 및 판매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li> </ul> </li> <li>* 협회 및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제도 및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안내 실시('07.2)</li> <li>○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li> </ul> </li> </ul>
<p>(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경쟁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06년)</li> <li><input type="checkbox"/> '07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 등과 협의할 예정</li> </ul>
<p>(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용도 평가시 신용조회 기록 반영여부 등은 자체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li> <li><input type="checkbox"/> 다만, 신용조회기록이 과다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객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비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에 이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체에 대해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토록 하였으며 (05.1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li> </ul> </li> <li>○ 동 사항을 전 권역의 금융회사가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함(06.10)</li> <li>□ 또한,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예정(07년중)</li> </ul>
<p>(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RBC제도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칠 예정이며,</li> <li>○ 시행시기도 국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li> </ul> </li> </ul>
<p>(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0.9 코스콤(주)의 KOSPI200 지수선물(12월물) 시세제공 오류 원인은 코스콤 내 지수선물분배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용(I/O) 메모리 부족인 것으로 확인</li> <li>* 동 시간중 선물거래법상 시세공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가 산출한 시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li> </ul>

시장 처리요구사항	시장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콤은 KRX가 산출하는 시세정보의 1차 이용자로서 KRX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간접이용자(증권사 HTS 등)에 제공</li> <li>○ 코스콤과 KRX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콤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는 코스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업무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시세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li> </ul> </li> <li>⇒ 거래소로 하여금 코스콤의 정보분배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정보 분배채널의 다양화를 유도('06.10월)</li> <li>※ 코스콤은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직후 송수신용시스템의 메모리를 확장하였으며(128M → 256M) 주요 프로그램의 취약 예상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스크 업그레이드 교체완료(9G→18G) '06.12월</li> <li>- 現 지수선물분배시스템 교체 예정: '07.8월</li> </ul> </li> <li>□ 한편, 거래소 선물시장의 경우 현물시장과 달리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09.1월 예정) 백업시스템도 가동할 예정</li> </ul> </li> </ul>
<p>(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p>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05.2.22부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물배상 가입금액별 가입구성비 : 3천만원 이하(54%), 5천만원(17%), 1억원이상(29%)</li> </ul> </li> <li>□ 최근 외제차 및 고급 국산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차량을 파손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배상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li> <li>□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입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아 1억원이상 고액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물배상 보험료 : 3천만원(123천원), 5천만원(130천원), 1억원(133천원)</li> </ul> </li> <li>□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대물배상담보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선택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li> </ul>
<p>(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개설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중에 동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및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li> </ul> </li> <li>□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에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음</li> </ul>
<p>(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은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li> </ul> </li> <li>□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의 1차적 상환재원인 차주의 미래소득을 대출취급 시점에서 평가함과 아울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예 : 실직, 폐업 등)에 대비한 2차 상환재원인 담보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li> </ul> </li> </ul>
<p>(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은행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점시스템인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li> <li>□ 한편, 동 시스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량률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설명변수를 도출하고 평점(scorecard)형태로 변환</li> </ul> </li> </ul> </li> <li>□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07.1.31) 도입을 계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li> </ul> </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강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신용평가시스템의 精度와 여신업무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li> </ul>
<p>(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 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기지보험 도입 결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경우(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 등) 보험 가입시 LTV 한도 상향 조정(60%→80%)</li> </ul> </li> <li>□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06.12)</li> <li>□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발표(0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DTI, 부채비율 등의 자율적 활용)</li> <li>○ 은행권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월중)한 후 3월부터 시행</li> </ul> </li> </ul>
<p>(28) 신협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협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 실패라는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측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최대한도의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하고</li> <li>○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곤란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li> </ul> </li> <li>□ 이러한 원칙하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신협 업계의 경영여건 및 전망, 국가재정 여건 등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li>□ 한편, 신협중앙회는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노력방안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07.2.2, 금감위 기송인)하였으며</li> <li>○ 재정지원에 앞서 관계부처와 감독당국신협중앙회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07.3월)하여 신협측의 경영 개선계획이행을 적극 유도하고</li> <li>○ 경영개선계획 이행성과를 보아가며 재정자금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협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li> </ul>
<p>(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고 있음</li> <li>○ 동 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의 분포대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5급 27명중 2명을 가등급에 배정한 것임</li> <li>□ 가등급으로 평정된 2명중 1명은 금년 4월에 수습공무원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다른 1명은 임용후 근무기간이 짧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서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li> </ul>
<p>(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li> </ul> <p>※ 연구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 중앙대 신인석 교수</li> <li>- 일정 : '07년 3월말 완료 예정</li> </ul>
<p>(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p>	<p>□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적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출신인사가 대주주인 좋은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감독·검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검찰고발,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음</li> </ul> <p>□ 앞으로 감독당국은 감사원 제척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 출신인사가 인수하거나 재직 중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감독·검사할 예정임</p> <p>* 금감원 출신인사와 일정기간 동일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을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p>
<p>(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p>	<p>□ 감독당국은 접수된 민원을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첩처리하는 민원비율이 '04년 27.3%, '05년 26.3%, '06년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p>	<p>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 등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은 감독당국이 개입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이첩 처리가 불가피한 점이 있음</li> <li>- 다만, 이 경우 이첩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보이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li>□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 민원인간의 자율적인 합의·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li> <li>○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민원 내용이 사실조사 및 판단 등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한하여 자율조정을 허용하고 있음</li> <li>○ 다만, 자율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li> </ul>
<p>(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추심회사는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교부받아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를 파악하여 추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li> <li>□ 감독당국은 사전심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령상 점검사항인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여부와</li> <li>○ 신용정보법상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인 「상법」상 상사채권인지 여부 및 추심위임자가 금융회사 등 적법한 위임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결과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주요 심사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향후 감독당국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임점 검사시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관리실태, 개인 정보 유출방지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li> <li>□ 한편,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전산자료를 교부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산자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li> </ul>
<p>(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 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 ('06.5월)</li> <li>○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06.6월~10월)</li> <li>&lt;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주요내용 &gt;</li> <li>□ 자동차 보험 손해를 악화에 대응하여 보험 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li> <li>○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하는 등의 감독강화</li> <li>○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data-bbox="686 297 1460 394">□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div> <div data-bbox="686 427 1460 577">□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div> <div data-bbox="686 611 1460 761">□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부채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div> <div data-bbox="686 795 1013 851">&lt; 향후 추진계획 &gt;</div> <div data-bbox="686 884 1460 1034">□ 개별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div>
<p>(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div data-bbox="686 1081 1460 1406">□ 금융업무의 국제화·고도화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세칙 제32조*에 의거 해외 우수 대학에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분야(예: 경영학, MBA, 경제학, 법학 등)로 연수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음</div> <div data-bbox="746 1440 1460 1630"> <p>* 연수세칙 제32조(해외학술연수)</p> <p>“해외학술연수는 경제학, 경영학(MBA 포함), 법학 등 감독원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분야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실시”</p> </div> <div data-bbox="686 1664 1460 1989">□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학술연수원이 미국 MBA위주로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미국 MBA 선발인원을 해외학술과정 모집인원의 50%로 제한하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IT 등과 같이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지식을</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임</p>
<p>(36) 지하철 지하상가·채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p>	<p>□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0월말 현재 화보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95%로 대부분 가입된 실정</li> </ul> <p>□ 다만, 지하철 지하상가, 채래시장 등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일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시·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통보하여</li> <li>○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li> </ul>
<p>(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p>	<p>□ 자기자금 여부, 경영참가의사 여부, 계좌추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금감원 조사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주요 판단사실 등에 대해 소명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지원의 자금 대부분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경영참여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li> <li>○ 스펙트럼DVD 경영권 양수도 협상 과정 및 인수자금의 출처, 매매행태 등을 종합</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판단해 볼 때 주가상승을 위해 하지원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첩하였음</p> <p>□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및 새로이 발견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자금의 계산주체를 하지원으로 보고 하지원에게 주식 인수당시에는 경영참가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것임</li> </ul> <p>□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이고 조사의 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검찰의 강제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감독당국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p> <p>□ 동 건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p>(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p>	<p>□ 개별적인 조사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검찰에 대한 지원인력 파견, 검찰의 감독당국에 대한 법률자문관(현직 검사) 파견 등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p>	<div data-bbox="694 302 1460 1657"> <div data-bbox="694 302 1460 1265"> <p>□ 감독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는 것이 필요한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은 가능한 한 모두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나</li> <li>○ 검찰도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건별로 처리 기간에 편차가 많이 있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기록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li> <li>○ 향후 감독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사건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판결문을 입수한 후 향후 조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임</li> </ul> </div> <div data-bbox="694 1288 1460 1568"> <p>□ 이러한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현행 조사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p> </div> <div data-bbox="694 1590 1460 1657"> <p>※ 검찰이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p> </div>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단위 : 건)</div> <table> <tr> <th>처리유형</th> <th>2004년</th> <th>2005년</th> <th>2006년</th> </tr> <tr> <td>기소<sup>1)</sup></td> <td>85</td> <td>76</td> <td>30</td> </tr> <tr> <td>불기소<sup>2)</sup></td> <td>18</td> <td>17</td> <td>3</td> </tr> <tr> <td>수사중<sup>3)</sup></td> <td>63</td> <td>93</td> <td>99</td> </tr> <tr> <td>총계</td> <td>166</td> <td>186</td> <td>132</td> </tr> </table> <div>           주 1) 구공판, 구약식            2)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 등         </div>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div>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 및 혐의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금융 실명법 위반 소지, 혐의자의 명예와 신용 훼손 우려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측면이 있음         </div> <div>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신종주가조작으로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안을 주가조작으로 본 전례를 찾기 어려움         </div> <div>           ※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도권약품공업의 대주주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06.7.19)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06.12.20)         </div>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div> <input type="checkbox"/> 금산분리 원칙은 국내·외 법인에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         </div> <div>           * 금산분리원칙은 범정부차원의 금산분리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         </div>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	<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은행의 자율결정사항으로 판단됨</p> <p>□ 감독당국은 지난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사회내 집행위원회(4명)에 내국인 이사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p> <p>○ SC제일은행은 동 집행위원회에 내국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룹본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07.3월경에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내국인 이사의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p>
<p>(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 감독당국은 '06년중 SC제일은행 등 5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바 있음</p> <p>* SC제일·대구·광주·제주·신한은행 (제주·신한은행은 현재 검사서 작성중)</p> <p>○ 점검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적이 미흡한 SC제일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신자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음</p> <p>(☞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p> <p>* '04.11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있음</p> <p>□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p> <p>*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p>	<p>□ SC제일은행이 리스크담당임원의 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SC그룹본부(런던)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여신신청업체(법인)의 일부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p> <p>* 매출액, 영업이익, 세후당기순이익, 총부채,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법인의 재무정보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시장에 공시된 것이며</li> <li>○ 법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li> </ul> <p>□ 다만, 감독당국은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과정이 사전승인 형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지난 '06.10.20. 국정감사시 SC제일은행장(존 필메리디스)도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li> </ul> <p>□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방지 노력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p>
<p>(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p>	<p>□ Free Board 활성화방안 마련('06.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성인(market maker) 제도 도입</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 상장시 혜택 부여 등 정규시장과 가교역할 강화</li> <li>○ 공사·퇴출요건 완화 등 Free board 기업부담 경감</li> </ul>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p>	<p>□ 현행 공사법상 기금 청산시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p> <p>○ '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배분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p> <p>*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조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3.7조원)</p> <p>□ '06.12.30자 공사법 개정으로 '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3.5조원에 대하여는 상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산시 잔여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계류 중인 법안 내용(신학용 의원 대표발의)</p> <p>① 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의 재계산 결과에 따라 면제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보며, 공적자금 상환기금출연금은 채무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계산 후에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함</p> <p>②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p> <p>③ 각 출연금 및 융자금 반환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 기여금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p>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p>	<p>□ 공사는 '03년 신용카드사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의거 대량의 카드채권을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03년도 업무계획을 초과하여 부실채권을 인수</li> </ul> <p>□ 향후 재무건전성을 감안한 인수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업무계획 보다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p>
<p>(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 결과와 재경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비상장 물납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성이 낮은 한계성*으로 물납금액 보다 낮게 매각 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일간지에 물납주식 매각 홍보 광고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월중 광고 예정</li> </ul> </li> <li>○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2월초 개최 예정</li> </ul> </li> </ul> <p>* 비상장법인의 상당수는 소수의 친인척·지인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세업체로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적</p> <p>□ 주식물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건의</li> </ul>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공사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추심활동을 수행토록 주기적 교육 실시</li> <li>○ 과잉·불법 추심행위 수행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또는 직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li> </ul> <p>□ 추심위임업체에 대한 감독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정기간담회를 통한 과잉·불법추심행위 예방교육 실시</li> <li>○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 조치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 위임계약서」에 반영('06.12.1)</li> </ul> <p>□ 향후에도 공사는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p> <p>→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민원신청 및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p>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05.7.20 공사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사업 수행근거는 마련(투자 방법·한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06.1.30 개정 완료) 되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 정비 및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국외투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일정 기간 소요</li> </ul> <p>□ '06년도 하반기 안정적인 해외부실채권 투자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발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MOU 체결(9.15)</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협의회 구성 및 JV-AMC 설립 등 중국 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10.26)</li> <li>○ 원활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 주도로 국내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협의회 구성(12.15)</li> <li>□ 현재 중국 4대 국영 AMC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MOU 체결(07.1.15) 및 자산실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부실채권투자를 실행할 예정</li> </ul> </li> <li>□ 아울러 공사는 고위험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사업 추진</li> </ul>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10 New 비전으로 “가치를 재창조 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로 설정('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비전과 전략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111조원의 인수·정리, 개인 신용불량자 약 36만명 지원, 국유재산 8만 필지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역량과 인프라의 기반 하에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05)</li> <li>○ 아울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별도로 “비전 실행 TF팀”을 설치하여 사업, 조직, 인사, 성과평가 4대 부문으로 세분화한 35개 실천과제를 선정('06)</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추진과제별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높임</p> <p>□ '07년 현재 공사는 비전 및 전략의 실행 1단계 연도부터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시행</p> <p>○ '07년 경영목표*에 중장기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수립('06.12) → 년중 추진</p> <div data-bbox="730 824 1433 117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07년 경영목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자산관리회사로의 도약</li> <li>•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li> <li>•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li> <li>• 고객만족경영의 실천</li> <li>• 성과중심의 책임 경영</li> </ul> </div> <p>○ 전략과제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07.1) → 사업별 본부 전담제 도입</p> <p>○ 조직·개인별 목표 부여 및 BSC(균형성과표) 적용('07.2)</p> <p>○ 전문인력의 채용 및 기존직원 업무 직군제 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착수('07.1~)</p> <p>□ 비전 실행 성과의 철저한 점검 및 목표 재설정</p> <p>○ 공사의 주요 회의기구(이사회 및 전략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비전 및 전략의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행</p> <p>○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와 성과 미달시 별도 TF팀을 설치하여 실행목표 및 추진방향 수정</p>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6. 4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L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 (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
- (12) 제3자 명의 CD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것
- (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 할 것
- (15) 역모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영세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 (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
- (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
- (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 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할 것
-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6) 환치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 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금감원 감사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 (2) 온비드의 장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3) 특별채권 매각 관련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 매각 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
- (4) 공매처분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할 것
- (5)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6) 공사의 해외 진출 사업 추진 대책을 보고할 것

- (7) 한마음금융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8) 무담보채권 위임 관련 공사 자체 회수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 실효성 여부 및 파잉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압류재산 공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 (11) 임직원 비위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12) 대우채권 2조 8천억원의 적자 발생 원인과 대책을 보고할 것
- (13) 경영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방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 (14) 국외연수 비용을 자산매수자가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할 것
- (15) (주)로이젠의 거제도 골프장 소유 관계를 검토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것
- (16) 압류재산 조세 업무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보고할 것
- (17) 임금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 (18) 부동산사업부의 업무량 대비 인원 과다와 관련 예산편성시 축소방안을 보고할 것
- (19)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국세물납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20)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라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수립계획을 보고할 것
- (21)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22) 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역할에 관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23) 국내에 진출해 있는 M&A 부띠끄의 실태 파악과 매커니즘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
- (24) 현재 부실채권 매각방식의 문제점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5) 공사가 매입한 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경영권 매입주체의 상시적인 배임·횡령 등의 사고에 휘말리고 있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위한 매각 방식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경영주체를 찾아주고 회사 정상화를 돕기 위한 우리 사주제 등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05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법16조의4, 은행법시행령11조의3, 은행업감독규정16조의2에 의거하여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수행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05년말기준 결산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06년 상반기중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시행할 계획*임</p> <p>* 적격성심사는 매반기 정기적으로 실시(은행법 제16조의4)</p>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마련('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책임 공시 자율추진</li> <li>○ 윤리경영 및 관계형 대출 활성화</li> <li>○ 휴면예금 등을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li> </ul>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국회의결에 따라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금감위(원)·재경부·한국외환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가 진행중임</p>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p>[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 ]</p> <p><input type="checkbox"/> '05.1.26 금감원은 여성 피조사자에게 음주한 상태에서 밤늦게 전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05.2.16 해당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금감원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품위 손상 등에 대하여 매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함을 적극 주장</p> <p>□ '05.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고,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도록 명령(구제명령)</p> <p>○ '05.5.6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06.1.2 중앙노동위원회도 금감원의 재심신청을 기각</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고, '06.3.2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낮추어 “정직” 처분(현재 해당 직원은 출근이 정지되고 있음)</p> <p>□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p> <p>□ 헤르메스 시세조종 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물산 주식 대량보유자인 헤르메스의 펀드 매니저가 국내 일간신문과의 인터뷰('04.11.26)를 자청하여 삼성물산의 M&amp;A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04.12.1)되게 한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04.12.3)한 사실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04.12.17)</li> <li>○ 조사결과, 헤르메스 펀드매니저가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보유주식을 원활히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헤르메스 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 D증권사 K직원을 고발('05.7.22)하였음</li> <li>* 검찰은 수사결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를 기소('06.1.31.)</li> </ul> <p>□ 위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05.9.22~10.11)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p> <p>(자체 진상조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르메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투자 펀드임에도 삼성물산이 헤르메스를 투기적 M&amp;A펀드로 몰아갔고 금감원의 조사는 특정 재벌 편들기의 일환이었다는 의혹 관련</li> </ul>

시장 처리요구사항	시장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르메스펀드의 삼성물산 주식매도 직후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감독당국도 헤르메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특정 재벌 편들기나 보호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li> <li>-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도 감독당국의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li> <li>○ 국내 D증권사 K직원을 고발하면서 동 증권사를 조치하지 않아 조치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 관련</li> <li>- D증권사 K직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헤르메스 펀드 매니저의 위법행위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K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D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업원·대리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묻는 증권거래법 제215조(양벌규정)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D증권사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li> <li>* D증권사 K직원은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재경부 등 지역·서민금융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상반기중) *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의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L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세제혜택 부여는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임 <input type="checkbox"/> LTV규제 완화는 부동산시장 동향, 일반은행 모기지 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LTV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에 근거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의 개정 필요성 여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05년 중 다음과 같이 워크아웃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이행 실태를 점검 ① 공동 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 ② 은행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③ 워크아웃제도 홍보 ④ 경영진의 관심 및 담당자의 인식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06년에는 서베이 실시 등 워크아웃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1/4분기중) 채권은행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워크샵을 개최(3/4분기중)하여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등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p>
<p>(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p>	<p>□ 분기별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BIS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신속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병, 제3자인수 및 퇴출 등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음</p>
<p>(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 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는 내·외부에서 혐의사항을 통보한 기업 및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p> <p>□ 무작위 표본선정은 엑셀프로그램의 난수발생기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이 공개적으로 직접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음</p> <p><b>(2005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에는 총 204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87사</li> <li>- 연결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5사</li> <li>- 결합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2사</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실시 회사는 모집단에서 제외</li> <li>- 모집단 형성시 무작위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감사투입시간 등을 혼용</li> </ul> </li> </ul> <p><b>(2006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감리대상을 확대하여 감리 사각지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사 → 280사(37% 증가)</li> </ul> </li> <li>○ 장기간 감리미 실시 회사, 자본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은 회사 등의 선정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표본 추출 모집단 형성을 검토</li> </ul>
<p>(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p>	<p>□ CD편취 및 위조 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CD발행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CD를 발행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출하여 관련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05.1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는 동시에 CD업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2월)</li> <li>*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li> <li>○ 위규행위와 관련된 직원(5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문책' 등의 조치를 하였음</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2) 제3자 명의 CD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18조 및 동 「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있음</p> <p>□ 따라서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에 대해서도 상기규정에 따라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조치하였음('05.1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li> </ul> </li> <li>○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책' 등 합당한 조치를 동일하게 취하도록 조치의뢰</li> </ul> <p>□ 앞으로도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전 금융권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조치</p>
<p>(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것</p>	<p>□ 불건전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유통 방지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0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금지사항에 CD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상적인 CD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li> <li>- CD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거래처의 재무제표 분식,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li> </ul> </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 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 등 전자 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전 권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보안 대책」을 수립('05.9)하여 시행중에 있음</p> <p><b>(전자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PC에 해킹차단 프로그램 의무적 설치</li> <li>○ 보안카드 비밀번호 확대를 통한 일회용비밀번호 (OTP: One time password)기능 강화</li> <li>○ 보안전담기구 및 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 도입과 운영을 위한 OTP통합인증센터 설립 추진</li> <li>○ 보안수준별 거래한도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뱅킹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차등 적용</li> </ul> </li> <li>○ 금융소비자의 보안의식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관리 유의사항 등 '전자금융이용자 정보보호수칙'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전자금융 이용방법을 홍보</li> </ul> </li> </ul>
<p>(15) 역모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재정경제부 주도로 당정협의를 거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06.2.16)</p> <p><input type="checkbox"/> 금년 중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07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임</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p> <p>○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3년이하 징역 등)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p> <p>*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 및 이용목적 제한,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 부여, 신용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관리규정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p> <p>□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한 내부관리기준 및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불법접근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 중</p> <p>□ 또한 최근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p> <p>○ 감독당국은 '05.11월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각 금융회사가 한층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지도</p> <p>-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운영</p> <p>- 고객신용정보처리 업무 위탁 등 고객정보 외부 제공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및 약정이행상태 점검</p> <p>- 고객의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권한 도입 등</p> <p>□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관리·보호인 지정 및 전화수신거부 신청 창구 마련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06.4월 이후 시행될 예정</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은행 감독이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업무 취급결과 늘어나는 위험자산을 BIS 비율 산정시 반영하고</li> <li>○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li> <li>○ 부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은행감독장치를 적용하고 있음</li> </ul> <p>□ 최근 금융겸업화 진전으로 은행의 부수업무가 증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업무 수행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06년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BIS비율 산정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li> </ul> </li> </ul>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근에는 보험사기의 수법도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p> <p>⇒ 전담조직(보험조사실)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의 방지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업계의 방지 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음</p>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2006년 주요 추진 보험사기 방지대책</p> <p>(적발강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혐의정보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 실시</li> <li>- 조직적 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지시스템의 성능을 개선</li> </ul> </li> <li>○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li> </ul> </li> </ul> <p>(예방활성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보험범죄 신고방법 등 대응요령 전파를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li> </ul> </li> <li>○ 보험사기 예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융소비자,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 대상 예방교육 실시</li> <li>- 보험사기 조사실무교육을 통한 조사 전문인력 양성</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 data-bbox="619 309 1406 353">('05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p> <div data-bbox="619 394 1444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19 394 1444 629">□ 인터넷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 중심으로 전자민원창구를 대폭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533 1444 629">○ FAQ 대폭확충 및 단순질의성 상담에 대한 즉답 시스템 구축 등</li> </ul> </li> <li data-bbox="619 667 1444 965">□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 평가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864 1444 965">○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직원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민원업무에 반영</li> </ul> </li> <li data-bbox="619 1003 1444 1301">□ 금융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정식 처리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자율조정 기회를 부여 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1193 1444 1301">○ '05.10~'06.3(필요시 3개월 연장) 기간중 민원 처리 우수 8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li> </ul> </li> <li data-bbox="619 1339 1444 1682">□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1529 1444 1682">○ 개인정보 제공범위, 민원서류 제출시 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마련</li> </ul> </li> <li data-bbox="619 1720 1444 1966">□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감축을 위해 민원처리 모범규준 제정 및 적용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1865 1444 1966">○ 민원처리조직, 민원처리절차, 민원예방 및 사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총 7장, 31개 조항으로 구성</li> </ul> </li> </ul>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우수회사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감축 노력, 금융교육 시스템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우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로 활용</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상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을 전담할 전문상담원제도 도입</li> <li><input type="checkbox"/> 소비자단체 임직원을 일일상담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명예옴부즈만제도 도입</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연수 등을 강화하고 법률·의료자문 및 외부 용역을 확대</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부당한 소 제기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소송지원제도 적극 추진</li> <li><input type="checkbox"/>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첩민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의 전자이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li> </ul> </li> </ul>
<p>(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영세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CB·BW의 공모발행시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BW의 전환권 등에 대한 내용, 발행절차,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목적 및 발행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또한, CBBW의 사모발행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사채의 내용, 자금조달의 목적, 사채발행 방법, 전환에 관한 내용 등의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며</p> <p>○ 특히 배정받는 특정인의 성명, 회사 또는 최대 주주와의 관계 및 발행권면총액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음</p> <p>□ 경영세습을 위한 CBBW 발행은 그 특성상 사모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p> <p>○ 이러한 CB 등의 사모발행을 통한 이익공여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를 통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40)</p> <p>□ 공시측면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 발행시의 공시를 강화하여 그 투명성을 확충하는 한편 사모발행시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CB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이전의 투명한 공시 및 공시를 통한 상법 및 세법상의 규율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겠음</p> <p>* 현재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단지 '특수관계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임</p>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p>□ '05.11.30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경우와 예치금을 포함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p> <p>○ '05.11.30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344억원 초과하였으나 12월 중 1조 167억원 감축하여 은행법상 한도이내를 유지</p>

시장 처리요구사항	시장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p> <p>*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씨티그룹캐피탈을 의미하며, 동사는 '04.12.29 씨티리스가 씨티파이낸셜을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임</p>	<p>□ 한국씨티은행의 그룹계열사인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리의 적정성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임</li> </ul> <p>□ '05년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05.10.12 ~11.10)시 동 내용을 점검한 결과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여신금리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씨티캐피탈의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p> <p>(AA등급 금융채금리 + 35bp 적용)</p> <p>⇒ 따라서 금감원에서의 별도 조치 사항은 없음</p> <p>□ 다만,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자금소요액 대비 지원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2.28현재 신용공여한도는 7,350억원(대출잔액은 3,280억원)인데 반해, 미사용한도가 4,070억원임</li> <li>○ 한편,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시 「씨티그룹간의 여신공여 승인규정」에 의거 신용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됨</li> </ul> <p>⇒ 따라서 금감원은 씨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 지원시 여신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신용조사 실시)하도록 관련 내규의 개선을 지도*할 예정임</p> <p>* '05년 종합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반영</p> <p>※ 동행은 '05.12.29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4,500억원으로 감축한 바 있음</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p>	<p>□ 금융감독원이 공기업과 외국은행간의 사적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소송 제기 등이 필요한 실정임</li> <li>○ 또한 외국은행의 거래행태에 부당한 점은 있으나 동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외국은행이 공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제반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치 않아 환수대상 금액을 확정하기 곤란</li> <li>○ 다만, 관련 외국은행들로 하여금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를 공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정형파생 상품거래로 전환토록 지도함으로써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과도한 위험을 해소하였음</li> </ul> <p>□ 금융감독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관련 검사결과를 '05.9.28 감사원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p> <p>□ 또한 장외파생상품 부당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을 통보('05.10.5)하고, 파생상품거래 담당자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05.10.20)</li> <li>- 거래의 적정성 및 거래 상대방의 법률적 권한 (Legal Capacity) 등의 확인의무와 리스크 등 중요정보의 충분한 고지의무</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보완(별첨 참조)하여 은행이 공기업 등 거래자에게 부당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도화('05.12.23)</li> <li>○ 또한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도이치, BNP파리바, 바클레이즈)과 재발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0.7)</li> <li>- 1차 점검결과 양해각서 내용이 대체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으며 부당한 비정형파생상품거래의 신규 취급은 없었음</li> </ul> <p>(별첨)</p> <p>&lt;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주요개정 내용&gt;</p> <p>□ 불건전 영업행위(세칙 64조)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하거나 리스크와 잠재적 손실에 영향이 있는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li> </ul> <p>□ 금융거래(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세칙 65조)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li> <li>○ 의사결정에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li> <li>○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는 내재된 개별 거래의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li> </ul>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의 거래권한 보유여부를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li> <li>○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고, 비정형 파생상품은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li> <li>○ 비정형파생상품거래 매월말 거래평가서를 송부</li> <li>○ 거래관련 자료를 보관</li> </ul>
<p>(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 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 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05.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영업전략·개인신용위험 평가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기준이 없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자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하지 않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다만 정책수행을 위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가 필요하며 국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 따라</p> <p>* 재경위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의 재작성을 정부(재경부)에 요청('05.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일정 금액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파악하여 代用통계로 활용</li> </ul> <p>* 3개월이상 연체중 50만원 이상 또는 50만원 미만 2건이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 심사제도 활성화 방안'('04.12월)을 마련,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하는 등 신용평가 심사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업체에 대한 내부심사결과를 분석하고 및 동 분석결과를 공시</li> <li>○ 신용등급별 기준수익률과 실제시장수익률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를 공시</li> <li>○ 신용등급 예측정보의 유의성을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 공시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사의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상기 제도 개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계속사항)</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지정요건 (안)을 마련중에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新BIS 협약 시행('07년말) 후 동 요건에 따른 ECAI 지정시 상기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감안하겠음</li> </ul>
(26) 환차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하여 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정부의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른 해외송금한도 폐지 등으로 일반기업·개인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등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 정보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혐의 거래 자동검색을 위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추진중</p> <p>* 「외국환거래법」 개정('05.11.23)으로 금년부터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정보 이용 가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감시시스템」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 정보 등을 DB화하여 거래분산송금 등 불법·이상 징후 외환거래를 자동검색</li> <li>- 「상시감시시스템」개발 및 운영을 위해 외환 심사반 신설</li> <li>□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 등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이 관련거래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은행의 안내 미흡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li> <li>○ 외환거래 설명회(상·하반기 각1회)</li> <li>○ 은행 외환업무지도·점검(하반기 1회)</li> </ul>
<p>(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감법 제15조 제1항은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증선위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li> <li>○ 여기서 ‘필요한’의 의미는 모든 외감법상의 위반 행위를 전부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의 대상 선택에 있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내지는 일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li> <li>○ 본 감리제외 방침의 적용요건(기업회계기준·실질에 맞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충족시킨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 감리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감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인 “기업회계 투명성”에 완전히 부합하게 되는 점</li> <li>② 또한 실무적으로도 계정분류오류 정도는 회계 정보 오류의 중요성이 낮아 처벌의 중요도도 떨어지는 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외감법 제15조 제3항은 감리업무의 집행에 수반하는 구체적 기준, 감리대상의 선정, 감리의 구체적 절차, 조치수준 등 집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 정립권을 금감위에게 부여하고 있음</p> <p>□ 상기 외감법상의 적법한 규정정립수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외감규정은 본 방침이전에도 이미 감리 조치의 감경·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p> <p>○ 규정 제58조 제4항은 동 규정제정 당시('99.3.12)부터 “발생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p> <p>- 금번 감리제외(조치유예) 제도의 조치 감경·면제 근거는 조치시행이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음</p> <p>□ 또한 본 방침이전에도 제48조 제2항 각호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금번 규정개정은 감리 미실시 사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p> <p>□ 금번조치는 엄벌주의보다는 집단소송법이 유예되었음을 기회로 감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한 것으로 선진유도 행정을 그 수단으로 하되, 엄격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악용소지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임</p> <p>○ 다만, 국정감사시 지적된 제도의 악용문제는 이미 실무지침을 통하여 시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은 현재 없다고 판단됨</p>

시장 처리요구사항	시장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시중 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경위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li> <li>□ 또한, 감독당국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li> <li>○ 회계감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감리방식도 변경하고 표본감리대상 기업도 대폭적으로 확대 선정('04년 120사 → '05년 204사)하여 감리를 실시중에 있음</li> </ul> </li> <li>□ 감독당국은 금년에도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감리대상기업을 '05년의 204사(상장법인의 약15%)에서 280사(상장법인의 18%)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li> <li>- 혐의기업감리(30사 예상) 감안시 총 감리기업은 310사(상장법인의 약 20%)가 됨</li> <li>○ 감사인의 회계감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 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li> <li>- '06.3월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하반기에 Pilot Test를 실시할 예정</li> </ul> </li> </ul>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금감원 감사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p>	<p>□ 공사는 '05.4.28자 금감위 조치요구서 접수 후 관련법령 및 내규에 의거 공매재산 취득양태(재산종류, 취득건수, 취득가액 및 업무관련성)를 기준으로</p> <p>○ 대상자 19명 전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처분</p> <p>※ 징계처분 내역</p> <table> <tr> <th>구 분</th> <th>정직</th> <th>감봉</th> <th>견책</th> <th>경고</th> <th>주의</th> <th>합계</th> </tr> <tr> <td>인원 (명)</td> <td>3</td> <td>5</td> <td>2</td> <td>4</td> <td>5</td> <td>19</td> </tr> </table> <p>※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가 불용 처분한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li> <li>- 징계 양정시 포상 등이 있을 경우 감경이 가능함에도 엄정한 기강확립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경 적용 없이 대상 직원 전원 중징계</li> </ul>	구 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합계	인원 (명)	3	5	2	4	5	19
구 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합계									
인원 (명)	3	5	2	4	5	19									
<p>(2) 온비드의 장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p>	<p>□ 발생 가능한 장애별 안정성 제고 대책을 '03년부터 마련·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p> <p>○ 자연재해 : 중요 시스템의 이중화, 자료의 정기적 백업 및 분석 시행</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재해 및 장애 : 2층의 방화벽 설치, 침입 탐지시스템 및 침입차단프로그램 사용</li> <li>○ 시스템 장애 및 기반구조 장애 : 자가발전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지사 확대 운영('05.12), 통신망의 이중화 및 정기적인 사용량 측정 시행</li> <li>○ 외부연계 장애 : 지불결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운영('04.7), 담당자간 비상연락 체계 운영</li> <li>□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주관제 서비스」('05.5), 「장애발생 통보 프로그램 및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06.2)</li> <li>○ 24시간 시스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li> </ul>
<p>(3) 특별채권 매각 관련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 매각 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1999-1 국제입찰에서는 경제적 매각 규모 달성을 위하여 지급보증부 부실채권을 일부 포함시켰으나, 1999-2 국제입찰부터는 포함시키지 않음</li> <li>○ 또한 '01년 이후부터는 국제입찰 매각 실적이 없으며 특별채권을 포함하는 모든 채권 매각시 원칙적으로 보증서 있는 채권은 매각에서 제외 하였으며 매각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매수자가 보증서 관련 회수액을 공사에 이전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조건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공매처분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할 것</p>	<p>□ 공사는 조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관리 업무를 확대 수행(배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업무)하여 정부의 조세행정 지원·징세 비용절감 및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대행수수료 체계는 '00.12.19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경영수지 대비 작간 접 경비 부담액을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40억원의 손실이 발생</li> <li>○ 이에 따라 정부(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06.2.9부터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매각금액의 2% → 2.8%</p> <p>□ 또한,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을 제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와 국세청 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종이문서 폐지('05.8.1)</li> <li>○ 공매통지서 등 자동우편봉합기 발송('05.12.5)</li> <li>○ 정원외 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li> </ul>
<p>(5)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p>	<p>□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체계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의 지역별(본사 및 권역별 6개지방팀) 전담관리체계를 통한 현장위주의 직접 관리 조직체제 구축 시행('06.2.1)</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유형별*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재산별 최적 관리방안 수립으로 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재산, 활용·수익재산, 처분·매각대상재산</li> </ul> </li> <li>○ 위탁확대로 증가되는 업무량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현행 전산시스템을 전면 확대·재구축('06.11, 개발완료 예정)</li> <li>○ 국유지 개발 사업분야 전문인력(변호사, 건축사 등) 보강 및 교육활동 강화를 통한 직원 전문성 제고</li> <li>○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괄청에 법령 개정 건의 및 반영('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부시 보증금 등 예치(10백만원 이상) 및 분납기준 상향조정(1백만원 초과)</li> <li>- 경쟁을 통한 매각 및 대부(임대)경우 전자입찰(OnBid) 의무화 등</li> </ul> </li> <li>○ 업무절차개선 및 체납자 관리 등 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효율적관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상금 부과시 공시송달제도 도입</li> </ul> </li> </ul> <p>□ 향후에도 국유재산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반영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공사의 해외 진출 사업 추진 대책을 보고할 것</p>	<p>□ 기본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우리나라와의 지역연계성 및 시장 잠재성이 높은 동북아지역에 핵심역량을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대만·일본·베트남시장을 초기 목표시장(틈새시장)으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li> <li>- 동북아 부실채권시장을 선도하여 해외부실채권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 창출</li> </ul> </li> <li>○ 해외부실채권시장 진출이 동북아 금융허브구축 지원 및 공사의 노하우 발전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투자 전문기관(IB, 연기금,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및 세계적인 사업망과 노하우를 갖춘 회계법무법인 등과 전략적 업무 제휴 추진</li> </ul> </li> </ul> <p>□ 부문별 해외사업의 전략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투자는 공사 초기 사업임을 감안, 사업 핵심요소(인력, Deal Sourcing, Fund Raising, 자산관리 및 리스크관리) 등 대내외 인프라의 확충에 주력</li> <li>○ 직접 투자의 초기 Track Record 시현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해외 IB가 참여하는 시범적 투자펀드 조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부문은 투자사업 시장조성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既 컨설팅 실적이 있는 국가 중심으로 실질적 수익창출 도모</li> <li>- ADB, AfDB 등 컨설턴트로 등록된 국제기구 적극 활용</li> </ul> </li> <li>○ 직원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및 KOICA(국제협력단)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사업 강화로 수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부문 교육기관으로서 인지도 확보 및 피연수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으로 사업진출 토대 구축</li> </ul> </li> </ul> <p>□ 해외투자사업 손실(리스크) 최소화를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 최소화</li> <li>○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20/100으로 총 투자한도를 제한하였으며,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li> </ul> <p>□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지원과 연계한 해외사업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정보센터 구축, 구조조정포럼 개최 준비 및 국내 구조조정자산운용업 육성 지원 등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지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한마음금융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p>□ 기한의 이익 상실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2월말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건수는 5만 1천 여건으로서 전체 대부건수(183,948건) 대비 28%에 이르고 있고, 매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li> </ul> <p>□ 기한의 이익 상실자의 부활 제도 도입 및 조건 완화를 통한 구제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3월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자에 대한 부활 제도를 도입하고, 콜센터를 통한 부활 안내 TM·SMS 발송 및 최고 등의 방법으로 연체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음</li> <li>○ 특히 '05. 9월부터는 배드뱅크 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자에 대한 부활조건을 완화 및 조기 상환시 일정률의 할인제도(할인율 : 6%)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1.1부터는 콜센터 연체전담 TM반을 운영, 기한의 이익 상실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li> </ul> </li> </ul> <p>※ 기한의 이익 부활 현황('06.2월말 기준)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05.3~12월</th><th>'06.1월</th><th>'06.2월</th><th>계</th></tr> <tr> <td>건수</td><td>6,757</td><td>1,306</td><td>994</td><td>9,057</td></tr> <tr> <td>금액</td><td>2,817</td><td>435</td><td>472</td><td>3,724</td></tr> </table>	구분	'05.3~12월	'06.1월	'06.2월	계	건수	6,757	1,306	994	9,057	금액	2,817	435	472	3,724
구분	'05.3~12월	'06.1월	'06.2월	계												
건수	6,757	1,306	994	9,057												
금액	2,817	435	472	3,724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무담보채권 위임 관련 공사 자체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p>	<p>□ 채권추심기관에 무담보채권 추심·회수위임과 관련하여 공사는 '05. 8월부터 수수료를 동종업계 평균 수준인 24%로 인상하고, 위임기관별 회수목표를 부여하여 관리함과 동시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월까지의 위임기관별 회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실적 부진 위임기관에 대하여는 과감히 위임계약을 해제하는 등</li> <li>○ 위임기관 간 채권 회수 경쟁체제 유도를 통해 아웃소싱 채권의 회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li> </ul> <p>□ 한편, 위탁관리 채권의 공사 자체 회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인력 수급 및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관리기관간의 실적 평가기간('06.3~8월) 종료 후 탈락업체 보유 채권에 대한 공사 직접 관리 여부를 경영 여건과 회수율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임</li> </ul>
<p>(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 실효성 여부 및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기초수급자 지원 대책의 실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도 공사가 수행한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업무는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마무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05.5.9~'05.11.8)간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 약15.6만명 대비 57%에 해당하는 약8.9만명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함</li> <li>□ 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의 과잉추심 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권금융기관 준수사항에 의거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를 중단하도록 약정되어 있음</li> <li>○ 이를 위반한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동 협약에 의거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과잉 추심 사례는 발생치 않고 있음</li> </ul> </li> </ul>
(10) 압류재산 공매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행성과와 공사의 직·간접비 대비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28 : 수익제고 및 비용절감 방안 수립</li> <li>○ '05.3.29 : 공매대행 수수료율 개선방안 보고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li> <li>○ '05.3.30~12.31 : 수수료율 개선방안 제출·협의</li> <li>○ '06.2.9~ : 변경 수수료 제도 시행</li> </ul> <p>□ 수수료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매각금액의 2%→ 2.8%로 상향 조정* - 단 매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수수료 조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비용 부담 및 국가 재정 수입 안정 기여</p>
<p>(11) 임직원 비위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p>	<p>□ 임직원 비위 방지대책 마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03.12.19)하고 이를 위반 시 엄격한 징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비위 를 원천적으로 봉쇄함</li> <li>○ 공매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취득금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원이 본인의 계산하에 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터넷 입찰시스템(OnBid)을 개선하여 임직원 및 직계 준·비속의 응찰을 원천적으로 제한</li><li>○ 매월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행사실시 및 윤리경영 책자 발간을 통한 임직원 윤리 의식 제고</li><li>○ 윤리경영 교육강화 및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발굴 시행</li></ul> <p>* 청렴서약제, 클린카드제, 임직원 재산취득 방지교육 주기적 실시, 공직기강 확립 계획의 추진실적 감독기관 정기보고</p>																					
(12) 대우채권 2조 8천억원의 적자 발생 원인과 대책을 보고할 것	<p>□ 대우채권 인수·정리 현황('05.12월말 기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조원)</p> <table><tr><th colspan="2">인 수</th><th colspan="3">정 리</th><th colspan="2">보 유</th></tr><tr><th>채권액</th><th>매입액</th><th>채권액</th><th>매입액</th><th>현금회수</th><th>채권액</th><th>매입액</th></tr><tr><td>35.8</td><td>12.7</td><td>6.7</td><td>4.1</td><td>5.8</td><td>29.1</td><td>8.6</td></tr></table> <p>□ 향후 회수 예상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유 주식에 대하여 '05.12월말 현재 시가로 매각을 가정하고 계열사별 채무상환계획상의 회수금액을 합하여 향후 6.4조원이 추가 회수 될 것으로 추정</li></ul>	인 수		정 리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현금회수	채권액	매입액	35.8	12.7	6.7	4.1	5.8	29.1	8.6
인 수		정 리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현금회수	채권액	매입액																
35.8	12.7	6.7	4.1	5.8	29.1	8.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2월말 현재 기회수한 5.8조원을 포함하면 총 12.2조원이 회수 예상되어 투입액 12.7조원 대비 96% 회수율 예상됨</li> <li>□ 따라서 공사는 주요 경영정상화 기업의 가치제고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로 대우채권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li> </ul>
(13) 경영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방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관리위원회는 출자 주주(정부, 금융기관)의 위임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관리감독적 기능과 공사 경영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서 설치되었음</li> </ul> </li> <li>□ 경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사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인적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수년 내에 투입한 공적자금 관리업무의 종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경우에 공사법 개정을 통하여 동 위원회의 공사 이사회와의 통합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추진코자 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국외연수 비용을 자산 매수자가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할 것</p>	<p>□ JV파트너의 국외연수비용 제공은 공사에 직접 금전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금융기법 연수를 위한 과정설계, 강사 섭외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li> <li>○ 대부분의 보유자산을 정리한 현재로서는 유사한 계약구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i> </ul> <p>□ JV투자자의 국외 연수 교육프로그램 제공 목적은 상호 발전적 협력차원에서 공사 직원의 자산유동화 AMC운영 등과 같은 최신 금융기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사 직원들의 다양한 금융기법 습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외연수를 실시토록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재무자문사의 주관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의 국외 연수 지원이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li> </ul>
<p>(15) (주)로이젠의 거제도 골프장 소유 관계를 검토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것</p>	<p>□ (주)로이젠*은 거제도 골프장 예정부지 21만 평(698,327㎡)을 '04.7.9 학교법인 지성학원으로부터 59억원에 매입, 소유권을 취득</p> <p>* 주주는 75%의 지분을 가진 에이원컨트리클럽(주)와 25%의 지분을 가진(주)필코리아리미티드로 구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사는 채권보전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 등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이젠은 (주)대우 및 김우중 前회장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으로서 현행법상 직접적인 채권보전조치는 불가능하나</li> <li>○ 공사는 김우중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퍼시픽인터내셔널이 소유한 필코리아리미티드 주식 10만주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득하였음</li> </ul> <p>□ 향후 공사는 10개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추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주)로이젠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코자 함</li> </ul>
(16) 압류재산 조세 업무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보고할 것	<p>□ 공사는 조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관리 업무를 확대 수행(배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업무)하여 정부의 조세행정 지원·징세 비용절감 및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대행수수료 체계는 '00.12.19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경영수지 대비 직간접 경비 부담액을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40억원의 손실이 발생</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정부(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06.2.9부터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 매각금액의 2% → 2.8%</li> <li>□ 또한,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을 제고함</li> <li>○ 공사와 국세청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종이문서 폐지('05.8.1)</li> <li>○ 공매통지서 등 자동우편봉합기 발송('05.12.5)</li> <li>○ 정원外 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li> </ul>															
(17) 임금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p>□ 공사는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p> <p>&lt; 인력 구조조정 실시 &gt;</p> <p>□ 인력구조조정 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data-bbox="670 1646 1476 1818"> <tr> <th>구 분</th><th>'03</th><th>'04</th><th>'05</th><th>'06</th></tr> <tr> <td>정 원</td><td>1,177</td><td>1,077</td><td>997</td><td>907</td></tr> <tr> <td>(전년대비)</td><td>△50</td><td>△100</td><td>△80</td><td>△90</td></tr> </table>	구 분	'03	'04	'05	'06	정 원	1,177	1,077	997	907	(전년대비)	△50	△100	△80	△90
구 분	'03	'04	'05	'06												
정 원	1,177	1,077	997	907												
(전년대비)	△50	△100	△80	△9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data-bbox="608 324 1114 369">&lt;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gt;</p> <div data-bbox="608 443 1453 1077"> <p data-bbox="608 443 1453 607">□ 유사기능 수행조직의 통폐합 및 부점별 적정 팀 모형 분석을 통한 팀 운용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5 674 1453 837">○ '06.2.1자 조직개편시 기업개선부, 해외채권관리부, 특별채권부 등 3개 부점을 기업개선부로 통합</li> <li data-bbox="635 904 1453 1077">○ '06.2.1자 조직개편시 부점별 적정 팀 모형 분석을 통한 팀 운영방안 도출로 총 팀수를 '05년말 대비 24팀 축소 운영</li> </ul> </div> <p data-bbox="608 1173 1114 1218">&lt;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gt;</p> <div data-bbox="608 1292 1453 1928"> <p data-bbox="608 1292 1062 1337">□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5 1375 1453 1538">○ 비서·서무지원 업무 등 비핵심 업무의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정원인력의 핵심업무 집중으로 효율성 제고</li> </ul> <p data-bbox="608 1612 1091 1657">□ 후선부서 투입인력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5 1695 1453 1814">○ 후선부서 투입인력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가용인력의 영업부점 배치로 효율성 제고</li> </ul> <p data-bbox="608 1888 943 1933">□ 임금피크제 도입</p>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 업무·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설계와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연봉제 적용범위 확대 추진(현재 정규직 1·2급)</li> </ul> <p>□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 강화 및 사후평가 실시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적정성 제고</li> </ul>
<p>(18) 부동산사업부의 업무량 대비 인원 과다와 관련 예산편성 시 축소 방안을 보고할 것</p>	<p>□ 부동산사업부 주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부동산 매입 및 컨설팅, 보유부동산 임대 및 시설관리</li> <li>○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및 신규사업방안 기획</li> <li>○ 국유부동산 및 보유부동산 개발에 따른 건축 업무 등</li> </ul> <p>□ 현재 인력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보유부동산에 대한 시설관리를 아웃소싱 하고 있고</li> <li>○ 대부분의 인력은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에 투입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운용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 시범개발사업 3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li> <li>○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검토 및 신규 개발물건 발굴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li> <li>○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국유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력운용이 필요한 상황임</li> </ul>
(19)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국세물납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p>□ 물납은 조세의 현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의 합법적 탈세 시비, 장기 미매각에 따른 국고회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li> </ul> <p>□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물납허용 기준 강화, 물납가액 산정방식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총괄청(재경부)에 건의('05.1)</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건의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608 394 1453 1066"> <thead> <tr> <th data-bbox="608 394 874 443">구 분</th><th data-bbox="874 394 1453 443">개선 의견</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08 443 874 568">① 물납허용기준 강화</td><td data-bbox="874 443 1453 568">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td></tr> <tr> <td data-bbox="608 568 874 775">② 물납청구범위 개선</td><td data-bbox="874 568 1453 775">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td></tr> <tr> <td data-bbox="608 775 874 891">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td><td data-bbox="874 775 1453 891">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td></tr> <tr> <td data-bbox="608 891 874 1066">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td><td data-bbox="874 891 1453 1066">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td></tr> </tbody> </table> <p>□ 향후 공사는 물납법인에 대한 관리강화와 시장 현실에 맞는 다양한 매각방식을 개발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기에 국고가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p>	구 분	개선 의견	① 물납허용기준 강화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	② 물납청구범위 개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	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	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	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	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
구 분	개선 의견										
① 물납허용기준 강화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										
② 물납청구범위 개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 물납청구 범위 책정시에는 부동산 세액은 제외										
③ 세법의 할증 평가 개선	실제 상속·증여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할증										
④ 물납 평가시점 개선	주식의 상속·증여 이후 배당금 수령 등 재산상의 이득을 고려한 물납시점의 주식가치로 과세평가										
<p>(20)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라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수립계획을 보고할 것</p>	<p>□ 「철도청잡종재산 활용도제고 및 관리효율화 방안」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재산을 활용, 처분, 보존재산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가능재산은 대부계약 갱신, OnBid를 통한 공개입찰 대부(임대)로 대부율을 극대화하고</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 대상재산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필요시 수의계약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매각 극대화</li> <li>- 보존재산은 소관청 관리환(도로, 구거), 처분제한 재산의 단기대부(도로부지 등) 추진</li> <li>○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작지, 야적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선정하여 공개입찰 대부를 추진</li> </ul> <p>□ 도로용지(보존재산)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이 개정('05.2)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12.31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총괄청 소관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li> <li>○ '92년 이전에 결정된 도로시설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국유지에 대하여도 사업시행 시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li> </ul>
(21)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p>□ 기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외환위기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대규모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영입했던 기업·금융 구조조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재교육 및 직무개발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로 신규, 전문인력 육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97년도 이후 공사가 금융·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정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업무 경험을 쌓은 우수 잠재 인력 보유 중임</p> <p>□ 국외부실채권 시장 진출 등 신규 업무수행시 국제적인 금융전문인력 및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할 경우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투자사업 전문분야 인력수요와 공사내 대체가능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 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li> </ul>
<p>(22) 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p>	<p>□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공사 내부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관리위원회는 공사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방침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등</li> <li>○ 경영관리감독적 기능 이외에 사외이사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li> <li>○ 한편, 경영관리위원회는 공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이사회와는 심의의결범위 등 그 기능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은 미미하여 향후 수년 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이 이루어 질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존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사 이사회와의 통합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함</p>
<p>(23) 국내에 진출해 있는 M&amp;A 부띠끄의 실태 파악과 매커니즘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p>	<p>□ 일반적으로 M&amp;A부띠끄는 소액의 자본금과 소수의 인력으로 한정된 업종 내 기업의 지분(주식)을 중심으로 M&amp;A 중개·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는 주로 증권회사 출신들이 사업자 등록 관련 법률상 기타 법인으로 설립하여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M&amp;A 중개를 하고 있으며</li> <li>○ M&amp;A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법이 제정되자 일부 M&amp;A부띠끄들이 참여하고 있음</li> </ul> <p>□ M&amp;A부띠끄 범주에 Hedge Fund, 사모펀드(PEF), 벌처펀드 등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회계법인들이 별도의 사업부문(Division)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금융부문(Corporate Finance)은 M&amp;A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M&amp;A부띠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공사 해외 사업의 경우, 국외소재 부실채권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 국외부실자산이 투자대상이며</p> <p>○ M&amp;A부띠끄가 중개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주식 등과는 구별하여야 되며</p> <p>○ 아직까지 부실자산투자 부문에서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M&amp;A부띠끄는 알려져 있지 않음</p> <p>□ 따라서 공사는 국외부실자산투자사업과 관련 향후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펀드, IB 및 기타 기관투자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임</p>
<p>(24) 현재 부실채권 매각방식의 문제점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매각 가능 채권은 대우계열사 관련 기업채권의 출자전환 주식이 대부분이며, 동 주식을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M&amp;A 등의 방식에 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p> <p>○ 공사가 주관하여 매각하는 기업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는 물론 해당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국민경제 기여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p> <p>□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이 기대되는 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의 토대 마련은 조성된 것으로 보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 매각시, 우리 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자금 등을 해당기업이 지원해줄 경우 동 금액만큼 기업가치 및 매각 금액을 하락시켜 공적자금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li> <li>○ 따라서 주주이익 및 기업가치가 침해되지 않고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li> </ul>
<p>(25) 공사가 매입한 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경영권 매입주체의 상시적인 배임·횡령 등의 사고에 휘말리고 있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위한 매각 방식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경영주체를 찾아주고 회사정상화를 돕기 위한 우리 사주제 등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의 매각 시에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및 해당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도모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수자에게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li> <li>○ 인수자 결정시 매각금액 뿐만 아니라 인수 후 인수자의 경영 및 사업 계획, 인수자와 해당기업 간의 시너지, 관련산업 연관효과,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투자자를 선정 매각하고 있음</li> <li>□ 한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나,</li> <li>○ 공적자금 투입으로 희생된 기업 매각의 경우 주주이익 및 기업가치가 침해되지 않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li> </ul>

## 5.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 첨부 참조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치분요구 내용	조치 및 회신 내역
2008 (감사원)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input type="checkbox"/>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금감위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input type="checkbox"/>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주의조치
2007 (감사원)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처분요구 내용	조치 및 회신 내역
2007 (감사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줄임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신·기보 발주 용역을 참고한 정책수립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6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기관운영실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편드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소액공모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반영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 6. 최근 3년간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 해당내용을 산하기관에 위임하였으며, 해당 산하기관에  
서 직접 의원실로 제출

## 7.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첨부 참조

## 〈공정시장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일정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05.6.30	
		<input type="checkbox"/> 회계 부정행위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  <input type="checkbox"/>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자산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 리감리업무를 직접 수행		
		<input type="checkbox"/>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발행인으로 부터 받은 분담금 중 한국회계기준 원에 지원하는 비율을 그 분담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 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 립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	2007.4.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 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구정비*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 상장법인	2008.7.29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외하고 주석을 추가 <input type="checkbox"/> 지배·종속의 관계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 상향조정 ○ 7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단축 ○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정기주총 4주전	입 법 예고중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규모가 큰 금융기관(8천억원 이상)에 대하여 일부 대형 회계법인만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 <input type="checkbox"/>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건별 기재사항을 총애만 기재토록 하는 등 작성부담을 완화	2006.3.10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제한의 완화 ○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정 ○ 감사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당해회사의 자산매도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006.3.10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input type="checkbox"/>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6.6.12	
		<input type="checkbox"/>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대체 시험(토플·토익·텡스)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처리되는 바, ○ 2006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험 형태인 토플 IBT(Internet Based Test) 시험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토플 시험의 실시방식에 IBT시험을 추가	2007.2.12	
		<input type="checkbox"/>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7.3.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정비	2008.7.29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2006.3.10.)됨에 따라 ○ 동 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의 제출 방법을 정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2006.7.5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 〈글로벌금융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령	금융중심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 차등을 규정한 법 령으로 금융중심 지의 지정절차, 금 융중심지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 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	2008.3.22 시행	



## 〈금융정책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금융감독기구 의설치등에관 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담금 산정방 법의 개선(영 제 12조제1항)</li> <li>○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개편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li> <li>○예산 및 결산 공시제도 마련 (영 제12조의2 신설)</li> </ul>	2007.5.16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관한 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li> </ul>	2008.7.29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li> </ul>	2006.3.29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li> </ul>	2007.10.23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 으로서 자산총액 기준 신설(영 제 3조의4 신설)</li> <li>○금융기관의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설정 요건 신설(영 제 5조의4부터 제5</li> </ul>	2007.11.12	

		<p>조의7까지 신설)</p> <p>○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영 제13조 제1항제4호나목 신설, 영 제15조 제1항제1호 등)</p>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p>○ 금융위원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2.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7.29	
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8572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추가하고,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p>	2007.10.31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하도록 하며,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 견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 금융 위원 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2.29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7.29	

## 보험업법령 최근 3년간 개정현황

### 〈보험업법 시행령〉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가.보험계약의 청약자 가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 험회사의 의무사항 나.보험회사의 자 회사 범위 확대 다.보험회사 주요 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	2007.8.17	
"	"	가.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의 요건 신설 나.대주주가 발행 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 조치 사유 신설	2008.1.20	
"	"	2008년 4월 1일부 터 금융기관보험대 리점 등에서 개인 보장성 보험, 자동 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삭제 등	2008.3.28	
"	"	가.보험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 나.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다.자산·손익 구분 계리 방식 마련	2008.6.15	

## 〈보험업법 시행규칙〉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61호, 2005. 3.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종전에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인·허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5.3.31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	2008.3.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2008.8.4	

## 〈산업금융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완화 - 100분의 15이하→100분의 20이하</li> <li>○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 부품·소재전문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li> <li>○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li> </ul>	'06. 1. 1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대한 여신한도를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 30으로 완화</li> </ul>	'06. 6.22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li> </ul>	'06.12.29	
개정(안) 입법예고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15% → 금융위가 정한 요건 충족 및 금융위 승인시 은행 자기자본의 30%</li> </ul>	'08. 9.12 (입법예고)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타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 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05. 8.26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 연비율 상향 조정 및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시 차등요율 적용	'06. 1.24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 하는 것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06. 2.22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금융 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요율 중 기준요율을 하향조정	'07. 7. 1	
개정	기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출연 금액 개정	'07. 6. 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농협·수협중앙회) 출연요율 상향 조정	'06. 1.2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농·수·산림 회원조합 출연개시)	'06.10. 1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농협·수협중앙회 출연대상 대출금 조정 및 출연요율 상향 조정	'07. 7. 1	

## 〈은행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 일자 (폐지 일자)	기 타
개정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추심이체의 경우 출금 동의의 방법을 추가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08.7.9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 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 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 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 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 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 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 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려는 것임	07.7.1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 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 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 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07.1.1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대상연령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및 보증요율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7.4.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요율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0.125퍼센트를 적용하되, 그 밖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0.260퍼센트를 적용하고,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	07.5.3	

		<p>위변제받는 금액이 출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 <math>\pm 0.04</math>퍼센트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p>		
--	--	--	--	--

## 〈자본시장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상장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에 관한 요건을 근로자복지 기본법과 일 원화	'05.12.9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증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제 도의 도입에 따른 승인대 상, 승인절 차 등을 규 정	'06.1.27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상장법 인의 임직원 이 금감위로 부터 해임권 고, 고발 또 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스톡옵 션 취소 근 거 마련	'06.3.30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금감원이 증권사 또는 유가증 권 발행인으 로부터 징수 하는 분담금 의 한도, 초	'07.5.16	

		과분의 처리 등을 규정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전자자금이체업무 를 증권사의 업무로 명시	'07.6.2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대주주가 증권사 에게 위법행 위를 요구하 거나 부당한 조건의 거래 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등 대 주주의 부당 행위를 금지	'08.1.1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규칙	정부·예보로부터 취득한 자사 주를 대상으 로 교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을 배제한 것 외에, 기타 용어 및 규 정체계 정비 등으로서 특 기 사항 없 음	'06.11.8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현물시장에서 이 득을 얻기 위해 선물시 장에서 시세 조종을 하는 역방향 시세 조종을 불공	'07.12.20	

		정 거래 행 위 로 명시하는 등 규제 정 비		
개정	선 물 거 래 법 시 행령	대주주가 선물업 자에게 위법 행위를 요구 하거나 부당 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주주의 부 당행위를 금 지	'08.1.18	
개정	선 물 거 래 법 시 행령	일반상품 선물거 래의 대량보 유 보고기 준, 보고사 항, 보고시 한 등을 규 정	'08.4.30	

## 〈자산운용과〉

구 분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개정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06.1.27)	<input type="checkbox"/>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 주주의 범위 및 요건 신설 등	‘06.1.30
	상동(‘06.2.9)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6.2.9
	상동(‘06.4.27)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등	‘06.4.27
	상동(‘06.12.29)	<input type="checkbox"/>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7.1.1
	상동(‘07.6.28)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확대	‘06.7.4
	상동(‘07.12.28)	<input type="checkbox"/>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위한 요건을 완화 등	‘07.12.28
	상동 (08.1.18)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8.1.20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규칙 (‘06.5.9)	<input type="checkbox"/>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내대리 인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 정함	‘06.5.9
	상동(‘08.1.8)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외국에서 설립한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의 임원 겸직 허용 등	‘08.1.8
	상동(‘08.3.3)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3.3
	신탁업법 시행 령(05.11.25)	<input type="checkbox"/>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이 신탁 업을 겸영시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 적용할 근거 마련	‘05.11.25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폐지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폐지	‘09.2.4
	간접투자자산운 용법 시행규칙	상 동	‘09.2.4
	신탁업법 시행령	상 동	‘09.2.4

## 〈중소서민금융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 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확대	2008.1.18.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의 활성화와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	2006.5.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를 조정	2008.1.18.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6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 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 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 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 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조회방 법을 다양화	2006.7.1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면이나 공인전자 서명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신 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하는 방식 등을 추가	2008.3.22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7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으로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11월 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중앙회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p>	2007.11.22.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협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이 지급불능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인 5000만원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p>	2008.6.25.	

		중앙회 타 회계에 대하여도 신탁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도록 함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5.9.1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2007.10.4.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0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2008.3.28.	

## 8.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

###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태

지시일자	지시제목	이행실태
2008.3.3	신기술 담보제도 개선 관련	정상추진
2008.3.10	예산 10% 절감	정상추진
2008.3.10	규제개혁의 조속한 추진	정상추진
2008.3.11	금년도 사업 조기발주 추진	정상추진
2008.3.31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정상추진
2008.3.31	금융허브 관련	정상추진
2008.3.31	개혁입법 추진관련	정상추진
2008.3.31	금융기관 감사 관련	정상추진
2008.6.5	금융위원회 인력관련 개선사항 검토	정상추진
2008.9.2	9월 위기설 관련	정상추진
2008.9.16	보험사 주택재개발 참여관련	정상추진

## 9.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 '06.1.1일 이후 '08.8.31일까지 舊재정경제부·舊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총469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

※ 舊재정경제부 2673건(57%), 舊금융감독위원회 316건(7%), 금융위원회 1701건(36%) 처리 완료

###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의	상담안내	질의	청 원	소 계
'06	재경부	32건	256건	259건	655건	1202건
	금감위	9건	26건	16건	64건	115건
'07	재경부	117건	357건	276건	548건	1298건
	금감위	12건	35건	15건	108건	170건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497건	810건	934건	2449건	4690건

## 10. 최근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11. 최근 3년간 임원 및 직원들의 국내외 연수출 장 관련 세부 내역

### □ 2006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영국 금융감독청(FSA) 및 런던소재 금융회사 연수프로그램 참석	영국	유재훈사무관 이윤수서기관 이진수사무관	3.11~3.19	10,654
2. 제14기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브라질,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김주현국장	6.4~6.17	11,721
3. 법제처 주관 2006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범수주무관	7.4~7.11	2,228
4. 비상대비담당자 해외선진국 보안시스템 연수	미국,캐나다	김홍식사무관	8.25~9.2	3,677

### □ 2007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영국 FSA 및 금융기관 단체연수 참가	영국	송병관사무관 이수영사무관 이민섭사무관 이홍민주무관	3.17~3.28	17,603
2.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해외 연수 참석	독일,스위스	김태환주무관	7.2~7.9	2,714
3.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스페인,그리스, 터키,이집트	최수현국장	10.6~10.21	8,127

### □ 200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룩셈부르크,벨기에 포르투갈,스페인	김현수주무관	8.24~9.2	4,205
2.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전태원사무관	8.25~9.1	3,059
3.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가	홍콩	오유정사무관	8.28~9.5	3,146
4.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영국	김선문사무관	8.30~9.7	3,857

## 1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07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법인카드별 사용내역

### □ 법인카드 발급현황

**<2007. 1. 1 ~ 2008. 2. 28(금융감독위원회)>**

(단위 : 개)

구분	일반수용비카드 (210목)	업무추진비카드 (240목)	자산취득비카드 (430목)	합계
본부	3	11	1	15
감독정책1국	1	6	-	7
감독정책2국	1	6	-	7
합계	5	23	1	29

**<2008. 2. 29~ 현재(금융위원회)>**

(단위 : 개)

구분	일반수용비카드 (210목)	업무추진비카드 (240목)	자산취득비카드 (430목)	합계
본부	6	9	1	16
대변인	2	2	-	4
감사담당관	2	2	-	4
기획조정관	3	3	-	6
금융정책국	2	5	-	7
금융서비스국	2	6	-	8
합계	17	27	1	45

### 13. 유사수신행위 관련

- 유사수신험의업체의 영위 업종별 수사기관 통보현황  
(2006~2008년 현재 까지)
- 유사수신험의업체 유형별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

#### □ 유사수신험의업체의 영위 업종별 수사기관 통보현황

##### 유형별 유사수신험의업체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개)

유사수신험의업체의 유형	'06년	'07년	'08.7월
농수산물 및 축산물,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판매 및 수입품 등 판매사업 가장	39	26	13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개발 사업 가장	39	23	4
자판기 등 각종기기 임대사업 가장	17	7	7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 가장	14	21	13
자판기 제조 및 판매사업 가장	3	13	1
유통업 및 다단계 판매사업 가장	14	13	4
미용제품 및 귀금속 판매사업 가장	6	6	-
상품권 발행·판매사업 가장	14	20	1
인터넷 및 통신 관련사업 가장	7	8	3
레저사업 가장	8	2	1
채권, 비상장주식 매매(상장) 및 인수합병 관련사업 가장	6	25	4
대부업 및 투자자문사 운영 사업 가장	4	10	1
전자화폐, 선불식·적립식 카드 발행사업 가장	3	5	3
해외자금 유치 및 해외 투자사업 가장	2	6	7
해외 통화선물(FX마진) 등 금융업 가장	-	-	12
프랜차이즈(체인점 등) 분양사업 가장	-	-	7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개발, 자원재활용 및 환경개선 사업 가장	-	-	11
게임·오락 등 사행성 사업 등 기타	16	9	16
계	192	194	108

※ 금융감독원 자료



## □ 유사수신 유형별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

- 유사수신업체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직접적인 조사·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형법과 유사한 처벌법규로 구성
-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위험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여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유사금융에 따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의 상담접수, 대국민 홍보업무 추진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
- \* 공익 광고, 금융기관의 포스터·상품안내서 등을 통한 홍보 등

